2026년도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산 업 통 상 부 소 관 】
일 반 회 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무 역 보 험 기 금
【 지 식 재 산 처 소 관 】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 산업통상부 소관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1. 총 괄 ····· 1

(1) 세입예산안 총규모 ····· 2

(2) 세출예산안 총규모 및 특징 ····· 5

(3) 기금운용계획안 ····· 41

2. 일반회계 ····· 43

(1) 세입예산안 ····· 43

(2) 세출예산안 ····· 44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46

(1) 세입예산안 ····· 46

(2) 세출예산안 ····· 48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51

(1) 세입예산안 ····· 51

(2) 세출예산안 ····· 52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

(1) 세입예산안 ····· 53

(2) 세출예산안 ····· 54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5

(1) 세입예산안 ····· 55

(2) 세출예산안 ····· 55

7. 전력산업기반기금 ····· 56
(1) 수입계획안 ····· 56
(2) 지출계획안 ····· 58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61
(1) 수입계획안 ····· 61
(2) 지출계획안 ····· 63
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 64
(1) 수입계획안 ····· 64
(2) 지출계획안 ····· 66
10. 무역보험기금 ····· 68
(1) 수입계획안 ····· 68
(2) 지출계획안 ····· 69

Ⅱ. 검토의견 ····· 70

1. 일반회계 ····· 70
(1) '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현황 ····· 70
(2)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제출 노력 필요 ····· 77
(3)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집행가능성 및 대외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86
(4) 수출지원기반활용: 신규 내역사업 차별화 및 지원기간 등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94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I전시회 사업의 관련 전시회간 통합·연계 강화 필요 ·· 105
(6)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재정여건 및 다른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통상피해지원 필요 ····· 111
(7)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ODA): 사업추진일정 및 타국공여현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117

(8)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타부처 사업 대비 차별화 강화 사업계획 수립 필요 122
(9)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건축 및 장비도입 지연 최소화 필요 ····· 132
(10)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미국현지 전문가 파견사업 운영계획 구체화 필요 ····· 137
(11)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상한액 등 사업계획 조정 필요 ····· 142
(12)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예산집행과 성과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49
(13)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예산 편성에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및 2025년 집행 지연 실적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154
(14)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협약지연 가능성을 감안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 161
(15)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73
(16)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목적 및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181
(17)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분야별 AI 응용제품 지원사업과 차별성 필요 ·· 187
(18)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간 R&D 업무분장 분명히 할 필요 ····· 192
(19)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실시지역 및 교육대상 확대 필요 ····· 198
(20)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설계 필요 204
(2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규모 조정 필요 ····· 210
(22)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단년도 및 다년도 과제의 사업관리체계 구분과 단년도 과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17
(23)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2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29
(1)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229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에특회계 재원운용 방향 재정비 필요 ····· 238
(3) 정부출자수입: 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49
(4)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검사수수료 인상 소요를 반영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55
(5) 비축사업 출자 사업: 비축사업 부문 수익 누적에 따른 석유공사 자체부담분 상향 방안 검토 필요 ····· 260
(6) 폐광대책비 사업: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연차별 국비 및 지방비 분담 계획 마련 필요 ····· 264
(7)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등 ····· 272
(8)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 회계 오류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적정 규모 반영 필요 ····· 278
(9)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융자관리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 자체수입 계상 문제 281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286
(1)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286
(2) 제조 AI R&D: 제조 AI R&D 체계적 수행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필요 ····· 292
(3)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실집행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298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05
(1)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305
(2) 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경과 고려 및 지원기준 마련 필요 311
(3)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회수 실적 제고 필요 등 318

(4)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신규과제 일괄 반영에 따른 과제협약 체결 관리 필요 ····· 329
(5) 지역투자촉진 사업: 실제 고용지원 효과를 감안한 성과관리 필요 ····· 333
(6)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필요 338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42
(1)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342

6.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 343
(1) '26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 ····· 343
(2)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후관리 체계화 및 내역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개편 필요· 347
(3) 기술성과활용촉진(R&D): 공공 R&D 성과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 전면 개편 등 필요 ····· 355
(4)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확대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지속적인 R&D 투자 지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사업비 유지 필요 ····· 362

7. 무역보험기금 ····· 370
(1) '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 ····· 370
(2) 민간출연금: 민간은행과 재협약 및 민간출연금 수납 제고 노력 필요 ····· 372
(3)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신용조회플랫폼 자체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최소화 필요 ····· 378
(4) 기타경비: 법인세·지방소득세 계획안 반영 및 계획변경 최소화 필요 ····· 383

◈ 지식재산처 소관

Ⅰ. 예산안 개요 ····· 393

1. 총 괄 ····· 393

(1) 세입예산안 ····· 393

(2) 세출예산안 ····· 393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 393

(1) 세입예산안 ····· 393

(2) 세출예산안 ····· 398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04

(1) 세입예산안 ····· 404

(2) 세출예산안 ····· 404

Ⅱ. 검토의견 ····· 405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 405

(1)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405

(2) 기금예탁이자수입: 최근 국고채 이자율 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413

(3) 국제지식재산나눔(ODA):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417

(4) 특허기술조사분석(R&D): 보유특허 진단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423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 국가발명인재관 체험 콘텐츠 내실화 필요 등 ····· 430

(6)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발명교원 인증제도 예산 재편성 검토 필요 ····· 439

(7)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담보IP 매각·활용 수익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45

(8)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세부사업 간 과목구조 조정 필요 ····· 461

(9)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목별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63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66

(1)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 466

산업통상부 소관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괄

’25년 9월 정부 예산안 제출시 기준으로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4개 기금으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는 동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기존 에너지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장하게 됨.

이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은 관리·운영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2].

---

1) 「전기사업법」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각각 「정부조직법」 개정시 타법개정됨.

따라서 ’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2개 기금으로 구성됨.

이하 총괄에서는 9월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에너지 업무·기능을 포함한 예산안 총규모의 증감내역을 우선 검토하고, 이어 정부조직개편 후 이관된 예산안 총규모를 살펴보겠음.

(1) 세입예산안 총규모

우선,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8조 7,473억원이며, 이는 ’25년도 본예산 8조 5,963억원에 비하여 1.8%(1,510억원) 증액 계상되었음.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증액으로 ’25년도 1,888억원에 비하여 24.6%인 464억원이 증액된 2,352억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법정

2) 다만, 전력기금의 경우 일부 산업통상부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사업이 있음.
※ 전력해외진출사업(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7402-301),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5436-304), 전력효율향상(가스냉방)(5145-302)

부담금 등 감액으로 '25년도 6조 702억원에 비하여 △0.9%인 △554억원이 감액된 6조 148억원이 계상되었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는 재산 수입 등 증액으로 '25년도 2조 2,843억원에 비하여 6.4%인 1,467억원이 증액된 2조 4,310억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타경상이전 수입 증가 등으로 '25년도 530억원에 비하여 25.1%인 133억원이 증액된 663억원이 계상되었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26년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합 계	8,596,320	8,436,399	8,747,325	151,005	1.8
일반회계	188,767	188,767	235,196	46,429	24.6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6,070,222	5,910,301	6,014,807	△55,415	△0.9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287	2,284,287	2,430,994	146,707	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044	53,044	66,328	13,284	25.0

주: 총계 기준,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조 2,167억원(△48.2%) 감소한 4조 5,306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는 601억원(25.6%) 이관한 1,751억원으로 계상되고,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는 4조 1,566억원(69.1%) 이관한 1조 8,58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별도 이관액이 없음.

'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A)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B)	이관액	
			B-A	%
합 계	8,747,325	4,530,608	△4,216,717	△48.2
일반회계	235,196	175,074	△60,122	△25.6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6,014,807	1,858,212	△4,156,595	△69.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430,994	2,430,994	0	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328	66,328	0	0.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 세출예산안 총규모 및 특징

우선,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조 6,820억원이며, ’25년도 본예산 11조 5,843억원에 비하여 18.0%인 2조 977억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조 9,294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출연 증액 등으로 인해 ’25년 본예산 6조 843억원에 비하여 30.0%인 1조 8,4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감액 등으로 ’25년 본예산 2조 4,836억원에 비하여 △997억원이 감액되어 2조 3,85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는 1조 9,509억원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R&D) 증액 등으로 ’25년도 본예산 1조 8,228억원에 비하여 7.0%인 1,281억원이 증액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4,103억원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증액 등으로 2025년도 본예산의 1조 1,879억원에 비하여 9.4%인 12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감액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5%인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지출규모)	11,584,302 (9,084,104)	13,682,009 (10,998,660)	1,078,099 (899,508)	8.6 (8.9)
일반회계 (지출규모)	6,084,286 (3,901,345)	7,929,350 (5,625,328)	1,146,551 (1,025,470)	29.6 (2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출규모)	2,483,649 (2,166,446)	2,385,940 (2,006,706)	△97,709 (△159,740)	△3.9 (△7.3)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출규모)	1,822,812 (1,822,812)	1,950,904 (1,950,904)	128,092 (128,092)	7.0 (7.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규모)	1,187,855 (1,187,801)	1,410,285 (1,410,192)	121,615 (121,576)	9.4 (△9.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규모)	5,700 (5,700)	5,530 (5,530)	△170 (△170)	△3.5 (△3.5)

주: 지출규모는 총지출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7,111억원(△12.5%) 감소한 11조 9,709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는 469억원(0.8%) 이관한 7조 8,824억원으로 편성되고,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는 1조 6,452억원(69.0%) 이관한 7,40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89억원(1.3%) 이관한 1조 3,914억원으로 편성됨.

'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A)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B)	이관액	
			B-A	%
합 계 (지출규모)	13,682,009 (10,998,660)	11,970,925 (9,666,810)	△1,711,084 (△1,331,850)	△12.5 (△12.1)
일반회계 (지출규모)	7,929,350 (5,625,328)	7,882,409 (5,578,387)	△46,941 (△46,941)	△0.6 (△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출규모)	2,385,940 (2,006,706)	740,692 (740,692)	△1,645,248 (△1,266,014)	△69.0 (△63.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출규모)	1,950,904 (1,950,904)	1,950,904 (1,950,904)	0 (0)	0.0 (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규모)	1,410,285 (1,410,192)	1,391,390 (1,391,297)	△18,895 (△18,895)	△1.3 (△1.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규모)	5,530 (5,530)	5,530 (5,530)	0 (0)	0.0 (0.0)

주: 지출규모는 총지출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① 보조금 내역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중 보조금은 총 3조 2,544억원으로, 이 중 민간경상보조는 2조 954억원, 민간자본보조는 4,730억원, 지자체경상보조는 1,769억원이며, 지자체자본보조는 5,090억원임.

'26년도 보조금 세출예산안은 '25년도 대비 2,907억원(9.8%)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유통기업 해외진

출 지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통상분쟁대응 등이 있음.

아래 표 중 음영표시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이관된 보조금 총액은 1조 4,281억원임.

'26년도 경상·자본 보조금 내역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2,963,700**	**3,254,355**	**290,655**	**9.8**
민간보조	**2,243,476**	**2,568,413**	**324,937**	**14.5**
지자체보조	**720,224**	**685,942**	**△34,282**	**△4.8**
◈민간경상보조	**1,969,019**	**2,095,433**	**126,414**	**6.4**
【일반회계】	**640,087**	**777,467**	**137,380**	**21.5**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1,098	11,829	731	6.6
대한상사중재원지원	743	669	△74	△10.0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631	6,450	△181	△2.7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11	41,404	△2,507	△5.7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1,074	89,710	98.2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0,390	14,048	3,658	35.2
해외진출기반구축	829	746	△83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9,290	340,129	10,839	3.3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200	8,200	-	-
양자산업협력	6,275	5,648	△627	△10.0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46,413	-	△46,413	순감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1,070	963	△107	△10.0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9,861	9,887	26	0.3
통상분쟁대응	1,080	2,700	1,620	150.0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604	596	△8	△1.3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2,821	1,968	△853	△30.2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	1,554	1,321	△233	△15.0
해외인재유치사업	-	3,448	3,448	순증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2,020	1,996	△24	△1.2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252	2,040	△212	△9.4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정보화)	475	-	△475	순감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18,090	21,647	3,557	19.7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1,317	1,267	△50	△3.8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547	35,036	30,489	670.5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18,066	14,794	△3,272	△18.1
엔지니어링산업진흥	1,970	1,802	△168	△8.5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918	826	△92	△10.0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2,019	2,020	1	0.0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00	300	-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691	902	211	30.5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600	555	△45	△7.5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370	360	△10	△2.7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660	670	10	1.5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	635	635	순증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636	636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5,657	7,646	1,989	35.2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2,633	2,633	-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46,000	46,000	순증
유통물류기반조성	1,662	1,526	△136	△8.2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	176	176	순증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0	70	-	-
자유무역지역관리	3,000	2,850	△150	△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6,761**	**701,293**	**△65,468**	**△8.5**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8,900	37,200	28,300	318.0
에너지바우처	501,365	517,167	15,802	3.2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5,185	5,108	△77	△1.5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5,869	4,853	△1,016	△17.3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393	190	△203	△51.7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	18	18	순증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4,624	15,956	1,332	9.1
석유유통구조개선	811	761	△50	△6.2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350	195	△155	△44.3
폐광대책비	166,368	57,606	△108,762	△65.4
탄가안정대책보조	51,433	50,895	△538	△1.0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50	150	-	-
일반광업육성지원	6,587	6,587	-	-
해외자원개발조사	3,674	3,105	△569	△15.5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052	1,352	300	28.5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150	150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44**	**2,880**	**△164**	**△5.4**
지역투자촉진	1,064	1,064	-	-
투자유치기반조성	1,780	1,636	△144	△8.1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200	180	△20	△1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414**	**2,287**	**△127.0**	**△5.3**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414	2,287	△127.0	△5.3
【전력산업기반기금】	**551,323**	**605,823**	**54,500**	**9.9**
전력효율향상	97,029	113,764	16,735	17.2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700	1,700	-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4,072	5,060	△29,012	△85.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0,754	193,012	42,258	28.0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	3,000	3,000	순증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	-	660	660	순증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	119,616	119,616	순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활성화지원사업	1,700	1,700	-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529	143	△386	△73.0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16,425	16,425	-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41,476	39,498	△1,978	△4.8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	3	3	순증
농어촌전기공급사업	88,614	87,939	△675	△0.8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86,163	-	△86,163	순감
사업운영비	1,199	1,060	△139	△11.6
전력산업홍보	2,093	50	△2,043	△97.6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7,761	13,905	△3,856	△21.7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08	-	△11,208	순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300	300	-	-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300	-	△300	순감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	7,988	7,988	순증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390**	**5,683**	**293**	**5.4**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4,540	4,876	336	7.4
몬트리올의정서대응	850	807	△43	△5.1
◈자치단체경상보조	**213,972**	**176,931**	**△37,041**	**△17.3**
【일반회계】	**4,689**	**50**	**△4,639**	**△98.9**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2,314	-	△2,314	순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00	50	△1,950	△97.5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375	-	△375	순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03**	**3,466**	**263**	**8.2**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3,203	3,466	263	8.2
【전력산업기반기금】	**187,977**	**153,228**	**△34,749**	**△18.5**
전력효율향상	7,300	6,570	△730	△10.0
전선로 지중화 지원	23,072	-	△23,072	순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00	1,450	950	190.0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87,078	88,176	1,098	1.3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66,228	52,897	△13,331	△20.1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3,799	4,135	336	8.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103**	**20,187**	**2,084**	**11.5**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자율)	-	3,602	3,602	순증
구역청투자유치지원	2,601	3,100	499	19.2
인천경제자유구역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5,376	5,376	-	-
지역균형발전지원	1,693	1,554	△139	△8.2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4,080	-	△4,080	순감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560	1,430	△130	△8.3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2,717	4,500	1,783	65.6
투자유치기반조성	76	55	△21	△27.6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제주)	-	330	330	순증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세종)	-	240	240	순증
◈자치단체자본보조	**506,252**	**509,011**	**2,759**	**0.5**
【일반회계】	**19,806**	**7,958**	**△11,848**	**△59.8**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5,925	3,500	△2,425	△40.9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1,004	-	△1,004	순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12,877	4,458	△8,419	△65.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3,448**	**-**	**△83,448**	**△100.0**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10,700	-	△10,700	순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5,400	-	△5,400	순감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사업	67,348	-	△67,348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7,168**	**501,053**	**103,885**	**26.2**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계정)	12,799	6,864	△5,935	△46.4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자율)	-	6,250	6,250	순증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자율)	-	51,522	51,522	순증
수소생산기지 구축	12,834	5,990	△6,844	△53.3
기타 기반시설 지원	24,576	25,288	712	2.9
주요기반시설지원	14,428	14,453	25	0.2
지역투자촉진	220,767	250,283	29,516	13.4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2,319	-	△2,319	순감
투자유치기반조성	104,500	124,400	19,900	19.0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664	920	256	38.6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제주)	-	500	500	순증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제주)	-	9,289	9,289	순증
지역투자촉진(세종)	4,281	5,026	745	17.4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	18	18	순증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세종)	-	250	250	순증
【전력산업기반기금】	**5,830**	**-**	**△5,830**	**△100.0**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3,000	-	△3,000	순감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2,830	-	△2,830	순감
◈민간자본보조	274,457	472,980	198,523	72.3
【일반회계】	**12,100**	**136,000**	**123,900**	**1,024.0**
킨텍스 3단계 건립	11,600	36,000	24,400	210.3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500	-	△500	순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100,000	100,000	순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937**	**75,685**	**39,748**	**110.6**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4,000	21,350	17,350	433.8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5,325	4,884	△441	△8.3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6,600	20,900	14,300	216.7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	581	581	순증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235	358	△877	△71.0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1,295	5,503	4,208	324.9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085	2,085	-	-
일반광업육성지원	15,397	16,397	1,000	6.5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3,627	3,627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0,000**	**200,000**	**-**	**-**
투자유치기반조성	200,000	200,000	-	-
【전력산업기반기금】	**26,420**	**61,295**	**34,875**	**132.0**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	-	21,340	21,340	순증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	12,942	12,942	순증
농어촌전기공급사업	26,420	27,013	593	2.2

자료: 산업통상부

② 출연금 내역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출연금은 총 8조 5,258억원으로, 이 중 일반출연금은 2조 3,853억원이고 연구개발출연금은 6조 1,405억원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원되는 금융성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6,005억원이 편성되었음.

출연금은 ’25년도 대비 29.4%(1조 9,355억원)가 증액되었으며, 산업혁신기반구축(R&D)(2,585억원), 산업기술국제협력(2,306억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2,014억원),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1,786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93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1조 2,909억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아래 표 중 음영표시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이관된 출연금 총액은 1조 4,141억원임.

’26년도 출연금 내역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계	**6,590,309**	**8,525,793**	**1,935,484**	**29.4**
◈일반출연금	**1,671,621**	**2,385,282**	**713,661**	**42.7**
【일반회계】	**539,847**	**1,368,416**	**828,569**	**153.5**
무역보험기금출연	80,000	600,500	520,500	650.6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	-	83	83	순증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31,207	31,207	순증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320	-	△320	순감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1,456	1,795	339	23.3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	1,649	1,409	△240	△14.6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	2,972	-	△2,972	순감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4,740	-	△4,740	순감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 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	-	500	500	순증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3,946	3,689	△257	△6.5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10,944	10,753	△191	△1.7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사업	4,762	4,311	△451	△9.5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 인력양성사업	2,960	2,771	△189	△6.4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710	8,620	3,910	83.0
배터리아카데미구축	6,000	5,740	△260	△4.3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3,700	3,650	△50	△1.4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	10,023	11,625	1,602	16.0
지속성장형기술인증	696	626	△70	△10.1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8,670	-	△8,670	순감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1,650	-	△1,650	순감
시스템반도체 IP Bank 플랫폼 구축	6,212	6,274	62	1.0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	180	180	순증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구축	-	2,194	2,194	순증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2,400	3,570	1,170	48.8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1,000	-	△1,000	순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25,213	-	△25,213	순감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4,000	3,986	△14	△0.4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11,150	11,150	-	-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기반조성	1,700	500	△1,200	△70.6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DX)지원사업	2,263	1,744	△519	△22.9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10	13,390	6,180	85.7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12,800	12,800	순증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1,300	1,017	△283	△21.8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 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	5,300	2,755	△2,545	△48.0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3,400	1,530	△1,870	△55.0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	2,822	-	△2,822	순감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제조실증 기반구축	1,200	595	△605	△50.4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3,500	2,500	△1,000	△28.6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4,000	3,500	△500	△12.5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400	5,610	3,210	133.8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1,920	1,913	△7	△0.4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3,200	3,579	379	11.8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6,400	5,100	△1,300	△20.3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9,240	11,196	1,956	21.2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2,400	2,855	455	19.0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3,240	2,916	△324	△10.0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000	2,125	125	6.3
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	2,712	3,458	746	27.5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2,500	2,500	-	-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1,300	3,230	1,930	148.5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	-	2,200	2,200	순증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	6,644	6,644	순증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	8,758	8,758	순증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3,200	4,080	880	27.5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	20,099	20,099	순증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	3,000	3,000	순증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4,985	4,985	순증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	3,615	3,615	순증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기반구축	-	2,280	2,280	순증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센터 구축	-	2,000	2,000	순증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	1,570	1,570	순증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지원	3,000	2,400	△600	△20.0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	55,923	55,923	순증
AI 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	3,200	3,200	순증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	-	3,000	3,000	순증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	2,500	2,500	순증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	-	6,000	6,000	순증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	7,663	7,663	순증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구축	2,515	-	△2,515	순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00	1,900	△100	△5.0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2,240	3,360	1,120	50.0
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	-	1,289	1,289	순증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	2,200	2,200	순증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	157,500	157,500	순증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2,250	3,000	750	33.3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1,439	1,439	순증
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3,000	2,850	△150	△5.0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2,229	1,800	△429	△19.2
미래 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	555	480	△75	△13.5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1,351	-	△1,351	순감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800	-	△800	순감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1,826	5,816	3,990	218.5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	2,000	1,843	△157	△7.9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2,000	3,075	1,075	53.8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3,000	2,135	△865	△28.8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300	292	△8	△2.7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XR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2,500	2,100	△400	△16.0
모빌리티실제환경모사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구축	2,600	3,800	1,200	46.2
바이오트윈기반미래차부품고도화기반구축	1,100	1,063	△37	△3.4
특장차수소파워팩기술지원기반구축	2,200	2,210	10	0.5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	3,600	1,573	△2,027	△56.3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2,100	2,900	800	38.1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3,000	2,400	△600	△20.0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평가 플랫폼 구축	3,150	618	△2,532	△80.4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6,000	3,500	△2,500	△41.7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560	2,432	△128	△5.0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1,600	2,040	440	27.5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1,500	1,530	30	2.0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5,000	4,250	△750	△15.0
미래자동차 구동계 소음·진동 평가기반구축	-	330	330	순증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	2,160	2,160	순증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인프라 구축	-	200	200	순증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	1,000	1,000	순증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생산 기반구축	2,855	2,402	△453	△15.9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1,660	3,003	1,343	80.9
모빌리티 인증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2,000	1,809	△191	△9.6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1,673	9,749	△1,924	△16.5
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1,190	1,071	△119	△10.0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2,000	3,103	1,103	55.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R&D)	31,459	28,605	△2,854	△9.1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2,423	2,629	206	8.5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20,277	27,953	7,676	37.9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	4,200	4,235	35	0.8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743	3,024	△719	△19.2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	2,436	2,436	순증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7,446	56,738	△708	△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944	7,371	427	6.1
디자인산업진흥	32,840	32,070	△770	△2.3
지식서비스기반구축	616	611	△5	△0.8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700	3,484	2,784	397.7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	100	100	순증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570	570	-	-
국가표준활성화	3,978	3,978	-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2,818	2,663	△155	△5.5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700	700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5,219	5,219	-	-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1,530	765	△765	△50.0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사업	2,400	1,680	△720	△30.0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 단지조성사업	2,250	-	△2,250	순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92,633**	**296,151**	**3,518**	**1.2**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124	446	△2,678	△85.7
에너지센서스	592	1,490	898	151.7
에너지국제협력	3,843	-	△3,843	순감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79,061	82,842	3,781	4.8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85,218	93,021	7,803	9.2
액화수소 검사 기반구축	7,895	-	△7,895	순감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	918	918	순증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918	-	△918	순감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1,535	1,449	△86	△5.6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14,715	9,785	△4,930	△33.5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1,520	1,788	268	17.6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5,912	7,612	1,700	28.8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300	8,800	8,500	2,833.3
광해방지사업	88,000	88,000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4,730**	**4,272**	**△458**	**△9.7**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730	4,272	△458	△9.7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7,236**	**381,890**	**134,654**	**54.5**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4,560	4,104	△456	△10.0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5,920	7,680	1,760	29.7
산업단지환경조성	212,078	334,640	122,562	57.8
지역균형발전지원	14,835	19,109	4,274	28.8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8,020	8,020	-	-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1,573	1,565	△8	△0.5
지역산업위기대응	-	6,522	6,522	순증
생활산업경쟁력강화	250	25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286**	**3,243**	**△43**	**△1.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3,286	3,243	△43	△1.3
【전력산업기반기금】	**99,925**	**187,178**	**87,253**	**87.3**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	24,500	24,500	순증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1,160	3,130	1,970	169.8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11,320	8,570	△2,750	△24.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119	7,623	2,504	48.9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8,000	9,000	1,000	12.5
무탄소에너지 보증	42,000	50,000	8,000	19.1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8,247	8,247	순증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	2,000	2,000	순증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4,183	5,559	1,376	32.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10,000	20,000	10,000	100.0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5,790	9,310	3,520	60.8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	1,972	-	△1,972	순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	21,526	21,526	순증
전력산업홍보	4,973	5,178	205	4.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780	780	순증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5,408	10,155	4,747	87.8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	1,500	1,500	순증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	100	100	순증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7,499**	**144,132**	**△13,367**	**△8.5**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47,916	17,572	△30,344	△63.3
처분시설운영	35,695	40,519	4,824	13.5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9,250	9,872	622	6.7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3,593	3,498	△95	△2.6
방사성폐기물홍보	2,912	2,762	△150	△5.2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1,502	2,500	998	66.4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37,674	40,783	3,109	8.3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18,957	26,626	7,669	40.5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연구개발출연금	4,661,264	6,140,511	1,479,247	31.7
【일반회계】	2,386,173	3,034,986	648,813	27.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166,145	201,395	35,250	21.2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6,529	17,332	803	4.9
산업혁신기반구축(R&D)	240,845	258,501	17,656	7.3
R&D관리기관지원(R&D)	25,557	34,022	8,465	33.1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R&D)	20,316	23,119	2,803	13.8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1,400	1,260	△140	△10.0
산업기술국제협력(R&D)	208,768	230,614	21,846	10.5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1,645	3,666	2,021	12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19,550	20,249	699	3.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44,445	45,625	1,180	2.7
기판실장용산화물계초소형 적층전고체전지(MLCB)개발(R&D)	6,670	5,835	△835	△12.5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6,300	9,792	3,492	55.4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100	115,737	115,637	115,637.0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 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R&D)	-	4,000	4,000	순증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18,403	18,973	570	3.1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46,888	23,142	△23,746	△50.6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D)	12,585	12,700	115	0.9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2,250	-	△2,250	순감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48,120	56,805	8,685	18.0
대중견 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R&D)	10,373	-	△10,373	순감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7,524	-	△7,524	순감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1,875	5,125	3,250	173.3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4,000	6,850	2,850	71.3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3,200	6,325	3,125	97.7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 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3,500	7,212	3,712	106.1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5,000	7,600	2,600	52.0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	17,835	17,835	순증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	4,500	4,500	순증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250	100	△150	△60.0
산업용무기·유기화합물제형 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	15,000	15,000	순증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 AI에이전트기술개발(R&D)	-	6,000	6,000	순증
열공정특화제조AI 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	12,000	12,000	순증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 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	5,250	5,250	순증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 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R&D)	-	2,000	2,000	순증
로봇산업기술개발(R&D)	148,612	173,529	24,917	16.8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R&D)	13,950	12,550	△1,400	△10.0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31,702	33,661	1,959	6.2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R&D)	1,160	-	△1,160	순감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 위한혁신기술개발사업(R&D)	1,200	8,910	7,710	642.5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오픈소스 및 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R&D)	300	2,500	2,200	733.3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1,000	-	△1,000	순감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사업(R&D)	1,200	2,200	1,000	83.3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사업(R&D)	450	-	△450	순감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R&D)	13,506	-	△13,506	순감
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기술개발(R&D)	-	3,000	3,000	순증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사업(R&D)	4,045	6,696	2,651	65.5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R&D)	38,131	57,655	19,524	51.2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사업(R&D)	2,740	2,400	△340	△12.4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 소재재도약사업(R&D)	4,000	6,386	2,386	59.7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 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5,850	5,150	△700	△12.0
바이오매스기반비건레더 개발및실증클러스터구축(R&D)	4,920	6,022	1,102	22.4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및셀적용기술개발(R&D)	5,850	5,150	△700	△12.0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2,550	6,500	3,950	154.9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R&D)	7,714	15,400	7,686	99.6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 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R&D)	1,008	806	△202	△20.0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 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사업(R&D)	2,000	2,000	-	-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지원(R&D)	2,000	2,500	500	25.0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R&D)	2,500	4,826	2,326	93.0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	4,800	10,287	5,487	114.3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FiberToFiber) 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R&D)	4,000	6,196	2,196	54.9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R&D)	1,600	3,200	1,600	100.0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R&D)	3,150	2,520	△630	△20.0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9,200	7,500	△1,700	△18.5
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열관리기술개발사업(R&D)	-	5,000	5,000	순증
미래모빌리티용부품내충격성향상을위한 저비용공정적용고분자공중합 체제조기술개발(R&D)	-	5,500	5,500	순증
뿌리산업혁신공정장비개발사업(R&D)	-	6,200	6,200	순증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기술개발(R&D)	-	3,500	3,500	순증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 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	5,000	5,000	순증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	2,900	2,900	순증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90,424	337,751	△52,673	△13.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119,165	178,562	59,397	49.8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R&D)	1,000	-	△1,000	순감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R&D)	1,100	-	△1,100	순감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4,250	6,188	1,938	45.6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2,068	3,330	1,262	61.0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R&D)	7,798	-	△7,798	순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R&D)	3,068	-	△3,068	순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R&D)	2,000	5,905	3,905	195.3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2,533	-	△2,533	순감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R&D)	2,183	1,735	△448	△20.5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개발사업(R&D)	3,000	7,800	4,800	160.0
해외수출형고출력전기 기관차구동변환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2,774	4,652	1,878	67.7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R&D)	5,350	6,000	650	12.1
SDV 아키텍처를 위한 In-Vehicle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R&D)	4,580	8,200	3,620	79.0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R&D)	4,000	7,000	3,000	75.0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R&D)	6,773	2,600	△4,173	△61.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17,900	7,800	△10,100	△56.4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30,239	27,406	△2,833	△9.4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46,310	29,635	△16,675	△36.0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R&D)	3,631	-	△3,631	순감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R&D)	6,654	-	△6,654	순감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 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R&D)	5,000	6,500	1,500	30.0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4,320	8,400	4,080	94.4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 및 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800	1,000	200	25.0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	185,060	185,060	순증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10,500	-	△10,500	순감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R&D)	21,170	24,910	3,740	17.7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00	39,188	21,388	120.2
K-치안수요기반피지컬 AI조명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	5,000	5,000	순증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R&D)	-	47,283	47,283	순증
배터리·디스플레이첨단 제조공정용레이저장비핵심기술개발(R&D)	-	5,640	5,640	순증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3,083	3,669	586	19.0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R&D)	17,300	15,636	△1,664	△9.6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파치계탄소소재개발사업(R&D)	-	3,075	3,075	순증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128,291	139,770	11,479	8.9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8,177	-	△8,177	순감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R&D)	1,332	1,190	△142	△10.7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4,140	2,970	△1,170	△28.3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 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R&D)	2,800	3,750	950	33.9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	19,980	19,980	순증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 제조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	8,800	8,800	순증
국가신약개발사업(R&D)	41,161	51,586	10,425	25.3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맞춤형 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R&D)	5,400	5,900	500	9.3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31,044	-	△31,044	순감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R&D)	1,700	1,700	-	-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 및 실증플랫폼기술개발사업(다부처특위)(R&D)	3,200	4,600	1,400	43.8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 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	4,800	7,260	2,460	51.3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R&D)	750	1,000	250	33.3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R&D)	6,594	6,755	161	2.4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4,440	5,100	660	14.9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R&D)	21,107	16,622	△4,485	△21.2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5,170	4,940	△230	△4.4
바이오파운드리 핵심장비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4,185	5,580	1,395	33.3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 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R&D)	2,088	2,820	732	35.1
세포및유전자치료 제제조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6,400	6,400	순증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R&D)	1,800	1,500	△300	△16.7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2,000	4,800	2,800	140.0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53,100	56,486	3,386	6.4
융복합 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R&D)	4,425	-	△4,425	순감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3,300	6,800	3,500	106.1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600	5,170	1,570	43.6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R&D)	-	5,370	5,370	순증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사업(R&D)	1,700	1,700	-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8,433	28,433	-	-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R&D)	2,000	3,250	1,250	62.5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R&D)	5,700	5,700	-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	15,587	25,166	9,579	61.5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	4,000	4,000	순증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	2,000	2,000	순증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	5,625	5,625	순증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	8,130	8,130	순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3,551**	**311,173**	**7,622**	**2.5**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197,961	194,829	△3,132	△1.6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9,022	-	△9,022	순감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495	-	△495	순감
액화수소(LH2)인수기지 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7,100	4,100	136.7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3,822	-	△3,822	순감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 안전성확보및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R&D)	-	4,000	4,000	순증
수용가전기설비원격점검 및 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	4,000	4,000	순증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 안전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10,290	3,500	△6,790	△66.0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 제조공정기술개발(R&D)	3,000	4,950	1,950	65.0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 개발활용기술개발(R&D)	3,889	3,000	△889	△22.9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 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R&D)	-	4,000	4,000	순증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R&D)	-	3,600	3,600	순증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R&D)	2,767	4,943	2,176	78.6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R&D)	6,994	3,900	△3,094	△44.2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 및 소재화기술개발(R&D)	5,000	4,860	△140	△2.8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4,018	52,113	8,095	18.4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30	630	-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5,275	3,733	242.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1,121	10,473	△648	△5.8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815,779**	**1,944,497**	**128,718**	**7.1**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77,993	1,290,947	112,954	9.6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58,244	219,989	61,745	39.0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	11,625	-	△11,625	순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162,613	113,772	△48,841	△30.0
국방무인기 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603	-	△603	순감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R&D)	2,500	-	△2,500	순감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R&D)	2,700	7,000	4,300	159.3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R&D)	4,000	4,000	-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18,000	50,000	32,000	177.8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R&D)	5,175	6,210	1,035	20.0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R&D)	3,000	4,000	1,000	33.3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5,400	6,730	1,330	24.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215,061	196,457	△18,604	△8.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4,814	4,748	△66	△1.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39,396	40,644	1,248	3.2
탄소산업기반조성(R&D)	3,955	-	△3,955	순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R&D)	300	-	△300	순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R&D)	400	-	△400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0,271**	**152,125**	**11,854**	**8.5**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36,935	69,947	33,012	89.4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17,752	29,160	11,408	64.3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11,171	11,482	311	2.8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3,980	11,276	7,296	183.3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60,104	-	△60,104	순감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	11,000	11,000	순증
AX실증밸리조성(R&D)	-	7,033	7,033	순증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	6,800	6,800	순증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1,378	-	△1,378	순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3,100	4,925	1,825	58.9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2,751	-	△2,751	순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3,100	5,425	2,325	75.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5,490**	**23,185**	**7,695**	**49.7**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1,650	1,650	-	-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R&D)	5,238	4,343	△895	△17.1
기술성과활용촉진(R&D)	7,435	16,185	8,750	117.7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1,167	1,007	△160	△13.7
【전력산업기반기금】	**543,858**	**631,363**	**87,505**	**16.1**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2,500	7,500	5,000	200.0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4,164	9,446	5,282	126.9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5,000	16,040	11,040	220.8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안증고도화혁신지원(R&D)	2,000	5,615	3,615	180.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314,103	335,756	21,653	6.9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2,403	1,225	△1,178	△49.0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6,302	3,168	△3,134	△49.7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사업(R&D)	1,160	-	△1,160	순감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및TestBed 구축기술개발사업(R&D)	2,924	-	△2,924	순감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 및 상태진단기술개발(R&D)	2,270	-	△2,270	순감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R&D)	2,004	-	△2,004	순감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R&D)	1,778	-	△1,778	순감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32,062	31,890	△172	△0.5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R&D)	1,284	-	△1,284	순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48,366	49,227	861	1.8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R&D)	32,920	26,665	△6,255	△19.0

세부사업	'25본예산	'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기술개발(R&D)	8,000	7,153	△847	△10.6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3,500	4,500	1,000	28.6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4,500	7,409	2,909	64.6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3,500	7,100	3,600	102.9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변압기 기술개발사업(R&D)	-	12,000	12,000	순증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대응 기술개발사업(R&D)	-	1,000	1,000	순증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 개발사업(R&D)	-	3,702	3,702	순증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5,592	-	△5,592	순감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576	76	△500	△86.8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4,024	2,033	△1,991	△49.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17,766	15,938	△1,828	△10.3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35,160	83,920	48,760	138.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0,031**	**38,259**	**△1,772**	**△0.044**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26,000	23,115	△2,885	△11.1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1,300	700	△600	△46.2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안전 관리강화기술개발(R&D)	5,100	8,944	3,844	75.4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 변화예측기술개발(R&D)	7,631	5,500	△2,131	△27.9

자료: 산업통상부

③ ’25년도 종료사업과 ’26년도 신규사업

’25년도 종료사업은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지원, 울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증설사업, 해상풍력산업지원,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R&D), 대·중견·중소 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R&D) 등이고,

’26년도 신규사업은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K-온디바이스AI 반도체기술개발(R&D), 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 지원,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AX실증밸리조성(R&D), 지역전략 산업기반고도화(R&D) 등으로 편성됨.

'25년도 종료사업 및 '26년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종료사업	'25 본예산	신규사업	'26 예산안
합계	**433,743**	**총합계**	**1,012,718**
【일반회계】	**297,701**	**【일반회계】**	**701,337**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2,772	첨단소재특화형AX플랫폼구축및실증	2,200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R&D)	1,000	디지털제품여권대응한국형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정보화)	705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R&D)	10,373	탄소저감형건설기계재제조품질인증기반구축을통한신시장개척사업	500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7,524	자동차부품순환경제혁신인프라구축	200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1,100	해외인재유치사업	3,448
수평적EV(전기차)산업생태계조성	1,351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6,000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R&D)(3551-359)	7,789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5,250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3,068	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	1,329
디지털융합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800	미래모빌리티용부품내충격성향상을위한저비용공정적용고분자공중합체제조기술개발(R&D)	5,500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4,425	뿌리산업혁신공정장비개발(R&D)	6,200
친환경선박전환대응미세먼지저감성능평가기반구축	4,740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2,000
조선해양 친환경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1,000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2,858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고도화지원사업	2,822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157,500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R&D)	1,000	모빌리티부품제조AI확산센터구축	2,000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2,533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1,570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	8,670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330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	1,650	전기상용차용멀티배터리시스템다중부하평가기반	2,16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142,221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1,000
전기차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사업(정보화)	475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지원	7,663

종료사업	'25 본예산	신규사업	'26 예산안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 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R&D)	1,160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 생산제조기반구축	2,194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R&D)	13,506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 구축	2,200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R&D)	450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6,644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R&D)	8,177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3,000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R&D)	3,631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4,985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 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6,654	AI 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실증지원센터구축	3,200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10,500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	3,000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31,044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100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R&D)	2,250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2,900
탄소중립융복합 자원화단지조성사업	2,250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 사업	8,75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지원	4,85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 구축지원사업	20,099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1,096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 구축	3,615
울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증설 사업	6,818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 기반구축	2,2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2,852**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 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	4,000
수소안전기반구축 및안전관리강화	918	첨단반도체후공정소부장 테스트베드구축	2,500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7,895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	6,000
수소충전인프라 안전관리핵심 기술개발(R&D)	495	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기술 개발사업(R&D)	3,000
액화수소충전핵심 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9,022	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열관리 기술개발사업(R&D)	5,000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10,700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 기술개발(R&D)	3,500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 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 실증(R&D)	3,822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 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5,000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9,383**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R&D)	185,060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	11,625	K-치안수요기반피지컬AI조명 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5,000
국방무인기 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603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R&D)	47,283

종료사업	'25 본예산	신규사업	'26 예산안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R&D)	2,500	배터리·디스플레이첨단제조공정용 레이저장비산업핵심기술개발 (R&D)	5,640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 (R&D)	300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피치계 탄소소재개발사업(R&D)	3,075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 뢰성기술고도화(R&D)	400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 지원	2,436
탄소산업기반조성	3,955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19,9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5,857**	세포및유전자치료제제조공정 고도화기술개발(R&D)	6,400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 (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 (R&D)	1,378	산업용유무기혼합물물성예측AI 파운데이션모델개발	15,000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60,104	열공정특화제조AI파운데이션 모델개발(R&D)	12,000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4,375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GATC)(R&D)	17,835
【전력산업기반기금】	**50,802**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 지속성장(R&D)	4,500
전력기자재디지털전환기반구축	1,972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1,439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 기술개발(R&D)	1,284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5,370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2,830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 및 실증(R&D)	4,000
전선로 지중화 지원	23,072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 (Speed-Up)사업(R&D)	2,000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및Test Bed구축기술개발사업(R&D)	2,924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5,625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 및상태진단 기술개발	2,270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76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 안전기술실증	1,160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R&D)	8,130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 개발	2,004	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0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894**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300	수소연료전지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구축	599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	1,778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수용가전기설비 원격점검및디지털 안전기술개발(R&D)	4,000

종료사업	'25 본예산	신규사업	'26 예산안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	4,000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 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	4,000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 · 재제조기술개발	3,600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3,7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6,834**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6,800
		AX실증밸리조성(R&D)	7,033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11,000
		지방주도형투자 · 일자리지원(자율)	3,602
		지방주도형투자 · 일자리지원(제주)	330
		지방주도형투자 · 일자리지원(세종)	240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18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율)	6,25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제주)	50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세종)	250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 구축(자율)	51,522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 구축(제주)	9,289
		【전력산업기반기금】	**193,653**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 조성	22,000
		K-그리드 인재 · 창업 밸리 조성	24,500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119,616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	3,000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8,247
		해상풍력용부품시험센터구축	2,000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 대응기술개발사업(R&D)	1,000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개발 사업(R&D)	3,702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건립	100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7,988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사업	1,500

자료: 산업통상부

④ 이관사업목록

우선, 세입예산안으로 산업통상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일반회계 601억원, 에특회계 4조 1,566억원과 전력기금 및 방폐기금 15조 5,268억원을 각각 이관하였고, 총계기준으로 2026년 이관한 세입예산액은 총 19조 7,435억원임.

산업통상부 '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입)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1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3,939	28,200	13,134	15,066
2	일반회계	과태료	364	268	158	110
3	일반회계	과징금	756	1,112	1,086	26
4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131,758	131,758	86,838	44,920
5	에특회계(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8,596	17,053	6,460	10,593
6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3,252	10,991	3,522	7,469
7	에특회계(투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54,714	49,421	15,838	33,583
8	에특회계(투자계정)	계정간전입금	158,244	147,644	-	147,644
9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전입금	1,242,635	909,142	-	909,142
10	에특회계(투자계정)	기금예수금	1,922,147	2,299,678	-	2,299,678
11	에특회계(투자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355,452	-	355,452
12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24,488	27,819	5,550	22,269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13	에특회계(융자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3,163	463,163	92,399	370,764
14	전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14,648	15,579	-	15,579
15	전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33,726	56,453	-	56,453
16	전력기금	가산금	2,782	2,798	-	2,798
17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2,687,997	2,616,097	-	2,616,097
18	전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91,587	108,433	-	108,433
19	전력기금	기타잡수입	1,847	31,532	-	31,532
20	전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29,915	285,543	-	285,543
21	전력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	443,259
22	전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	12,649
23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66,976	128,263	-	128,263
24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43,008	813,050	-	813,050
25	방폐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50,391	193,758	-	193,758
26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844,957	837,553	-	837,553
27	방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41,347	41,347	-	41,347
28	방폐기금	기타잡수입	88,184	88,184	-	88,184
29	방폐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3,866,300	4,016,300	-	4,016,300
30	방폐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06,192	100,321	-	100,321
31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37,435	352,147	-	352,147
32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971,396	5,383,527	-	5,383,527
합 계			18,670,867	19,968,494	224,984	19,743,510

자료: 산업통상부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으로 산업통상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회계(일반회계, 에특회계, 지특회계) 내 59개 세부사업 총 1조 7,111억원과 전력기금 및 방폐기금 15조 5,268억원을 이관하였고, 총계 기준으로 이관한 세출예산액은 17조 2,379억원임

‘본부인건비’, ‘본부기본경비(총액)’,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본부기본경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사업은 인원 이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이관하였고,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사업은 청년인턴 관련 예산 및 자체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 일부 예산을 이관하였음.

또한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회선비를 일부 이관하였고,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사업은 7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이관하였음.

산업통상부 ’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출)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1	일반회계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	176	-	176
2	일반회계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	4,000	-	4,000
3	일반회계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	2,000	-	2,000
4	일반회계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	8,130	-	8,130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5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97,729	103,415	85,793	17,622
6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총액)	2,847	3,203	2,871	332
7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118	118	-	118
8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30	30	12	18
9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17	17	-	17
10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7,278	7,386	6,181	1,205
11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1,292	1,311	-	1,311
12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	218	212	-	212
13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749	737	285	452
14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1,898	1,732	1,509	223
15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965	2,034	1,776	258
16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1,407	1,407	1,140	267
17	일반회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1,645	3,666	3,149	517
18	일반회계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	5,625	-	5,625
19	일반회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12,877	4,458	-	4,458
20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857	3,381	256	3,125
21	에특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2,395	2,559	1,735	824
22	에특회계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160	-	160
23	에특회계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124	446	-	446
24	에특회계	에너지센서스	592	1,490	-	1,490
25	에특회계	에너지국제협력	3,943	500	-	500
26	에특회계	회계관리비	39	39	-	39
27	에특회계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8,900	37,200	-	37,200
28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79,061	82,842	-	82,842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29	에특회계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	918	-	918
30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	501,365	517,167	23,140	494,027
31	에특회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14,715	9,785	-	9,785
32	에특회계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1,520	1,788	-	1,788
33	에특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5,912	7,612	-	7,612
34	에특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9,185	26,458	-	26,458
35	에특회계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5,869	4,853	-	4,853
36	에특회계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2,150	1,935	-	1,935
37	에특회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1,650	1,485	-	1,485
38	에특회계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5,718	5,074	-	5,074
39	에특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6,600	20,900	-	20,900
40	에특회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300	8,800	-	8,800
41	에특회계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	599	-	599
42	에특회계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197,961	194,829	-	194,829
43	에특회계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 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7,100	-	7,100
44	에특회계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안전성확보 및 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R&D)	-	4,000	-	4,000
45	에특회계	수용가전기설비원격점검 및 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	4,000	-	4,000
46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4,018	52,113	-	52,113
47	에특회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30	630	-	630
48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정책연구	600	261	37	224
49	에특회계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5,275	-	5,275
5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1,121	10,473	-	10,473
51	에특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58,959	231,590	-	231,590
52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91,038	276,510	-	276,510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53	에특회계	투자계정 전출	158,244	147,644	-	147,644
54	자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계정)	12,799	6,864	-	6,864
55	자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12,834	5,990	-	5,990
56	자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200	180	-	180
57	자특회계	AX실증밸리조성(R&D)	-	7,033	2,110	4,923
58	자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664	920	-	920
59	자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	18	-	18
60	전력기금	기금전담기관인건비	4,750	4,917	-	4,917
61	전력기금	기금관리비	1,778	1,816	-	1,816
62	전력기금	사업운영비	1,199	1,060	-	1,060
63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4,072	5,060	-	5,060
64	전력기금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8,554	127,674	-	127,674
65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35,160	83,920	-	83,920
66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점검	104,518	109,454	-	109,454
67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66,228	52,900	-	52,900
68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5,034	114,952	-	114,952
69	전력기금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	24,500	-	24,500
70	전력기금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3,286	3,286	-	3,286
71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1,160	3,130	-	3,130
72	전력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11,320	8,570	-	8,570
73	전력기금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1,340	1,204	-	1,204
74	전력기금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2,500	7,500	-	7,500
75	전력기금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4,164	9,446	-	9,446
76	전력기금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5,000	16,040	-	16,040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77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104,329	120,334	-	120,334
78	전력기금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700	1,700	-	1,700
79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202,085	-	202,085
80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326,300	648,000	-	648,000
81	전력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11,000	9,000	-	9,000
82	전력기금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안증고도화혁신지원(R&D)	2,000	5,615	-	5,615
83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	3,000	-	3,000
84	전력기금	무탄소에너지 보증	42,000	50,000	-	50,000
85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8,247	-	8,247
86	전력기금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	2,000	-	2,000
87	전력기금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	-	22,000	-	22,000
88	전력기금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4,183	5,559	-	5,559
89	전력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	119,616	-	119,616
90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10,000	20,000	-	20,000
91	전력기금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5,790	9,310	-	9,310
92	전력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활성화지원사업	1,700	1,700	-	1,700
93	전력기금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529	13,085	-	13,085
94	전력기금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16,425	16,425	-	16,425
95	전력기금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3,799	4,135	-	4,135
96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314,103	335,756	-	335,756
97	전력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2,403	1,225	-	1,225
98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6,302	3,168	-	3,168
99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32,062	31,890	-	31,890
100	전력기금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48,366	49,227	-	49,227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101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R&D)	32,920	26,665	-	26,665
102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기술개발(R&D)	8,000	7,153	-	7,153
103	전력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3,500	4,500	-	4,500
104	전력기금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4,500	7,409	-	7,409
105	전력기금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3,500	7,100	-	7,100
106	전력기금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변압기 기술개발사업(R&D)	-	12,000	-	12,000
107	전력기금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 대응기술개발사업(R&D)	-	1,000	-	1,000
108	전력기금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 기술개발사업(R&D)	-	3,702	-	3,702
109	전력기금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576	76	-	76
110	전력기금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4,024	2,033	-	2,033
111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17,766	15,938	-	15,938
112	전력기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86,163	21,526	-	21,526
113	전력기금	전력산업홍보	7,366	5,378	-	5,378
114	전력기금	전력산업정책개발	495	347	-	347
115	전력기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8,336	32,180	-	32,180
116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5,408	10,155	-	10,155
117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00	150,000	-	150,000
118	전력기금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	7,988	-	7,988
119	전력기금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	1,500	-	1,500
120	전력기금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	100	-	100
121	전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0,000	400,000	-	400,000
122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전출	200,000	200,000	-	200,000
123	전력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전출	1,242,635	909,142	-	909,142
124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09,714	34,599	-	34,599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5 본예산	'26 예산안		
				개편전	산업부	기후부
125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4,433	394,659	-	394,659
126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인건비	951	986	-	986
127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관리비	515	435	-	435
128	방폐기금	처분시설운영	35,695	40,519	-	40,519
129	방폐기금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9,250	9,872	-	9,872
130	방폐기금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47,916	17,572	-	17,572
131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3,593	3,498	-	3,498
132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홍보	2,912	2,762	-	2,762
133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26,000	23,115	-	23,115
134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1,300	700	-	700
135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안전관리 강화기술개발(R&D)	5,100	8,944	-	8,944
136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 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7,631	5,500	-	5,500
137	방폐기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1,502	2,500	-	2,500
138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37,674	40,783	-	40,783
139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18,957	26,626	-	26,626
140	방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4,016,300	4,516,300	-	4,516,300
141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352,147	367,501	-	367,501
142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838,759	5,945,524	-	5,945,524
합계			15,904,700	17,367,871	129,994	17,237,877

자료: 산업통상부

(3) 기금운용계획안

우선,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22조 269억원으로 '25년 20조 2,973억원에 비하여 8.5%인 1조 7,296억원이 증액되었음.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감액 등으로 '25년도에 비하여 △15.2%인 △382억원이 감액된 1,97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무역보험기금은 통화금융기관예치 증액 등으로 '25년도에 비하여 9.0%인 5,223억원이 증액된 6조 3,030억원이 편성되었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5년에 비하여 16.5%인 6,385억원이 증액된 4조 5,13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11조 13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운용계획(A)	'26년도 운용계획안(B)	증 감	
			B-A	%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157	4,513,656	638,499	16.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35,212	197,061	△38,151	△16.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406,202	11,013,137	606,935	5.8
무역보험기금	5,780,733	6,303,040	522,307	9.0
계	**20,297,304**	**22,026,894**	**1,729,590**	**8.5**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공정한 전환 지원 등 분야에 대해 '25년에 비하여 4.6%인 383억원이 증액된 8,637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운용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이는 산업통상부 총계 및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15조 5,267억 9,300만원(70.5%)을 이관하고 남은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6조 5,001억 100만원임.

'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운용계획(A)	'26년도 운용계획안(B)	증 감	
			B-A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35,212	197,061	△38,151	△16.2
무역보험기금	5,780,733	6,303,040	522,307	9.0
계	6,015,945	6,500,101	484,156	8.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52억원[3]으로 '25년도의 1,803억원에 비하여 5.6%인 9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561억원으로 '25년도 465억원에 비하여 20.8%인 97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수입은 1,331억원으로 '25년도 1,329억원에 비하여 0.2%인 3억이 증액되었음. 또한,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은 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재산수입	46,475	56,129	9,654	20.8
경상이전수입	132,890	133,146	256	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	31	△1	△3.1
수입대체경비수입	870	890	20	2.3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00	45,000	36,500	429.4
계	188,767	235,196	46,429	24.6

자료: 산업통상부

[3]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601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1,751억원임.

(2) 세출예산안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9,294억원[4]으로 ’25년도의 6조 843억원에 비하여 30.3%인 1조 8,45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408억원으로 ’25년도의 1,354억원에 비하여 4.0%인 5,4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93억원으로 ’25년도의 286억원에 비하여 2.2%인 6억원이 증액되었음.

주요사업비는 7조 7,593억원으로 ’25년도의 5조 9,203억원에 비하여 31.1%인 1조 8,390억원이 증액되었음.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계	6,084,286	7,929,350	1,845,064	30.3
인 건 비	135,390	140,842	5,452	4.0
기본경비	28,637	29,256	619	2.2
주요사업비	5,920,259	7,759,252	1,838,993	31.1

자료: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수출지원 기반활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기금출연 등이 증액 편성됨에

4)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469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7조 8,824억원임.

따라 ’25년도 대비 97.9%(6,862억원) 증가한 1조 3,871억원으로 편성함.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25년도 대비 535.8%(121억원) 증가한 143억원으로 편성함.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은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등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25년도 대비 4.0%(75억원) 증가한 1,947억원, 산업혁신지원 부문은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전출, 산업단지환경조성,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증액 등으로 ’25년도 대비 21.9%(1조 1,394억원) 증가한 6조 3,332억원으로 편성함.

’26년도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계	6,084,286	7,929,350	1,845,064	30.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084,286	7,929,350	1,845,064	30.3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700,935	1,387,104	686,169	97.9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250	14,306	12,056	535.8
○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187,224	194,709	7,485	4.0
○ 산업혁신지원 부문	5,193,887	6,333,231	1,139,354	21.9

자료: 산업통상부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5년도 대비 △0.9%(△554억원) 감소한 6조 148억원[5]이며, 전력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타계정전입금 등을 제외한 순계는 '25년에 비하여 △3.7%(△889억원) 감소한 2조 3,029억원임.

계정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투자계정의 경우 '25년도 대비 △587억원(△1.1%) 감소한 5조 5,238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중 전년도 대비 재산수입이 162억원(136.5%)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수입이 △1,084억원(△5.7%) 감액 계상되었음.

융자계정의 경우 '25년도 대비 33억원(0.7%) 증가한 4,910억원으로, 재산수입이 33억원(13.6%) 증액 계상되었음.

[5]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4조 1,566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1조 8,582억원임.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6,070,222	6,014,807	△55,415	△0.9
순 계	2,391,744	2,302,891	△88,853	△3.7
【 투자 계정 】	5,582,571	5,523,825	△58,746	△1.1
□ 재산수입	11,861	28,057	16,196	136.5
○ 관유물대여료	13	13	-	-
○ 정부출자수입	8,596	17,053	8,457	98.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252	10,991	7,739	238.0
□ 경상이전수입	1,892,232	1,783,852	△108,380	△5.7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61	161	-	-
○ 가산금	75	7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891,996	1,783,616	△108,380	△5.7
□ 세계잉여금	355,452	355,452	-	-
○ 세계잉여금이입액	355,452	355,452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323,026	3,356,464	33,438	1.0
○ 기금전입금	1,242,635	909,142	△333,493	△26.8
○ 계정간전입금	158,244	147,644	△10,600	△6.7
○ 예수금	1,922,147	2,299,678	377,531	19.6
【 융자 계정 】	487,651	490,982	3,331	0.7
□ 재산수입	24,488	27,819	3,331	13.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488	27,819	3,331	13.6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3,163	463,163	-	-
○ 융자원금회수	463,163	463,163	-	-

자료: 산업통상부

(2) 세출예산안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계는 ’25년도 대비 △3.9%(△977억원) 감소한 2조 3,859억원[6]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는 ’25년도 대비 △7.4%(△1,597억원) 감액된 2조 67억원임.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483,649	2,385,940	△97,709	△3.9
순 계	2,166,446	2,006,706	△159,740	△7.4
【 투자 계정 】	1,973,984	1,872,944	△101,040	△5.1
【 융자 계정 】	509,665	512,996	3,331	0.7

자료: 산업통상부

’26년도 세출예산안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투자계정은 ’25년도 대비 △5.1%(△1,010억원) 감액된 1조 8,729억원이고, 융자계정은 ’25년도 대비 0.7%(33억원) 증액된 5,130억원이 계상되었음.

주요 사업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자원정책 분야는 1조

6)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1조 6,452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7,407억원임.

228억원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이 증액되어 총 2.9%(284억원) 증액되었음.

재생에너지 및 에너신신산업 활성화 분야는 918억원으로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구축,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등이 증액되어 총 37.7%(251억원) 증액 계상되었음.

에너지공급체계구축 분야는 5,806억원으로 폐광대책비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총 △27.5%(△2,205억원) 감액되었음.

에너지기술개발 분야는 2,427억원으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등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총 △1.4%(△36억원) 감액되었음.

에너지기술기반확충 분야는 688억원으로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등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총 18.7%(108억원) 증액되었음.

회계기금간거래 분야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증액으로 45.7%(726억원) 증액 계상되었고, 정부내부지출거래 분야는 융자계정으로부터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이 △6.7%(△106억원) 감액 계상되었음.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 분야·계정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에너지자원정책	계	994,423	1,022,802	28,379
	투자계정	697,554	740,909	43,355
	융자계정	296,869	281,893	△14,976
재생에너지및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투자계정	66,714	91,848	25,134
에너지공급체계구축	계	801,158	580,622	△220,536
	투자계정	746,606	497,163	△249,443
	융자계정	54,552	83,459	28,907
에너지기술개발	투자계정	246,240	242,682	△3,558
에너지기술기반확충	투자계정	57,911	68,752	10,841
회계기금간거래	투자계정	158,959	231,590	72,631
계정간거래	융자계정	158,244	147,644	△10,600
합 계		**2,483,649**	**2,385,940**	**△97,709**

자료: 산업통상부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조 4,310억원으로 '25년도 2조 2,843억원에 비하여 6.4%(1,467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은 2조 3,040억원으로 '25년도의 2조 1,829억원에 비하여 5.5%(1,21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세계잉여금 71억원, 정부출자수입 79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 10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정부출자수입	4,757	12,685	7,928	166.7
기타재산이자수입	14,906	25,477	10,571	70.9
기타경상이전수입	43,818	43,818	0	0.0
전년도세계잉여금	16,965	24,092	7,127	42.0
일반회계전입금	2,182,941	2,304,022	121,081	5.5
기금전입금	20,900	20,900	0	0.0
계	**2,284,287**	**2,430,994**	**146,707**	**6.4**

자료: 산업통상부

(2) 세출예산안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 1조 9,509억원으로, ’25년도의 총 1조 8,228억원에 비하여 7.0%인 1,2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은 총 1조 7,026억원으로, ’25년도 대비 소재부품기술개발(R&D),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등이 증액됨에 따라 9.7%(1,50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소재부품장비기반구축은 총 2,418억원으로, ’25년도 대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등이 감액됨에 따라 총 △8.4%(△221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은 총 64억원으로, ’25년도 대비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총 △8.9%(△6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도 본예산 (A)	’25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1,551,853	1,702,648	150,795	9.7
소재부품장비기반구축	263,926	241,849	△22,077	△8.4
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	7,033	6,407	△626	△8.9
계	**1,822,812**	**1,950,904**	**128,092**	**7.0**

자료: 산업통상부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63억원으로 '25년도의 550억원에 비하여 25.0%인 13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54억원으로 '25년도의 29억원에 비하여 84.5%인 25억원이 증액되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609억원으로 '25년도의 501억원에 비하여 △21.6%인 △108억원이 감액되었음.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921	5,390	2,469	84.5
기타 경상이전수입	50,123	60,938	10,815	21.6
계	**53,044**	**66,328**	**13,284**	**25.0**

자료: 산업통상부

(2) 세출예산안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7]은 총 1조 4,103억원으로, ’25년도의 1조 1,879억원에 비하여 18.7%인 2,2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은 총 742억원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자율),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자율),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자율)이 신규편성되어 ’25년 대비 189.6%(486억원) 증액되었음.

지역지원계정은 총 1조 3,09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산업단지환경조성,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증액 등으로 1,608억원(14.0%) 증액,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총 160억원으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증액 등에 따라 ’25년도 대비 94억원(145.0%)이 증액되었음.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총 110억원으로 지역투자촉진(세종), 지역혁신클러스터(R&D)(세종) 증액 등에 따라 ’25년 대비 36억원(48.5%) 증액되였음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지역자율계정	25,633	74,228	48,595	189.6
지역지원계정	1,148,326	1,309,134	160,808	14.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515	15,964	9,449	145.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381	10,959	3,578	48.5
계	**1,187,855**	**1,410,285**	**222,430**	**18.7**

자료: 산업통상부

7)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189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1조 3,914억원임.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에서 일괄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5억원으로,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감액 등으로 '25년도 대비 △3.0%(△2억원) 감액되었음.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00	5,530	△170	△3.0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414	2,287	△127	△5.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3,286	3,243	△43	△1.3

자료: 산업통상부

7. 전력산업기반기금[8)]

(1) 수입계획안

'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규모는 4조 5,137억원으로 '25년도 대비 14.1%가 증가하였음.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수입은 720억원으로 '25년도 대비 48.9%(237억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수입은 2조 7,273억원으로 '25년도 대비 △1.9%(△550억원) 감액되었음.

잡수입은 315억원으로 '25년 대비 1607.2%(297억원) 증액되었고,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2,855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2.6%(2,313억원) 증액되었으며,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9,413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2.6%(2,313억원) 증액되었음.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4,559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44.0%(3,532억원) 증액되었음.

8) 조직개편으로 해당 기금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

’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계	3,875,157	4,513,656	638,499	16.5
□ 재산수입	48,374	72,032	23,658	48.9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8,374	72,032	23,658	48.9
□ 경상이전수입	2,782,366	2,727,328	△55,038	△2.0
○ 법정부담금	2,687,997	2,616,097	△71,900	△2.7
○ 가산금	2,782	2,798	16	0.6
○ 기타경상이전수입	91,587	108,433	16,846	18.4
□ 잡수입	1,847	31,532	29,685	1607.2
○ 기타잡수입	1,847	31,532	29,685	1607.2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9,915	285,543	55,628	24.2
○ 융자원금회수	229,915	285,543	55,628	24.2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09,984	941,313	231,329	32.6
○ 정부예금회수	09,984	941,313	231,329	32.6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671	455,908	353,237	344.0
○ 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343,259	343.3
○ 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9,978	373.6

자료: 산업통상부

(2) 지출계획안

’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4조 5,137원으로 ’25년도 대비 6,385억원(16.5%)이 증액되었음.

주요 사업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자원정책 분야는 3,052억원으로 전기설비안전점검, 전력효율향상 등이 증액되어 ’25년도 대비 16.3%(42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분야는 1조 1,24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플랫폼구축 등이 증액되어 ’25년도 대비 88.4%(5,27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에너지공급체계구축 분야는 3,161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어 ’25년도 대비 △4.2%(△1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에너지기술개발 분야는 4,909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등이 증액되어 ’25년도 대비 3.7%(17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에너지기술기반확충 분야는 1,234억원으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등이 감액되어 '25년도 대비 △14.9%(△217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전력산업경쟁력강화·수급안정(운영) 분야는 78억원으로 기금관리비가 증액되어 '25년도 대비 0.9%(1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분야는 2,076억원으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등 증액으로 '25년도 대비 7.5%(14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기금간 거래는 9,09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26.8%(3,335억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기금간 거래 분야(예탁금)은 4,000억으로 '25년도 대비 300%(3,00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간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보전지출로서 여유자금운용은 4,293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2.4%(1,051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
계	3,875,157	4,513,656	638,499	16.5
에너지자원정책	262,389	305,164	42,775	16.3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596,777	1,124,277	527,500	88.4
에너지공급체계구축	330,040	316,086	△13,954	△4.2
에너지기술개발	473,244	490,871	17,627	3.7
에너지기술기반확충	145,085	123,417	△21,668	△14.9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운영)	7,727	7,793	66	0.9
전력산업경쟁력강화	193,113	207,648	14,535	7.5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242,635	909,142	△333,493	△26.8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	400,000	300,000	300.0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0	0.0
여유자금운용	324,147	429,258	105,111	32.4

자료: 산업통상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9)]

(1) 수입계획안

'2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규모는 11조 13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5.8%인 6,069억원이 증액되었음.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수입은 1,938억원으로 '25년도 대비 28.8%(434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수입은 8,789억원으로 '25년도 대비 △0.8%(△74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882억원으로 '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5조 7,357억원으로 '25년도 대비 8.0%(4,26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4조 1,166억원으로 '25년 대비 3.6%(1,441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9) 조직개편으로 해당 기금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

’2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계	10,406,202	11,013,137	606,935	5.8
□ 재산수입	150,391	193,758	43,367	28.8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0,391	193,758	43,367	28.8
□ 경상이전수입	886,304	878,900	△7,404	△0.8
○ 기타경상이전수입	886,304	878,900	△7,404	△0.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8,184	88,184	0	0.0
○ 잡수입	88,184	88,184	0	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308,831	5,735,674	426,843	8.0
○ 정부예금회수	5,308,831	5,735,674	426,843	8.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72,492	4,116,621	144,129	3.6
○ 예탁원금회수	3,866,300	4,016,300	150,000	3.9
○ 예탁이자수입	106,192	100,321	△5,871	△5.5

자료: 산업통상부

(2) 지출계획안

’2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1조 13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5.8%인 6,069억원이 증액되었음.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방사성폐기물관리는 1,824억원으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등이 감액되어 ’25년도 대비 △7.7%(△151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은 14억으로 ’25년도 대비 △3.1%(△4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금간거래(예탁금)는 4조 5,163억원으로 ’25년도 대비 12.4%(5,00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지출로서 여유자금운용은 6조 3,130억원으로 ’25년도 대비 2.0%(1,221억원) 증액되었음.

’2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10,406,202	11,013,137	606,935	5.8
방사성폐기물관리	197,530	182,391	△15,139	△7.7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	1,466	1,421	△45	△3.1
기금간거래(예탁금)	4,016,300	4,516,300	500,000	12.4
여유자금운용	6,190,906	6,313,025	122,119	2.0

자료: 산업통상부

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1) 수입계획안

’26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규모는 1,971억원으로, 기술료가 주 재원인 산업기술혁신계정과 법정부담금이 주 재원인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운용되며 ’25년도 대비 △16.2%인 △382억원이 감액되었음.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수입계획 규모는 1,711억원으로 ’25년 대비 △17.0%인 △35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은 131억원으로 ’25년 대비 70.3%(2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경상이전수입은 649억원으로 ’25년 대비 16.4%(9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131억원으로 ’25년 대비 △70.3%(309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760억원으로 ’25년 대비 △26.6%(275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수입계획 규모는 260억원으로 ’25년 대비 △10.5%인 31억원이 감액되었음.

수입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재산수입은 5,700만원으로 '25년 대비 5.6%(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수입은 14억원으로 '25년 대비 △8.8%(△1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15억원으로 '25년 대비 9.4%(1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138억원으로 '25년 대비 △6.8%인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93억원으로 '25년 대비 △18.0%인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6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합 계	**235,212**	**197,061**	**△38,151**	**△16.2**
□ 산업기술혁신계정	**206,170**	**171,074**	**△35,096**	**△17.0**
○ 재산수입	2,935	2,116	△819	△27.9
○ 경상이전수입	55,749	64,879	9,130	16.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15,000	15,000	순증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3,986	13,079	△30,907	△70.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3,500	76,000	△27,500	△26.6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9,042**	**25,987**	**△3,055**	**△10.5**
○ 재산수입	54	57	3	5.6
○ 경상이전수입	1,530	1,395	△135	△8.8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36	1,462	126	9.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783	13,773	△1,010	△6.8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339	9,300	△2,039	△18.0

자료: 산업통상부

(2) 지출계획안

’26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1,971억원으로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성됨.

우선, 산업기술혁신계정은 1,711억원으로 ’25년 대비 △17.0%인 △351억원이 감액되었음.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은 1,181억원으로 ’25년 대비 △15.7%인 △22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행정지원은 10억원으로 ’25년 대비 1%인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기금간거래는 109억원으로 ’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기금간거래는 79억원으로 ’25년 대비 △78.0%인 △280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은 332억원으로 ’25년 대비 80.8%인 14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다음으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260억원으로 ’25년 대비 △10.5%인 △31억원 감액되었음. 주력산업진흥은 8억원으로 ’25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는 2억원으로 ’25년 대비 2.8%인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기금간거래는 90억원으로 '25년 대비 22.2%인 2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여유자금운용은 140억원으로 '25년 대비 △26.4%인 △50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26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25년도 계획(A)	'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
합 계	**235,212.0**	**197,061.0**	**△38,151**	**△16.2**
□ 산업기술혁신계정	**206,170**	**171,074**	**△35,096**	**△17.0**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140,030	118,061	△21,969	△15.7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행정지원	983	993	10	1.0
○ 회계기금간거래	10,900	10,900	-	-
○ 기금간거래	35,880	7,902	△27,978	△78.0
○ 여유자금운용	18,377	33,218	14,841	80.8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9,042**	**25,987**	**△3,055**	**△10.5**
○ 주력산업진흥	850	807	△43	△5.1
○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212	218	6	2.8
○ 기금간거래	9,000	11,000	2,000	22.2
○ 여유자금운용	18,980	13,962	△5,018	△26.4

자료: 산업통상부

10. 무역보험기금

(1) 수입계획안

'26년도 무역보험기금 수입계획안은 '25년도 대비 5,223억원(9.0%) 증가한 6조 3,030억원이 계상되었음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수입의 경우 '25년도 대비 314억원(12.7%) 증가한 2,796억원, 경상이전수입은 '25년도 대비 192억원(6.6%) 증가한 3,092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의 경우 '25년도 대비 2,583억원(36.9%) 증가한 9,588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25년도 대비 △3,071억원(△6.9%) 감소한 4조 1,550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25년도 대비 5,205억원(650.6%) 증가한 6,005억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음.

2026년도 무역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재산수입	248,123	279,563	31,440	12.7
경상이전수입	289,959	309,203	19,244	6.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00,530	958,796	258,266	36.9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462,121	4,154,978	△307,143	△6.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000	600,500	520,500	650.6
계	**5,780,733**	**6,303,040**	**522,307**	**9.0**

자료: 산업통상부

(2) 지출계획안

'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안은 '25년도 대비 5,223억원(9.0%) 증가한 6조 3,030억원이 계상되었음.

주요 내역을 보면, 무역보험지원은 '25년도 대비 △404억원(△7.6%) 감소한 4,880억원으로 감액 계상되었고, 기금운영비는 '25년도 대비 △55억원(△4.2%) 감소한 1,259억원, 여유자금운용은 '25년도 대비 5,682억원(11.1%) 증가한 5조 6,891억원으로 계상되었음.

'26년도 무역보험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 (A)	'26년도 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5,780,733	6,303,040	522,307	△9.0
무역보험지원	528,416	488,018	△40,398	△7.6
- 무역보험지원운영	511,132	467,818	△43,314	△8.5
- 무역보험환급금등	17,284	20,200	2,916	16.9
무역보험지원(기금운영비)	131,389	125,909	△5,480	△4.2
- 무역보험기금인건비	87,259	93,164	5,905	6.8
- 무역보험기금기본경비	44,130	32,745	△11,385	△25.8
여유자금운용	5,120,928	5,689,113	568,185	11.1
- 통화금융기관예치	2,920,860	2,425,187	△495,673	△17.0
- 국공채매입	229,690	241,772	12,082	5.3
- 기타유가증권매입	1,970,378	3,022,154	1,051,776	53.4

자료: 산업통상부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1) '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현황

'26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7조 4,468억원으로,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세입의 0.05%(2,352억원), 세출의 1.6%(7조 9,294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25년도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세 입	세 출
정부 전체	5,074,468(100)	5,074,468(100)
산업통상자원부	2,352(0.05)	79,294(1.6)
(※이관후)	(175,074(0.03))	(78,824(1.6))

자료: 산업통상부

세입과 세출 규모를 전년(본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총 세입은 46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1조 1,466억 증가하였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 감(B-A)	증감률
세입	188,767	235,196	46,429	24.6
세출	6,084,286	7,929,350	1,146,551	29.6

자료: 산업통상부

세출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5년도 예산에 비하여 무역진흥,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주력산업진흥, 신산업진흥 등이 증액되었고, 무역구제, 통상협력지원, 지역경제활성화, 포항지진 피해관리 프로그램이 감액되었음.

프로그램별 예산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무역진흥	594,056	1,243,907	649,851
무역구제	1,793	1,722	△71
통상협력지원	105,086	83,812	△21,274
산업경쟁력기반구축	1,152,850	1,672,865	520,015
산업기술기반구축	-	7,663	7,66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2,000	2,000
지역경제활성화	21,369	9,984	△11,385
주력산업진흥	1,153,950	1,619,950	466,000
신산업진흥	490,003	516,239	26,236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112,989	124,517	11,528
중견기업육성	66,523	123,571	57,048
에너지자원정책	-	176	176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2,250	11,625	9,375
에너지기술개발	-	8,130	8,130
포항지진 피해관리	13,252	4,458	△8,794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187,224	194,709	7,485
회계간거래	2,182,941	2,304,022	121,081
합계	**6,084,286**	**7,929,350**	**1,845,0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 프로그램은 6,499억원 증액되었고, 특히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이 5,20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무역구제 프로그램은 △1억원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이는 무역구제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통상협력지원 프로그램은 △213억원 감액되었고, 이는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ODA)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산업경쟁력기반구축 프로그램은 5,200억원 증액되었고, 산업혁신기반 구축(R&D),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등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산업기술기반구축 프로그램은 77억원 신규 편성되었고,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함.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은 20억원 신규 편성되었고,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R&D)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함.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은 △114억원 감액되었고, 이는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 사업 등이 감액편성된 것에 기인함.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은 4,66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R&D), 로봇산업기술개발(R&D),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등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신산업진흥 프로그램은 262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등임.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11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정보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은 5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자원정책 프로그램은 2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은 93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포항지진 피해관리 프로그램은 △88억원 감액되었으며, 산업통자원부행정지원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부사업 기준으로 종료사업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등 32개 사업이며, 무탄소에너지 보증,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등 69개 사업임.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종료사업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2,772	-
종료사업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R&D)	1,000	-
종료사업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R&D)	10,373	-
종료사업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7,524	-
종료사업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1,100	-
종료사업	수평적EV(전기차)산업생태계조성	1,351	-
종료사업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3551-359)	7,789	-
종료사업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 개발(R&D)	3,068	-
종료사업	디지털융합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800	-
종료사업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4,425	-
종료사업	친환경선박전환 대응미세먼지저감성능평가기반구축	4,740	-
종료사업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1,000	-
종료사업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지원사업	2,822	-
종료사업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R&D)	1,000	-
종료사업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2,533	-
종료사업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	8,670	-
종료사업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	1,650	-
종료사업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142,221	-
종료사업	전기차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사업(정보화)	475	-
종료사업	나노제품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R&D)	1,160	-
종료사업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R&D)	13,506	-
종료사업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R&D)	450	-
종료사업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8,177	-
종료사업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3,631	-
종료사업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6,654	-
종료사업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R&D)	10,500	-
종료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31,044	-
종료사업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2,250	-
종료사업	탄소중립융복합 자원화단지조성사업	2,250	-
종료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지원	4,852	-
종료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1,096	-
종료사업	울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증설사업	6,818	-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신규사업	첨단소재특화형AX플랫폼구축및실증	-	2,200
신규사업	디지털제품여권대응한국형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정보화)	-	705
신규사업	탄소저감형건설기계재제조품질인증기반구축을통한신시장개척사업	-	500
신규사업	자동차부품순환경제혁신인프라구축	-	200
신규사업	해외인재유치사업	-	3,448
신규사업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	6,000
신규사업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	5,250
신규사업	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	-	1,329
신규사업	미래모빌리티용부품내충격성향상을위한저비용공정적용고분자공중합체제조기술개발(R&D)	-	5,500
신규사업	뿌리산업혁신공정장비개발(R&D)	-	6,200
신규사업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	2,000
신규사업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	2,858
신규사업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	157,500
신규사업	모빌리티부품제조AI확산센터구축	-	2,000
신규사업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	1,570
신규사업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	330
신규사업	전기상용차용멀티배터리시스템다중부하평가기반	-	2,160
신규사업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	1,000
신규사업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지원	-	7,663
신규사업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구축	-	2,194
신규사업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	-	2,200
신규사업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	6,644
신규사업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	3,000
신규사업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	4,985
신규사업	AI 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실증지원센터구축	-	3,200
신규사업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	-	3,000
신규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	100
신규사업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	2,900
신규사업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	8,758
신규사업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	20,099
신규사업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	3,615
신규사업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기반구축	-	2,280
신규사업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	-	4,000
신규사업	첨단반도체후공정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	-	2,500
신규사업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	-	6,000
신규사업	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R&D)	-	3,000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신규사업	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열관리기술개발사업(R&D)	-	5,000
신규사업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기술개발(R&D)	-	3,500
신규사업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 개발(R&D)	-	5,000
신규사업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	185,060
신규사업	K-치안수요기반피지컬AI조명핵심기술개발및실증 (R&D)	-	5,000
신규사업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R&D)	-	47,283
신규사업	배터리 · 디스플레이첨단제조공정용 레이저장비산업핵심기술개발(R&D)	-	5,640
신규사업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피치계탄소소재개발사업 (R&D)	-	3,075
신규사업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 지원	-	2,436
신규사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	19,980
신규사업	세포및유전자치료제제조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6,400
신규사업	산업용유무기혼합물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	-	15,000
신규사업	열공정특화제조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	12,000
신규사업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	17,835
신규사업	저탄소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	4,500
신규사업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	1,439
신규사업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	5,370
신규사업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	4,000
신규사업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	2,000
신규사업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	5,625
신규사업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	176
신규사업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R&D)	-	8,130
신규사업	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	50,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제출 노력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무역보험기금 출연’(1138-881)은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05억원 증액된 6,00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00	80,000	380,000	600,500	520,500	650.6

자료: 산업통상부

② 대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제출 노력 필요

정부는 「무역보험법」[10]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수출금융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5,700억원, ‘RG특

10)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제31조(기금의 조성)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례보증 지원'을 위한 305억원 등 총 6,00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① 對美 투자지원 (570,000백만원)
- 최근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무보 기금여력 확충 및 기금건전성 제고 필요

② RG 특례보증 지원 (30,500백만원)
- 중소형 조선사 RG 지원 통한 조선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305억원 출연 필요 (총 2,000억원 지원 예정)

자료: 산업통상부

정부는 매년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목표 및 운용배수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여 출연연도에는 출연금을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하되, 차년도부터는 출연금을 특정 사업별로 관리·운용하기보다 기금총액(순자산)을 기반으로 보증·보험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기금배수(유효계약액/기금총액)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출연금 산정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예산	산정내역
2020	본예산	2,960	수출中企 신흥시장 진출확대, 新 수출시장 개척 지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 금융지원
	1차 추경	500	수출 中企 긴급유동성지원
	3차 추경	2,271	수출 中企 긴급유동성지원,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지원

구분		예산	산정내역
2021	본예산	3,500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신산업 지원
2022	본예산	912	新산업 지원, 수출中企 무역금융지원
2023	본예산	500	수출中企 무역금융지원, 글로벌공급망안정거래지원
2024	본예산	700	대규모프로젝트수주지원, RG특례보증지원, 원전수출보증지원*
2025	본예산	800	방산물자 수출지원, RG특례보증지원
2026	본예산(안)	6,005	대미투자지원, RG특례보증지원

주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하는 기금전입금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RG 특례보증 지원’이나 ‘국가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등과 같이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배수를 5배로 낮게 설정하고, 해당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된 금액은 사업별로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음.

2026년 ‘RG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보증수요 조사 등을 기반으로 총 2,000억원을 신규 보증·지원할 계획인데, 해당 사업은 단일 사고시에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특성상 운용배수는 5배[11]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을 400억원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정부는 재원절감을 위해 2020년에 이미 출연된 ‘국가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예산 1,600억원 중 잔액 95억원을 활용하여 305억원만 신규 출연할 계획임.

11) 참고로 2011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RG 보험 인수한도 특례 책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운용배수를 3배로 제한하여 왔음. 그러나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산업통상부는 2019년, 2024년 각각 400억원씩 총 800억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 11월부터는 운용배수를 5배**로 확대하였음.

2026년도 'RG 특례보증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26년 중소형 조선사 RG 특례보증 예상 수요에 대한 기존 운용배수 적용하여 필요 예산 산출하고, '20년 국가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받은 예산 잔액을 차감하여 최종 305억원 산출

- (① 필요예산 산출) 2,000억원(지원 수요) ÷ 5배(운용배수) = 400억원
- (② 예산잔액 차감) **400억원 - 95억원(국가개발 프로젝트 예산 잔액) = 305억원**

*** [참고] 국가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20년 출연)**

□ (사업개요) 低신용도 국가*의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발주된 프로젝트의 국내기업 수주 지원 * OECD 6·7등급, 국제신용평가사 B+(B1)이하 또는 등급 미보유 국가

□ (출연금) 1,600억원(예산) × 5배(운용배수) = 8,000억원(지원목표)

□ (지원현황) '25.8월까지 총 7,524억원 지원

□ (잔여한도 및 예산) 한도 기준 476억원, 출연금 기준 약 95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반면, '대미 투자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에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RG 특례보증 지원'과 달리 구체적인 지원목표나 운용배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임.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對美 투자패키지(출자, 대출, 보증)[12]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 후 10월 29일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매년 200억달러씩 10년간

12) □ (투자패키지)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 조성 약속

○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 1,500억불, 이외 2,000억불은 반도체· 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

* 미국 내 조선소 신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 등

자료: 산업통상부(2025. 8. 6.)

총 2,0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하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기 선박금융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MOU 등의 계약문서는 향후 작성 예정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국내 민간기업 및 은행, 글로벌 투자금융기관 등의 직접투자 및 대출규모, 그리고 이에 따른 보증·보험 수요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미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용등급과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보유한 국가이므로 '대미 투자지원' 사업은 통상적인 12.5배[13] 보다 높게 운용배수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투자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배수를 계획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2025년에 제1회 추경에 따른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중기 무역보험 긴급지원' 1,500억원은 예산안 산출시 12.5배~30배 가량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였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구 분	(본예산→) 추경안	보험공급액 목표
가. 방산물자 수출지원	(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 30배(운용배수) = 4.2조원 (+1,000억원 × 〃 = + 3조원)
나. RG특례보증	(400억원→) 900억원	900억원 × 5배(운용배수) = 4,500억원 (+500억원 × 〃 = + 2,500억원)

13)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치(8%)의 역수 적용

구 분	(본예산→) 추경안	보험공급액 목표
다. 美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中企 무역보험 긴급 지원	(순증) 1,500억원	1) 수출애로기업 핀셋 유동성 특별지원 : 800억원(추경) × 12.5배 = 1조원 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신용보증) 200억원 × 12.5배 = 2,500억원 - (단기수출보험) 300억원 × 30배 = 9,000억원 3) GVC 안정화 지원 : 200억원 × 12.5배 = 2,50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대미 투자패키지에 따른 보증·보험공급은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이 아니므로 30배 가량의 운용배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9월말 기준 기금배수는 21.8배로 전망됨.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배, %)

사업명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전망		2026 전망('25.9.)
				'24.9.	'25.9.	
기금총액(A)	34,118	39,187	47,756	45,998	55,758	63,494
정부출연금	912	500	700	800	3,800	6,005
자체수입	8,668	11,927	14,747	12,386	15,618	15,476
유효계약액(B)	865,524	1,009,241	1,034,558	1,152,607	1,217,460	1,386,117
기금배수(B/A)	**25.4**	**25.8**	**21.7**	**25.1**	**21.8**	**21.8**

주: 1. 기금총액: 기금의 순 자산
2. 유효계약액: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책임이 남아있는 책임잔액
3. 기금배수: 기금총액 대비 유효계약액 비율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대미 투자지원 사업의 운용배수를 높게 설정하더라도 기금배수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출연 지원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 또는 수출감소 우

려[14][15] 등으로 다른 보증·보험사업에 따른 유효계약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대미 관세협상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출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패키지 협상 결과와 별도로 최근 추진 중인 국내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따라서도 보증·보험 수요가 상당 수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국내기업의 주요 대미 투자 및 수입 계획(안)

분야	기업	투자 내용
반도체	삼성전자	텍사스 팹, 파운드리 공장 건설
반도체	SK하이닉스	인디애나 HBM 후공정 공장 건설
원자력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건설, 운영 등
자동차	현대차	조지아 HMGMA 전기차 공장 확장 및 부품사 현지화 추진
철강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
이차전지	LG엔솔	애리조나 포함 미 전역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 중
에너지	GS칼텍스, 포스코인터 등	미국산 원유 및 LNG 구매 확대

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재정리

그러나 2026년도 유효계약액(138조 6,117억원) 전망할 때 대미 투자패키지에 따른 보증·보험 수요를 고려하였고 단일 사업·요인으로는 가

14)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5년 8월 조사국·경제모형실)에 따르면 5월에는 **2026년도 재화 수출 증가율을 0.7%로 전망했으나, 8월에는 △0.1%로 하향조정**함.

15) **현대경제硏, 수출은 올해 -0.6%에서 내년 -1.0%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한편, 수입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내년 1.1%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
자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5048&siteId=1&utm

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같은 주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미 투자패키지 등 협상결과가 정리되면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지원 사업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기금배수 및 출연금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 이를 제출·설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국회 예산안 의결보다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동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변경하되, 사업목적을 대미투자지원으로 미리 지정[16]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이에 따라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실제 협상 및 사업계획 수립 결과 대미 투자지원 예산 5,700억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조기 집행하기 보다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반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금배수 및 출연금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가 미국 투자패키지 협상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미 투자지원 사업계획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는 사업계획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집행가능성 및 대외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1139-302)은 최근 미국의 품목관세 50% 부과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8억 5,8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음.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	-	-	-	2,858	2,858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집행가능성 및 대외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미국은 자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국방 관련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 2월 10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관세 25% 부과를 발표하고, 이후 6월 3일에는 이를 50%로 인상하였음. 구리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50% 수준의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비례하여 50% 품목관세를, 그 외 성분 함량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함.

우리나라 철강 산업 등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면, 미국 내 철강 산업 등은 비교적 생산 재확대를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기가 용이하여 국내 철강기업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17].

이에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25.3.)을 수립하여 불공정 철강수입재 국내유입차단(제3국을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세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이후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료 매입대금,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수요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추세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편성함.

---

17)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사)무역구제학회 최창환, 2025. 8., pp.62.
- 철강·비철금속 산업은 15.1%라는 상당한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자국산 제품으로의 대체가 용이하여 규모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동 사업은 통상 융자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형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M&A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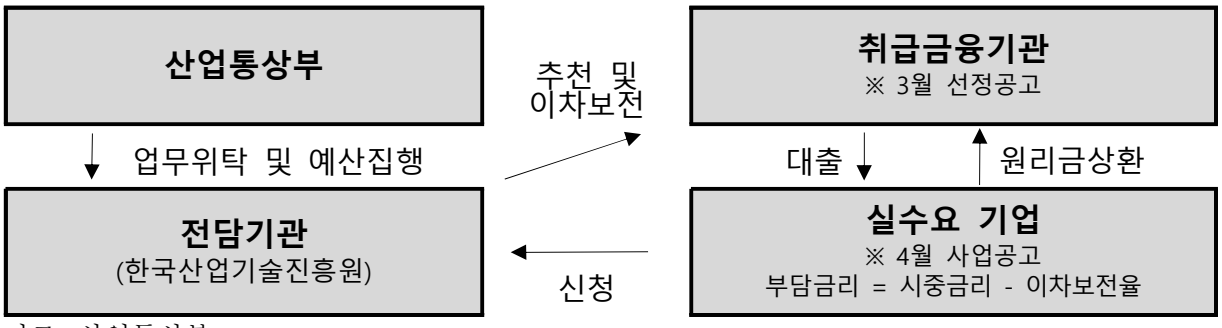
지원대상 자금 및 지원기간(안)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시설자금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M&A자금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자료: 산업통상부

그리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요기업을 취급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수요기업은 총 10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율에 따른 이자비용 지원분을 지급할 계획임.

이차보전 사업 집행구조



자료: 산업통상부

이차보전율은 각각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하여 약 30개 기업(중소기업 21개, 중견기업 9개)에 지원하기 위한 비용 28억 5,800만원을 예산안으로 산정함.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금 액
중소기업	대출한도 평균 5,000백만원 × 2.0% × 21개 기업	2,100백만원
중견기업	대출한도 평균 5,000백만원 × 1.5% × 9개 기업	675백만원
기관운영비	2,858백만원 × 3%	83백만원
합 계		2,858백만원

주: (이차보전금리) 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5%p /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 (기업규모가정)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 가정
자료: 산업통상부

즉, 예산안은 모든 기업이 연초부터 대출을 실행하고 1년간 소요되는 이자비용(평균 대출금×이차보전율×(12개월/12개월)×지원기업 수)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산정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신규 사업이므로 실제 기관 선정, 대출실행 등에 이르는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지원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보임.

10월말 현재 산업통상부는 이차보전 사업 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 공고를 2026년 3월에, 사업공고를 4월에 실시하고, 실제 이차보전은 6월부터 지원할 계획임.

대출이 6월 초부터 일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7개월분(58%)의 이차보전비용만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시기가 다양할 것이므로 평균 지원기간은 7개월보다 짧을 수 있음.

참고로 동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2022년 신규 추진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3551-326) 사업(이하 "친환경차 이차보전")은 사업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이후 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에 편성된 12개월분의 이차보전 비용(24억 9,000만원) 중 일부(4억 9,837만원)만 2022년 내에 실집행되고 19억 9,163만원(80.0%)이 이월되었음[18].

다음으로, 예산안 산출시에는 중소기업은 21개, 중견기업은 9개가 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산업통상부가 실시한 긴급 대출수요조사에서는 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4개로 나타나 오히려 중견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1,000억원 공급하고,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을 7,500억원(+5,000억원)으로 증액하여 상당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 바 있음.

---

18)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예산정책처, 2023. 7., 74쪽 (Ⅱ-3-2.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기업대출 부담완화 효과 부족 우려 등)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과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사업 비교

구분	중진공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사업
수행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대상기업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 경영애로 증빙 필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중소·중견기업 (잠정)
지원대상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 / 경영안전자금
지원산업	美 품목관세 조치 업종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업종
지원방식	융자(직접대출)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액(안)	1,000억원 (대출공급목표 1,000억원)	27.8억원('26예산안) (대출공급목표 1,500억원)
지원(대출) 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기업당 100억원
지원금리 (이차보전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3%p * '25년 4분기: 3.14%	- (중견기업) 1.5%p - (중소기업) 2.0%p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4년거치) ○(운전자금) 6년 이내 (3년 거치) ※ 만기연장 1년(기업요청시)	○(시설자금, M&A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구개발자금, 경영안전자금)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사업기간	'25년 한시	'26~'27년 한시(잠정)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산업통상부는 기존 대출수요 조사(8월, 1차) 외에도 9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다수 중소기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는 설명임.

이러한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1차 조사에서는 기업규모별 대출수요가 중견기업 75%, 중소기업 25%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를 전제로 예산안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현재 고관세가 부여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중진공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사업은 그 외에도 품목관세가 발효된 자동차부품 및 목재 등의 업종을 지원하며, 품목관세 발효현황에 따라 이를 추가 공시하기로 하는 등 지원업종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음[19].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산업 등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타 업종의 대출수요, 추후 관세 정책 변동가능성도 감안하면 동 사업 역시 지원계획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0월 29일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부 품목관세가 인하·면제되기로 합의되었으나,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4.1.), 의약품(4.1.), 핵심광물(4.22.), 항공기(5.1.), 폴리실리콘(7.1.), 무인항공기(7.1.), 풍력터빈(8.13.) 등의 품목에

---

19)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간접 거래 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은 '25년 공고일 현재 품목관세가 발효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에 대해 적용하며, 향후 추가 발효 시 해당 품목을 중진공 누리집에 추가 공시 후 확대 적용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자료: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15M0.do

대해서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저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조사개시일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수입품 조정 결정·조치(관세 부과, 수량 제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 관세정책은 추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와 함께 EU,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고려하여 지원업종 등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실제 평균 지원기간, 기업유형별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산정하고, 향후 대외 관세정책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수출지원기반활용: 신규 내역사업 차별화 및 지원기간 등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에 대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7억 1,000만원 증액된 1,810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91,364	180,171	181,074	89,710	98.2
- 통합지원사업	56,658	61,628	150,435	154,312	92,684	150.4
· 중견기업 수출 역량강화	25,000	25,000	25,000	23,670	△1,330	△5.3
·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31,080	36,050	124,857	130,064	94,014	260.8
·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578	600	600	600	0	0.0
- 개별지원사업	29,736	29,736	29,736	26,762	△2,974	△1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기존 바우처-긴급지원바우처 사업간 차별화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통합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수출 역량강화’,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등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및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중견기업 수출 역량강화’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2026년 예산이 일부 감액(250억원→236.7억원)되고,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산업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사업은 2025년 본예산 360억 5,000만원 대비 940억 1,400만원(260.8%) 증액된 1,300억 6,400만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산업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예산안 산출내역

❑ 산업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25) 361억원 → (’25추경) 1,249억원 → (’26) 1,301억원

○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474억 4,900만원 (+113억 9,900만원)
- (지원) 기존 수출바우처에 기회시장패키지 추가, 바우처 기업수요 반영, 기회시장패키지 서비스 신규 운영 및 물량 확대
- (산출내역) 1,335개사 × 51백만원 × 69.7% = 47,449백만원
  ((’25) 1,014개사 × 51백만원 × 69.7% = 36,050백만원)

○ 긴급지원바우처(관세대응바우처, 신규): 424억 4,300만원 (※ ’25추경 888억원)
- (지원) 미 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기업의 안정적 지원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정규화
  ※ 바우처 발급한도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등으로, 수출 애로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산출내역) 42,443백만원 (796개사 × 76.5백만원 × 69.7%)

○ K-수출스타 500(신규): 401억 7,200만원
- (지원) 10대 품목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선정,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인증·특허, Post R&D 등 수출중추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 지원기관(안) :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증·특허·물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Post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 (지원목표) 30년까지 500개사 육성, ’26년 100개사 지원
- (산출내역)
  · (지원패키지) 40,000백만원 (100개사 × 800백만원 × 50%)
  · (전담멘토링) 122백만원 (3명 × 40.6백만원)
  · (육성추진단) 50백만원 (10개 × 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사업 중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이하 “기존 바우처”)은 2025년 1,014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6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20], 2026년에는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1,335개사를 지원하기 위한 474억 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한편, 기존 바우처 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14대 메뉴판 서비스[21]에 ‘기회시장진출패키지’를 추가하여 지원기업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기회시장 진출패키지 서비스 구성 예시

구분	주요내용	서비스 명칭(안)
정보제공	기회시장 신속 진출 위한 국별 제도·시장특성·바이어 관련 심층정보 제공	- 기회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 국별 산업·제도(법률·회계 등) 현지전문가 연계 컨설팅 -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진출준비	기회시장 진출리스크 최소화 위한 사전 준비지원	- K-파트너스* 연계 1:1 멘토링 - 물류 루트 최적화 컨설팅 서비스 - 국별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 현지전문가 디자인(상품디자인 등) 서비스 - 국별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서비스
수출직결	국별 문화적 특성 반영한 현지 특화 마케팅 제공	- 국별 대형 유통채널 연계 판촉 서비스 -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서비스 - 현지 마케팅전문가 매칭 및 세일즈 대행 - 업종별 해외 아웃리치** 지원 서비스

주: *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관리하는 해외 현지 전문가(시장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산업전문가)로 구성, 우리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협력 진행
** 국내 업종별 협회·단체(자동차부품, 섬유산업 등) 주도의 해외 시장 진출사업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20] 실제로는 본예산 360억 5,000만원 중 224억 7,0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여 692개 기업을 선정·지원 중이고, 그 외 115억 8,000만원을 제1회 추경 편성 전에 관세대응 바우처로 사용(모집공고 4.2.~15.)하여 216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음.

[21] 기존 14개 서비스 메뉴: ①조사/일반 컨설팅, ②디자인개발, ③브랜드개발/관리, ④홍보동영상, ⑤통번역, ⑥역량강화 교육, ⑦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⑧해외규격인증, ⑨특허/지재권, ⑩홍보/광고, ⑪국제 운송, ⑫서비스대행/현지등록, ⑬법무·세무·회계 컨설팅, ⑭무역보험·보증

다음으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미 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888억원으로 추진된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에 정규편성한 것임.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사업은 추경 편성 이후 3차례 모집공고[22]되었으며, 2026년 긴급지원바우처는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사업의 최신 모집공고(9월, 2차 모집 연장)에 따른 지원요건 및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추후 긴급 보호무역조치 영향기업과 관세대응 119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바우처사업별 바우처 발급한도 비교

(단위: 백만원)

산업유형	단계	기존 바우처	'25 관세대응(9월)	'26 긴급지원
소재·부품·장비/그린	진입	50	75	75
	성장	70	105	105
	확장	100	150	150
소비재	진입	30	45	45
	성장	50	75	75
	확장	55	82.5	82.5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사업은 기존 바우처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산업(서비스 산업 제외)을 대상으로 바우처 발급한도를 높이되, 발급액 중 30% 이상을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23]에 사용하도록 함. 특히 9월 2차 연장 모집공고에서는 바우처 발

22) ① 5. 16. 1차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93호)
② 8. 15. 2차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77호)
③ 9. 1. 2차 모집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23)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는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것으로, 기존 15개 서비스 메뉴 중 ①조사/일반컨설팅, ⑬법무·세무·회계컨설팅, ⑪국제운송, ⑦전시회/

급한도 및 물류비 지원한도(3,000만원 → 6,000만원)를 추가상향하였으며, 2026년 긴급지원바우처에서도 이를 유지할 계획임.

그런데 10월 21일 기준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은 총 2,262개, 이 중 관세대응 패키지 공급기업은 총 1,139개이지만, 관세대응 패키지 공급기업은 모두 기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도 선정되어 있음. 한편, 관세대응 패키지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실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365개로써,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공급기업은 기존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 풀에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기업'의 중복으로 서비스 '내용' 중복가능성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관세대응 서비스 공급기업이 기존 바우처 공급기업에도 포함되나 해당 기업이 관세대응 패키지서비스로 등록한 서비스는 기존 바우처 선정기업이 사용할 수 없고, 관세대응 패키지는 14개 서비스 메뉴 중 6개[24]를 공급하는데 이 중 조사/일반 컨설팅 유형에서는 해외전문가 300명과 연계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생산거점 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설명함.

참고로, 2026년부터는 기존 바우처 사업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회시장 진출패키지 서비스를 추가될 예정인데 이는 관세대응 바우

행사/해외영업지원, ⑧해외규격인증, ⑨특허/지재권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24) ①조사/일반컨설팅, ⑬법무·세무·회계컨설팅, ⑪국제운송, ⑦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⑧해외규격인증, ⑨특허/지재권

처의 생산거점 이전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부 겹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해외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성, 전문성 등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산업통상부는 그 외에 선정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출한 후 정산받는 사후정산[25]에 대해서도 관세대응 바우처에 대해서는 허용 항목을 확대하는 등 기존 바우처와 관세대응 바우처간 서비스 내용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기존 바우처 대비 관세대응 바우처 사후정산 확대 적용 예시

바우처 서비스 메뉴	기존 바우처	관세대응 바우처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항공임 지원 없음	미국 바이어 방문 항공임 지원
국제 운송	해당 없음	현지법인 대상 무상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중간재 운송비 지원
특허	해당 없음	IP권리화 비용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기존 바우처 사업으로 선정·지원받는 기업은 해외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후정산 항목 및 발급한도가 2/3가량으로 낮다는 3가지 점을 제외하면,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바우처를 사용하여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비율 제한이 없어 오히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함.

---

25) 「KOTRA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
바. "사후정산"이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전시회 참가에 따른 해외항공임,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비용**에 대해 수행기관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직접 서비스 진행 후, 운영기관에 청구하는 정산 방식을 말한다.

긴급지원 바우처 사업은 2026년 본예산 사업으로 정규편성된 만큼 기존 바우처 사업과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26]. 차별화가 미흡하면 사업 간 유사기능 중복, 예산상 칸막이 구조 등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긴급지원 바우처는 사업취지상 관세로 상당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는 기존 바우처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피해정도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부여, 지원한도 및 지원율 확대, 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목적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6) 산업통상부는 그 외에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선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설명임.

③ K-수출스타 500 사업 적정기간 지원 필요

‘산업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사업 내에 신설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은 수출 중추기업(수출 1,000만~5,000만$[27])을 확대·육성하여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026~2030년간 10대 품목·업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매년 100개사 선정하여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인증·특허, Post R&D 등 수출중추기업 육성 패키지를 지원하고자 함.

2026년도 K-수출스타 500 예산안 산출내역

- (물량) ’30년까지 500개사 육성, ’26년 100개사 지원 - (산출내역) · (지원패키지) 40,000백만원 (100개사 × 800백만원 × 50%) · (전담멘토링) 122백만원 (3명 × 40.6백만원) · (육성추진단) 50백만원 (10개 × 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10대 업종·품목으로 우선 美 품목 관세 대상 업종 3개(철강, 자동차, 가전)와 미래전략 7대 업종(방산, 바이오, 조선, 전력기자재, 이차전지, 소비재, 서비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관세 상황,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고,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인증·특허·물류 및 POST R&D 세 가지 유형의

27) 중추기업: 수출 1천만불 초과 5천만불 이하 기업(’24년 기준 2,586개)으로 ’21년 이후 지속 감소 중
※ (’21) 2,789개, (’22) 2,708개, (’23) 2,621개, (’24) 2,586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중 프리미엄 해외마케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인증·특허·물류 및 POST R&D에 대해서는 40% 이내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임.

수출 중추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내용(안)

구분	수행기관	지원내용(안)
프리미엄 해외 마케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수요 기반 수출상품 공동 기획 및 마케팅 - 현지 최신 트렌드·수요 기반으로 예비 히트상품 및 시장 제시, 공동 기획 및 개발 후 마케팅 지원
		· 산업별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 지원 - 핵심 바이어 발굴과 파트너십 형성, 마케팅 활동 및 영업망 구축, 현지시장 정착과 점유율 확대 지원 - 1년간 상시 맞춤형 지원 및 단독 행사·판촉 개최 지원
		· 해외법인 설립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 - 현지 전문 컨설팅기관(법무·회계·노무·관세 등) 활용 지원,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애로 해소
인증·특허·물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인증] 인증조사 및 사후관리 원스탑 지원 - 필수인증확인-획득전략수립-시험진행·관리-사후관리
		· [특허] 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분쟁지원 등 맞춤형 특허 지원
		· [물류] 물류 최적화 컨설팅 및 풀필먼트 지원 - 물류 최적화 컨설팅(물류 협의체 연계) 및 해외 공동물류 네트워크 활용 지원 등 - FTA활용 및 관세·통관 관련 애로해소 지원
Post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 수출목적형 R&D 컨설팅 -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R&D 완료 과제의 해외현지 기술규제·규격·인증 컨설팅 제공
		· 단기실증 지원 - 분야별 해외 주요기업 수요 반영 단기실증 관련 파트너 매칭, 실증결과 바탕 시제품 개발 및 인증 연계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수출지원사업은 단년도로만 지원하면 수출성공의 지속성 및 사업효과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후관리를 지원과 함께 2026년에 선정된 기업이 다음 연도에도 신청·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장기간 지원이 집중되면 지원대상 기업 수가 한정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성과 우수기업에 한해 재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제를 도입하여 지원 기간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재지원을 허용하고 매년 지원기업을 100개씩 선정하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외한 실제 지원기업 수는 5년간 500개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동 사업 추진 목적이 수출 중추기업 저변 확대 및 감소세 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 지원기업 수가 100개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기업 수, 지원한도 및 졸업주기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1~2024년간 수출 중추기업 수

(단위: 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중추기업수	2,789	2,708	2,621	2,586
전년대비 증감	-	△81	△87	△35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재선정 기준, 졸업제도를 조속하게 마련하고 이를 내년 사업공고시 공표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업관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I전시회 사업의 관련 전시회간 통합·연계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직망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억 3,900만원 증액된 3,40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17,455	329,290	334,606	340,129	10,839	3.3
- 조직망운영비	70,572	66,830	66,830	73,122	6,292	9.4
- 인건비	153,721	165,251	165,251	174,020	8,769	5.3
- 경상경비	2,657	2,556	2,556	4,520	1,964	76.8
- 예비비	5,499	5,677	5,677	5,893	216	3.8
- 정보화경비	6,398	5,542	5,542	8,159	2,617	47.2
- 사업비	78,609	83,434	88,750	74,415	△9,019	△10.8

자료: 산업통상부

② AI전시회 사업의 관련 전시회간 통합·연계 강화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사업비’로 내내역사업인 ‘수요연계형글로벌 진출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예산 중 2026년 ‘AI전시회’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2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28] 주최인 '산업 AI 엑스포 및 컨퍼런스·부대행사'(이하 "AI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외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로보월드[29] 행사와 연계하여 융합특별관을 운영하고 공동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이는 붐업코리아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수출전시회의 경우 2024년부터 다른 전국 주요 산업전시회와 연계하여 '수출 붐업코리아 Week'[30]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가 짧은 방한 기간 중에도 유망 국내기업 정보를 통합제공받고 다양한 지역 방문이 활성화되며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부는 2026년에 신규 추진되는 AI전시회에 대해서도 여러 전시회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며, 통상 AI, 반도체, 로봇 산업 등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이와 같이 해당 산업 전시회를 서로

28) 정부조직 개편 이전 계획으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공동주최 여부 추후 논의 필요

29) 행사개요

행사명	개최 규모	주최/주관	소관부처	주요 내용 및 특징
한국전자전 (KES)	550개사 1,300부스 참관객 7만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부	국내 대표 전자IT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AI,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전시회
반도체대전 (SEDEX)	280개사 700부스 참관객 6만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산업부	국내 최대규모 반도체산업 전시회
로보월드	350개사 900부스, 참관객 5만명	한국로봇산업협회	산업부	국내 최대규모 로봇산업 전시회

30) 「전국에 수출과 내수 활력의 불씨를 심는다,「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4. 10. 15.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 붐업코리아 Week」 행사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10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K Connect AI 2026’ 행사개요

○ (기간·장소) ’26.10.13.(화)~11.7.(토) / KINTEX, COEX ○ (행사규모) 기업 1,500개사, 해외바이어 1,000개사, 참관객 15만명 ○ (행사내용) **산업 AI 엑스포 및 컨퍼런스·부대행사(잠정KINTEX, 10.21.~23.)**, 전자전(COEX, 10.13.~16.), 반도체대전(COEX, 10.14.~16.), 로보월드(KINTEX, 11.4.~7.) * 각 전시회별 AI 역량·혁신 모델 전시 융합특별관 운영, 공동 홍보 ○ (주요 전시분야) 자율제조, AI 인프라·플랫폼, 의료 AI 등 ○ (주최)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 (주관) KOTRA·산업지능화협회 / (협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반도체산업협회·로봇산업협회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AI 분야는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31] 등 각종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시회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산업통상부 내 전시회간 연계 외에도 부처간·기관간 협의를 통해 통합·연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산업통상부는 ‘붐업코리아 Week’ 행사를 매년 10월말에 추진하고 있어 ‘K Connect AI 2026’ 행사와 개최시기가 서로 중첩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K Connect AI 2026’ 내 연계전시회로 계획된 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로보월드는 최근 붐업코리아 연계전시회로도 운영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붐업코리아 Week’와 ‘K Connect AI 2026’

31) AI SEOUL 2025, 2025. 2. 11., 코엑스, 서울특별시 주최(https://aiseoul2025.com/home/i1.php?s=11)

행사도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AI와 관련하여 해외바이어를 적극 유치하여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2025년에 이미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7개 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으로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는데, 2026년부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공동 주관으로 AI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2회 산업AI 엑스포는 AI 전시회와 통합할 예정임[32].

제1회 산업AI EXPO 행사개요

○ (행사명) 제1회 산업AI EXPO * 주제 : AI와 산업의 융합,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다.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의 AI기반 핵심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으로 마련 ○ (일 정) 2025년 9월 3일(수) ~ 9월 5일(금), 3일간 ○ (장 소) 코엑스 마곡전시장(7,452m^2), 르웨스트홀B+C, 비즈니스라운지 등 ○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 (참가대상) 산업AI 활용 선도기업(국내 대·중견·중소·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 연구기관(민간, 공공), 학계, 지자체 등 ○ (행사규모) 133개 업체, 320 부스 / 21,709명 방문

자료: 산업통상부

32) 제2회 산업AIEXPO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부스참가 가신청(9.10.~10.31.)을 받음.

-행 사 명 : 2026 산업AI 엑스포
-일시/장소: 2026년 10월(예정)
-예상규모 : 150개 기업, 350개 부스

자료: [제2회 산업AI EXPO] 2026년 가예약 신청안내
https://industrialaiexpo.or.kr/Contents.asp?LoadPage=NoticeView&board_idx=83&board_id=notice

그런데 당초 제1회 AI 엑스포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국고 예산 지원 없이 민간 부담 9억 8,300만원으로 개최된 바 있고, 당시 임차비, 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등의 항목이 모두 민간부담으로 충당되었음. 2026년에는 20억원 예산[33]의 AI전시회 사업과 통합되면서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자체부담을 축소하고 주로 관리·행정업무에 따른 인건비 위주로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음. 즉, 신규 국고지원으로 기존 민간투자를 일부 대체하여 전체적인 지원효과 또는 행사규모 확대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음.

제1회 AI 엑스포 예산 소요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내 용	예산
임차비	전시장/회의장 임차료 및 관리비	130
행사 운영비	- 장치 및 현장운영 및 보안, 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 등	623
행사 홍보비	사이트 구축 및 언론홍보 등	50
인건비	행사 기획 및 운영	120
부대행사 운영비	포럼/컨퍼런스/세미나 등 부대행사 운영비	60
합 계		983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기존 제1회 AI 엑스포가 AI전시회와 통합되면서도 사업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자부담 등을 제고하고 재원 및 역할분담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33) 지급임차료, 장치비, 연사료, 인건비, 홍보비, 행사비 등 지원 예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K Connect AI 2026’ 행사를 주최하면서 AI 및 수출 관련 전시회 등을 상호 연계하고, 통합예정인 기존 민간 전시회와도 통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재정여건 및 다른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통상피해지원 필요

① 결산 현황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1935-301)은 FTA 체결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FTA 전문인력양성, FTA 이행상황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2,600만원 증액된 117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12,780	11,293	11,293	11,719	426	3.8
- 중소기업FTA활용 지원	11,087	9,722	9,722	9,722	0	0.0
- FTA전문인력양성	1,163	714	714	714	0	0.0
-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	530	857	857	1,284	426	49.7

자료: 산업통상부

② 재정여건 및 다른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통상피해지원 필요

내역사업인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은 ‘FTA이행상황평가등’과 ‘통

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으로 구분되고, 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 사업은 2025년 시행[34]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35]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기술·경영지원을 하기 위해 2025년 신규편성된 사업임.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산출내역

'25 예산	'26 예산안
❑ (요구)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기술·경영 혁신지원을 위한 사업비 350백만원	❑ (요구) 타국과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 및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등 통상환경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기술·경영 혁신지원을 위한 사업비 376백만원
❑ 산출내역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및 사후관리 89백만원(40개사 × 2.2백만원) ○ 지정기업 기술·경영 혁신지원 261백만원(15개사 × 17.4백만원)	❑ 산출내역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및 사후관리 88백만원(40개사×2.2백만원) ○ 지정기업 기술·경영 혁신지원 288백만원(16개사×1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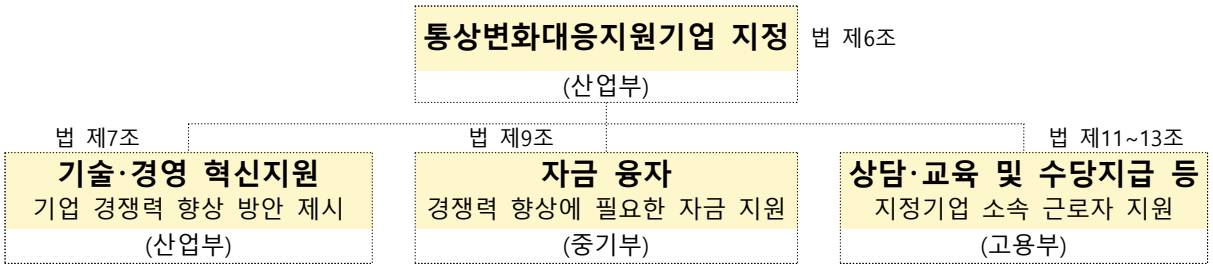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예산으로 FTA 등 통상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정하여 기술경영혁신(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간 100억원 한도의 융자사업을 실행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정기업의 소속 근로자의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34)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458호)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2024년 2월 20일 일부개정되고, 2025년 1월 1일 시행됨.

3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입지(立地)・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근로자 지원 체계도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에 따른 변화대응[36]과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대응[37]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역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기업도 해당 법률 및 동 사업에 따른 통상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산업통상부는 2025년 동 사업으로는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38]에 대해서만 현행법 제7조에 따른 기술·경영 혁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3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8) ○ (지정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2026년부터는 통상협정등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기술·경영 혁신지원을 지원하고자 함.

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기존 자유무역질서에서 벗어나 각국이 개별조치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존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상대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00만원을 증액한 3억 7,600만원에 그치는데 비해, 산업통상부는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9.3.)에 따라 2026년 관세피해 긴급지원 예산안으로 총 6,15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관세피해 긴급지원 예산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방식	예산규모 (백만원)
수출지원기반활용 (1139-307) (긴급지원바우처)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조사컨설팅, 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 국제운송 등 수출 전 과정 바우처 지원	민간경상보조	42,443
무역보험기금출연 (1138-881) (대미 투자지원)	-대미 투자패키지 등 투자지원	-대미투자시 보증·보험 공급	출연	570,000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1139-302)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중소·중견기업	-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2,858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 지원범위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것이므로 미국 관세조치 외의 보호무역조치도 포함하는데, 오히려 동 사업 예산안은 긴급지원 예산안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에 따른 경영혁신 관련 컨설팅 외에 ‘통상분쟁대응’(1936-401)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으로도 수입규제 및 관세 부과에 따른 법률, 회계 및 관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임. 즉,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환경변화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관세피해 긴급지원 예산안

구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원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지원대상	통상조약의 이행 및 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등 통상환경변화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기업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등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혁신 지원(핵심역량·외부환경·기업애로 조사 등을 통한 기업 분석 후 취약점 개선방안 및 성장전략·로드맵 제시)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법률 및 회계 컨설팅(원가정보 분석, 덤핑마진 계산, 의견서 작성 대행 등)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컨설팅(관세율 산정, 통관서류 대행, 원산지 증빙, HS분류, 의견서 작성 대행 등)
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보조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예산규모	’25년 350백만원 ’26년(안) 376백만원	’25년 1,080백만원 ’26년(안) 2,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통상피해대응기업에 대한 법률상 지원근거 및 지원 필요성, 실제 재정여건 및 다른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지원목표 및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39].

39)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와 동일하게 202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임.

(7)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ODA): 사업추진일정 및 타국공여현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① 결산 현황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1937-402) 사업은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에 3년(2025~2027년) 동안 8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역내 수익성 있는 청정인프라 사업 16여개(평균 50만 달러 계획)에 기술지원, 사업이행자금 지원, 양허성 금융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1,800만원 증액된 44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	2,100	2,100	4,418	2,318	110.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추진일정 및 타국공여현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란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상협력체[40]로, 2022년 5월 공식 출범 이후 장관회의 및 공식협상을 거

40) 분야(4개) : ①무역(필라1) ②공급망(필라2), ③청정경제(필라3), ④공정경제(필라4)
참여국(14개국) : 美, 韓·日·호·뉴, 아세안 7개국(싱·태·베·브루나이·말련·필·인니), 인도, 피지

쳐 2023년 11월 정상회의에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되었고, 각 회원국은 해당 협정 발효·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필라3 청정경제 협정[41][42]에 따라 IPEF 회원국은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역량확충에 1,200억 달러 등의 투자를 공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할 예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국제부담금(340-02) 비목으로 동 사업을 신설하여 2025~2027년간 총 109억원을 공여하고자 함. 다만,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2025년 21억원, 2026년 50억원, 2027년 38억원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2026년 44.18억원, 2027년 43.82억원으로 납부계획이 수정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재정당국의 ODA 감액방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계획 대비 감액된 것으로 설명함.

산업통상부는 PIDG[43]에 예산액을 지급하고, PIDG는 6개 자회사에

---

41)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Agreement Relating to a Clean Economy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42) 제17조 투자와 지속가능금융 동원 및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
1. 당사자들은 지역 전체에 걸친 청정경제로의 전환, 기후 변화 적응 및 회복력 구축은 정부, 국내 및 국제 금융기관,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자선단체로부터의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현저한 확대를 요할 것임을 인식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데 양허성 금융과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사용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43) PIDG(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이를 재교부하여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기술지원과 무상원조, 보증, 지분투자, 대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자회사별 역할 및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사업단계별 자회사 역할·지원내용

<table>
<tr><th>단계
자회사</th><th>①사업 발굴</th><th>②타당성 검토</th><th>③계약 및 인허가</th><th>④상업적 계약체결</th><th>⑤금융 약정</th><th>⑥건설</th><th>⑦운영</th><th>⑧관리</th></tr>
<tr><td>TAF</td><td></td><td>무상원조 /기술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DevCo</td><td colspan="5">기술지원/역량개발지원</td><td></td><td></td><td></td></tr>
<tr><td>InfraCo Africa</td><td colspan="5" rowspan="2">사업개발을 위한 직접투자/민간자금유치</td><td></td><td></td><td></td></tr>
<tr><td>InfraCo Asia</td><td></td><td></td><td></td></tr>
<tr><td>EAIF</td><td></td><td></td><td></td><td colspan="2">장기대출/메자닌 금융* 제공</td><td></td></tr>
<tr><td>GuarantCo</td><td></td><td></td><td></td><td colspan="2">현지통화 보증제공</td><td></td></tr>
</table>

주: * ‘메자닌 금융’이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PIDG가 발굴 및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사업 풀(3단계 이후) 내에서 기술지원, 금융지원, 사업이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약 50만 달러 내외로 공여하고자 함. 산업통상부는 2025~2027년간 약 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16개 내외로 추진하여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개, 2026년에는 6개, 2027년에는 6~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정부 자금으로 설립된 공여기관 출자그룹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2025년 1분기에 PIDG와 공여국 간 계약서(이하 “LoA”, Letter of Arrangement)을 체결하면서 공여금액·기간, 사업추진방향 및 계약·지원형태[44]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IPEF 추진여건이 변동되었고, 「사업추진방향 연구용역」(2024.12.~2025.4.)으로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효과성 제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계약 체결 관련 주요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LoA는 당초 계획 대비 반년 가량 지연된 2025년 8월에 체결되었고, 산업통상부는 9월 19일 PIDG에 예산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그러나 기술지원(통상 3~12개월), 금융지원 및 실제 사업이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에 이를 모두 실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45].

또한 매년 예산 확정 후 해당 금액에 따른 LoA를 다시 체결해야 하고, 2025년 실집행 기준으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 예산안(44억 1,800만원)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4) 기술지원과 무상원조, 보증, 지분투자, 대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발사업을 지원
45) 산업통상부는 연내에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일본·호주의 PIDG 공여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 당시 계획보다 공여액이 과소하게 나타나거나 잔여금 공여 계획을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미·일·호 공여현황 및 계획

구분	'24.10월 기준	'25.10월 기준
미국	• 2023년 1천만불 공여 완료	• 2023년 11월 1천만불 공여 약속 • 현재까지 미공여
일본	• 2023년 11월 1천만불 공여 약속 • '24년 내 공여 완료 예정 - **'23년 380만불(약 51억원)** 공여 완료, '24년 잔여금 공여 추진 중	• (좌동) • **현재까지 410만불(약 57억원)** 공여 완료 - 잔여금 공여 계획 내부 검토 중
호주	• 2023년 11월 500만불 공여 약속 • '24년 내 260만불(약 35억원) 공여 완료 예정	• (좌동) • **현재까지 260만불(약 37억원)** 공여 완료 - 잔여금 공여 계획 내부 검토 중

자료: 산업통상부

이는 IPEF 정상회의 당시 관련 MOU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국제기구 분담금과 달리 동 사업은 매년 민간 출자그룹과 구속력 없는 사업계약(LoA 19항)을 체결하여 추진된다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46].

따라서 실제 2025년 사업추진과정에서 LoA 체결이 지연되고 타국 공여 현황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사업 예산의 적정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6) 참고로 일본·호주의 계약체결형태에 대해서는 자료 없음.

(8)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3161-315): 타부처 사업 대비 차별화 강화 사업계획 수립 필요

① 결산 현황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3161-315)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별로 수요기반 석·박사 혁신인재 등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2억 5,000만원 증액된 2,01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R&D)	157,479	166,145	166,145	201,395	35,250	21.2
- 교육훈련	142,754	149,420	149,420	177,070	27,650	18.5
- 해외연계	8,600	8,600	8,600	16,200	7,600	88.4
- 정책기반	6,125	8,125	8,125	8,125	0	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부처간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차별화 필요

내역사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첨단·주력산업 분야별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여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재를 양성하려는 내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6억 5,000만원 증액된 1,77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됨.

2025~2026년 교육훈련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5년 산출내역	2026년 산출내역
가. 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및 산업계 수요 기반의 업종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149,420백만원** - (계속) 44개 과제 × 2,452.2백만원 × 12/12개월 = 107,898백만원 - (신규) 14개 과제 × 2,965.9백만원 × 12/12개월 = 41,522백만원	가. 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및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및 박사후연구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177,070백만원** - (계속) 47개 과제 × 2,614.6백만원 × 12/12개월 = 122,885백만원 - (신규) 12개 과제 × 4,515.4백만원 × 12/12개월 = 54,18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매년초 산·학·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각각 R&D 과제로 사업공고하여 컨소시엄[47]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48]을 제외한 과제는 통상 10억원~90억원 가량으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기존 과제는 특정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각각 양성하는 내용이었으나, 산업통상부는 2026년 신규 과제 중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112억 5,000만원) 과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

47) 주관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과 공동기관(대학원 운영(또는 계획중인) 4년제 대학 등 여러 개)으로 구성

48)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 설치·운영을 통해 첨단분야 육성에 필요한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 (현황) '25년 기준 총 14개 대학 지정('23년 3개, '24년 8개, '25년 3개교 지정)
❑ (예산) '26년 180억원 계획(6개교 추가지정 예정) ※ 5년(3+2)간 대학별 총 150억원 내외 지원
❑ (지원) 분야별 교육환경 구축 및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 (교육환경 구축) 실험·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산업계 전문가의 교원 채용,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 (교육과정 개발) 기술·산업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개선, 「프로젝트 학기제」 도입으로 프로젝트 중심 학위과정 운영

봇, 방산, 미래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박사후 연구원 양성을 지원하고자 함.

2026년도 신규과제 목록

구 분	예산(안)(백만원)	양성규모(명)
(2026)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	18,000	270
반도체핵심IP설계전문인력양성	6,735	101
SDV기반AI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1,300	20
고성능·고안전친환경자동차핵심부품R&D전문인력양성	2,000	30
디지털조선소(DigitalShipYard)전문인력양성	3,000	45
고부가첨단석유화학소재전문인력양성	1,300	20
탄소섬유복합재첨단제조및재활용기술전문인력양성	1,300	20
첨단산업고내구성세라믹소재기술전문인력양성	1,300	20
첨단분야AI제품응용기술전문인력양성	3,000	45
AX기반제조공정활용기술전문인력양성	4,000	60
GX·DX융합형공급망탄소관리전문인력양성	1,000	15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	**11,250**	**100**

자료: 산업통상부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은 산업분야별 컨소시엄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산학협력 프로젝트(1~3년)를 수행하도록 하여,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산업계 접점을 확대하여 향후 취업을 촉진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박사후연구원은 법령상 박사학위를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49]으로 정의되고, 통상 지도교수 연구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

4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석·박사 학위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달리 박사후연구원은 이미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된 독립적인 연구자임.

다만, 박사후연구원 직종의 취지를 고려하면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 12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상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의 경력설계 및 개발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50]하도록 하는 등 최근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 중 내역사업인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51]으로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해오고 있음. 해당 사업은 기존 R&D

50) 그 외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2025년 6월 20일** 일부개정되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채용지원, 경력개발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침*에 마련하도록 함.
*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정부 이행여부 점검 가능

51)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자료: 교육부)
③ 박사후국내외연수 : ('25) 45,300백만원 → ('26) 42,420백만원, 2,880백만원 감액
- (요구) 국내·외 대학 등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단절없는 연구활동 지원 및 초기 일자리 창출
- (산출) (계속) 492개 내외×60백만원×12/12= 29,520백만원
(종료) 180개 내외×60백만원×6/12= 5,400백만원
(신규-국내) 150개 내외×60백만원×6/12= 4,500백만원
(신규-국외) 50개 내외×60백만원×12/12= 3,000백만원
④ Post-Doc. 성장형 연구 지원 : ('25) 55,492백만원 → ('26) 80,827백만원, 25,335백만원 증액
- (요구) 박사후연구원 등의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지원
- (산출) (계속-공동) 226개 내외×평균256백만원×12/12= 57,847백만원
(신규-공동) 13개 내외×평균260백만원×9/12= 2,650백만원
(계속-개인) 54개 내외×평균70백만원×12/12= 3,780백만원
(신규-개인) 30개 내외×평균60백만원×9/12= 1,350백만원

사업이 주로 교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로 진출하려는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연구과제를 학술진흥 차원에서 부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R&D)'(1744-412) 사업 중 내역사업인 '혁신성장선도고급연구인재육성'(KIURI) 사업(이하 "키우리 사업")으로, 2020년 4개 연구단(2020~2023), 2021년 2개 연구단(2021~2024)을 각각 선정하여 4년간 지원함.

부처별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간 비교

구분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과기부-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육성	산업부-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
사업목적	•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수 및 연구 참여기회 지원	• 박사급 인재 첨단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산업계 진출 지원	• 첨단제조분야 융·복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양성
사업기간	• '15년~계속	• '20~'24년(종료)	• '26~'30년
지원분야	• 이공계 전분야	•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미래차소재부품, 바이오진단·치료제 등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지원내용	• (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대학·연구소 과제 수행 지원 • (연구) 박사후연구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및 단독과제 지원	• 산학 협력에 기반한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을 구성,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 • 연구분야, 성과목표 등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은 자율 추진	• 분야별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매칭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 • 기업과 연계하여 포닥의 독립적 심화연구 및 실무역량 강화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계속-비전임) 152개 내외×100백만원×12/12= 15,200백만원

이는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에 대해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화·창업으로의 성장경로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취지임[52]. 다만, 2020~2021년에 선정된 6개 연구단 지원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구단 지정이나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우리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 과제와 사업목표 및 지원산업분야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키우리사업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에 대해 기술사업화·창업으로의 성장경로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타부처 종료사업의 성과평과 및 개선방안을 동 사업에서 환류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키우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 2025년부터 AI 분야의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AI스타펠로우십지원)을 추진하여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5~2030년까지 과제당 평균 115억원(1차년도 15억원, 이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53]. 산업통상부의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 과제는 첨단제조(AX) 융합이 필요한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간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

52)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지원 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용역), 포항공대, 2019. 11.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 4. 30.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분야 신진연구자 중심의 인공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재양성 분야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의 지원목표 및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종료사업의 성과평가 등도 환류하여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기존 사업과 해외석학 유치 사업의 차별화 필요

내역사업인 ‘해외연계’ 사업은 신진연구자의 해외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국내산업 연구환경 및 수준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2026년에는 기존 내국인 연구자의 해외공동연구 지원 외에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첨단산업분야 해외 석학을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에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체재비·연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

2026년도 ‘해외연계’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② 해외연계 : (2025 본예산) 8,600백만원 → (2026 예산안) 16,200백만원, +7,600백만원 - (요구) 신진연구자 해외 공동연구 지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연계, 해외석학 유치를 위해 증액 요구 - (산출) 계속 : (내국인) 112명 × 95.5백만원 × 10/12개월 = 9,000백만원 신규 : (외국인) 100명 × 3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신규 : **(해외석학) 14명 × 600백만원 × 6/12개월 = 4,2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해외석학 유치’ 사업은 박사학위자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를 유치대상으로 하고, 향후 5년간(’26~’30년) 매년 14명씩 신규 선발하여 각 3년씩 총 15억원[54]을 지원할 예정임. 이를 통해 첨단산업분야의 해외 최고급 인재를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에 유치하여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54) 1년차에는 6개월분(3억원), 2~3년차에는 각각 6억원씩 지원하여 총 15억원 지원

다만,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과 비교할 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재유치하는 것을 우대하고,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산업분야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점을 제외하면 초빙대상,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임.

BP/BP+ 사업 및 해외석학 유치 사업 비교

구 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해외석학 유치
	기관유치형	개인유치형		
초빙대상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신청 가능			
유치기관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우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전 산업분야 -국가 첨단산업 및 에너지·AX·조선 분야 우대
과제 수	8개 과제 내외	144개 과제 내외	5개 과제 내외	14개 과제
과제당 연구비	3억~9억 원 이내/년	최대 3.5억원 내외/년	6억 원 이내/년	6억 원 이내/년
지원항목	인건비, 연구활동비(체재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			
연구기간	3년	1~3년	최장 10년(4+6)	3년
비 고	기관 단위의 전략적 유치계획에 따라 과제 신청	연구책임자가 해외과학자(1인) 발굴하여 과제 신청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석학급 인재 유치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 및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5년도 신규 과제 공고(2025.2.13.)」 재정리

그리고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인재를, 해외석학 유치 사업은 산업분야 인재를 각각 유치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우대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인공지

능, 첨단제조·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55]는 해외석학 유치사업의 우대분야인 첨단산업, 에너지·AX·조선 산업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재유치를 우대하는 점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과 일부 차별화된 점으로 보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해야 할 인력에 대해 정부가 연간 6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예산배분상 우선시해야 하는 사업인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가 특정 기업의 고급인재 고용을 위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비해 기업측의 인재유치 및 환경조성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해외석학 유치사업은 초빙대상의 학위·경력, 비용항목별 지원기준 등 세부기준 등을 추후 마련할 예정인데, 기존 과기부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치대상 선정시 분야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5)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총 12가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됨.

(9)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건축 및 장비도입 지연 최소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3171-434)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전장부품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신뢰성검증을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400만원 감액된 29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4,300	3,240	3,240	2,916	△324	△1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건축 및 장비도입 지연 최소화 필요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국비 144억 7,500만원, 지방비 153억원, 기관부담금 35억 7,700만원 등 총 333억 5,2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투입하여 원주시 부론산업단지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3년 작성하여 발표한 사업계획 상 2024년 7월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계획·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1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56],

부지 위치 변경[57]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지연[58]에 따라 7개월이 지연된 2025년 2월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이후 계획·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 일정지연이 반영되어 역시 계획보다 7개월이 지연된 2025년 8월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짐.

56) 산업통상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사업계획」, 2023.11.
57) 건설예정지 주변에 변전소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부지 위치 재검토 실시
58)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2024년도 지방비 분담금이 세수부족 등 사유로 2024.12. 지연납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건축계획과 건축경과

단계	건축계획	건축경과	시차
부지매입	'24. 6.~'24. 7.	'25. 2.	7개월
계획・기본설계	'24. 9.~'24.10.	'25. 1.~'25. 6.	8개월
실시설계	'24.11.~'25. 1.	'25. 7.~'25. 8.	7개월
건축허가	'24.12.~'25. 1.	'25. 8.	7개월
착공	'25. 4.	'25. 10.	6개월
사용승인	'26. 11.	'27. 6. (추정)	7개월 (추정)

자료: 산업통상부

일정지연이 건설단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신뢰성검증센터의 사용승인 역시 계획된 2026년 11월이 아니라 2027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장비도입의 경우 2024년 디지털광학현미경 등 5개 장비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차년도인 2025년 3월 이후 5개 장비에 대한 도입계약이 체결되었음.

이 결과 반도체특성분석기 등 3개 장비는 2025년 하반기에 검수가 완료되었고 기능안전가상평가시스템 등 1개 장비는 2025년 11월 현재까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장비도입계획과 도입경과

장비	계약	검수 (구축완료)
디지털광학현미경	'25. 3.	'25. 3.
반도체특성분석기	'25. 4.	'25. 7.
주사음향현미경	'25. 4.	'25. 9.
전단시험기	'25. 4.	'25.10.
기능안전가상평가시스템	'25. 4.	미정

자료: 산업통상부

검증센터 건축과 장비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세부사업은 2024년 성과계획서상 공간확보 지표에서 66.6%의 달성도를 보이는 한편, 장비구축 지표에서 39.6%의 달성도를 기록하였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는 성격상 사업기간 중 재차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 지방비 분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진행절차에 따른 납입시기를 사전에 협의하는 한편,

착공 이후 공사절차와 장비 도입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건립**

□ 사업개요

○ **(목적)**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및 전장부품 개발을 위해 설계-단품-모듈- 시스템 전분야 신뢰성·안전성·기능검증·인력양성 One-Stop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2024. 05 .01 ~ 2027. 12. 31 (3년 8개월)

○ **(사업예산)** 총 33,352백만원
* 국비 14,475백만원, 지방비 15,300백만원, 기관부담금 3,577백만원

○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실장산업협회

□ 사업내용

○ (센터건립) 신뢰성 평가 및 기능안전 검증을 위한 센터건립
1) 규 모 : 지상 3층 (부지 2,622㎡, 연면적 2,380㎡)

2)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 부론산업단지 A-20-2 구역

3) 주요시설 : 기계적 내구성 평가실, 고장분석실, 환경시험실, 기능안전평가실 등

<센터 위치 및 조감도>



(10)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미국현지 전문가 파견사업 운영계획 구체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3171-445)는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으로서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마스터스 아카데미 등 현지 기술지원 및 수주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6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	-	-	6,644	6,644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미국현지 전문가 파견사업 운영계획 구체화 필요

동 세부사업은 미국 내에 조선산업 관련 현지 동향 파악과 대미정책 연구를 위한 산업기술협력센터 2개소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21억 4,000만원)과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향분석 및 현지네트워킹” 사업(8,600만원), 국내 기능장급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미국 내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을 교육하는 “마스터스 아카데미” 사업으로 구성됨.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조선산업 관련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미 정책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내 한미협력센터 2개소 구축·운영
동향분석 및 현지네트워킹	미국내 정책 변화 습득, 효과적인 한-미 조선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 활동 등
마스터스 아카데미	미 선박설계 실무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전문가 파견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자료: 산업통상부

미국 내 동향파악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 국내 전문가 파견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성격상 동 세부사업은 미국 내 현지인력을 채용하는 외에 국내인력 일부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현지인력 채용과 국내인력 파견 규모를 정할 예정이며,

“마스터스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현지·국내·파견으로 나누어 코디네이터를 두는 외에 국내 기능장급 전문인력을 현지로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미국파견인력 구성 예시

구분	미국파견인력	비자가능유형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인력 O명	A2 외교 및 공무비자(공무) L 전근비자(주재원)
동향분석 및 현지네트워킹	코디네이터 O명	A2 외교 및 공무비자(공무) L 전근비자(주재원)
마스터스 아카데미	코디네이터 O명	L 전근비자(주재원)
	전문인력 OO인 ***6개월 이내 파견 후 귀국**	**J1 교환방문비자(참가자)** **B1 방문비자**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현장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하는 기능장급 전문인력의 경우 비공무원 신분인 점, 미국 내 법인이 아닌 국내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J1 비자(교환방문)[59] 또는 B1 비자(방문)[60]를 통해 미국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J1 비자(교환방문) 또는 B1 비자(방문)는 비영리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미국 내 활동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됨.

현지 적응과 현장환경 이해, 의사소통능력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조선 관련 현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교육내용 상 체재기간이 짧은 경우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체재기간은 다소 부족해 보임.

---

59) (U.S. Department of State) The J-1 classification (exchange visitors) is authorized for those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an approved program for the purpose of teaching, instructing or lecturing, studying, observing, conducting research, consulting, demonstrating special skills, receiving training, or to receive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60) (U.S. Department of State) You may be eligible for a B-1 visa if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business activities of a commercial or professional natur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sulting with business associates
Traveling for a scientific, educational, professional or business convention, or a conference on specific dates
Settling an estate
Negotiating a contract
Participating in short-term training
Transit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certain persons may transit the United States with a B-1 visa
Deadheading: certain air crewmen may enter the United States as deadhead crew with a B-1 visa

또한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근로자 316명이 불법체류자로 체포·구금되었던 사건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따른 인력을 출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체류기간 및 비자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과 국내 조선기업 미국 진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와 비자 등 파견절차 관련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1)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상한액 등 사업계획 조정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3171-446)은 시스템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EDA 설계 소프트웨어와 계측·측정장비 등 설계환경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8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	-	-	8,758	8,758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상한액 조정 필요

동 세부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범위를 전액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사무공간 지원예산 3억 7,500만원을 감축하는 대신 고난이도 공정의 지원건수와 상한액을 높이는 등 MPW[61] 시제품제작 지원예산 7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R&D 활동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였음.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22~'25)과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26~)

구분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25)	시스템반도체기업사다리조성 ('26안)
사무공간 지원	**575백만원** - 사무공간지원 (15개×25백만) - 시설확장 (200백만)	**200백만원** - 사무공간지원 (16개×25백만원×50%)
EDA 설계환경구축	**3,000백만원** - EDA설계환경구축 (4사×750백만원)	**3,000백만원** - EDA설계환경구축 (5사×600백만원)
MPW 시제품제작 컨설팅	**5,095백만원** - 시제품제작 (일반 23건×60백만원, 미세 3건×185백만원, 초미세 5건×560백만원) - 컨설팅 (20건×18백만원)	**5,558백만원** - 시제품제작 (일반 10건×60백만원, 미세 6건×225백만원, 초미세 5건×700백만원) - 컨설팅 (6건×18.3백만원)
합계	**8,670백만원**	**8,75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61) Multi-Project Wafer, 여러 프로젝트 설계결과물을 한 웨이퍼로 제작하여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동 세부사업 중 MPW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국내 팹리스[62] 기업이 시스템반도체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사업이 40nm 이상 일반공정 23건, 12nm 이상 미세공정 3건, 10nm 이하 초미세공정 5건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신규사업은 일반공정 10건(△13건), 미세공정 6건(+3건), 초미세공정 5건(-)으로 일반공정 지원건수를 줄이고 미세공정 지원건수를 늘리는 한편, 초미세공정 지원상한액을 5억 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하였음.

MPW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					미세		초미세
		180nm+	130nm	90nm	60nm	40nm	28nm	12nm	10nm-
평균 단가		45	65	85	145	175	300	700	1,300+
기존 사업	지원 건수	23건					3건		5건
	지원 상한	25	40	50	80	100	200	300	560
	사업자 부담	20	25	35	65	75	100	400	740+
신규 사업	지원 건수	10건 (△13건)					6건 (+3건)		5건 (-)
	지원 상한	60					225		700
	사업자 부담	- (△20)	- (△25)	25 (△10)	85 (+25)	115 (+45)	75 (△25)	475 (+75)	600+ (△140)

자료: 산업통상부

62)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를 수행하되 별도의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설계전문회사

이는 국내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고 AI반도체 등과 관련하여 고성능 반도체 설계기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반도체 육성정책[63]에 따른 것으로,

미세공정 지원건수를 늘리고 초미세공정 지원상한액을 증액함에 따라 국내 시스템반도체 초기기업의 고난이도 공정 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기존사업에서 일반공정의 지원상한액을 공정난이도에 따라 2,500만원(180nm+)에서 1억원(40nm)으로 달리하고 있던 것을 신규사업에서 공정난이도와 관계없이 6,000만원으로 통일함에 따라,

130nm 등 저난이도 공정의 경우 사업자부담이 2,500만원에서 무부담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40nm 등 고난이도 공정의 경우 7,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됨.

미세공정의 경우에도 기존사업에서 28nm와 12nm 공정의 지원상한액을 2억원과 3억원으로 달리하고 있던 것을 신규사업에서 2억 2,500만원으로 통일한 결과,

저난이도인 28nm 공정의 경우 사업자부담이 1억원에서 7,500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고난이도인 12nm 공정의 경우 4억원에서 4억 7,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저난이도 공정의 사업자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고난이도 공정의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됨.

---

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2025.4.

사업개편의 취지가 고난이도 공정에 도전하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시스템반도체 초기기업의 사업고도화를 지원하는 데에 있는 점,

사업자수익사업 중 저난이도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제품제작 지원상한액 결정시 고난이도 공정 도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정별 난이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운영 필요

동 세부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사무공간[64]과 EDA[65] 설계도구를 제공하고 MPW 시제품 제작비용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 등 금융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내역이 없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시스템반도체・AI 등 초격차 10대 분야[66]의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화 단계별로 Pre-초격차 사업화지원(연간 1.5억원), 초격차 사업화지원(연간 2억원)과 Post-초격차 사업화지원(연간 5억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딤돌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전기전자 등 중기 전략기술 로드맵 중 7개 분야[67] 중소기업에 대해 글로벌 R&D 지원(연간 2억원), 소부장 R&D 지원(연간 2억원) 등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64) 2025년까지 임차료 전액지원하였으나 2026년부터 50% 지원예정

65)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시 설계자 요구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구조・회로 및 전력구조를 디자인하여 설계를 자동화하는 도구

66) ①시스템반도체, ②바이오·헬스, ③미래 모빌리티, ④친환경·에너지, ⑤로봇, ⑥빅데이터·AI,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해양, ⑨차세대원전, ⑩양자기술 등

67) ①기계금속, ②미래소재, ③디스플레이, ④자동차, ⑤전기전자, ⑥바이오・그린에너지 ⑦비대면 디지털 등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성장기술개발(R&D) (디딤돌)
'26안	87억 5,800만원	1,456억 2,200만원	1,180억 2,800만원
목적	개발환경 조성	사업자금 지원	
대상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 미상장 창업 7년 이내 기업	시스템반도체·AI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전기전자 등 중기 전략기술 로드맵 중 7개 분야 중소기업
지원 내역	**사무공간지원** -연간 1,250만원 **시제품제작** -회당 6,000만원~7억원 **EDA설계툴제공** **컨설팅**	**Pre-초격차 사업화지원** -AI·팹리스 특화 연간 1.5억원 **초격차 사업화지원** -10개 분야 연간 2억원 **Post-초격차 사업화지원** -10개 분야 연간 5억원	**글로벌 R&D 지원** - 세계시장 진출가능성 연간 2억원 **소부장 R&D 지원** -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간 2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창업 초기단계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점, 사업성공을 위해 개발환경지원 외에 금융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세부사업 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소관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대상 홍보 강화, 컨설팅 지원 등 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예산집행과 성과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3174-354)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의 CVC 연계 R&D 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협력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2억 5,000만원 증액된 5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CVC투자연계 대중견중소기업협력 (R&D)	-	1,875	1,875	5,125	3,250	173.3

자료: 산업통상부

② 예산집행과 성과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를 중심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68] 투자와 연계하여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CVC는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지분 50% 초과)인 벤처캐피탈로, 단순한 재무적 수익보다 신기술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시너지, 신규 사업 기회 창출 등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으며, 동 사업은 이러한 CVC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확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계속과제(5건) 및 신규과제(7건) 지원을 위한 연구비로 구성되어 총 5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CVC투자연계R&D (5,125백만원) - (계속) 5과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500백만원 - (신규) 7과제 × 500백만원 × 9/12개월 = 2,62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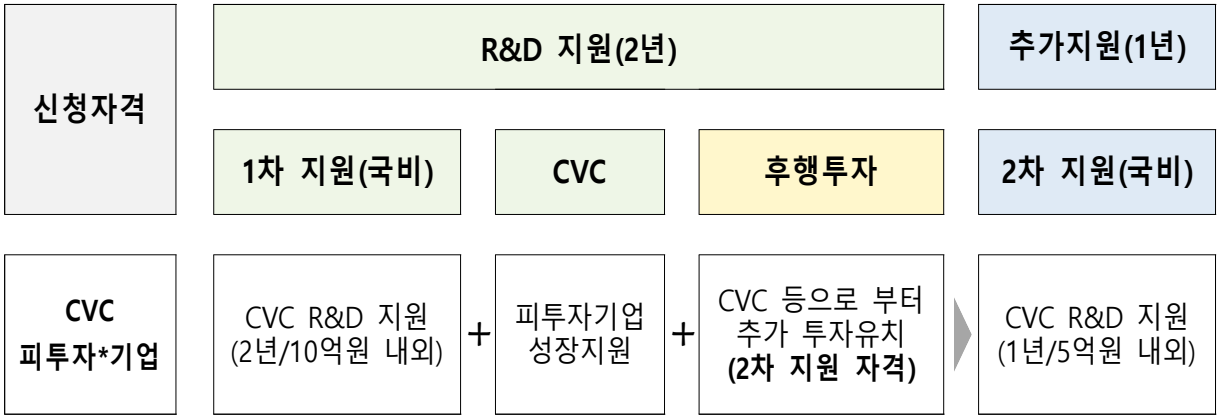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CVC로부터 투자가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R&D를 과제당 10억원 이내로 2년간 지원(1단계)하고, 이후 1단계 R&D 지원

68)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 정의
-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50% 초과)인 벤처캐피탈로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모기업과의 사업 포트폴리오 시너지 모색, 신기술 및 인력 확보,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등 전략적 목적을 추구
※ CVC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CVC(기업주도 벤처캐피탈)는 대·중견기업 등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대·중견·중소기업간 기술사업화 협력이라는 동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광의의 CVC로 정의

성과 및 후속 투자유치 여부에 따라 우수과제를 선발하여 과제당 5억원 이내로 1년간의 추가 지원(2단계)을 실시할 계획임.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사업 개요



* (투자유치 인정기간)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체결된 투자계약(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계약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투자유치금액)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신규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전체 과제의 평균 실집행[69]률이 2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제 공모(2~3월) 이후 과제 선정(4월) 및 협약체결(7월)까지 약 3개월의 지연이 발생하면서 예산의 연내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69) 실무적으로 산업통상부가 전담기관(전문기관)에 출연하는 것을 집행, 전담기관(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에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실제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실실집행으로 지칭하나,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실제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으로 표현함.

2025년도 동 사업 신규과제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과제선정 통보일	협약일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존 AMR 한계를 극복한 감속기 80% 절감, 중량 30% 경량화 고출력 리프팅 모듈 개발 및 완제품화	2025.04.28	2025.07.21	375	115	30.67
이차전지용 저유전율 및 내가수분해성을 갖는 저경도 우레탄 접착제 개발	2025.04.28	2025.07.17	375	124	33.07
차세대 AI/ML HPC 연결용 224G PAM4 신호전송기술 기반 고집적/고성능 1.6T 광통신모듈 개발	2025.04.28	2025.07.21	375	11	2.93
전기차 배터리팩 열폭주 화재 대응 자가소화시스템 양산화 개발	2025.04.28	2025.07.15	375	67	17.87
건설·재난 현장 로봇용 UWB 메쉬 기반 3D 위치 추정 모듈	2025.04.28	2025.07.17	375	137	36.53
총 계			**1,875**	**454**	**24.21**

주: 2025. 9. 30.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과제 선정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의견 반영 및 수정·보완 과정에서 기업의 서류 제출이 일부 지연되었고,

과제 수행기업에 투자한 CVC와 관련된 대·중견기업 등과의 구체적인 사업화 협력전략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CVC-대·중견기업 간의 의견 조율 및 추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협약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동 사업은 1단계 지원과제의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과제 선별 및 2단계 지원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나타난 예산집행 지연은 향후 성과평가 일정 및 2단계 지원체계의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2025년 1단계 지원과제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의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2026년 신규과제 선정 시에는 협약 필수서류 작성요령, 평가의견 반영 방식 등 세부 절차 표준화 및 사전 안내를 통해 동일한 지연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3)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예산 편성에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및 2025년 집행 지연 실적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미래 판기술[70] 프로젝트(R&D)’(3174-367)는 향후 10~20년 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억원 증액된 7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	5,000	5,000	7,600	2,600	52.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예산 편성에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중점투자 분야를 ① 생산자동화/로봇, ② 에너지, ③ 모빌리티,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⑤ 바이오·의료의 5대 전

70) 판기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을 의미

략분야로 구성하고, 현재 최종 테마 후보군으로 10개 테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음.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중점투자 분야 및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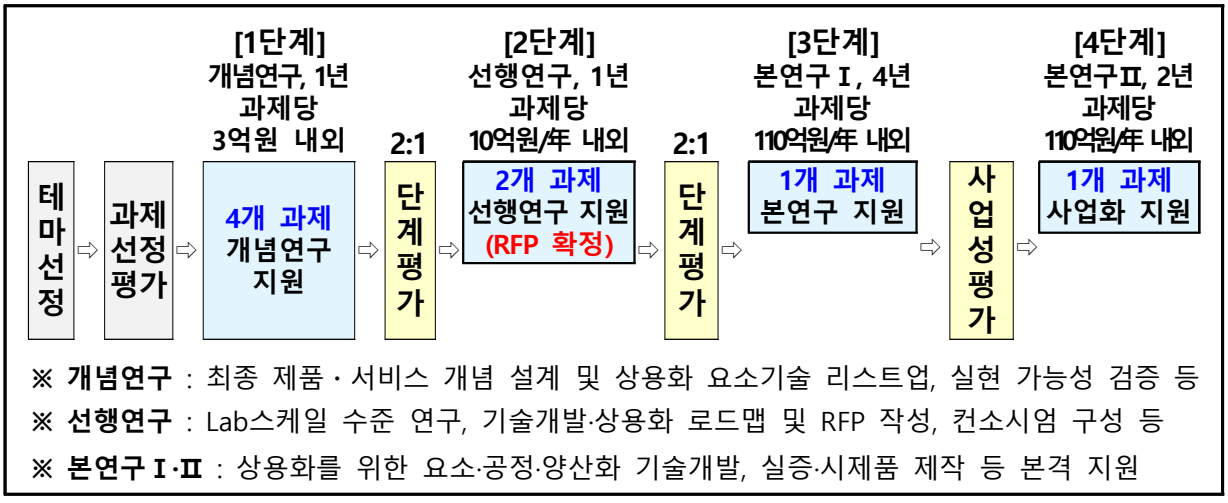
전략분야	유형	현재 선정 테마(안)	내용
①생산 자동화 /로봇	기존 시장 혁신	밀폐/고위험 생산 환경용 산업 휴머노이드	복잡한 비정형(밀폐, 고위험) 환경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일반 작업자 수준의 도구 조작 등의 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新시장 창출	초정밀 분자 레벨 패터닝 프린팅	물질을 원자/분자 수준의 정밀도로 원하는 위치에 배열하고 3차원 형태의 구조물 형상화가 가능한 인쇄 기술
②에너지	新시장 창출	무제한 범위 원격 집속 고효율 무선충전	일정 영역 내 무선으로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전파 에너지 활용 광범위 원격 무선 충전 기술
	기존 시장 혁신	배터리 등 PFAS(과불화화합물) 대체 무해한 신소재	배터리 등에 PFAS(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무해한 신소재 기술
③모빌리티	新시장 창출	야외 불균일 지형에 강인한 비접촉식 모빌리티 (Off-the-ground)	지면에서 일정 높이를 부상하여 다양한 지면 위를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Off-the-ground (OTG) 모빌리티 시스템과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부상형 Autonomous Mobile Manipulator Robot (AMMR) 시스템
④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존 시장 혁신	사용자 중심 몰입감을 위한 차세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관찰 방향에 따른 적응형 가시화가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新시장 창출	On-Device 학습용 초저전력 생체 뇌 구조 모방 AI 반도체	생체의 신경 신호 전달 체계와 인간의 뇌구조 동작 기반의 뉴로모픽 알고리즘 및 전기적 소자, 회로 구현을 통한 고효율의 인공지능을 발현하고, on-chip에서 학습과 확장이 가능한 뉴로모픽 신호처리와 반도체 기술

전략분야	유형	현재 선정 테마(안)	내용
⑤바이오·의료	新시장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화 제로 기술	노화된 조직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역전하는 기술로 노화세포 또는 조직을 타겟하여 기능적으로 회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술
	新시장 창출	인체 기능 보강과 대체를 위한 바이오 인공장기	세포, 성장 인자, 바이오 잉크 및 생체재료를 결합하여 기능적 구조를 제작하는 인공 조직/장기 기술
	新시장 창출	바이오신호 기반 인체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서로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생체 인터페이스 기술과 인간의 육체를 스캔하여 정보화하는 디지털 고정밀 생체인식 데이터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10개의 테마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4단계 경쟁형 R&SD[71] 방식을 통해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4단계 경쟁형 R&SD 방식



자료: 산업통상부

71)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단순 기술개발 목표 달성이 아닌 新시장 창출을 위한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 종합 개발 지원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9,785억 8,200만원(국비 7,250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7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규모이나,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으로 그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73]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2024. 8.)되었음.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74]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

---

7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7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7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 중임.

그러나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검토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한 현재(2025. 10.)까지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2026년 예산편성에도 그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026년도 예산안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2025년 집행 지연 실적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총 50억원)에 1단계 신규과제(12개) 및 총괄과제(1개)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 36억원과 14억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예산안(총 76억원)에는 1단계 신규과제(12개) 및 총괄과제(1개)의 지원을 위한 연구비와 2025년 1단계 과제의 단계평가를 거쳐 선정될 2단계 계속과제(6개) 지원을 위한 연구비로 각각 46억원과 3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00백만원 가. 신규 지원 (5,000백만원) ・ (1단계, 신규) 12개 과제 × 400백만원 × 9/12개월 = 3,600백만원 ・ (총괄과제, 신규) 1개 과제 × 1,870백만원 × 9/12개월 = 1,400백만원	7,600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7,600백만원 가. 신규 지원 (4,600백만원) ・ (1단계, 신규) 12개 과제 × 400백만원 × 9/12개월 = 3,600백만원. ・ (총괄과제, 신규) 1개 과제 × 1,714백만원 × 7/12개월 = 1,000백만 나. 계속 지원 (3,000백만원) ・ (2단계, 계속) 6개 과제 × 50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동 사업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75]되어 사업계획 적정

7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0~11 발췌
1-2. 예산배정
가. 예산 배정 및 집행 유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산 배정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여[76] 연내 예산집행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6개의 2단계(선행연구) 지원과제는 2025년에 추진 예정인 12개의 1단계(개념연구) 과제가 완수된 후 단계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 과제로, 2025년 1단계 과제가 공고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2026년의 2단계 과제 집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5년 신규사업의 집행 지연 실적과 예산의 집행 가능성 및 재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76]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총괄 지원과제는 과제 공고가 완료(8~9월)되어 선정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현 시점에도 최종 과제선정이나 협약체결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실제 예산집행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총괄 지원과제 경과

○ 공고 완료('25.8.~9.) → 선정평가 진행('25.10.)

□ 1단계 신규과제 경과

○ 후보테마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25.5월~7월, 총 226건 기술수요 접수), 전문가 자문회의('25.8월~), 트랜드·문헌 분석 진행

○ 발굴된 후보 테마에 대해 다양한 분야(기술, 미래학, 경제, SF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지속 검토 중('25.9월~)

(14)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협약지연 가능성을 감안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① 예산안 현황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3174-368)은 수출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의 혁신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78억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글로벌우수기업 연구소육성사업 (GATC)(R&D)	-	-	-	17,835	17,835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협약지연 가능성을 감안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동 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의 핵심 주체인 우수기업연구소를 선별하여 육성하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R&D)[77]’(2020년～2026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써,

77) 코드: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R&D) 3174-308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R&D를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조직인 GATC 얼라이언스를 신설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과제 기획부터 글로벌 네트워킹, 전문가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음.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2024.5.~2025.4.)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2,895억원(국비 2,119.4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기술선도형 신규과제(국내 3개, 해외 12개)와 시장맞춤형 신규과제(2개), GATC 얼라이언스 신규과제(1개)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총 17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상세

<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17,835백만원 > 순증
가. 기술선도형(국내)
• (신규) 3개 × 1,100백만원 × **9/12개월** = 2,477백만원
나. 기술선도형(해외)
• (신규) 12개 × 1,450백만원 × **9/12개월** = 13,054백만원
다. 시장맞춤형(해외)
• (신규) 2개 × 870백만원 × **9/12개월** = 1,304백만원
라. GATC 얼라이언스
• (신규) 1개 × 1,090백만원 × 11/12개월 = 1,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유형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기술선도형은 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국내외 혁신기관이 보유한 기술, 고급 연구인력, 첨단장비, 사업화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R&D 과제로,

국내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선도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선도기관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국제협력을 원칙으로 함.

다음으로, 시장맞춤형은 기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목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제품을 개선 및 고도화하는 수출 대상국 현지 실증 R&D 과제로, 시험인증 설비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실증·인증기관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GATC 얼라이언스는 동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전담 조직을 선정하는 총괄 지원 과제로, 기업연구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업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지원 및 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구성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주요 내용</th></tr>
<tr><td rowspan="2">지원
트랙</td><td colspan="2">기술선도형 트랙</td><td rowspan="2">시장맞춤형 트랙
(글로벌 협력)</td></tr>
<tr><td>국내 협력 트랙</td><td>글로벌 협력 트랙</td></tr>
<tr><td>지원
요건</td><td colspan="3">• 연구전담인력 8인 이상. 종사자 수 50인 이상
•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 기업연구소 OR 수출 비중 20% 이상 기업연구소 OR 기업부설연구소 혁신역량 진단 결과 상위 20% 이내 기업연구소</td></tr>
<tr><td rowspan="2">민자
부담금</td><td>• 중소기업 33%
• 중견기업 50%</td><td>•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33%</td><td></td></tr>
<tr><td colspan="3">※ 단,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하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민자 부담 가능</td></tr>
<tr><td>지원
내용</td><td>• 선도적 기술개발 R&D (국내 협력)</td><td>• 선도적 기술개발 R&D (글로벌 협력 필수)
• 인력교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모두 허용)
• 해외 연구시설·장비 활용</td><td>•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제품 고도화 R&D (글로벌 협력 필수)
• 인력교류 (아웃바운드형만 허용)
• 해외 테스트베드 활용</td></tr>
<tr><td>GATC
Alliance</td><td colspan="3">• 총괄 지원 과제 : 성과 확산, 전문가 연계 및 자문, 글로벌 협력(산업기술협력센터 연계) 등</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에 기술선도형과 시장맞춤형 R&D 과제 연구비를 9개월분으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협약과제에 대해서 9개월분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임[78].

78)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5 발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

다만, 기술선도형(해외)과 시장맞춤형 과제는 해외 선도기관이나 해외 실증·인증기관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국제공동 R&D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79]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전에 상대국과의 연구범위 조율, 연구협약 체결 및 국제계약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국내 R&D 과제보다 실제 협약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일반 R&D 신규과제 기준(9개월분)으로 편성되어,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협약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6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과제형 R&D 예산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79)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3. (생 략)

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①~② (생 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체결한 국제계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⑧ (생 략)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80]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동 사업과 유사하게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지원는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기술국제협력(R&D)[81]' 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과제의 협약 지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국제공동 R&D 신규과제는 해외기관 측의 면밀한 법적 검토와 이에 따르는 후속 협의 등으로 인해 협약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82]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에는 전체 신규과제에 대해 6개월분의 연구비를 편성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는 대다수의 신규과제 연구비를 1개월분 더 축소한 5개월분으로 편성하였음.

---

80) 산업통상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국 5개 지역(잠정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공동 R&D 유의사항 및 계약 가이드라인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고, 2026년 2월부터는 국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에 유의사항 및 계약서 양식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GATC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청기업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공동연구 계약 협상 전략 수립, 계약 조건 검토 등을 지원하여 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임.

81) 코드: 산업기술국제협력(R&D) 3171-320

82) 2024년 신규과제 협약 일정
: (공고)1월→(접수)6월→(평가)7월→(선정결과 통보)8월→(법률검토)8월~11월→(협약)11~12월

산업기술국제협력(R&D) 국제공동 R&D 예산편성 내역(2025～2026)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R&D)	과제	2025년	2026년(안)
국제기술 공동개발	신규	41개×276=11,310 (6/12개월분)	45개×213=9,600 **(5/12개월분)**
	계속	151개×549=82,914 (12/12개월분)	152개×538=81,770 (12/12개월분)
글로벌산업기술 협력센터	신규	8개×1,000=8,000 (6/12개월분)	19개×800=15,200 **(5/12개월분)**
	계속	48개×2,000=96,000 (12/12개월분)	56개×1,971=110,400 (12/12개월분)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신규	3개×500=1,500 (6/12개월분)	3개×500=1,500 **(6/12개월분)**
	계속	3개×1,000=3,000 (12/12개월분)	6개×750=4,500 (12/12개월분)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특성상 협약체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선도형(해외)과 시장맞춤형 R&D 과제의 연구비를 유사 사업의 예산편성 사례에 준하여 집행 가능한 연구비 규모로 조정하고, 연구협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법률·협약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협약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방안 구체화 필요

동 사업은 국내 산·학·연과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

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R&D)[83]’과 지원분야,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사업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보임.

먼저, ‘산업기술국제협력(R&D)’이 첨단산업 6대 분야(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84]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고,

다음으로, ‘산업기술국제협력(R&D)’이 내역사업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공동 R&D 과제를 지원하고, 내역사업 ‘국제협력기반구축’과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를 통해 협력 파트너 및 과제 발굴·기획 지원, 네트워킹, 포럼 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지원내용이 유사함.

---

83) 코드: 산업기술국제협력(R&D) 3171-320

84)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안) p.19 발췌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동 사업과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사업목적	수출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의 혁신 주체로 육성	해외 혁신주체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지원분야 (유사)	8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	첨단산업 6대 분야 등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디스플레이)
사업기간	2026 ~ 2031	2006 ~ 계속
지원대상 (유사)	향후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연구소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부설연구소	첨단산업 6대 분야 등의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단체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지원내용 (유사)	• 목표 기술 수준에 따른 R&D 지원 • GATC Alliance 중심의 글로벌 R&D 추진체계 마련	• 국제공동기술개발 • 국제협력기반구축 •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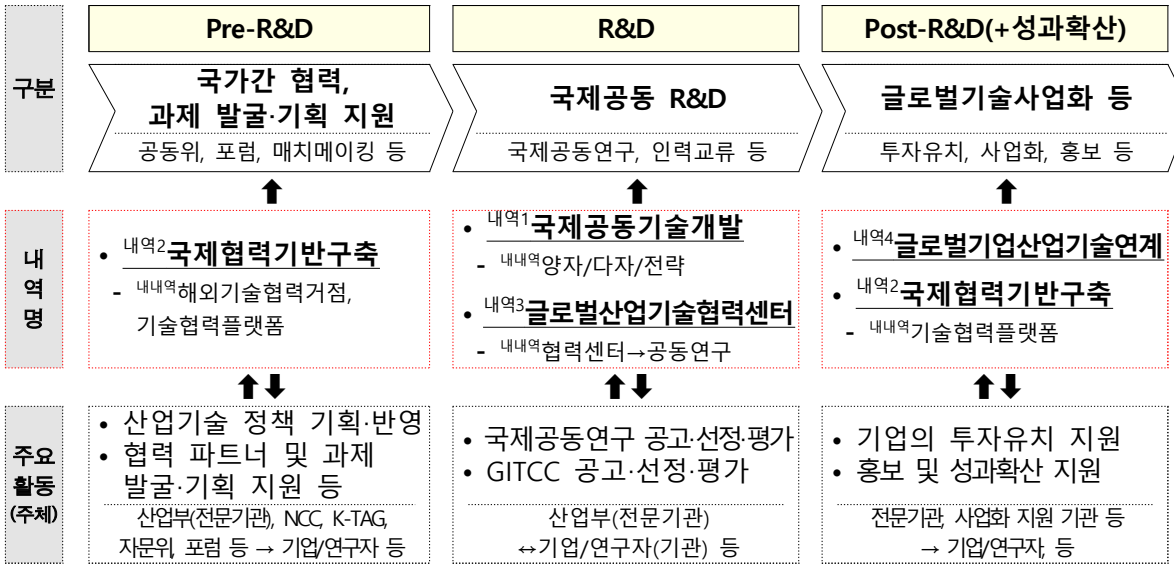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마지막으로, ‘산업기술국제협력(R&D)’이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연구를 전주기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을 3단계(Pre-R&D / R&D / Post- R&D)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C 얼라이언스를 통해 R&D 지원·관리 및 네트워킹, 글로벌 대응, 성과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R&D 과제의 협약 전부터 과제수행 및 과제 종료 후 시점까지 전주기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사업구조 및 운영체계가 매우 유사하며,

특히 GATC 얼라이언스의 기능(기획·네트워킹·성과확산)은 '산업기술국제협력(R&D)'의 해외거점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의 기능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산업기술국제협력(R&D) 내역사업간 구조 및 운영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GATC 얼라이언스 주요 과업 체계

구분	R&D 지원·관리	네트워킹	글로벌 대응	성과 확산
협약 전	IP 및 협약 지원	국내외 R&D 수요 발굴	현지 BM 발굴, 기술 현지화 지원, 민간 투자사 연계 등	
		매칭데이 운영		
과제 수행 중	R&D 과제 관련 자문 및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	최신 기술/시장 동향 조사·분석	성과 발굴 및 분석
	시험·검사·인증 및 법제도 관련 자문	국내외 파견 인력 교육 및 연수		
	해외 시설·장비 및 테스트베드 탐색	국제협력과제 진도 모니터링 및 공유	과제별 글로벌 이슈 대응	
과제 종료 후	고도화 과제 기획, 정부사업 연계 방안 탐색 등 후속지원	R&D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해외 판로 개척 (타사업 연계 지원)	성과 조사·분석
				성과 확산 및 홍보
				정책건의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국제협력(R&D)’이 기구축된 해외거점[85]을 통해 우수기관 간 국제협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을 가지나,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은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을 단순 우대하는 사업이 아닌, 산업 기술혁신의 중추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연구소’를 직접 지원하여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GATC 얼라이언스 기능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GATC 얼라이언스 운영 시 협력 대상국 중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해외거점이 있는 경우, 해당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86]하고, 해외거점이 없는 국가는 GATC 얼라이언스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성을 방지할 계획이며,

해외 현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시 GATC의 주요 기능을 병행 소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해외거점과 GATC 얼라이언스 간 상호보완적 협력모델 구축(거점-네트워크

85) ① 해외거점 운영: 유럽(브뤼셀, 베를린, 이스라엘), 북미(워싱턴D.C, 실리콘밸리, 보스턴), 아세안(하노이)
②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운영: 미국(MIT,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퍼듀대, 조지아텍), 독일(프라운호퍼), 캐나다(토론토대), 영국(런던대학교(UCL))

86) R&D 파트너 발굴, 수요기업 연계, 시장동향 정보, 기술정책 분석, 과제기획, 기술매칭, 인력교류 등 지원

연계체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만, 협력모델 내에서의 GATC 얼라이언스와 기구축된 해외거점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해외거점별 협력체계의 구체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여[87] 실제 사업추진 시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정부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외 현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거점과 GATC 얼라이언스 간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GATC 얼라이언스 과제 공모 시 유사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항목[88] 중 '사업 지원 체계·전략의 적합성' 항목에 반영하여 수행기관의 사업 이해도 및 전략적 기획 역량의 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7) 유사 사업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추후 R&D 과제가 선정되면, 해당 과제 및 수행기관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지원 사항에 맞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88) GATC Alliance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사업 지원 체계·전략의 적합성	**35**
책임자의 전문성·역량	30
기대 성과 및 정책 반영 가능성	25
소요 예산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10
합계	**100**

자료: 산업통상부

(15)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3174-378)는 녹색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녹색인증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을 활성화하며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4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위한지속성장 (R&D)	-	-	-	4,500	4,50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89](이하

8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기업을 확인해 주는 녹색인증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 중임.

현재 9개 부처 및 2개 위원회[90]가 공동으로 제도를 관리하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누적 12,919건의 인증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녹색인증은 기술성, 환경성, 정책부합성을 평가하여 국내 녹색기술의 표준화와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녹색인증제도 개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자료: 산업통상부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90) 산업통상부(총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통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10~15		'16		'17		'18		'19		'20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기술	4,234	2,330	572	320	536	245	522	274	530	318	553	310
제품	1,188	758	550	390	549	362	655	462	749	592	827	655
기업	355	279	47	41	11	7	21	19	23	15	14	8
합계	5,777	3,367	1,169	751	1,096	614	1,198	755	1,302	925	1,394	973
구분	'21		'22		'23		'24		'25.9.		합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기술	638	387	695	394	668	380	695	441	537	350	10,180	5,749
제품	1,031	786	932	770	956	787	868	739	603	421	8,908	6,722
기업	21	21	18	10	23	18	27	19	14	11	574	448
합계	5,777	3,367	1,169	751	1,096	614	1,198	755	1,302	925	**1,394**	**973**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성·환경성을 입증받은 기업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실증·스케일업, 수요 연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의 46.7%(누적)[91]에 해당하는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른바 '다윈의 늪[92]' 현상이 발생하고 것으로 나타나며,

91) 녹색기술 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 연계 누적 현황(2025. 9. 기준)

(단위: 건)

녹색기술 인증 건수			총 계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미확인: 46.7%		
	확인 미신청(%)	확인 미승인(%)	
3,066(53.3%)	**2,274(39.6%)**	**409(7.1%)**	5,749(100%)

자료: 산업통상부

92) 다윈의 늪(Darwin's Swamp): 친환경기술이 녹색인증, 실증 등을 거쳤음에도 시장에서의 경쟁, 수요 부족, 사업화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도태되는 구간

실제 녹색기술 및 제품의 매출로 평가되는 녹색전문기업[93]의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15개사 수준에 불과[94]하여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인증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고, 실제 제품화와 사업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후속 R&D를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상세

<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4,500백만원 > 순증 · (신규) 12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4,5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녹색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사업화 역량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R&D 지원으로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인증 10대 기술분야[95]에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관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

93) 녹색전문기업: 기업 매출 중 녹색기술 및 제품의 매출이 일정비율(20%)을 초과하는 기업

94) 녹색전문기업(개사): ('10) 8 → ('11) 40 → ('12) 47 … **('20) 8 → ('21) 21 → ('22) 10 → ('23) 18 → ('24) 19**

95) 녹색인증 10대 기술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여 과제당 21개월간 8억 7,500만원씩 지원하고, 녹색인증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기획, 기술 고도화, 시제품 설계·제작, 시험·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임.

다만, 동 사업의 효과성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녹색인증 10대 기술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녹색기술은 전체(1,267건)의 91.2%(1,156건)에 달하는데 비해, 2026년 지원과제는 12개에 불과하여 신청기업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며,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및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녹색인증 10대 기술분야의 기업 규모별 녹색기술(누적) 보유 현황

(단위 : 건)

기술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총합계
신·재생에너지	1	2	35	2	40
탄소저감	9	2	73	2	86
첨단수자원	5	2	63	2	72
그린IT	4	3	235	4	246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	2	21	1	27
첨단그린주택·도시		1	44	5	50
신소재	1	2	29	1	33
청정생산	2	1	54	1	58
친환경농수산식품및시스템			34	3	37
환경보호 및 보전	27	43	510	38	618
합 계	**52**	**58**	**1,098**	**59**	**1,267**

자료: 산업통상부

다음으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5. 4.)으로 녹색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에서 4년(1회에 한해 4년 연장 가능)으로 연장되어 최장 8년까지 인정되며, 인증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이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녹색인증 이후 장기간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의 최신성 저하로 인해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녹색인증 기술의 유효기간별 통계

(2025. 10. 31. 기준)

유효기간	1년이하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합계
인증기술(개)	288	320	262	168	133	96	1,267

자료: 산업통상부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는 녹색기술인증 제도와 연계한 사업화 R&D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과제선정 시 기술성(30%), 녹색성(30%), 사업성(40%)을 평가할 계획이나,

기술성과 녹색성은 이미 기술의 녹색인증 단계에서 검증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동일 지표의 반복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동 사업의 과제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착안사항
기술성 (30%)	기술의 우수성	▪ 기술 및 적용 제품의 우수성, 인증 이후 기술·제품의 개선 및 완성도 제고 노력
	기술의 차별성	▪ 경쟁 기술 대비 차별성, 방법의 창의성
	기술의 파급성	▪ 시장,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파급력
녹색성 (30%)	환경 영향 개선 효과	▪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저감 효과 등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한 개선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	▪ 에너지 효율 향상 정도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가능성 정도 등
사업성 (4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연구책임자) 사업화 역량 ▪ 과거 사업화 실적, 관련 장비·시설·인력 등 자원 보유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 양산 및 마케팅, 자금조달계획 ▪ 해외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계획 등
	파급효과	▪ 산업적 파급 효과(경제적 효과, 산업 공급망 구축 효과, 정책 부합도 등) ▪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자료: 산업통상부

녹색기술 인증기준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성	녹색성
• 기술의 완성도(10점) • 기술의 탁월성(15점) • 기술의 차별성(20점) • 기술의 권리성(5점) • 기술의 파급성(10점)	• 환경기대효과(30점) • 정책부합성(10점)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자료: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① 기술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요건을 세분화(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관련 특허 보유 등)하여 신청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② 녹색인증 기술의 진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증 유효기간 및 기술의 최신성을 평가체계에 반영하며, ③ 녹색기술 인증 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성·녹색성의 평가결과를 과제 선정 시 연계·활용하여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사업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6)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목적 및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R&D 혁신스케일업 융자'(3174-412)는 2024년도 R&D 수행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96]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8,800만원 감액된 94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6,575	11,250	11,250	9,462	△1,788	△15.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목적 및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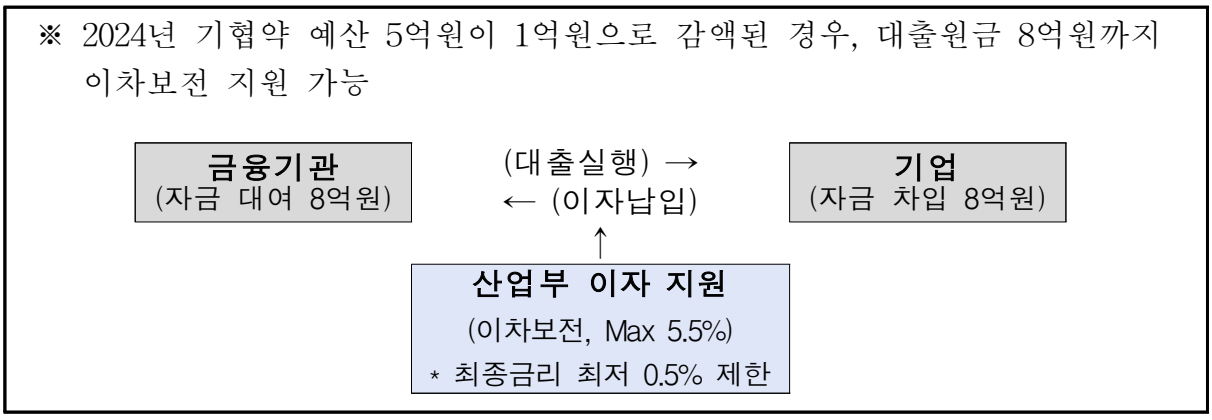
동 사업은 기존에 정부 지원 R&D를 수행하는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가 2024년도에 감액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97] 전 부처)으로 당초 협약에 따른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분

96) 이차보전: 이자 차액(대출금리-보전금리=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9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이차보전)'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2025년도 예산은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사업의 내내역사업으

의 200% 이내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최대 5년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p(최저 0.5%)까지 지원하여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기업의 R&D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R&D 과제 수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이차보전 예시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220억 3,5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2025년에는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조건[98]으로 2,200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하여 최대 5.5%p의 보전금리를 적용· 지원하였음.

이차보전금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 신청을 받아 집행되는데, 분기별 평균 이차보전율은 5.21% → 5.07% →

로 이관되었음)하였고. 동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R&D 수행 기업은 제외됨.

98) 2024~2025년 동 사업 이차보전 지원 요건: 최대 5년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최대 5.5%p(최저 0.5%)까지 지원

4.96%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5년 3분기까지 총 84억 2,2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지급되었음.

2025년도 동 사업 이차보전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분기	2분기	3분기	소계	
이차보전금	11,000	2,865	2,804	2,753	8,422	2,578
평균 이차보전율	-	5.21%	5.07%	4.96%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만, 2025년 집행잔액(25억 7,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4분기 지급 가능 이차보전율은 최대 4.65% 수준으로, 3분기 대비 이차보전율이 충분히 하락(0.31%p 이상)하지 않는다면 일부 미지급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99], 이 경우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제5항[100]에 따라 차년도 예산으로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해야 함.

산업통상부는 2023년 12월 이후 지속된 시중금리 하락[101](기업대출

99) 동 사업의 2025년 3분기 대출금리(4.96%)는 2분기(5.07%) 대비 0.11%p 하락에 그쳤음.

100)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⑤ 전문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01) 예금은행 기업대출금리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구분	2023년 12월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예금은행 기업대출금리*(%)	5.29	4.88	4.62	4.06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3.50	3.00	2.50

금리 5.29% → 4.06%,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 2.50%) 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에는 최대 보전금리를 기존 5.5%에서 4.5%로 1%p 인하할 계획으로 2026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5억 3,800만원이 감액된 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9,462백만원) - 대출원금 2,200억원 × 평균 이차보전율 4.25%p × 12/12개월 (보전금리 최대 4.5% / 최저 0.5%) · 기획평가관리비 (100백만원) - 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사업비유용 방지) 실시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예산의 감액 조정(평균 이차보전율 하락)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나, 동 사업의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당초 최대 5.5%까지 지원하기로 협약[102]된 보전금리의 상한 기준을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수준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임.

---

* 예금은행 기업대출금리 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2)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4조(지원조건)** 이차보전의 한도,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한도 :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감액분의 최대 200% 지원
2. 이차보전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보전금리 : 최대 5.5%(단, 기업 최소 부담금리는 0.5% 이상)

동 사업은 2024년 정부의 R&D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이미 사업비 감액 등의 손실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중단 등의 추가 피해를 완화하고, R&D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후속 지원사업임.

2025년 9월 기준, 동 사업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전체 기업(529개사)의 78.8%(417개사)가 최저금리(0.5%)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을 사유로 당초 5년간 지원하기로 협약한 5.5%의 이차보전율 상한을 4.5%로 낮추게 될 경우,

수혜기업의 23.2%(123개사)만이 최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기업은 실질적인 부담 금리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이차보전율 인하)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2025년 9월 기준 동 사업 대출금리 분포 현황

(단위: 개사)

<table>
<tr><th>은행 대출금리</th><th>업체수(비중)</th><th>5.5% 보전시
기업부담금리</th><th>4.5% 보전시
기업부담금리</th></tr>
<tr><td>5.0% 이하</td><td>123(23.2%)</td><td rowspan="2">0.5%</td><td>0.5%</td></tr>
<tr><td>5.0% 초과 ~ 6.0% 이하</td><td>294(55.6%)</td><td rowspan="3">0.5% 초과</td></tr>
<tr><td>6.0% 초과 ~ 7.0% 이하</td><td>91(17.2%)</td><td rowspan="2">0.5% 초과</td></tr>
<tr><td>7.0% 초과</td><td>21(4.0%)</td></tr>
<tr><td>합 계</td><td>529(100%)</td><td>-</td><td>-</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사업에서 2026년에도 당초 협약한 5.5%의 이차보전율 상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에서만 최대 이차보전율을 인하할 경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R&D 수행기업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기업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2026년도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예산안 산출 근거

◎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 ('25) 58,496백만원 → ('26) 61,803백만원, 3,307백만원 증액
① 이차보전금 : 61,203백만원 (기존 55,698백만원 + 신규 5,505백만원)
* [신성장] 26,135백만원 (기존 23,075백만원 + 신규 3,060백만원)
= (`23년 기존) 5,134억원 × 0.5(평잔) × 3%+ (`24, `25년 기존) 5,125억원 × 3% + (`26년 신규) 2,040억원 x 0.5(평잔) x 3%
* [신시장] 18,585백만원 (기존 16,140백만원 + 신규 2,445백만원)
= (`23년 기존) 2,240억원 × 0.5(평잔) × 3%+ (`24, `25년 기존) 4,260억원 × 3% + (`26년 신규) 1,630억원 x 0.5(평잔) x 3%
* **[개발기술] 16,483 백만원 = (`24, `25년 기존) 2,997억원 x 5.5% (이차보전율)**
※ `23~`25년 기존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공급잔액 기준으로 산출
② 이차보전 운영지원: 60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100백만원), 이차보전 외부평가수당(221백만원), 실사여비(147백만원), 콜센터 용역비(53백만원), 기타경비(79백만원)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R&D 구조조정의 후속 보완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부처 간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이차보전율 상한을 현행과 같은 5.5%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17)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분야별 AI 응용제품 지원사업과 차별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3174-421)은 AI 기술을 융합한 국내 제품·서비스 중에서 상품화 또는 파급효과 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서비스를 선정하여 제품개발과 조기 상용화 등 패키지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57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	-	-	157,500	157,50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분야별 AI 응용제품 지원사업과 차별성 필요

이 사업은 상품화 또는 파급효과 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AI 응용제품을 이미 양산 중인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탑재하여 즉시 출시가능한 조기상용화 제품(Type 1) 유형과 AI 기능이 추가되면 시장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개발이 필요한 시장선도형·글로벌진출형 제품(Type 2) 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Type 1의 경우 1년, Type 2의 경우 2년 동안 제품개발과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지원유형

구분	(Type 1) 조기상용화 제품	(Type 2) 시장선도형 및 글로벌진출형 제품
내용	이미 양산 중인 제품에 AI기능 추가탑재하거나 즉시 출시가능한 AI응용제품	AI기능이 추가될 경우 파급력이 높은 제품으로, AI모델 및 관련부품 개발이 필요한 제품
지원기간	1년	2년
예시	(AI 블랙박스) 기존 블랙박스에 주행 중 돌발상황을 실시간 감지하여 사고시 자동신고	(AI 산업재해방지 에어백) 작업자 추락 감지시 AI 센서 기술로 에어백을 팽창시켜 신체보호하는 장비로 기술개발 필요

자료: 산업통상부

AI 응용제품 산업의 경우 2028년 국내시장은 5조 9,347억원 규모[103], 세계시장은 1조 3,037억 달러 규모[104]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국내기업 중 23.8%의 기업만이 실제 프로젝트에 AI를 사용하고 있고[105] 제조업의 경우 3.9%의 기업만이 제품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서[106] AI 융합산업의 미래성 대비 국내 제조업 업체의 기술적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AI 응용제품과 시장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AI 응용제품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AI 응용제품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가전산업의 경우 “가전산업 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R&D)”사업, 기계장비산업의 경우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중 AI 관련 내역사업, 로봇산업의 경우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사업 등 주요 산업분야별로 AI 응용제품 개발지원에 관한 별도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3) IDC Korea, 「국내 인공지능 분석 시장 전망: 2023-2027」, 2023.4.
104) Fortune Business Insghts,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105) 삼성SDS, 「2023 국내 AI 도입 및 활용 현황 조사」, 2023.12.
1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AI 전략 세미나」, 2025.4.

산업통상부 소관 AI 융용제품 개발지원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유형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5	'26안
가전제품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 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R&D)	가전산업 분야 AX 전환 및 융복합 기술	-	4,000
기계장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중 AI 관련 내역사업	기계장비산업 분야 AI 기술 적용	42,342	112,512
로봇	로봇산업기술개발(R&D) 중 AI 관련 내역사업	로봇산업 분야 AI 기술 적용	27,068	40,997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 촉진	57,446	56,738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 기술국제공동연구(R&D)	자율로봇 부문 공동연구	3,150	2,520
모빌리티	자동차산업기술개발 (R&D) 중 자율주행 관련	모빌리티 자율주행 AI 관련 연구	171,034	158,559
선박	AI 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3,200
드론 조명	K-치안수요기반피지컬AI조명 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드론용 조명에 AI 기술 접목	-	5,000
의약품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 제조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AI 및 로봇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개발	2,200	8,800
헬스케어	스마트엣지디바이스 기술개발(R&D)[107]	디지털·모바일 헬스케어 AI 개발	2,200	8,800

자료: 산업통상부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산업통상부는 동 세부사업을 통해 AI 스마트 매트리스 등 가전제품, AI 절삭가공기 등 기계장비, 길거리 청소로봇 등 로봇, 로드 세이프티 스캔 AI 등 모빌리티, 웨어러블 혈압계 등 헬스케어 AI 응용제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108],

가전제품·기계장비 등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는 기존 R&D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제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본사업 기획시 사업 지원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여 산업분야별 AI 응용제품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독립된 세부사업으로서 별도편성에 따른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8)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사전기획보고서」, 2025.8.

(18)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간 R&D 연계강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은 자동차 제조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6억 7,300만원 감액된 3,37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스마트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디지털전환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및 커넥티비티 플랫폼 개발” 등 4개 내역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24억 7,500만원이 감액된 1,58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48,493**	**390,424**	**390,424**	**337,751**	**△52,673**	**△13.5**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중 자율주행 관련	**171,034**	**171,034**	**171,034**	**158,559**	**△12,475**	**△7.3**
-스마트카	82,813	115,684	115,684	125,404	9,720	8.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37,174	39,650	39,650	18,500	△21,150	△53.3
-디지털전환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및 커넥티비티 플랫폼 개발	8,880	7,950	7,950	7,950	-	-
-미래모빌리티차세대 전자아키텍처개발	6,320	7,750	7,750	6,705	△1,045	△13.5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산업통상부 - 국토교통부간 R&D 연계강화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AI 기반 자동차 R&D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카” 내역사업(1,254억 400만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술을 연구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내역사업(185억원), 지능형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 R&D 사업인 “디지털전환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및 커넥티비티 플랫폼 개발” 내역사업(88억 8,000만원) 등 총 1,585억 5,900만원의 R&D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자동차-ICT-도로교통 간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419억 7,700만원),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실증 기술개발(R&D)’(45억원) 사업, AI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개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율주행글로벌혁신클러스터연구개발사업’(34억원) 등 총 498억 7,700만원의 R&D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26안	사업내용
산업통상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중 자율주행 관련**	**158,559**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 연구개발**
	-스마트카	125,404	AI・자동화・지능화 중심 자동차 R&D 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18,500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기반 기술 연구개발
	-디지털전환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및 카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7,950	지능형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미래모빌리티차세대 전자아키텍처개발	6,705	소프웨어중심차량(SDV) 아키텍처 개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R&D)	41,977	자동차-ICT-도로교통 간 융합기술개발 및 실증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실증 기술개발(R&D)	4,500	중소도시 대상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자율주행글로벌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사업(R&D)	3,400	AI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러스터 운영
	소계	**49,87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운영시스템 연구개발**

자료: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109]을 소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연구개발[110]을 소관하고 있음.

---

10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산업통상부 소관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세부사업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전방위 센서 탑재 양산차 적용을 위한 End-to-End 자율주행 기술개발” 과제[111]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인식 기술개발이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인프라 센서 기반의 도로 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112] 및 “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개발” 과제[113]와 일부 내용상 관련성이 있는 한편,

산업통상부 소관 “엣지기반 위험환경 데이터 분석기술” 과제[114]의 경우 자율주행 중 위험환경에 대한 분석처리 기술개발이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인지판단 안정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개발” 과제[115]와 연구범위에 일부 연계성이 있음.

이 외에 산업통상부 소관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과제[116]의 경우 중소도시 대상 상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하여 내용상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실증 기술개발(R&D)”과 관련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간 R&D 사업에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간 R&D 사업이 독자적으로 편성・발주되고 있음.

---

111) 산업통상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스마트카) 내 과제 (주식회사에이치엘클레무브, 1억원)
11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내 과제(한국교통대학교, 25억원)
11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내 과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억원)
114) 산업통상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스마트카) 내 과제 (주식회사베이리스, 123억 2,200만원)
115)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내 과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억 9,400만원)
116) 산업통상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스마트카) 내 과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52억 5,000만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속기·조명 등 종전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 자율주행자동차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고[117],

중국의 경우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범도시를 20곳 지정하여 자율주행·지능형 자동차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118]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태동기 산업으로서 매년 관련 법제도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부처간 역할 분장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간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R&D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R&D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 R&D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데이터, 기술표준 공동 검증 등 부처간 협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7) Mayer Brown, 「DOT and NHTSA Announce Autonomous Vehicle Framework」, 2025.4.
118) digwatch, 「China launches pilot program for smart vehicle integration in 20 cities」, 2024.7.

(19)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실시지역 및 교육대상 확대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3688-321)은 나노 단위 정밀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나노소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9,200만원 증액된 4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918**	**1,618**	**1,618**	**4,310**	**2,692**	**166.4**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918	918	918	826	△92	△10.0
-글로벌사업화촉진	-	700	700	1,700	1,000	142.9
-협업생태계조성	-	-	-	1,784	1,784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실시지역 확대 검토 필요

동 세부사업 중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내역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계열 특성화고와 이공계열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나노공정 장비운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00만원 감액된 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행정교육기관 매칭사업으로서 서울·경기·대전·대구·포항 등 5개 권역에 소재하는 특성화고 학생 116명과 전문대학 학생 84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장비유지·보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개월 과정[119]과 장비운영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5개월 과정[120]을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사업내역

(단위: 명)

권역	교육기관	특화분야	교육대상	인원
서울	서울대학교	반도체	전문대	17
경기	한국나노기술원	화합물계 나노소자	특성화고	25
			전문대	28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실리콘계 나노소자	특성화고	25
			전문대	1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소재부품	전문대	26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나노소자/재료	특성화고	66

자료: 산업통상부

119) 전문대 대상) 장비유지·보수인력(Technician) 양성 목적의 장비실습 중심 교육과정(200시간)
120) 특성화고 대상) 장비운영인력(Operator) 양성 목적의 장비실습 중심 교육과정(450시간)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교육기관과 매칭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각 교육과정 소재지에 거주하는 학생만이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과정수료 후 취업연계 역시 소재지에 위치하는 나노기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있음.

지역별 나노기업의 채용수요와 동 사업에 따른 양성인력 수를 비교하면, 전체 나노기업 중 7.4%에 해당하는 68개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북권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양성인력이 전체 인력 중 46.0%에 달하는 92명인 반면에, 전체 나노기업 중 6.2%에 해당하는 57개사와 5.7%에 해당하는 52개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남권과 호남권에는 동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권역별 소재 나노기업 수와 교육사업 양성인력 수

권역	지역 나노기업	교육사업 양성인원	지원예산
수도권	548사 (59.7%)	70명 (35.0%)	2억 8,910만원
충청권	177사 (19.3%)	38명 (19.0%)	1억 5,694만원
경북권	68사 (7.4%)	92명 (46.0%)	3억 7,996만원
경남권	57사 (6.2%)	-	-
호남권	52사 (5.7%)	-	-
제주권	15사 (1.6%)	-	-
강원권	1사 (0.1%)	-	-
계	918사 (100%)	200명 (100%)	8억 2,60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한국탄소나노협회

해당 사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특성화고와 전문대생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나노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현장근무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2025년까지 동 사업 수료자의 지역기업 등 취업률은 55.0%에 달함[121].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나노기업과 관련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광주・전라권과 제주권 등 채용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실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1) 고용노동부,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7.

③ 교육대상 확대 필요

특성화고 학생 수의 경우 2011년 34만 227명에 달하던 것이 2024년에는 17만 1,378명으로 13년간 49.6%가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2011년 77만 6,738명이던 것이 2024년에는 49만 2,042명으로 36.7%가 감소하는 등 동 사업의 교육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학생 수와 전문대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특성화고 학생 수와 전문대학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특성화고 학생수	전문대학 학생수	계
2011년	340,227	776,738	1,116,965
2012년	330,797	769,888	1,100,685
2013년	320,374	757,721	1,078,095
2014년	313,449	740,801	1,054,250
2015년	302,021	720,466	1,022,487
2016년	290,632	697,214	987,846
2017년	274,281	677,721	952,002
2018년	252,260	659,232	911,492
2019년	230,098	643,762	873,860
2020년	212,294	621,772	834,066
2021년	198,663	576,041	774,704
2022년	182,801	539,306	722,107
2023년	175,327	509,169	684,496
2024년	171,378	492,042	663,420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이와 관련하여 나노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반면 교육대상이 되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학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기술인력(학생) 간에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122],

교육과정 수료율과 관련해서도 교육인원 100인당 중도탈락인원 수가 9.0인으로 국가직업훈련교육 평균 중도탈락인원 수 7.0인 대비 28.6%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원의 지속적 감소 및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 변화에 따라 동 사업의 교육대상이 되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기업의 고급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교육대상 외에 대졸 전공자 또는 유사직종 경력직 구직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122) “교육난이도가 높다”,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고용노동부,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7.)

(20)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설계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3688-325) 사업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산업연계형 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	-	-	100	10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설계 필요

지역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산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문기관[123]으로, 현재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강원지역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 디자인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 소재한 디자인전문기업의 업체 수가 2015년 104개에서 2019년 210개, 2024년에는 504개로 9년간 3.8배 규모로 증가하였고[124], 디자인전문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21년 10억 6,600만원에서 2023년 17억 3,800만원으로 2년간 63.0%가 증가하였음.

전북지역 디자인전문업체 및 디자인전공대학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	'22	'23
기업	전북 디자인전문기업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684	993 (+309, +45.2%)	1,603 (+601, +61.4%)
		소기업	836	950 (+114, +13.6%)	1,251 (+301, +31.7%)
		중기업	10,170	10,117 (△53, △0.5%)	10,805 (+688, +6.8%)
		평균	1,066	1,214 (+148, +13.9%)	1,738 (+524, +43.2%)
대학	전북 디자인전공 대학생수		724	1,249 (+525, +72.5%)	1,394 (+145, +11.6%)

자료: 산업정책연구원

12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24)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125]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2021년 101억 7,000만원에서 2023년 108억 500만원으로 2년간 6.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자체 디자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126]의 경우 오히려 평균매출액이 2021년 6억 8,400만원에서 2023년 16억 300만원으로 2년간 1.3배 이상 증가하여 전북지역 디자인산업의 수요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국립군산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전북 소재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디자인전공 대학생의 수가 2021년 724명에서 2023년 1,394명으로 2년간 92.5%가 증가한 점,

5개 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지역 디자인진흥원이 기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중소기업 중 평균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기업
1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중소기업 중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지역별 디자인진흥원과 소재 디자인전문기업 수

(단위: 개사)

권역	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강원	전북	제주
기관	본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검토중)	-
업체수	8,296	1,098	1,123	1,563	1,029	368	504	201
비율	58.6%	7.8%	7.9%	11.0%	7.2%	2.6%	3.6%	2.4%

자료: 산업정책연구원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생명바이오산업,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산업, 탄소융복합소재산업 등을 3대 주축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127],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3대 산업의 경우 지역 1인당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전국평균 대비 평균 1억원 이상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는 한편 각 사업체가 매년 평균 3% 이상 증가하는 등 해당 산업에 관한 민간과 공공의 디자인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127)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2025.8.

전북특별자치도 3대 주축산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3년간('20～'22) 연평균 성장률				경쟁력 (전국평균)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1인당 생산액	1인당 부가가치
농생명 바이오	+3.25%	+3.46%	+12.47%	+2.95%	436 (296)	103 (105)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3.77%	+4.63%	+20.43%	+15.42%	529 (398)	259 (112)
탄소융복합 소재	+3.08%	△1.73%	+1.71%	+2.87%	812 (673)	278 (211)

자료: 통계청

출범 초기부터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디자인진흥원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경제구조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요맞춤형 사업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26년~’29년/ 총 200억원(국 100, 지 100)

○ (제안기관) (주관) 전북도청

○ (사업위치) 전북 익산시

□ 사업내용

○ 전북 익산시 내 지역디자인진흥원 건립, 디자인 관련 장비 및 지원 체계 구축

- (장비구축, 100억원) 디자인소프트웨어 패키지, AI 이미지 생성 툴 등 47종 장비 구축

- (건축비, 100억원) 전북디자인진흥원 1개동(지하 1층, 지상 4층, 4,500㎡) 건립

* ’26년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으로 상세내용 변동 가능

□ ‘26년 예산요구 : 100백만원

○ 지역디자인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기본설계 등) 및 부지 선정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분야별				합계
	’26	’27	’28	’29	건축	장비	기업지원	기평비	
국 비	100	2,400	5,000	2,500	-	9,500	-	500	**10,000**
지방비	100	2,400	5,000	2,500	9,500	-	-	500	**10,000**
합 계	200	4,800	10,000	5,000	9,500	9,500	-	1,000	**20,000**

* ‘26년 기본계획 수립 예정으로 분야별 예산은 변동 가능 有

(2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규모 조정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는 시험인증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을 방지하여 적합성평가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된 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4,760	3,818	3,818	3,778	△40	△1.0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	400	400	500	100	25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25	1,100	1,100	1,100	-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2,785	1,718	1,718	1,563	△155	△9.0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0	600	600	555	△45	△7.5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	-	-	60	6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규모 조정 필요

동 사업은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③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④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⑤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내역사업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은 미래 유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128] 개발(기반조성, 공인성적서 발행 등)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1억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안전과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 감액된 1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28) 시험·인증서비스: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2026년도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사업출연금(350-02) ('25) 1,100백만원 → ('26) 1,100백만원

- (요구)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시험인증서비스 기반이 미약하거나 없는 유망분야의 시험 절차서, 치공구(지그)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 (산출)
  -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3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9백만원

②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출연금(350-02) ('25) 1,718백만원 → ('26) 1,563백만원

- (요구) 항바이러스 제품의 초기 기능성 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인증기준 및 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제품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산출)
  - 국제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10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3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4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국내외유효성 검증 210백만원(70백만원x3품목) + 지속성 국제기반 마련 145백만원
  - 시험인프라 구축 : 420백만원 = 3품목 x 200백만원 x 70%(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율)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내역사업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의 2025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공고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5월 과제 공고(품목지정공모[129])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현재 7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129) 품목지정공모: 정부에서 품목을 지정, 제시된 품목 내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선정

내역사업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의 2025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위원회와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과제 공고(지정공모[130])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현재 1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개발이 진행 중임.

2025년도 동 내역사업의 사업 추진 일정

①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7개 과제 선정)
- 2025년 2월 : 기술 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KEIT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수요조사 공고 20일
- 2025년 3~4월 : 기획위원회(3회) 및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5월 : 과제 공고(품목지정공모)
- 2025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②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1개 과제 선정)
- 2025년 2~3월 : 1차·2차 기획위원회 개최
- 2025년 3월 :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4~5월 : 과제 공고(지정공모)
- 2025년 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두 내역사업이 모두 과제별 착수 시점과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12개월분의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전체 과제의 수행기간이 2026년까지 이어지는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까지의 내역사업별 실집행률은 각각 12.0%와 31.3%에 불과함.

130)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여 사전에 기획된 RFP 형태의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

2025년도 동 내역사업 과제별 협약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과제명	협약 체결일	협약기간	예산액[실집행액] (실집행률*)
유망시험 서비스 개발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서비스 개발	'25.08.21	'25.07.01~'26.06.30 (12개월)	162[34] (21.1%)
	전력·에너지 분야 IEC62351기반 보안 시험인증 기반 조성	'25.08.21	'25.07.01~'26.06.30 (12개월)	141[23] (16.1%)
	마그네틱 감속기어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험방법 개발과 시험인증 기반 조성	'25.08.21	'25.07.01~'26.06.30 (12개월)	141[6] (4.3%)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 전자기적합성(EMC) 시험서비스 개발	'25.08.21	'25.07.01~'26.06.30 (12개월)	162[12] (7.4%)
	드론 종합 성능평가 시험서비스 개발	'25.08.25	'25.07.01~'26.06.30 (12개월)	162[33] (20.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력양계 시험서비스 개발	'25.08.25	'25.07.01~'26.06.30 (12개월)	162[9] (5.6%)
	물리적 AI 적용 물류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인증 기반조성	'25.09.02	'25.07.01~'26.06.30 (12개월)	141[11] (7.8%)
	소 계			**1,071[128] (12.0%)**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표면방역 생활용품에 대한 항바이러스 성능 지속성 평가기반 인증체계 구축	'25.06.25	'25.05.01~'26.04.30 (12개월)	**1,680[525] (31.3%)**

* 2025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사업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는 동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내역사업별 연내 평균 실집행률은 각각 43.0%와 53.0%로, 연례적인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

2022~2024년도 동 내역사업별 연도말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연도	과제수	협약기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유망시험 서비스 개발	2022	7건	'22.05.01~'23.04.30 (12개월)	1,250	615	49.2%
	2023	7건	'23.06.01~'24.05.31 (12개월)	1,225	542	44.2%
	2024	7건	'24.07.01~'25.06.30 (12개월)	1,103	383	34.7%
소 계				3,578	1,540	43.0%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2022	1건	'22.05.01~'23.04.30 (12개월)	3,675	2,725	74.1%
	2023	1건	'23.05.01~'24.04.30 (12개월)	3,679	1,299	35.3%
	2024	1건	'24.05.01~'25.04.30 (12개월)	2,750	1,331	48.4%
소 계				10,104	5,355	53.0%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3조[131]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132]하고 있음.

13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32)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p.265 발췌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350-02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2. 세부지침

□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적과 출연기관의 보유자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연례적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제기획 및 공모 등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2)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단년도 및 다년도 과제의 사업관리체계 구분과 단년도 과제 사업관리 강화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3731-330)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의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국내 기준물질의 부재로 수급 불안정 시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전략기준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원 증액된 68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R&D)	-	3,300	3,300	6,800	3,500	106.1

자료: 산업통상부

② 단년도 및 다년도 과제의 사업관리체계 구분과 단년도 과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소재 신뢰성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133]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국내기관 중심

133) 국가전략기준물질: 국가전략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 공급망 안정화, 정부 주도 공

단년도 과제와 국제협력형 다년도 과제로 구분되어 있음.

2026년 예산안에는 국내기관 중심 단년도 R&D 과제(신규 11개)와 국제협력형 다년도 R&D 과제(신규 4개, 계속 4개)에 대한 연구비로 총 68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800백만원

가.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 (3,300백만원)

・ (신규) 11개×300백만원×12/12개월 = 3,300백만원

  ・ (인건비) 4명 * 22.5백만원 = 9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30백만원 = 150백만원

  ・ (시험·인증비) 3건 * 10백만원 = 30백만원

  ・ (간접비) 30백만원

나. 국제협력 R&D 과제 (3,500백만원)

・(신규) 4개×500백만원×9/12개월 = 1,500백만원

・(계속) 4개×500백만원×12/12개월 = 2,000백만원

  ・ (인건비) 6명 * 25백만원 = 15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50백만원 = 250백만원

  ・ (국내외 시험·인증비) 5건 * 10백만원 = 50백만원

  ・ (간접비) 5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급 등에 필요한 물질로서 다른 물질의 양의 값과 측정 불확도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표준물질: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34]에 따르면,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고,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단년도 과제에는 12개월분의 연구비를, 다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9개월분의 연구비를 반영하였음.

그러나 2025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모든 과제가 2~3월 과제 공고, 4월 과제선정, 5월 협약체결로 일괄 진행되어,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의 경우에는 단년도 과제임에도 협약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실제 연내 과제 수행기간이 8개월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13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5 발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6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과제형 R&D 예산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2025년도 동 사업추진 일정 및 과제별 협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공고기간	선정 통보일	협약 체결일	예산액
국내기관 중심 R&D (단년도)	인수공통감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2.	295
	투명전극용 ITO 박막의 두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295
	리튬이차전지 분석용 Si계 음극재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295
	고출력, 고안정성 알루미늄계 이차전지 양극재 (NCA, NCMA)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295
	반도체 DRAM Metal Gate용 high-k 박막 증착을 위한 전구체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295
	반도체용 고순도 탄화규소 (SiC)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295
국제협력 R&D (다년도)	의료영상기기용 영상팬텀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0.	355
	디스플레이용 산화물 반도체 IGZO 박막의 두께 및 화학조성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355
	자동차 이차전지용 리튬인산철(LFP)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1.	355
	통신 반도체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밀리미터파 대역 On Wafer 측정용 임피던스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25.02.25.~ '25.03.26.	'25.04.28.	'25.05.20.	465

자료: 산업통상부

이는 단년도 과제의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분의 예산 편성을 허용하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단년도 과제의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단년도 및 다년도 과제의 사업관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제의 통합공고 및 일괄협약 방식을 지양하고, 단년도 과제의 협약체결 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과제기획·평가·선정 등의 협약준비 절차를 직전년도 예비사업 단계에서 선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3)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4301-303)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3,300만원 감액된 5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7,706	6,550	6,550	5,617	△933	△14.2

자료: 산업통상부

②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135]은 기존 「중견기업 기본통계」 데이터 범위가 기초적인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할 때 한계

135) 주: 산업부는 당초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라는 명칭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화 사업을 계획하고, 국회 등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동일한 사업 명칭으로 설명한 반면, 실제 사업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추진됨.
그리고 다시 2026년에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지원’(내역사업)에서 ‘통계시스템 고도화 사업’(내내역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① 데이터 수집, ② 가공·분석(콘텐츠), ③ HW 인프라에 걸쳐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초 소요 비용을 27억원으로 추정하고, 사업수행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였으며, 2025년 사업 완료 및 2026년 상반기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음.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예산	500	1,380	1,173
집행	500	1,380	1,173
실집행	500	1,379	808

자료: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1차) 통계자료 서비스

구분	기존	통계시스템 구축(1차, '23년~'25년)
통계 자료	○중견기업 기본통계 * 주요생산품, 업종, 종사자수, 매출, 자산, 부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중견기업 기본통계 * 주요생산품, 업종, 종사자수, 매출, 자산, 부채,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중견기업 품목(HS코드, MTI)별·업종별·지역별·국가별 수출입** **○중견기업 금융·공급망·기술 등 신규 통계 구축** **○산업경제동향보고서, 주요이슈보고서 제공** **○개별기업정보(재무정보, 신용정보, 거래처 등)** **○기업경영분석 등 자체 통계**
데이터 이용	○통계청(KOSIS) ○중견련 담당자에게 개별 요청(엑셀형태)	○KOSIS 연계 **○통계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DB화)** **- 시스템 내에서 통계분석 가능(피벗, 챗봇 등)**

자료: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메인화면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콘텐츠 화면



연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합계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2024	7,659	5.60	24	-27.30	2,430	-5.40	10,931	-15.40	21,044	-7.60
2023	7,254	9.40	33	-17.50	2,568	-7.90	12,927	52.50	22,782	27.00
2022	6,630	-12.00	40	-13.00	2,789	0.80	8,478	-16.00	17,937	-12.20
2021	7,532	5.60	46	-14.80	2,768	17.40	10,087	4.60	20,433	6.50
2020	7,134	-0.40	54	-44.90	2,358	-5.20	9,642	-16.40	19,188	-9.80
2019	7,162	4.60	98	-2.00	2,488	17.70	11,533	16.90	21,281	12.40
2018	6,849	2.90	100	-27.00	2,113	-10.00	9,868	16.80	18,930	7.60
2017	6,658	7.50	137	-0.70	2,349	-4.00	8,448	15.60	17,592	9.30
2016	6,196	4.90	138	-34.90	2,448	-1.50	7,309	-9.50	16,091	-3.50
2015	5,904	4.80	212	5.50	2,486	18.90	8,072	63.00	16,674	29.50
2014	5,633	-23.40	201	-23.90	2,091	-4.20	4,952	-31.40	12,877	-24.30
2013	7,353	18.40	264	-41.10	2,183	-12.90	7,221	45.60	17,021	20.50
2012	6,212	47.60	448	33.30	2,505	7.00	4,961	2.50	14,126	20.50
2011	4,209	-	336	-	2,341	-	4,838	-	11,724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이어 2026년 ‘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신개선 지원(내역사업)**
: (‘25) 3,145백만원 → (‘26) 3,136백만원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1,997백만원)
(산출) 통계갱신 1회×310백만원, 조사·분석 3식×120백만원,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정보마당 운영 1식×370백만원, **통계시스템 고도화 1식×957백만원**

○ 중견기업 인식개선 지원(1,139백만원)
(산출) 중견기업일자리박람회 2회×210백만원, 핵심인재육성아카데미 2과정×247백만원, 중견기업혁신네트워크 5회×5백만원, 중견기업인의날 1회×100백만원,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1식×1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우선,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9억 5,700만원)은 사업 계획 당시 예정했던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운영비(2억 5,000만원)와 차이가 있는데,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및 연도별 계획(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23	’24	’25	’26~
총 예산	500	1,400	800	250
인프라 구축	250	350	-	-
시스템 개발	250	800	550	-
데이터 수집·분석	-	150	150	150
유지·관리	-	100	100	100
주요 추진 내용	- 기본 인프라 구축(HW/SW) - 기존 데이터 DB化 작업	- 인프라 추가 구축(HW/SW) -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시스템 완성	- 보유 데이터 업데이트 및 분석 - 유지·관리

자료: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방향(23.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6년 개통된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의 운영 비용(2.8억원)외에 정보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인건비(2억원), 통계DB 구매비(2.5억원), 통계시스템 추가 고도화를 위한 ISMP 비용(1.5억원) 등의 필수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6년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예산금액	비고
인건비	200,000	
보수	**200,000**	**-사업비의 21%**
운영비	700,000	
일반수용비	6,000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4,000	-평가위 4회×5명×200천원
소규모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 대가	2,000	-회계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5,580	-서비실전기료: 300천원×12개월 -인터넷회선: 165천원×12개월
특근매식비	1,020	-야근식대: 3명×10천원×34회
임차료	600	-노트북 렌탈: 50천원×1대×12개월
재료비	**250,000**	**-통계DB: 150,000천원** **-이슈조사: 50,000천원** **-데이터처리: 50,000천원**
일반용역비	436,800	-시스템 유지보수: 286,800천원 **-ISMP컨설팅: 150,000천원**
여비	1,000	
국내여비	1,000	-국내여비: 2인×50천원×10회
업무추진비	3,000	
사업추진비	3,000	-업무추진비: 5명×30천원×20회
간접비	50,000	
간접비	50,000	-사업비 총액의 5.2%
합 계	957,000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통계시스템 재료비'는 이슈·조사,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지원(내역사업)에는 이미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과 별도로 통계 갱신이나 조사·분석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관리하거나,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6년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지원(내역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신개선 지원(내역사업)**
: ('25) 3,145백만원 → ('26) 3,136백만원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1,997백만원)
(산출) **통계갱신 1회×310백만원**, **조사·분석 3식×120백만원**,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정보마당 운영 1식×370백만원, **통계시스템 고도화 1식×957백만원**

○ 중견기업 인식개선 지원(1,139백만원)
(산출) 중견기업일자리박람회 2회×210백만원, 핵심인재육성아카데미 2과정×247백만원, 중견기업혁신네트워크 5회×5백만원, 중견기업인의날 1회×100백만원,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1식×1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 및 개통 직후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적합성·필요성을 검토하는 ISMP[136]를 실시할 계획인데,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 ISMP를 통해 향후 진행될 고도화사업에 있

136)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성능, 품질, 보안)·프로젝트 지언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 가능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2025)」 p.10

어 먼저 진행된 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통계시스템 고도화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명확한 사업 계획 설정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25년도 정부 전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838억원임. 세입은 총 6개 소관 기관에 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9개 소관 기관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음.

'26년도 정부 전체 에특회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6,283,803(100.0)**	**6,283,803(10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0.0)	25,48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0)	464,762(7.4)
농림축산식품부	43,047(0.7)	16,837(0.3)
산업통상자원부 **(※이관후)**	**6,014,807(95.7)** **(1,858,212(29.6))**	**2,385,940(38.0)** **(740,692(11.8))**
환경부	222,394(3.5)	3,225,538(51.3)
고용노동부	0(0.0)	89,495(1.4)
국토교통부	792(0.01)	8,796(0.1)
해양수산부	2,696(0.04)	57,661(0.9)
국가보훈부	67(0.001)	9,288(0.1)

자료: 산업통상부

'26년도 에특회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세입의 95.7%(6조 148억원), 세출의 38.0%(2조 3,85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첫째, 세입과 세출 규모를 전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총세입은 △554억원 감소하였으며, 총세출은 △977억원 감소하였음. 계정(투자계정, 융자계정) 간 전입금, 공자기금예탁원리금, 기금예수금 및 전력기금전입금 등을 제외한 순세입은 △889억원 감소하였고, 순세출은 △1,597억원 감소하였음.

'26년의 순세입과 순세출의 차이는 2,962억원으로 '25년의 5,160억원보다 △2,198억원 감소하였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특회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 감(B-A)
세입	순세입	2,391,744	2,302,891	△88,853
	타계정전입금	158,244	147,644	△10,600
	기금예수금	1,922,147	2,299,678	377,531
	전력기금전입금	1,242,635	909,142	△333,493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355,452	-
	계	6,070,222	6,014,807	△55,415
세출	순세출	2,166,446	2,006,706	△159,740
	타계정전출금	158,244	147,644	△10,600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58,959	231,590	72,631
	계	2,483,649	2,385,940	△97,709

주1) 순세입은 세입 중 타계정전입금, 기금예수금, 전력기금전입금,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임.
주2) 순세출은 세출 중 타계정전출금,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부

둘째, 세출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5년도 예산에 비하여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기술개발, 계정간거래 등은 감액되었고, 에너지자원정책,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에너지기술기반확충, 회계기금간거래는 증액되었음.

프로그램별 예산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에너지자원정책	계	994,423	994,423	1,022,802	28,379
	투자계정	697,554	697,554	740,909	43,355
	융자계정	296,869	296,869	281,893	△14,976
재생에너지및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투자계정	66,714	66,714	91,848	25,134
에너지공급체계구축	계	801,158	1,016,878	580,622	△220,536
	투자계정	746,606	962,326	497,163	△249,443
	융자계정	54,552	54,552	83,459	28,907
에너지기술개발	투자계정	246,240	246,240	242,682	△3,558
에너지기술기반확충	투자계정	57,911	57,911	68,752	10,841
회계기금간거래	투자계정	158,959	163,519	231,590	72,631
계정간거래	융자계정	158,244	158,244	147,644	△10,600
합 계		**2,483,649**	**2,703,929**	**2,385,940**	**△97,709**

자료: 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급체계구축 프로그램은 △2,20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폐광대책비 사업이 △1,088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이 △547억원 감액된 것에 기인함.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은 △3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사업이 △31억원 감액 및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사업이 △68억원 감액된 것에서 기인함.

이러한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의 특징은 전반적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세부사업 기준으로 종료된 사업은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강화,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등 6개이며, 신규사업은 수소연료전지고도화지원센터플랫폼구축 및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등 7개임.

종료 및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종료사업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강화	918	-
종료사업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7,895	-
종료사업	수소충전인프라 안전관리핵심 기술개발(R&D)	495	-
종료사업	액화수소충전핵심 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9,022	-
종료사업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10,700	-
종료사업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3,822	-
신규사업	수소연료전지고도화지원센터플랫폼구축	-	599
신규사업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	918
신규사업	수용가전기설비 원격점검및디지털 안전기술개발(R&D)	-	4,000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신규사업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	-	4,000
신규사업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	-	4,000
신규사업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	-	3,600
신규사업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3,777

자료: 산업통상부

넷째, R&D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5년도 예산에 비하여 약 7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에너지공급기술 76억원 증액, 국제협력 81억원, 에너지기술기반구축에서 30억원 증액된 반면, 에너지수요기술에서 △112억원 감액되었음.

에너지 R&D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197,961	194,829	△3,132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증 및안전기술개발(R&D)	10,290	3,500	△6,790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7,100	4,100
		수용가전기설비원격점검 및 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	4,000	4,000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안전성확보 및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R&D)	-	4,000	4,000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9,022	-	△9,022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495	-	△495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운영실증(R&D)	3,822	-	△3,822
		소계	**224,590**	**213,429**	**△11,161**

구분		사업명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에너지 공급 기술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R&D)	6,994	3,900	△3,094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 최적화기술개발(R&D)	2,767	4,943	2,176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 개발(R&D)	3,889	3,000	△889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 술개발(R&D)	5,000	4,860	△140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 기술개발(R&D)	3,000	4,950	1,950
		자원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 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R&D)	-	4,000	4,000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R&D)	-	3,600	3,600
		소계	**21,650**	**29,253**	**7,603**
	계		**246,240**	**242,682**	**△3,558**
에너지 기술 기반 확충	국제 협력	에너지국제공동연구	44,018	52,113	8,095
	기술 정책	에너지기술정책수립	630	630	0
		소계	**44,648**	**52,743**	**8,095**
	기반 구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1,121	10,473	△648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5,275	3,733
		소계	**12,663**	**15,748**	**3,085**
	계		**57,311**	**68,491**	**11,180**
합계			**303,551**	**311,173**	**7,622**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사업별로는 에너지국제공동연구(80억원),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37억원),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1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30억원),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38억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90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40억원),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36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다섯째, '26년도 예산안을 사업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부가 직접 수행하는 예산은 49억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에 보조, 출연 등을 통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임.

사업수행주체별 '26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4,908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3,381),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160), 에너지국제협력(500), 회계관리비(39), 자원협력기반구축(567), 에너지자원정책연구(261)
대한석탄공사	31,047	석탄비축자산구입비(1,257), 대한석탄공사출자(28,650), 석탄비축자산관리비(1,140)
수소융합얼라이언스	5,019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5,019)
한국LPG산업협회	2,235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2,235)
에너지경제연구원	1,936	에너지정보통계센터(446), 에너지센서스(1,490)
한국가스안전공사	93,939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93,021),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918)
한국광해광업공단	397,459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23,140), 폐광대책비(57,606), 광해방지사업(88,000), 탄가안정대책보조(50,895),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46,000), 일반광업육성지원(22,984), 해외자원개발조사(3,705),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1,352),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3,777)
한국산업	26,197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구축(9,785),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기술진흥원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7,612),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8,800)
한국석유 공사	70,682	회계위탁관리비(279), 저탄소암모니아유통구조구축시범연구사업(1,935),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 및 도입기반구축(1,485), 석유비축사업출자(55,300), 석유유통구조개선(761), 유전개발사업출자(10,922)
한국석유 관리원	26,865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16,314), 수소유통기반구축(4,853),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기반 구축사업(5,698)
한국에너지 공단	981,98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276,5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37,200), 한국에너지공단지원(82,842), 가스안전관리(융자)(3,522), 장기사용석유저장시설안전관리융자(1,861), 에너지바우처(494,027),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2,559),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12,442),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71,017)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360,973	폐갱도를활용한이산화탄소육상저장시범시업(1,788),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20,9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94,829),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3,500),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3,00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내 타이타늄 최적화기술개발(4,943),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3,900),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술개발(4,860), 에너지국제공동연구(52,113), 에너지기술정책수립(630),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5,2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10,473),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21,439),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5,074),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7,100), 저품위 산화광 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4,950), 수소연료전지 고도화 지원센터 플랫폼 구축(599),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기술개발(4,000),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망 고안전성 확보 및 AI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4,000),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4,000),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3,600)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지방자치 단체	3,466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3,466)
합 계	2,006,706	

자료: 산업통상부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에특회계 재원운용 방향 재정비 필요

① 정부조직 개편 현황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시행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왔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2026년 회계·기금별 예산안 소관 구분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6년 예산안 (사업수)		산업부 (사업수)	기후부 (사업수)
합 계	138,778 (579)		97,869 (461)	40,909 (132)
◇ 예 산	109,986		96,668	13,319
일반회계	56,253 (369)		55,784 (359)	469 (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67 (65)		7,407 (37)	12,660 (3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9,509 (15)	➡	19,509 (1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02 (42)		13,913 (37)	189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5 (2)		55 (2)	-
◇ 기 금	28,792		1,201	27,591
전력산업기반기금	25,753 (61)		-	25,753 (6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201 (11)		1,201 (11)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838 (14)		-	1,838 (14)

주: 1)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이며, 일반·에특·지특 사업내 분리되는 사업 포함
2) 기금사업은 원칙상 기금 주무부처 예산으로 계산(산촉기금-산업부, 전력기금-기후부)
자료: 산업통상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소요를 반영할 경우, 2026년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13조 8,778억원 중 산업통상부 소관은 9조 7,869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규모는 총 4조 909억원으로 추산됨.

주요 이관사항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관리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산업통상부는 기존 에특회계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 자원산업 정책 관련 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에특회계 소관 예산의 경우 당초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 예산안이 2조 67억원(세부사업 65개) 규모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잔류하는 예산은 7,407억원(세부사업 37개) 규모임.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2조 5,753억원(세부사업 61개) 규모의 지출계획안이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②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의 적정 규모 재산출 필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세입예산안 6조 148억 700만원 대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30.9% 수준인 1조 8,582억 1,3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개편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1	이관 대상	정부출자수입	8,596	17,053	6,460	10,593
2		기타재산이자수입	3,252	10,991	3,522	7,469
3		기타경상이전수입	54,714	49,421	15,838	33,583
4		계정간전입금	158,244	147,644	-	147,644
5		기금전입금	1,242,635	909,142	-	909,142
6		기금예수금	1,922,147	2,299,678	-	2,299,678
7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355,452	-	355,452
8		기타민간이자수입	24,488	27,819	5,550	22,269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3,163	463,163	92,399	370,764
소 계(A)			4,232,691	4,280,363	123,769	4,156,594
1	잔류	토지대여료	13	13	13	-
2		과태료	105	105	105	-
3		과징금	56	56	56	-
4		가산금	75	75	75	-
5		법정부담금	1,837,282	1,734,195	1,734,195	-
소 계(B)			1,837,531	1,734,444	1,734,444	-
합 계			6,070,222	6,014,807	1,858,213	4,156,594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 구성된 법정부담금(1조 7,341억 9,500만원) 과목임. 이 중 단일 과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석유수입부과

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원유/석유제품에 대하여 7,406억 4,200만원, 천연가스(LNG)에 대하여 6,641억 1,800만원을 합한 1조 4,04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법정부담금의 예산 대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이 30% 가량 인하되면서, 2024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총 1조 8,944억 4,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1조 4,116억 3,500만원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74.4% 수준으로 나타났음.

2022~2025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650,005	1,650,005	1,650,005	1,812,875	1,803,073	109.3
2023	1,821,355	1,821,355	1,821,355	1,225,225	1,218,059	66.9
2024	1,894,449	1,894,449	1,894,449	1,411,635	1,409,209	74.4
2025. 9월말 기준	1,837,282	1,837,282	1,837,282	1,035,628	1,022,032	55.6
2026(안)	1,734,195	1,734,195	-	-	-	-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신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8월부터는 수출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연내 최초 부과금액 대비 당해연도 환급금액 비율을 보면 2023년 74.3%로 전년 대비 15.3%p 증가한 이후로 계속하여 70%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1~2025년 9월말 기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현황(한국석유공사)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말 기준
연내 최초 부과금액(A)	3,530,115	3,678,181	3,578,573	3,674,530	2,656,276
부과건수	474	523	535	573	370
건당 부과금액	7,447	7,033	6,689	6,413	7,179
연내 당해연도 환급금액(B)	2,231,943	2,168,936	2,660,207	2,601,871	1,889,094
환급건수	2,231	2,183	2,765	2,800	1,992
건당 환급금액	1,000	994	962	929	948
순징수금액 (C=A-B)	1,298,172	1,509,245	918,366	1,072,658	767,182
환급 비율(B/A)	63.2	59.0	74.3	70.8	71.1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2025년 9월 말 기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실적은 7,671억 8,200만원으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법정부담금 예산현액 1조 8,372억 8,200만원의 최종 수납률 또한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2025년 9월 말 기준 법정부담금의 수납진도율은 55.6%로 3분기까지의 실적임을 고려하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소관 세입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수납계획에 기초하여 적정 규모를 재산출함으로써 에특회계의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③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 재정운용 방향 정비 필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137]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 필요성이 주요 설치 요건임.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 세입 예산안은 1조 8,582억 1,300만원임에 비해, 에특회계 내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 예산안은 7,409억 6,200만원에 불과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자원 산업계의 법정부담금 세입으로 에특회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타 부처 소관 에너지 분야 사업의 재원을 사실상 충당하는 형태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

137)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에특회계 부처별 세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4년	'25년	'26년	
		본예산	본예산	정부 제출안	조직 개편 반영안
에특회계 세출 총계		6,471,155	6,305,822	6,283,803	6,283,803
에특회계 순세출 총계 *		6,224,780	5,988,619	5,904,569	5,904,569
	산업부	2,561,139	2,166,446	2,006,706	740,962
	총리실	11,631	12,374	25,486	-
	과기부	387,195	420,694	464,762	-
	보훈부	13,259	9,854	9,288	-
	농림부	17,363	16,495	16,837	-
	기후에너지환경부	3,066,950	3,200,667	3,225,538	4,491,552
	고용부	89,566	86,620	89,495	-
	국토부	14,426	13,667	8,796	-
	해수부	63,251	61,802	57,661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98,210	158,959	231,590	-
계정간 전출금		148,165	158,244	147,644	-

주: * 에특회계 순세출 총계는 세출 총계에서 정부 내부거래 예산을 제외한 에특회계 순세출 사업의 총계를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특회계로 2026년 예산안 기준 9,091억 4,200만원을 전출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에특회계로 2조 2,996억 7,800만원을 예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나, 충당된 재원의 상당 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 분야 사업(4조 4,915억 5,200만원)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에특회계 관리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간 설립 목적 및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방향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에특회계의 산업통상부 소관 법정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세출 사업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전기료 등)을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세출 사업을 분리하여 두 재원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원전 수출 기능 관련 사업추진 기반 마련 필요

‘전력해외진출지원’(7402-301)은 원전, 전력지자재, 분산에너지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수출기반 조성, 전력산업 홍보, 정보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38억 4,400만원 증액된 32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전력해외진출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전력해외진출지원	8,463	18,336	33,336	32,180	13,844	75.5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원전 도입국 및 협력국 대상 원전 세일즈 지원활동을 확대하고, 각종 홍보행사 개최 및 주요인사 국내초청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역사업인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과, ‘전력기자재수출지원’, ‘전력기자재금융지원’,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 등 총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전력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전력해외진출지원	8,463	18,336	33,336	32,180	13,844	75.5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8,463	11,641	11,641	12,705	1,064	9.1
전력기자재 수출지원	-	500	500	1,695	1,195	239.0
전력기자재 금융지원	-	-	15,000	17,000	17,000	순증
분산에너지 국제인증지원	-	-	-	780	780	순증
신재생에너지 산업해외진출 지원	-	-	6,195	-	△6,195	순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면서,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산업통상부(원전전략기획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예산요구 및 기금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이는 기획재정부가 기금관리주체인 기후대응기금 내 세출 사업들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부처들은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고, 예산의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대응은 기획재정부가 기금관리주체로서 전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임.

다만,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는 국내 에너지공급 및 전력시장 등 에너지정책은 기후·환경 대응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진흥 및 수출·통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원칙 하에 원전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역·통상 기능에 대한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통상부의 업무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이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 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원전의 공동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사업자의 컨설팅 비용 및 각종 필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036호)」[138]도 현재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중인 상황임.

이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의 원전수출 기능 강화에 대한 기획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집행을 도모하기

138)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제1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제1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제15조(원전수출사업자의 사업재편지원 등)

위해서는 원전 수출 지원 관련 재정사업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음.

참고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는「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139], 원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2호에 따라 위임된 대통령령[140]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원전 수출지원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139)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14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5. < 생 략 >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 8. < 생 략 >

(3) 정부출자수입: 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정부출자수입’(52-521)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내 출자기관[141]의 경영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이익의 일부를 출자배당으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억 5,700만원 증액된 17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정부출자수입	3,721	8,596	8,596	17,053	8,457	98.4

자료: 산업통상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 관련 세입예산안(105억 9,300만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산업통상부 소관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세입(41억 5,600만원)과 송유관공사(23억 400만원)에 대한 세입으로 구성됨.

141) 지역난방공사, 송유관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2026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산출 근거

2025년 세입예산 내역 (8,596백만원)	2026년 세입예산안 내역 (17,053백만원)
▪ '24년말 예상 당기순이익×배당성향×에특지분 · 송유관공사 : 41,414백만원×90.1%×9.76%=3,641백만원 · 가스공사 : 561,529백만원×24.0%×3.67%=4,955백만원	▪ '25년말 예상 당기순이익×배당성향×에특지분 · 지역난방공사 : 238,649백만원×12.85% ×34.55%=10,593백만원 · 송유관공사 : 47,296백만원×90.05%×9.76%=4,156백만원 · 가스공사 : 403,035백만원×15.8%×3.67%=2,304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② 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최근 5년간 정부출자수입의 예산 대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은 출자기관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0%대에 머물다가, 2025년은 예산액 85억 9,600만원 대비 수납액이 243억 9,600만원으로 수납률이 283.8%에 이르고 있음.

2022~2025년 정부출자수입 예산 대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2022	5,351	5,351	5,351	14,745	14,745	275.6	100.0
2023	7,722	7,722	7,722	3,644	3,644	47.2	100.0
2024	9,208	9,208	9,208	3,721	3,721	40.4	100.0
2025	8,596	8,596	8,596	24,396	24,396	283.8	100.0
2026(안)	17,053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 출자기관 배당수익금 배분계획과 실제 수납치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년도말 당기순이익에 배당성향과 에특회계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배당수익금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 시점 당시와 실적치 간에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 편성 당시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1월 제출한 2023년 말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023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7,331억원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반기 이후부터의 공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악화되자 2024년 결산 기준 배당금 수납실적이 0원이었음.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료비를 낮추고자 기존 장기 계약에 대한 가격 재협상, 신규 저가 장기 물량 도입을 추진하였고, 해외사업 분야의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되었음.[142]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당기순이익이 1조 1,49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음.

지역난방공사 또한 2022년 급등했던 연료비 여파가 2023년 이후 점

142)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가스공사, “2024년 흑자 전환은 전사적인 노력의 결실”」

차 완화되면서 비용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등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안정화가 수익구조 정상화에 기여하였음.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2025년도 정부출자수입의 수납실적은 243억 9,600만원으로 수납률이 283.8%을 기록하게 된 것임.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정부출자수입을 2025년 수납실적 243억 9,600만원보다 73억 4,300만원(△30.1%) 적은 17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을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출자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하반기 영업이익 악화를 전제로 2025년도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이 각각 이미 6,279억 8,200만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종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4,030억 3,500만원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2~2025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근거 대비 제출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구분	당기순이익 추정	2024년 당기 순이익	배당성향	에특지분	최근 배당성향 실적치[2]
한국가스공사	26(안) 편성근거	403,035	793,415	15.8%	3.67%	(2019) 40.8 (2021) 39.4 (2024) 16.0
	제출계획	403,035[1]		16.0%	3.67%	
지역난방공사	26(안) 편성근거	238,469	223,374	12.9%	34.6%	(2020) 40.0 (2021) 43.0 (2024) 21.4
	제출계획	238,469		21.4%	34.6%	
송유관공사	26(안) 편성근거	47,296	45,020	90.1%	9.76%	(2019) 34.9 (2020) 35.0 (2021) 90.1 (2022) 90.2 (2023) 90.2 (2024) 90.0
	제출계획	47,296		(명시하지 않음)	9.76%	

주: 1) 한국가스공사의 제출일(7월) 기준 2025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추정 당기순이익은 4,303억 5,100만원임
2) 배당성향 실적치에 표기하지 않은 연도는 배당이 없었던 해에 해당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의 2024년도 당기순이익(별도) 실적치는 7,934억 1,5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로 계상한 당기순이익 4,030억 3,500만원 대비 196.8% 수준이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0월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303억 5,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과 관련하여서도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당성향을 직전년도(2024년도) 실적치인 16.0%에 근거하여 각각 15.8%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과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9년 40.8%, 2021년 39.4%,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20년 40.0%, 2021년 43.0%의 배당성향 실적치를 기록하였음을 고려하면, 과거 평균치가 아닌 최근 1개년 실적치만을 참조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안을 추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추가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배당성향 실적치가 2024년도 기준 21.4%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배당성향 추계치는 12.9%로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과도한 보수주의로 인하여 2025년과 같이 세입이 과소계상되어 초과수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출자기관별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배당성향 예상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검사수수료 인상 소요를 반영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① 예산안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5143-301)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출연금 302억 6,100만원,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운영출연금 627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억 300만원 증액된 93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89,374	85,218	85,218	93,021	7,803	9.2

자료: 산업통상부

② 검사수수료 인상 소요를 반영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지출 계획 총액에서 자체수입 추계액을 차감하는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해당 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인 추계 방식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6년 공통처우개선(3.5%) 및 증원 인력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4.6% 증가한 1,477억 8,200만원이 소요되고, 경상비는 86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비 33억 6,600만원을 합하여 지출 총계액은 1,598억 3,8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이후 해당 지출 총계액에서 자체수입 추계치 1,295억 7,700만원을 제외한 302억 6,100만원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계상하였음.

2026년도 기관운영출연금 수지차 보전 방식 추계 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24실적	'25예산(a)	'26예산안 (b)	(b-a)	%
□ 총 수입	125,033	130,823	129,577	△1,246	△1.0
○ 자체수입	125,033	130,823	127,007	△3,816	△2.9
- 사업수입	121,881	128,867	124,918	△3,949	△3.1
· 검사	79,278	83,033	80,797	△2,236	△2.7
· 기술컨설팅	27,534	30,238	28,890	△1,348	△4.5
· 연구개발	6,164	6,613	6,684	+71	+1.1
· 교육	8,905	8,983	8,547	△436	△4.9
- 사업외수입	3,152	1,956	2,089	+133	+6.8
· 잡수입	1,681	1,172	1,189	+17	+1.5
· 이자수입	1,471	784	900	+116	+14.8
○ 이월결산 잉여금 등	-	-	2,570	+2,570	순증
- 전기이월금	-	-	2,457	+2,457	순증
- 전전기이월금	-	-	113	+113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수입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업수입을 보면, 산업통상부는 2026년 검사수수료, 교육수수료 등 주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1,249억 1,800만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수입 1,288억 6,700만원보다 39억 4,900만원(△3.1%) 감소한 수준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검사 및 교육수수료의 경우처럼 업무별 매년 수입결산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 업무별 추세에 따른 평균값 및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망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검토 요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사업수입 결산액이 2021년 1,143억 1,600만원 대비 2024년 1,218억 8,100만원으로 증가해 온 추세와 수입예산 개선 자구노력 등을 종합 반영하여 1,249억 1,800만원으로 추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121,731	115,231	125,183	119,198	127,729	123,291	124,932	125,033
○사업수입	**120,758**	**114,316**	**124,156**	**118,039**	**126,537**	**121,335**	**122,070**	**121,881**
-검사수입	82,889	77,568	84,341	78,361	85,001	80,254	79,631	79,278
-기술컨설팅수입	23,764	24,182	25,662	25182	26,956	26,222	28,049	27,534
-연구개발수입	5,549	6,135	5,597	6554	5,597	6,407	5,407	6,164
-교육수입	8,556	6,431	8,556	7942	8,983	8,452	8,983	8,905
○사업외수입	973	915	1,027	1159	1,192	1,956	1,416	3,152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잡수입	441	796	502	713	671	1,172	797	1,681
-이자수입	532	119	525	446	521	787	619	1,471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산업통상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 및 교육 기준을 개정하여 가스시설 정기검사와 완성검사를 비롯하여 교육수수료(수수료 716종 중 643종의 수수료에 해당)를 평균 5% 인상한 바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및 교육 수수료 인상 현황

■ 주요 가스시설 검사 수수료

비교		인상전	인상후
LPG충전·집단공급·저장소 시설	완성검사(5톤 이하)	20만7000원	21만9000원
	정기검사(5톤 이하)	13만9000원	14만7000원
LPG판매시설	완성검사	17만6000원	18만6000원
	정기검사	12만원	12만7000원
가스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40만5000원	42만9000원
LPG배관망공급사업	정기검사(5톤 이하)	13만9000원	14만7000원
정압기	정기검사	8만3000원	8만8000원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	압력조정기류	60만5000원	64만1000원
	콕	53만원	56만1000원
	주물연소기	40만원	42만4000원
	업무용대형연소기	36만4000원	38만5000원
안전관리규정 심사	LPG충전시설(신규)	12만3000원	13만원
	집단공급시설(신규)	9만8000원	10만4000원
	판매시설(신규)	6만2000원	6만6000원
	가스용품 제조시설	21만5000원	22만8000원
도시가스 공급소	정기검사	23만1000원	24만5000원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규/ 변경)	가스도매사업자시설	(45만5000원/ 35만원)	(48만2000원/ 37만1000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시설	(32만7000원/ 25만2000원)	(34만6000원/ 26만7000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7만5000원/ 21만2000원)	(29만1000원/ 22만5000원)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납사분해시설	115만3000원	122만1000원
	중질유분해시설	107만2000원	113만5000원
	기타시설	82만원	86만8000원
품질검사 (기본+추가)	연료전지용 수소	96만원	101만7000원
	냉매용 가스	(72만원+19만원)	(76만2000원 +20만1000원)

자료: 가스신문, 「가스시설 검사·교육수수료 10월부터 평균 5% 인상」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 조치로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면 자체수입 추계 시 사업수입은 연평균 증가 추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 여건 개선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수입 추계 기준 사업수입 893억 4,400만원 중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진 대상 금액은 505억 5,400만원으로, 이에 따라 28억 9,700만원 상당의 추가 수수료 수입 증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기관에 대한 수지차보전 지원 예산 편성 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 요인도 반영하여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비축사업 출자 사업: 비축사업 부문 수익 누적에 따른 석유공사 자체부담분 상향 방안 검토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석유비축사업 출자’(5432-301)는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유를 구입하고,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6억 100만원 감액된 55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석유비축사업출자	66,595	79,901	79,901	55,300	△24,601	△30.8

자료: 산업통상부

② 비축사업 부문 수익 누적에 따른 출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비축유 구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통해 석유수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9억 8,100만원이 감액된 263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5차 석유비축계획(안)에 따른 2026년도 원유 비축 목표 50만 배럴 중 25만 5천 배럴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 출자금을 통해 구매·비축하고, 나머지 24만 5천 배럴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비축할 계획임.

2024~2026년 비축유 구매에 대한 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부담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축유 구입	· 원유 320천B × 단가 $88.14/B ×환율 1,301.0원/$	· 원유 430천B × $85.07/B × 환율 1,347.2원/$	· 원유 255천B × $74.66/B × 환율 1,380.0원/$
총 비축량	909천B(정부출자 320천B, 석유공사 부담 589천B)	790천B(정부출자 430천B, 석유공사 부담 360천B)	**500천B(정부출자 255천B, 석유공사 부담 245천B)**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석유공사가 제출한 비축사업 부문 영업이익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비축자산 활용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2025년 기준 1,083억원으로 전년 346억 대비 737억원 증가하였음.

2020~2024년 비축사업 부문 영어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수익 A)	비축유 활용수익(a)		1,506	498	2,033	1,580	2,345
	비축시설 활용수익(b)		1,098	898	858	1,037	1,088
	비축자산활용수익(a+b)		2,604	1,396	2,891	2,617	3,433
매출원가(비용 B)	비축기지운영 인건비		492	402	418	473	507
	비축기지 운영경비	기타경비	610	626	675	723	732
		감가상각비	845	838	1,028	1,075	1,111
	소계		1,947	1,866	2,121	2,271	2,350
영업이익(A-B)[주]			657	△470	770	346	1,083

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의 비축사업부문 영업이익과의 차이 사유 : 감사 보고서 부문별 손익은 비축사업부문/석유사업부문/개발사업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석유상품(재고자산)의 판매 수익 및 매출원가'는 석유사업부문으로 집계됨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와 같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사업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1,08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의 자체부담분을 전년 36만 배럴 대비 오히려 11만 5천 배럴 감소한 24만 5천 배럴로 설정하여 정부 출자금을 편성하였음.

더욱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트레이딩 확대 등 비축자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차입금 감축 등 실질적인 재무성과 도출을 통해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1,915억원, 영업이익 1조 2,734억원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2022년 이후 3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143]

이를 고려하면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석유비축 부담분 중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부담분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초 산업통상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을 통해 2025년 내 누적비축물량 100.4백만 배럴을

143)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 “한국석유공사, 2024년 당기순이익 1,915억원 시현으로 3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 2025.3.4.

달성할 것을 추진하여 왔고, 석유비축계획 달성률은 2024년 성과지표 기준 99.7%로 사실상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안)을 통한 추가 비축유 구매 소요분 50만 배럴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이를 고려하면,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144]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기에 앞서 해당 계획(안)의 내용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하여 추가적인 비축유 구매의 필요성 및 정부 예산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45]

1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45)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정부 석유비축계획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 비공개자료로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 및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임.

(6) 폐광대책비 사업: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연차별 국비 및 지방비 분담 계획 마련 필요

① 예산안 현황

‘폐광대책비’(5437-301)는 석탄생산 규모 축소 및 폐광으로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7억 6,200만원 감액된 57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폐광대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폐광대책비	223,589	166,368	166,368	57,606	△108,762	△65.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재해위로금 지급 지연에 따른 문제

내역사업인 ‘근로자대책비’는 석탄생산규모 축소로 정부재정 부담 경감과 폐광·감산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자금, 재해위로금을 지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송무비 지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근로자대책비 예산안

내역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근로자대책비	○ 근로자대책비 : 12,169백만원 - 학 자 금 : 1,394백만원(366명×3.81백만원) **- 재해위로금 : 10,766백만원** **• 재해위로금 : 10,756백만원(77건x140.3백만원)** **• 심의비(외부위원) : 10백만원(400천원x4명x6회)** - 송 무 비 : 332백만원 • 소송비용확정(패소) : 260백만원(20건x13백만원) • 변호사선임비(착수) : 72백만원(20건x3.67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재해위로금은 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의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 144억 7,700만원 대비 37억 1,100만원이 감액된 10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14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146) 「석탄산업법」
제41조(폐광대책비)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건수 예상치가 2025년 103건에서 2026년 77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최근 3년(2023~2025년)간 1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자대책비 내내역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9월 재해위로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11.9%로 2024년 63.7% 대비 5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2025년 근로자대책비 내내역별 실집행 현황(1~9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학 자 금	589	129	21.9	1,463	342	23.4	1,496	338	22.6
재해위로금	25,609	32,174	125.6	20,654	13,158	63.7	14,477	1,730	11.9
송 무 비	113	182	161.1	121	149	123.1	332	7	2.1

자료: 산업통상부 및 광해광업공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행정소송 판결 지연 및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감소하였다고 설명[147]하였으나,

재직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에게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특성상 공단 내부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147) 구체적으로, 2025년 석탄공사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 및 석탄공사 본사 인력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폐광지원 업무 및 석탄공사가 수행 중인 정부석탄비축 사무의 공단 이관 결정 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의 특성상 판결지연에 따라 재해위로금 집행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당초 폐광대책비에 반영한 근로자대책비 내내역별 지원 예산이 본래 계획했던 진도율에 맞추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③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연차별 국비 및 지방비 분담 계획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신규)은 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화순, 태백, 삼척 지역에 경제진흥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 중 국비 151억원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반영하였음.

2026년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예산안

내역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 15,100백만원 - 화 순 군 : 3,190백만원(설계비 1,400, 기타비 1,790) - 태 백 시 : 7,370백만원(설계비 3,390, 기타비 3,980) - 삼 척 시 : 4,540백만원(설계비 1,180, 기타비 3,360)

자료: 산업통상부

조기폐광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화순, 태백, 삼척 3개 조기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및 스마트팜단지(화순), 미래자원 클러스터(태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등 첨단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삼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보조비율 100%)인 것처럼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상 총사업비 1조 722억원 중 국비부담은 4,273억원으로, 나머지는 지방비 2,738억원, 민간부담 3,711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총사업비 현황

지역	사업내용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사업명	주요 내용			
화순	농공단지 (2개소)	식료품·의약품 제조업체 유치	2,649	(국비)	530
				(지방비)	121
				(민간)	1,998
	스마트팜 단지	파프리카,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930	(국비)	173
				(지방비)	30
				(민간)	727
	부지면적 : 385천㎡		3,579	(국비)	703
				(지방비)	151
				(민간)	2,725
태백	미래자원 클러스터		3,070	(국비)	1,548
				(지방비)	536
				(민간)	986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연 22,000톤 규모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가스화 20,000톤, 수전해 2,000톤	2,112	(국비)	860
				(지방비)	266
				(민간)	986
	핵심광물 산업단지	배터리 및 공정부산물 자원화 민간기업 유치	228	(국비)	52
				(지방비)	176
				(민간)	
	청정메탄올 물류시설	청정메탄올, 핵심광물 등 생산물 적재공간 및 물류시설 등 조성	730	(국비)	636
				(지방비)	94
				(민간)	-
	근로자 주택단지	노후 석공 사택 부지를 활용한 근로자 주택단지 조성	470	(국비)	173
				(지방비)	297
				(민간)	-
	부지면적 : 546천㎡		3,540	(국비)	1,721
				(지방비)	833
				(민간)	986
삼척	첨단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All 케어센터 및 Healthcare Residence 조성	3,603	(국비)	1,849
				(지방비)	1,754
				(민간)	-
	부지면적 : 125천㎡		3,603	(국비)	1,849
				(지방비)	1,754
				(민간)	-
총계	부지면적 : 1,056천㎡		10,722	(국비)	4,273
				(지방비)	2,738
				(민간)	3,711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지난 8월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음.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3개 지역 중 화순군 농공단지 및 스마트팜 단지 지역의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1차년도 사업비는 178억 300만원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매입비 및 보상비 146억 6,700만원, 설계비 등 비용 13억 4,900만원, 예비비 17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화순군 경제진흥 개발사업 연차별 재원투입계획(KDI 검토보고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공사비	부지조성 공사비	50,454	-	4,145	9,188	13,804	23,317	-
	기반시설 설치비	277,574	-	382	900	1,408	2,383	272,500
	소계	328,028	-	4,528	10,089	15,212	25,700	272,500
보상비	직접 보상비	14,440	14,440	-	-	-	-	-
	간접 보상비	709	227	54	-	-	428	-
	소계	15,149	14,667	54	-	-	428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2,682	1,227	1,424	32	-	-	-
	감리비	1,886	-	60	135	626	1,066	-
	시설 부대비	326	-	10	23	108	185	-
	부가 가치세	422	122	83	19	73	125	-
	소계	5,317	1,349	1,576	209	807	1,375	-
기타비		1,624	-	-	-	542	1,082	-
예비비		7,790	1,787	616	1,030	1,603	2,754	-
합계		357,907	17,803	6,774	11,328	18,163	31,339	272,500

주: 2031년의 경우 민자(상부건축물 공사비) 사업비 부담이 반영된 것임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비해 산업통상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차년도 화순군 국비 사업비는 31억 9,000만원으로, 1차년도 총 사업비 178억 300만원의 17.9%에 불과한 수준임. 이는 3개 지역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인 4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태백이나 삼척 지역의 1차년도 사업비 대비 국비 부담 비율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 1차년도 사업비 대비 2026년도 국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화순	태백	삼척	합계
1차년도 사업비(A)	17,803	9,459	5,906	33,168
2026년도 국비 편성액(B)	3,190	7,370	4,540	15,100
비율(B/A)	17.9	77.9	76.8	45.5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울러, 화순군의 경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개별 지자체에서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초 추진된 바, 부지매입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2026년 1년차에 전부 투입되어 당해연도 국비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다고 밝힘.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지방비와 민간 부담의 매칭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100%의 형식을 갖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과 지방비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진흥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각 지자체별 지방비 및 민간 매칭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지원하고, 2026년 사업 착수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등

① 예산안 현황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5440-304)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7억 2,700만원 감액된 1,46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762	200,727	415,447	146,000	△54,727	△27.3

자료: 산업통상부

②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내역사업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정부 핵심광물(희소금속) 비축확대 정책 및 조달청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5억 6,600만원 감액된 690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2026년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부지매입비	12,847	12,847	15,472	15,472	-
시설부대경비	5,853	5,853	4,562	4,562	2,312
공사비	-	-	82,603	82,603	66,759
합계액	18,700	18,700	102,637	102,637	69,071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내역사업에 대한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2024년 11월 설계착수 및 단기간 설계를 전제로 설계기간 소요로 10개월을 예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전용 비축기지 건설공사에 착수하는 계획 하에 당초 총사업비 계획상 1차년도 공사비 826억 300만원을 전액 반영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계 착수는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지연된 2025년 3월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기준 중간설계까지만 완료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통한 공사비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1차년도 공사비 826억 300만원을 포함한 동 내역사업 사업비 전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미 교부하였는데,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2026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전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차년도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 소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소요로 공사비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148]

③ 비축대상 희소금속의 비축 연간 계획 대비 집행실적 제고 필요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희소금속의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비축 대상 품목을 기존 코발트에서 2024년 리튬, 희토류, 갈륨 등으로 확대하고, 이후 예산규모 및 비축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비축확대를 위해 총 70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19억 2,600만원 감액한 88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2025년 2월)한 몰리브덴과 콩고민주공화국이 수출중단(2025년 2월)한 코발트 등을 추가 구매·비축하기 위하여 지난 2025년 1회 추경에 3,033억 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편성 예산은 전액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148)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월 예상되는 2025년 1차년도 공사비 826억 300만원은 전체 지반보강공사 및 구조물 골조공사 비용이며,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2차년도 공사비는 구조물 외형공사 및 일부 내부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비 667억 5,900만원으로 2개년도 공사비를 1차년도 1,494억원(전체 1,827억원)으로 계약 시행하고 초기 집중투입 및 70%까지 선금지급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단기간 내(19개월) 기지완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편성되어, 현재 전액 교부가 이루어진 상황임.

2024~2026년 희소금속 비축확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광종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		2026년 예산안
		본예산	1회 추경	
A	217,361	21,614	38,279	3,050
B	11,844	7,868	7,868	-
C	1,314	-	-	-
D	-	32,272	38,348	6,998
E	-	26,839	26,839	-
F	-	-	183,518	-
G	-	-	616	-
H	-	-	3,066	-
I	-	-	4,779	2,565
J	-	-	-	3,740
K	-	-	-	43,320
L	-	-	-	10,740
합계	230,519	88,594	303,314	70,413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이와 같은 비축 예산 확대 편성 및 전액 교부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희소금속 계획 대비 비축 현황에 따르면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저조한 편임.

먼저, 2024년에 편성된 비축 확대 예산 2,305억 1,900만원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액이 561억 5,600만원으로 24.4%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내 비축확대 사업의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A)	48,791	37,232	230,519
집행잔액	11,473	9,779	174,363
실집행액(B)	**37,498**	**27,453**	**56,156**
실집행률(B/A)	**76.9**	**73.7**	**24.4**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중국 등 공급국 수출통제에 대비하여 2023년부터 전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비축광산물을 추가 구매하고 있으며, 광물가격 변동에 따라 당초 목표량 구매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희소금속의 구매 용도로만 집행·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25년 10월 말 기준 희소금속 비축확대 예산 대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재원	광종	연간 계획		집행실적(계약기준)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5년 본예산	A	(비공개)	21,614	(비공개)	14,555	완료
	B		7,868		6,048	순차입찰 중
	D		32,272		34,577	완료
	E		26,839		28,242	순차 입찰 중
	소 계		88,594		83,422	완료
'25-1 추경	A		16,665		12,191	완료
	G		616		477	완료
	D		6,076		6,750	완료
	H		3,066		2,662	완료
	F		183,519		97,256	순차 입찰 중
	I		4,779		2,948	순차 입찰 중
	소 계		214,720		122,284	-
합계			303,314		205,706	-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2025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비축 연간 계획 대비 10월 말 기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33억 1,400만원 중 구매 및 비축 관련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은 2,057억 600만원으로 67.8%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해 발생한 비축확대를 위한 출자금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비축 금속 구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규 비축확대 소요 중 과거 교부받은 출자금의 집행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요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비축확대를 위한 출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8)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 회계 오류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적정 규모 반영 필요

① 예산안 현황

‘해외자원개발조사’(5446-302)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공급을 위해 민간기업이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된 3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해외자원개발조사	3,291	3,674	4,674	3,705	31	0.8

자료: 산업통상부

② 회계오류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적정 규모 반영 필요

내역사업인 ‘자원안보정보’ 사업은 핵심자원 공급기관의 공급망 취약점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

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2025년 최초로 산업통상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 별도 신규 세부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이후 최종 심의 단계에서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디브레인 시스템 상 타 내역사업들과 동일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입력되었음.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상에서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설명된 바와 달리, 실제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배정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정보사업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에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보완요청 및 담당자 변경 등으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동안 용역이 수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자원안보정보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목-세목	'25년 예산현액	전 용		전용 후 예산현액
				증	감	
302 (해외자원 개발조사)	(조사사업) (기반구축)	320-01 (민간경상보조)	3,674	-	600	3,074
	(자원안보 정보사업)	320-02 (민간위탁사업비)	-	600	-	6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잘못 편성된 6억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 난 이후에서야,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6억원 전액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인 위탁용역 수행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통상부가 민간위탁사업자인 해외자원산업협회에 지급한 위탁사업비는 사실상 차년도까지 연장되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연구 용역기관 변경 등으로 사업 수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던 협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에 2025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마찬가지로 2025년과 동일한 1년치 용역사업비 6억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규모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융자관리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 자체수입 계상 문제

① 예산안 현황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0억 1,700만원 증액된 710억 1,700만원이 융자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9,817	39,000	39,000	71,017	32,017	82.1

자료: 산업통상부

② 융자관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취급수수료 자체수입 계상 문제

동 사업의 융자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기타민간융자금을 수취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대하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성공불융자에 따른 감면액[149] 등을 제외한 융자원리금을 수취한 다음, 융자취급수수료(융자잔액의 1.0%, 감면원금의 1.0%)를 제외한 차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음.

2020~2024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원리금 상환 및 국고반납 현황

(단위: 건, 천불)

구분	융자 원금 상환건수	원금 상환액 (A)	이자 수익액 (B)	융자 취급 수수료 (C)	대손액	감면액	국고 반납액 (A-B-C)
2020년	17	7,140	16,493	1,342	-	79,818	22,291
2021년	24	32,711	5,783	1,095	482	128,106	37,396
2022년	11	17,688	10,141	701	-	84,843	27,128
2023년	16	27,045	5,754	928	9,124	100,244	31,872
2024년	12	20,868	11,171	1,167	-	60,968	30,873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융자취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차감한 차액만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사업의 경우 직접 융자금의 대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150]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기후에너지

1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융자 원리금의 최대 80%까지 면제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18조제2항[151]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융자잔액 및 감면원금의 1.0%를 직접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에는 융자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바가 없고, 사실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융자취급수수료를 직접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2023~2025년도 융자취급수수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융자취급수수료		합계액
	융자잔액 대상 (1.0%)	감면원금 대상 (1.0%)	
2023	1,495	170	1,665
2024	1,782	2,033	3,815
2025(3분기 기준) *4분기 추가 수입발생 예정	1,010	765	1,775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융자잔액의 1.0%를 융자사업의 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의

15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4조(융자조건등) 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운용요령」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7조[152]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조직도를 살펴보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관리하는 융자전담조직(해외자원융자팀)의 인원은 5명에 불과한데, 2023년에는 16억 6,500만원, 2024년에는 38억 1,500만원을 융자취급수수료로 수납하여 자체사용하고 있어, 사업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필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수지차보전 지원 방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융자취급수수료 자체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은 2025년 예산 기준 18억 9,500만원, 2026년 예산안 기준 15억 7,500만원으로 2024년도 수수료 수납 실적치 38억 1,500만원보다 낮아, 수지차보전 지원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현행과 같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리금 수익 중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융자취급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

152)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적정 사업관리비용 소요를 추계하여 별도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1) '26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26년도 정부 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라 한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310억원이며, 세입은 1개 부처 소관으로, 세출은 3개 부처 소관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음.

'26년도 정부 전체 소특회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2,430,994(100.0)	2,430,994(100.0)
산업통상자원부	2,430,994(100.0)	1,950,904(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0)	469,497(19.3)
중소벤처기업부	0(0.0)	10,593(0.4)

자료: 산업통상부

'26년도 소특회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세입의 100.0%(2조 4,310억원), 세출의 80.3%(1조 9,509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과 세출 규모를 전년(본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총세입은 1,467억원 증가하였으며, 총세출은 1,281억원 증가하였음. 전년도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순세입은 185억원 증가하였고, 순세출은 1,281억원 증가하였음.

’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특회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 감(B-A)	증감률
세입	정부출자수입	4,757	12,685	7,928	166.7
	기타재산이자수입	14,906	25,477	10,571	70.9
	기타경상이전수입	43,818	43,818	-	-
	전년도 세계잉여금	16,965	24,092	7,127	42.0
	일반회계 전입금	2,182,941	2,304,022	121,081	5.5
	기금 전입금	20,900	20,900	-	-
	합계	2,284,287	2,430,994	146,707	6.4
세출	순세출	1,822,812	1,950,904	128,092	7.0
	합계	1,822,812	1,950,904	128,092	7.0

자료: 산업통상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6년 세출예산안은 ’25년 본예산인 1조 8,228억원 대비 1,281억원을 증액한 1조 9,509억원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특회계 프로그램 예산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1,822,812	1,950,904	128,092

자료: 산업통상부

소특회계에서 종료된 사업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 국방무인기 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R&D),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R&D),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R&D), 탄소산업기반조성 6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특회계 종료 및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종료사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	11,625	-
종료사업	국방무인기 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603	-
종료사업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R&D)	2,500	-
종료사업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R&D)	300	-
종료사업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R&D)	400	-
종료사업	탄소산업기반조성	3,955	-

주: 신규사업 편성 없음
자료: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예산의 규모는 '25년 예산 대비 77억원 증액된 1조 9,44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조 2,909억원이 편성되었음.

소특회계 R&D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 본예산 (A)	'26년 예산안 (B)	증감	
			B-A	%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77,993	1,290,947	112,954	9.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215,061	196,457	△18,604	△8.7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R&D)	4,000	4,000	-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162,613	113,772	△48,841	△30.0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58,244	219,989	61,745	39.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4,814	4,748	△66	△1.4

구 분	'25년 본예산 (A)	'26년 예산안 (B)	증감	
			B-A	%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5,400	6,730	1,330	24.6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R&D)	2,700	7,000	4,300	159.3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18,000	50,000	32,000	177.8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R&D)	3,000	4,000	1,000	33.3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R&D)	5,175	6,210	1,035	20.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39,396	40,644	1,248	3.2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	11,625		△11,625	순감
국방무인기 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603		△603	순감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R&D)	2,500		△2,500	순감
탄소산업기반조성(R&D)	3,955		△3,955	순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R&D)	300		△300	순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R&D)	400		△400	순감
합 계	**1,815,379**	**1,944,497**	**83,781**	**4.8**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사업별로는 소재부품기술개발 1,130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617억원,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13억원,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43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32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 10억원,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86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488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사업수행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수행하는 예산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1개 사업 6억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0개 사업 1조 7,433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개 사업 2,055억원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1개 사업 15억원으로 출연, 위탁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사업수행 주체별 '26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주체	예산안 규모	세부사업 목록(금액)
산업통상자원부	631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631)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1,743,292	소재부품기술개발(1,290,9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219,989)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113,772) 공간컴퓨팅구현을 위한 첨단XR디바이스 부품통합형기술개발(7,000)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캡필러소재개발(4,00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50,000)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6,210)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4,000)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6,73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평가관리비(40,644)

사업수행주체	예산안 규모	세부사업 목록(금액)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5,47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96,45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4,748)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4,272)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1,509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1,509)
합 계	**1,950,904**	**15개 사업**

자료: 산업통상부

(2) 제조 AI R&D: 제조 AI R&D 체계적 수행을 위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제조 AI R&D는 자동차・선박・디스플레이 등 제조산업 생산공정에 자율제조・제작검증 등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R&D 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3231-304) 등 5개 세부사업에 15개 내역사업을 두어 전년 대비 938억 7,200만원 증액한 4,09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제조 AI R&D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8,854	158,244	158,244	219,989	61,745	39.0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25,565	135,044	135,044	199,989	64,945	48.0
-제조장비실증	20,000	20,000	20,000	20,000	-	-
-제조장비산업전주기기술개발	3,200	3,200	3,200	-	△3,200	순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	10,089	-	-	-	-	-
로봇산업기술개발	117,442	148,612	148,612	173,529	24,917	16.8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05,426	137,822	137,822	162,629	24,807	18.0
-협업지능기반로봇플러스경쟁력지원	2,817	-	-	-	-	-
-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로봇화기반구축	4,999	5,390	5,390	-	△5,390	순감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2,400	2,000	2,000	2,000	-	-
-재난위험작업현장로봇사고방지를위한로봇기술개발	1,800	3,400	3,400	3,000	△400	△11.8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	-	-	5,900	5,900	순증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	-	9,200	9,200	7,500	△1,700	△18.5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	-	-	6,800	6,800	순증
AX실증밸리조성기술개발	-	-	-	2,110	2,11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② 제조 AI R&D 체계적 수행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필요

산업통상부는 ①기계장비산업 분야 AI와 관련하여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로봇에 제조 AI를 결합하는 내용의 AI 자율제조, 운영시스템에 AI·빅데이터·IoT를 융합하는 내용의 스마트 장비, 산업기계와 로봇 등 이종공정을 융합하는 내용의 융복합 기계 등의 R&D를 위해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세부사업 예산 2,199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다품종 유연생산 공장생산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AI자율제조SDM[153]플랫폼기술개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2026년 75억원의 R&D 예산을 반영하였음.

또한 ②로봇산업 분야 AI와 관련하여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 내에 휴머노이드, 제조·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1,735억 2,900만원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휴머노이드 특화 AI와 휴머노이드 개발을 내용으로 '지역거점AX[154]혁신기술개발' 세부사업을 신규편성하여 68억원을 반영하였음.

153) Software-Defined Manufacturing, SDM: 공정 전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여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연구·개발

154) AI Transformation: 로봇 등 제조와 활용에 있어서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공정전환

2026년도 제조 AI R&D 관련 사업내용

주제	세부사업 ('26안)	구분 (시작연도)	사업내용
기계 산업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2,199억 9,800만원)	제조기반 생산 시스템 ('09)	**(AI 자율제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로봇에 AI 결합
			(스마트 장비) 기계장비 운영시스템에 AI·빅데이터·IoT 결합
			(융복합 기계) 산업기계와 로봇 등 이종공정 융합
			(친환경 산업기계) 탄소중립·환경규제 대응 제조기술개발
		제조장비 실증 ('19)	**(수요기업 실증)** 개발된 기계·장비를 수요기업 제조환경 적용
			(핵심부품 실증) 개발된 부품을 완제품에 장착하여 신뢰성 검증
	AI자율제조SDM 플랫폼기술개발 (75억원)	('25)	**(소프트웨어 기반제조)** 다품종 유연생산 기조에 따른 공장 생산구조 개편
로봇 산업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1,735억 2,900만원)	('09)	**(로봇 핵심기술)** 휴머노이드, 제조·서비스로봇 기술 개발
	지역거점AX 혁신기술개발 (68억원)	(신규)	**(휴머노이드 특화 AI)** 공정 맞춤형 자율제조 로보틱스 솔루션 구현
			(휴머노이드 제품) 작업현장 별 적정 휴머노이드 개발
모빌리티	AX실증밸리 조성기술개발 (21억 1,000만원)	(신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피지컬 AI 기반 자율형 모빌리티 융합시스템

자료: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와 같은 제조 AI R&D 사업은 제조산업 생산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반을 확장한다는 사업목적 및 내용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통상부는 기존 R&D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 AI R&D 사업을 별도편성하는 대신 종전 R&D 사업구조 내에서 산발적으로 제조 AI R&D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도 제조 AI R&D 사업은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세부사업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 내에서 프로젝트형 R&D 사업[155]에 비해 과제선정에 있어 전문기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형 R&D 사업[156] 중 일부를 AI 관련 과제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5년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157], 2026년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세부사업과 'AX실증밸리조성기술개발'

155) 대상 기술·제품을 특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R&D 사업
156) 목표 기술·제품을 특정하지 않고 사업목적만을 규정하여 정책 및 기술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 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R&D 사업
15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세부사업은 각각 대구와 광주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158]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편성하였음.

2026년도 제조 AI R&D 사업 편성경과

(단위: 백만원)

유형	세부사업	사업내용
프로그램형 R&D 일부 조정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기계장비 관련 AI개발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 관련 AI개발
소액으로 예타 대상제외	AI자율제조SDM 플랫폼기술개발	제조업 제조데이터 사전학습으로 제조 특화 AI 개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예타 면제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산업현장에 자율형 로봇 도입 연구
	AX실증밸리조성기술개발	제조공정 특화 딥러닝 AI 학습 연구

자료: 산업통상부

15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이는 R&D 사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절차상의 부담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에 따른 시간상의 지연을 우려한 조치로 이해되나,

정책적·기술적 목표를 공유하는 R&D 사업은 사업 목표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격상 계속사업으로 매년 증액편성이 예상되는 제조 AI R&D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 없이 기존 사업의 조정과 비예타사업 편성으로 대응하는 경우 제조 AI 관련 R&D 사업의 역량분산과 투자중복이 우려되는 한편 개별 사업별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로드맵의 차이로 성과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조 AI R&D 사업의 중요성[159]과 향후 계속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여 R&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제조 AI R&D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규정의 적극 적용을 통해 산업 분야 AI R&D 사업을 적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9)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가 5대 신성장동력 과제 중 하나로 제조 AI를 명시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분야 AI 활용률 목표를 70%로 설정

(3)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실집행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3241-301)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 감액된 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지원	1,000	854	879	631	△223	△26.1

자료: 산업통상부

② 위원회 개최실적 및 실집행을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

산업통상부는 동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편성예산 10억 2,900만원 중 89.9%에 해당하는 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편성예산 10억원 중 95.9%에 해당하는 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편성예산 10억원 중 99.6%에 달하는 9억 9,600만원을 집행하는 등 편성예산 중 95% 이상을 집행하고 있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예산집행 및 회의개최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2		'23		'24		'25		'26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0월)	예산안
일반수용비	345	309	344	284	344	325.5	290	199	285
공공요금및제세	10	1	10	3	10	1	3	1	3
특근매식비	23	36	23	30	23	30.5	23	20	23
시설장비유지비	15	15	15	15	15	15	15	11	15
기타운영비	10	10	10	10	10	9.8	10	7	10
국내여비	38	75	39	88	39	38	43	41	37
국외업무여비	29	2	29	38	29	48.6	29	27	25
관서업무추진비	16	16	16	16	16	16	16	15	14
직책수행경비	25	25	25	22	25	24.2	25	18	25
일반연구비	300	230	280	245	280	279	200	103	35
민간위탁사업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
자산취득비	18	16	9	9	9	8.4	-	-	-
계	**1,029**	**935 89.9%**	**1,000**	**959 95.9%**	**1,000**	**996 99.6%**	**854**	**642 75.1%**	**631**
위원회 (전문위원회)	**2건 (2건)**		**2건 (2건)**		**1건 (1건)**		**1건 (1건)**		

자료: 산업통상부

동 세부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160]와 분야별 전문위원회[161] 및 그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회의수당과 관련하여 매년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6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2회 개최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 1회 개최되어 2023년에는 예산액 중 27.5%에 해당하는 1,485만원을, 2024년에는 14.9%에 해당하는 805만원을, 2025년에는 15.6%에 해당하는 1,130만원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 외에 집행잔액은 소부장 공급망 선도사업자 평가수당, 정책연구용역 평가수당, 시스템유지보수 기술평가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편성 및 집행내역

구분		'22	'23	'24	'25 (10월)	'26안
편성 (회의수당)		30만원×15인×12회	30만원×15인×12회	30만원×15인×12회	30만원×15인×12회	30만원×15인×10회
		5,400만원	5,400만원	5,400만원	5,400만원	4,500만원
집행	회의수당	30만원×11인 30만원×12인 30만원×13인 30만원×11인	35만원×15인 35만원×12인 30만원×7인 30만원×11인	35만원×12인 35만원×11인	35만원×14인 35만원×10인	-
		1,410만원 (26.1%)	1,485만원 (27.5%)	805만원 (14.9%)	840만원 (15.6%)	-
	그외 162)	10만원(1건) (0.2%)	245만원(8건) (4.5%)	622만원(10건) (11.5%)	290만원(8건) (5.3%)	-
	소계	1,420만원 (26.3%)	1,730만원 (32.0%)	1,427만원 (26.4%)	1,130만원 (20.9%)	

자료: 산업통상부

16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아닌 브라운백 미팅 강사수당, 정책연구용역 평가수당, 시스템유지보수 기술평가수당 등 집행

산업통상부는 2026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 15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 10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4,500만원의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였는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이래 회의개최 실적과 회의참석수당 집행내역을 고려하여 적정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편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③ 예산편성과 집행 시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 구분 필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3241-301)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비이고,

‘산업정책실 기본경비’(7111-255)는 산업공급망정책관실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실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로 서로 다른 예산 프로그램에 속함.

산업통상부는 산업정책실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출장시에는 주요사업비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사업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외 산업정책실[163] 출장시에는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구분하여 집행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출장시에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두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음.

163) 산업정책실은 산업정책관실,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제조산업정책관실, 첨단산업정책관실 등 4개 정책관실로 구성

산업공급망정책관실 국내여비(220-01)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26안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주요사업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3241-301)	38	75	39	88	39	38	43	41	37	
기본경비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7111-255)	162	-	154	-	164	73	424	38	229	

자료: 산업통상부

주요사업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산인 반면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비목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경상경비로 재정사업평가[164] 및 성과관리[165]의 대상에서 제외됨.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간 예산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166],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두 예산의 사용목적과 집행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164) 기획재정부, 「2025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 2025.1.
165) 기획재정부. 「2026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5.4.
166) 프로그램 간 예산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의 이용에 해당(「국가재정법」 제47조)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과 세출 규모를 전년(본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세입은 663억원으로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4,103억원[167]으로 전년대비 2,224억원 증가하였음.

'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예산(A)	'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세입	**합 계**	**53,044**	**66,328**	**13,284**	**25.0**
	기타재산이자수입	2,921	5,390	2,469	84.5
	기타경상이전수입	50,123	60,938	10,815	21.6
세출	**합 계**	**1,187,855**	**1,410,285**	**222,430**	**18.7**
	지역자율계정	25,633	74,228	48,595	189.6
	지역지원계정	1,148,326	1,309,134	160,808	14.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515	15,964	9,449	145.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381	10,959	3,578	48.5

자료: 산업통상부

167)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으로, 189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3,914억원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업입지환경개선’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25년 예산에 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반구축’,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수송기기기술개발’, ‘지역산업경쟁력강화’,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 사업이 감액되었고, 그 외 단위사업들은 증액되었음.

단위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총 계		1,187,855	1,288,670	1,410,285	222,430
지역자율계정	소 계	25,633	25,633	74,228	48,595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	3,602	3,602
	에너지이용합리화	12,799	12,799	6,864	△5,935
	가스수급안정	-	-	57,772	57,772
	기반구축	12,834	12,834	5,990	△6,844
지역지원계정	소 계	1,148,326	1,249,141	1,309,134	160,808
	경제자유구역지원	47,861	47,861	49,095	1,234
	기업입지환경개선	341,858	397,958	419,124	77,266
	지역산업경쟁력강화	100,039	105,204	170,035	69,996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60,104	60,104	11,000	△49,104
	지역투자유치활성화	221,831	221,831	251,347	29,516
	지방시대위원회운영	3,664	3,664	4,021	357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	1,810	1,810	1,680	△130
	제조기반기술개발	-		13,833	13,833
	수송기기기술개발	1,378	1,378	-	△1,378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369,527	409,077	388,726	19,199
	기반구축	200	200	180	△20
	회계기금관거래	54	54	93	39
제주특별자치도	소 계	6,515	6,515	15,964	9,449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100	3,100	5,255	2,15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2,751	2,751	-	△2,751

구 분		'25예산		'26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계정	에너지이용합리화	664	664	920	256
	가스수급안정	-	-	9,789	9,789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소 계**	**7,381**	**7,381**	**10,959**	**3,578**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100	3,100	5,665	2,565
	지역투자유치활성화	4,281	4,281	5,026	745
	에너지이용합리화	-	-	18	18
	가스수급안정	-	-	250	250

자료: 산업통상부

'26년부터 '가스안전관리', '가스수급안정'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이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

세출예산의 이관, 신규 및 종료사업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이관된 사업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세부사업 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내역사업 및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구축 세부사업 등 5개임. 신규사업은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AX실증밸리조성(R&D) 등 7개 사업이며, 종료사업은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3개 사업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및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본예산	'26예산안
회계이관 (에특→지특)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율)	-	6,25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제주)	-	50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세종)	-	250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자율)	67,348	51,522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제주)	-	9,289
신규사업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	6,800
	AX실증밸리조성(R&D)	-	7,033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	11,000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자율)	-	3,602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제주)	-	330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세종)	-	240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	18
종료사업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1,378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60,104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4,375	-

자료: 산업통상부

'26년도 예산안을 사업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수행(지자체 포함)하는 예산은 7,828억원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 출연 등을 통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임.

사업수행주체별 '26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합 계	1,410,28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지자체 포함)	782,768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자율)(6,864),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제주)(920),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18), 수소생산기지구축(5,990),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878), 구역청투자유치지원(3,100), 기타기반시설지원(25,288), 주요기반시설지원(14,453), 인천경제자유구역전시컨벤션건립(BTL)(5,376), 외국교육연구기관등유치지원(4,500),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771) 및 지원(3,250),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자율)(3,602),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제주)(330),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세종)(240), 지역투자촉진(세종)(5,026), 지역투자촉진(250,283), 투자유치기반조성(382,345), 산업단지환경조성(200), 생활산업경쟁력강화(1,430),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93),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율)(6,25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제주)(500),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세종)(250),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자율)(51,522),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제주)(9,28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8,065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80,297) 및 비R&D(8,02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2,2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R&D)(11,482), 지역균형발전지원(15,868),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R&D)(11,276),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11,000), 지역산업위기대응(17,922)
한국산업단지공단	448,758	산업단지환경조성(407,14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26,960), 기계방산제조디지털전환(DX)지원센터(4,104),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제조특화초거대제조AI서비스개발및실증(7,680), 지역투자촉진(1,064),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1,565), 첨단투지지구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24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3,550	지역균형발전지원(4,640),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6,800), AX실증밸리조성(R&D)(2,110)
기타 (산업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144	지역균형발전지원(155), 투자유치기반조성(1,636), 생활산업경쟁력강화(250), 수소생산기지구축지원(180), AX실증밸리조성(R&D)(4,923)

자료: 산업통상부

(2) 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경과 고려 및 지원기준 마련 필요

① 결산 현황

‘구역청 투자유치지원’(2733-302)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구역청 투자유치지원	3,060	2,601	2,601	3,100	499	19.2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경과 고려 및 지원기준 마련 필요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구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168][169]하도록

16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4·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청)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비목으로 동 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의 1/3은 구역청별로 균등배분하고, 다른 1/3은 구역청 규모(현원)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나머지 1/3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있음.

2025년 예산은 9개 구역청에 평균 2억 8,900만원씩 교부하기 위한 26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평균 3억 4,440만원씩 교부할 수 있도록 31억원으로 편성됨.

2025년도 예산 교부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5 예산	'26 예산안
❑ 2,601백만원: 9개청 × 289백만원 ◦ 인천청 : 609.3백만원 ◦ 부산진해청 : 399.8백만원 ◦ 광양만청 : 225.4백만원 ◦ 대구경북청 : 264.6백만원 ◦ 경기청 : 326.6백만원 ◦ 강원청 : 158백만원 ◦ 충북청 : 182.2백만원 ◦ 광주청 : 257.8백만원 ◦ 울산청 : 177.3백만원	❑ 3,100백만원: 9개청* × 344.4백만원 * 2개청 신규 개청 추진중

자료: 산업통상부

16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이는 최근 5년간 동 사업 예산액이 감소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3,812	3,431	3,431	**3,060**	2,601
구역청별 평균지원액	423.6	381.2	381.2	**340**	289
전년대비 증감액	-	△381	-	△371	△459
전년대비 증감율	-	△10%	-	△9.9%	△9.4%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대전세종 및 충남 지역에 각각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경우 총 11개 구역청에 대해 2025년과 같이 평균 2억 8,9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두 지역의 실제 지정·신청 경과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주요 절차	비 고
시도(경자청) 개발계획(안) 수립	• 경자법 제6조(경자구역 개발계획)
⇩	
시도(경자청) 주민 의견청취	• 경자법 제4조제2항단서(14일 이상)
⇩	
시도(경자청) 관계기관 사전협의	• 경자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동산 안정 대책 협의 국토부·산업부) • 경자법 제4조제3항(산단 포함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국토부)

주요 절차	비 고
⇩	
사전자문(컨설팅) ※대전·세종	• (필요시) 사전컨설팅 희망 시도 대상 * 지정,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 등
⇩	
시도(경자청) 지정 신청	•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1항(경자구역개발계획(안) 제출)
⇩	
경자위 보고	• 지정신청 현황 / 지정 절차, 기준, 추진 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충남	• 경자법 시행령 제2조의3(20일 이내) * 경자구역 개발계획(안) 협의(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 등
⇩	
지정평가	• 민간평가단 구성·운영(서면, 현장실사, 종합)
⇩	
시도(경자청) 각종 영향평가 이행	<관계부처 협의> • 도시계획 등(국토부) • 재해영향성검토(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산지에서의 구역지정(시·도): 산지관리법 제8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농림부): 농지법 제43조의2 • 경자청 신설(지방공무원 증원) 협의(행안부) • 기타 관계부처 협의시 요청 사항
⇩	
경자위 심의·의결	• 경자구역 지정

자료: 산업통상부

우선, 대전·세종 지역은 2022년 8월(1차), 10월(2차) 및 2024년 3월(3차)에 사전자문을 실시한 후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고, 2025년 10월말 현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리고 충남 지역은 2024년 5월 사전자문을 실시한 후, 2025년 3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해당 안

건이 보고되어 있음. 2025년 9~11월에는 충남-환경부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와 충남-환경부간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절차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통상적으로 지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가량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남지역은 비교적 근시일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승인을 거쳐 구역청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통상 6개월 가량 소요[170]되므로, 신규 구역청을 위한 균등배분 보조금 편성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동 사업 예산의 1/3은 구역청별 현원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는데, 기존 구역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신규 구역청에 대해서도 현원을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청별 현원 현황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정원/현원	298/291	102/102	126/94	98/93	37/37	39/38	35/33	41/40	42/40

주: 2025. 6. 30.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170) (울산청) '20.6.11. 지정 → '20.9.7. 행안부 기구·정원 승인 → '21.1.1. 개청
(광주청) '20.6.3. 지정 → '20.9.7. 행안부 기구·정원 승인 → '21.1.27. 개청

직원 채용 및 임용절차는 개청 전인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승인시부터 착수할 수 있지만, 실제 채용·임용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청 초기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음.

즉, 예산액 중 규모(현원)에 비례배분하는 금액(1/3)은 신규 구역청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될 것으로 보임[171]. 그러나 신규 구역청에 대해서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현원충원율이 낮은 기존 구역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되므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172]하도록 하는데, 구역청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10월말 현재 산업통상부는 신규 구역청에 대한 성과평가 차등배분 예산을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별도로 없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성과평가 예산배분 관련 안건 상

171) 당초 산업통상부는 신규 구역청에 대해서는 현원이 아닌 행안부 기구·정원 승인 현황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개청한 울산청/광주청의 경우에는 현원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므로 차후 유불리/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재설명함.

17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정 후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신규 구역청은 사업추진기간이 2026년도 하반기 이내로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과도출 및 평가상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차등배분 예산에 있어서도 신·구 구역청간 형평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등배분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두 구역청의 개청시기에 따라 소요예산 규모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신청경과에 따르면 2026년도 상반기 내에 개청이 어렵다는 점, 신·구 구역청간 규모(현원)비례 배분, 성과평가 차등배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회수 실적 제고 필요 등

① 예산안 현황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59억 6,200만원 증액된 4,07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산업단지환경조성	397,197	331,378	387,478	407,340	75,962	22.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회수 실적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정부출자금과 민간투자금을 펀드로 조성하여 노후산단 내 업종고도화, 창업·혁신, 지원·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3억원 감액된 700억원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음[173].

173) 2025년까지 동 내내역사업에 간접비 성격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

매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민간위탁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년 펀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예산액을 전액 지급하고, 운용사는 다른 민간기관과 투자약정액 등을 유치한 사업자(이하 “SPC”)[174]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투자협약에 따라 펀드운용기간 동안 해당 SP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단계별 협약체결 구조

위수탁협약	⇨	업무협약(펀드설정)	⇨	투자협약
산업부-산단공		산단공-운용사		운용사-SPC

자료: 산업통상부

최종적으로 펀드운용기간이 도래하여 청산이 임박한 펀드들에 대하여는 청산 후 국고 반납[175]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펀드운용기간이 만료되어 청산이 도래한 산업단지는 시화, 부평, 대구성서 산업단지 총 3곳으로, 이들 3곳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산업통상부 및 산업단지공단이 SPC에 출자의 형태로 투자한 누적금액은 270억원 상당임.

탁관리비용 25억원이 2026년도부터 분리편성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실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순출자금 감액분은 493억원에서 25억원을 제외한 468억원임.

174)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와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SPC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

175) 청산 후 반납금액은 일반회계 세입 과목에 기타유가증권매각대로 계상되어 있음.

2025년 청산 예정인 펀드들의 누적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구분 (산업단지)	관련 펀드 조성 연도	누적 투자 현황			수익 관련 사항(2024년 말)		
		산업단지 공단 지분 투자액	민간 지분 투자액	민간 그 외 자금 투자액	공단 지분 투자액의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액	누적 이익 잉여금	청산예정 연도
휴먼에코타운 (시화)	2015	10,000	300	9,700	9,800	△7,454	2025
부평테크시티 (부평)	2015	8,500	11,500	13,000	8,300	△10,312	2025
성서드림타운 (대구성서)	2015	8,500	500	6,875	8,300	△1,515	2025
합 계		27,000	12,300	29,575	26,400	△19,281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이들 산업단지의 청산 계획 대비 이행 현황에 대한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내 투자금액 회수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부평테크시티가 유일한 상황[176]으로, 성서드림타운 지식산업센터와 시화휴먼에코타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수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산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당국 협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만기를 2년 연장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의 청산 대상인 지식산업센터 3건, 호텔 및 지식산업센터 1건에 대한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4건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누적 투자액이 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17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주간사업자 매입 확약 이행을 통해 연내 투자금액 회수를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2026년 청산 예정인 펀드들의 누적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구분 (산업단지)	관련 펀드 조성 연도	누적 투자 현황			수익 관련 사항		
		산업단지 공단 지분 투자액	민간 지분 투자액	민간 그 외 자금 투자액	공단 지분 투자액의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액	누적 이익 잉여금	청산예정 연도
아라컨소시엄 (창원)	2016	15,000	1,000	30,000	15,000	2,104	미청산 (2026)
웨스턴라이프 컨소시엄 (익산)	2016	22,000	2,500	25,500	22,000	(8,766)	미청산 (2026)
후이즈스마트 센터(남동)	2016	8,000	2,500	30,000	8,000	1,056	미청산 (2026)
한국산단개발 (청주)	2016	15,000	1,000	56,000	15,000	(6,838)	미청산 (2026)
합 계		60,000	7,000	141,500	60,000	△12,444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회수율 75%를 가정하여 450억원을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수입사항으로 계상하였음.

2022~2025년 일반회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 대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8,500	8,500	8,500	-	-	-	-
2026(안)	45,000	45,000	-	-	-	-	-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2025년 회수대상 금액 대비 실적이 다소 저조

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매각 대상인 정부 출자자산에 대한 매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펀드 조성 이후 SPC 집행률 제고 필요

펀드 조성 사업의 특성상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SP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므로,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 따른 정부의 신규 출자가 실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투자약정 이후 SPC에 대한 투자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2025년 10월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2,800	1,500	1,280	958	1,868
펀드 조성액(A)	2,796	1,497	1,277	964	1,885
정부(B)	2,754	1,475	1,259	937	1,845
민간(C)	42	22	18	27	40
펀드 SPC 집행액(D)	1,390	1,046	1,066	650	542
펀드 SPC 집행률(D/A)	49.7	69.9	83.5	67.4	28.8
2024년 10월 기준 SPC 집행률	49.7	66.6	58.4	21.2	3.3

주: A, B, C: 펀드조성시 협약된 금액
D: 펀드자금이 SPC에 실제로 집행 및 지급한 금액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0~2024년 매년 산단환경개선펀드 결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규로 출자한 자금을 통해 결성된 펀드의 총액 대비 실제 SPC 집행액의 비율(2025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49.7%, 2024년의 경우 28.8%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0년 당시 동 내내역사업을 통해 신규 출자한 2,800억원의 경우, 운용사 및 민간투자사의 투자금액을 합하여 총 1조 6,645억원 규모의 투자약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SPC에 집행된 비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 및 투자회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도에 SPC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운용사가 사업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임.

2020 ~ 2024년 취소사업 현황

취소 시기	산업 단지	투자사업	정부투자액 (억원)	취소사유	선정 시기
2020.1.	대전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19.1.
2020.2.	남동	지식산업센터	7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19.10.
2020.2.	전주제1	지식산업센터	110	사업자포기(부지 미확보)	2019.10.
2020.4.	광주본촌	복합센터	10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19.6.
2020.10.	익산	지식산업센터	12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19.5.
2020.10.	시화	복합센터	10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19.6.

취소 시기	산업 단지	투자사업	정부투자액 (억원)	취소사유	선정 시기
2021.1.	춘천후평	지식산업센터	115	사업자포기(부지 미확보)	2020.11.
2021.1.	서울디지털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3.
2021.2.	여수	지식산업센터	116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11.
2021.3.	남동	에너지시설	249	사업자포기(부지 미확보)	2020.5.
2021.3.	송탄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5.
2021.5.	여수	육상배관망	7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7.
2021.8.	군산	연료전지	234	사업자포기(자금조달문제)	2020.7.
2021.8.	구미	연료전지	237	사업자포기(자금조달문제)	2020.7.
2022.5.	남동	연료전지	115	사업자포기(인허가 지연)	2021.9.
2022.6.	서울디지털	오피스텔	150	사업자포기(부지 미확보)	2020.12.
2022.6.	군산	스마트연료전지발전	13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8.
2022.6.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	8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1.12.
2022.6.	신평장림	지식산업센터 건립	150	사업자포기(부지 미확보)	2021.12.
2022.10.	서울디지털	오피스텔 건립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7.
2022.12.	대죽대산	폐·방류수 재이용	300	사업자포기(인허가 지연)	2021.10.
2022.12.	울산미포	공업용수 공급	33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22.6.
2023.1.	구미	물류센터 건립	2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2.5.
2023.1.	신평장림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2.6.
2023.4.	반월	지식산업센터	18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19.12.
2023.4.	시화	물류센터	15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21.4.
2023.4.	성남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2.10.
2023.5.	군산2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8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2.10.
2023.11.	광주하남	오피스텔	13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22.10.
2024.6.	광주평동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2.3.
2024.6.	신평장림	지식산업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3.2.
2024.12.	진영죽곡	물류센터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3.9.
2024.12.	울산미포	지식산업센터	132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3.2.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산업통상부는 정부 펀드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PF약정 체결 등이 완료된 후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기출자한 자금의 SPC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출자를 통한 펀드 결성 이후 실제 SPC 투자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산단환경개선펀드의 투자 지연 및 중도포기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RE100 산단 지원 사업 관련 사업출연금의 비목변경 필요 등

내역사업인 'RE100 산단 구축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출기업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RE100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산업단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설치,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및 정주요건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RE100 산단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RE100 산단 구축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출연금>** ○사업출연금(350-02) : 25,900백만원 - RE100산단 전력망 구축 1개소 × 1차년도 25,000백만원 + 기업유치 200백만원 + RE100산단 위원회 운영 900백만원 **<산업통상부 자체 집행>** ○ 일반수용비(210-01) : 100백만원 - RE100 산단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홍보 비용, 해외 행사 10백만원×5회 + 국내 행사 8개지역×6.2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백만원 - RE100산단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IR, 3명x6회x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1차년도 사업비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구축 등의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RE100 산단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소요 9억원을 합한 259억원을 한국산

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또한, 산업통상부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및 국내 IR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필요경비로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내역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안(「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안, 13531호)」,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안, 13822호)」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의원안, 13848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임.

이들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자립도시[177]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177) RE100 산단에 해당함.

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178]를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역별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구축 및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위의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들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179].

따라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이 아닌 산업통상부의 직접 부내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단지공단에 대해 반영된 위원회 운영경비 9억원을 산업통상부 직접 지출 비용으로 비목변경할 필요가 있음.[180]

---

178)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예산안 산출근거에 명시된 “RE100산단 위원회”에 해당함.

17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이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안)」
제7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80)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글로벌 앵커기업 및 첨단기업의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해외 및 국내 IR 활동 지원경비 2억원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운영비용 9억원을 합한 11억원을 부

(4)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신규과제 일괄 반영에 따른 과제협약 체결 관리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3362-301)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0억 1,200만원 증액된 69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R&D)	36,189	36,935	36,935	69,947	33,012	89.3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신규과제 반영에 따른 과제협약체결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는 지역 특화산업과 5극3특[181] 성장엔진 핵심기술 시스템 구축 및 실증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협력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내 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1) 5개의 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뜻하는 행정구역 체제를 의미함.

이전 과제 협약체결이 되어 진행 중인 계속과제 19개에 대한 12개월분 과제비 103억 4,300만원, 신규과제 58개에 대한 9개월분 과제비 437억 5,800만원을 합한 54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은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을 위하여 계속과제 12개에 대한 12개월분 과제비 65억 2,000만원, 신규 과제 36개에 대한 9개월분 과제비 9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내역사업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개월)

내역사업	구분	과제수	과제비	개월수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계속	19	10,343	12
	신규	58	43,758	9
	합계	77	54,056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계속	12	6,520	12
	신규	36	9,371	9
	합계	48	15,891	-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내역사업은 2023년 예산에 168개 과제를 신규로 반영하여 추진한 이후 3년만에 최초로 신규 과제를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 따른 R&D 과제들이 과

제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2~5년 기간동안 추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과제별 최종집행기관 단계에서의 연도말 기준 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최종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87.8%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이보다 17.7%p 낮은 70.1%로 나타났음.

2019~2024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A)	59,203	75,088	75,400	67,058	72,377	36,189
최종집행액(B)	45,955	58,969	52,634	56,749	50,763	31,762
최종집행률(B/A)	77.6	78.5	69.8	84.6	70.1	87.8

주) 최종집행액은 각 연도 말 기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2023년 동 과제의 최종집행률이 2022년이나 2024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해당 연도에 2026년 예산안과 같이 신규과제 168건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과제협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3년 당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신규과제 168건에 대하여 9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과제 협약이 체결된 시점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신규 과제 체결시점별 현황

(단위: 개)

연도	7월	8월	9월	합계
2023년	116	27	24	167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반영된 2026년도 신규 과제에 대하여 과제 협약 체결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편성된 과제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지역투자촉진 사업: 실제 고용지원 효과를 감안한 성과관리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지역투자촉진’(3363-306)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5억 1,600만원 증액된 2,51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투자촉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지역투자촉진	208,015	221,831	221,831	251,347	29,516	13.3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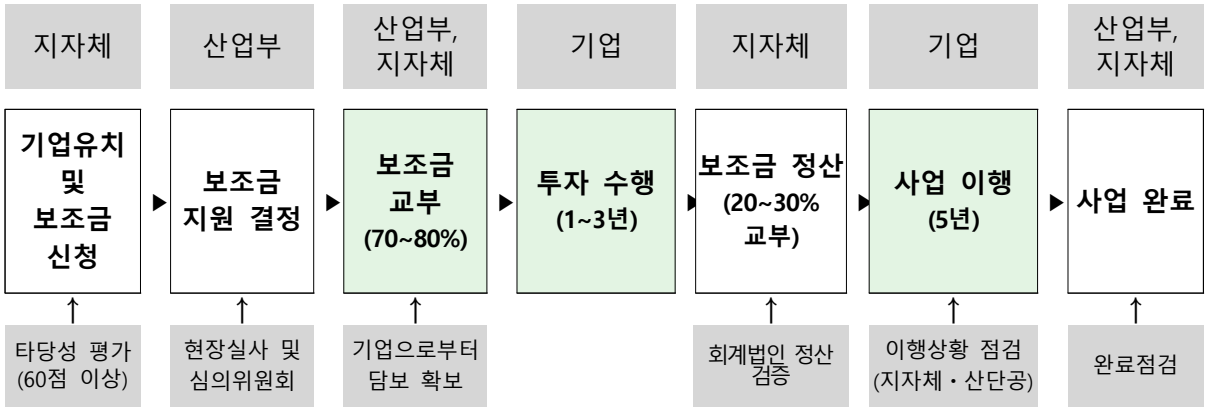
② 고용이행계획 미이행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증설 투자보조금 1,995억원, 지방이전 보조금 81억 2,000만원, 투자완료 정산 지금 소요 426억 6,300만원을 합한 2,50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182]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

50%)을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이전 시에는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 신·증설 투자 시에는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동 내역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투자 수행 이후 보조금 정산 시점에 지방투자 기업의 투자 이행실적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또는 반납받는 방식으로 지방투자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현재 기준 1차 정산 기한(3년)이 모두 도과한, 202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의 최종 투자 및 고용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 대상 69곳 중에 17곳이 사업지연으로 인

182) 지방투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하여 정산이 당초 시점보다 지연되었거나,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타당성점수 미달, 투자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7건의 보조금이 전액환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도 기지원 대상 업체 중 미정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일반현황				신청(계획)		실적	
지역	업체 연번	최초 지원 연도	보조금 지원 분류	투자액	고용인원	실투자액 (누적)	실고용인원
충남	591	2021	설비	8,096	11	전액환수(사업포기)	
대전	592	2021	설비	4,910	26	전액환수(타당성점수미달)	
충북	594	2021	설비	16,826	25	전액환수(사업포기)	
경남	597	2021	설비	46,833	60	투자이행중	
충남	603	2021	설비	14,183	35	정산중	
충북	613	2021	설비	13,007	50	정산중	
충북	614	2021	설비	24,204	33	투자이행중	
전북	621	2021	설비	18,775	86	투자이행중	
충남	624	2021	설비	15,927	54	전액환수(사업포기)	
충남	625	2021	설비	15,981	75	전액환수(사업포기)	
대전	626	2021	설비	49,478	100	투자이행중	
전북	629	2021	설비	29,837	62	투자이행중	
세종	636	2021	설비	30,518	60	정산중	
전북	644	2021	설비	56,094	80	정산중	
전북	645	2021	설비	6,363	30	전액환수(사업포기)	
전북	647	2021	설비	25,285	80	전액환수(투자미이행)	
경북	651	2021	설비	47,376	40	정산중	
합 계				423,693	907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정산이 완료된 나머지 52곳의 신청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총 투자계획액 1조 2,940억 1,800만원 대비 달성 실적은 9,063억 8,700만원으로 달성률이 7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도 정산완료 보조금 지원대상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업체 수	당초 계획		실적(2025년 기준)	
		투자액	고용인원	투자액	고용인원
정산완료	52곳	1,294,018	2,379	906,387	2,564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실고용인원은 2,564명으로 고용계획상 인원 2,379명 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미정산 대상 업체의 고용계획 인원인 907명을 차감하면 실제 고용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임.

2022~2025년 성과지표 중 고용이행률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고용이행률	목표	100	100	100	100	지방투자기업의 정산후 실고용인원을 사업계획서 대비 설정	투자정산 결과보고서의 고용창출인원/보조금 신청서의 고용계획 인원
	실적	112.0	106.3	121.4	-		
	달성도	112.0	106.3	121.4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상 고용이행률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지방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대비 실고용인원 비율을 산출하고, 매년 성과가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사업을 중단·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필요

① 결산 현황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4901-304)은 첨단투자지구 조성·임대 관리와 첨단투자 기업의 투자이행여부 지속 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첨단투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70	245	245	245	0	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필요

첨단투자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2021년에 법률상 지정근거가 마련되고[183][184], 이후 지정수요 사전 조사, 지정계획 공고, 첨단투자지구

183) 2021.6.15. 일부개정, 2021.9.16. 시행, 법률 제18274호

1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

실무위원회를 통한 지구 지정 등을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수행해왔음.

첨단투자지구 지정현황

지역	지구명(기업명)	지역 현황	업종
충남(3)	아산 탕정 (㈜에드워드코리아 등)	○ 아산탕정 일반산단(외투) - 72,728㎡	반도체· 디스플레이
	엠이엠씨코리아㈜	○ 충남 천안시 - 295,336㎡	반도체
	넥스콘테크놀러지㈜	○ 충남 천안시 - 30,582㎡	이차전지
전북(3)	㈜에이치알이앤아이 (舊호룡)	○ 김제 지평선 일반산단 - 93,899㎡	생산시스템
	㈜두산	○ 김제 지평선 일반산단 - 82,211㎡	디스플레이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 완주테크노밸리2 일반산단 - 32,674㎡	이차전지
부산(1)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아이디씨㈜	○ 부산 강서구(경자구역) - 23,792㎡	바이오·헬스
울산(1)	현대자동차㈜	○ 울산·미포 국가산단 - 685,800㎡	자동차
경기(1)	기아자동차㈜	○ 경기도 광명시 - 498,908㎡	자동차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2024년 신설되어, 시행령[185] 및 지침[186]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첨단투자지원센터가 첨단투자지구 효율적인 지구 위탁관리 및 입주기업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음.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1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86)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7조 ① 첨단투자지구 내 국·공유재산 관리 등 첨단투자지구 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첨단투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입주건수’로 설정하여 기업의 첨단투자와 이에 따른 신규 지구 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관리하고자 함. 그러나 현재까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동 사업 신설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2024년 사업 신설 이후로는 첨단투자지구 신규지정 실적이 없음.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및 실적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입주 건수 (단위: 건)	목표	-	6	4	4	4	연도별 평균 첨단기업*의 6%인 4개사를 목표치로 설정
	실적	-	9	0	0	0	
	달성도	-	150%	0	0	0	

주: * 산업부 첨단기술·제품 확인 기업이 입주 대상이므로, 2011년(도입)~2022년간 확인기업 총 790개사(연 평균 65.8개사)를 정책대상으로 고려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첨단기업 지원 및 투자활성화 목표를 기반으로 주요 첨단기업을 일부 유치하였으나 중점 인센티브(법인세·지방세 감면)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지정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향후 기존 입주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인센티브 확보 및 첨단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임.

첨단투자지구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근거	도입시기
설비보조비율 2%p 가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22.01.0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농지법 시행령	(’22.05.09.)

지원제도	지원근거	도입시기
토지가액 1%의 임대료로 임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2.07.12.)
준보전산지 대체산림조성비 50%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22.07.10.)
대체초지조성비 50% 감면	초지법	('23.12.19.)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당초 산업통상부가 직접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행하던 업무이고, 시행령 및 지침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첨단투자지원센터에 위탁된 업무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 첨단투자지구 관리 및 지원업무"임. 이를 고려하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관리·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규 투자유치도 관리·지원업무의 일환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유일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세제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추가 지정 수요를 확보하려는 것은 공공기관 내 센터조직이 수행하기에 과도한 사업목표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 목적은 첨단투자지구 관리·지원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사업을 실효성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26년도 정부 전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조 3,163억원임. 세입은 교육부 소관에 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6개 소관 부처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음.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세입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세출의 0.03%(57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정부 전체)

(단위: 백만원, %, 총계기준)

구 분	세 입		세 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7,316,309**	**100**	**17,316,309**	**100.00**
교육부	**17,316,309**	**100**	**16,625,050**	**96.00**
산업통상자원부	0	0	15,897	0.03
고용노동부	0	0	403,403	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259,209	1.50
농림축산식품부	0	0	15,897	0.09
특허청	0	0	7,220	0.04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 규모는 55억으로 지역 전문가 양성 및 공급(23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32억원) 등 2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6.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1) '26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

'26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82억원이 감소한 1,971억원임.

계정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수입계획 규모는 1,71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5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재원별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649억원, 융자원금회수가 150억원, 운용수익금이 2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760억원, 여유자금회수가 131억원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하 "특물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규모는 260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재원별로는 융자원금회수가 15억원, 법정부담금이 1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이 0.5억원, 기금예탁원금회수가 90억원, 여유자금회수가 138억원임.

’26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계획(A)	’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
○ 산업기술혁신계정	206,170	171,074	△35,096	△17.0
- 운용수익금	2,935	2,116	△819	△27.9
· 융자이자수입	1,425	300	△1,125	△78.9
· 예탁이자수입	1,510	1,816	306	20.3
- 기타경상이전수입	55,749	64,879	9,130	16.4
- 융자원금회수	-	15,000	15,000	순증
- 여유자금회수	43,986	13,079	△30,907	△70.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3,500	76,000	△27,500	△26.6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9,042	25,987	△3,055	△10.5
- 부담금	1,485	1,348	△137	△9.2
- 운용수익금	54	57	3	5.6
· 융자이자수입	15	14	△1	△6.7
· 예탁이자수입	39	43	4	10.3
- 기타경상이전수입	45	47	2	4.4
- 융자원금회수	1,336	1,462	126	9.4
- 여유자금회수	14,783	13,773	△1,010	△6.8
- 기금예탁이자수입(산촉기금-특물계정)	339	300	△39	△11.5
- 기금예탁원금회수(산촉기금-특물계정)	11,000	9,000	△2,000	△18.2
합 계	235,212	197,061	△38,151	△16.2

자료: 산업통상부

다음으로, '26년도 산촉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382억원이 감소한 1,971억원임.

'26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25년도 계획(A)	'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
○ 산업기술혁신계정	206,170	171,074	△35,096	△17.0
-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1,650	1,650	-	-
-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R&D)	5,238	4,343	△895	△17.1
-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4,540	4,876	336	7.4
- 기술성과활용촉진(R&D)	7,435	16,185	8,750	117.7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1,167	1,007	△160	△13.7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120,000	90,000	△30,000	△25.0
- 산촉기금운영인건비	698	723	25	3.6
- 산촉기금운영관리비	285	270	△15	△5.3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전출	10,900	10,9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 상환	5,880	7,902	2,022	34.4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 상환	30,000	-	△30,000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산촉기금-혁신계정)	18,377	33,218	14,841	80.8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9,042	25,987	△3,055	△10.5
- 몬트리올의정서대응	850	807	△43	△5.1
- 인건비(산촉기금-특물계정)	170	176	6	3.5
-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42	42	-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0	11,000	2,000	22.2
- 통화금융기관예치(산촉기금-특물계정)	18,980	13,962	△5,018	△26.4
합 계	235,212	197,061	△38,151	△16.2

자료: 산업통상부

계정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지출계획 규모는 1,711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5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43억원, 기술성과활용촉진 162억원,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49억원,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900억원, 통화금융기관예치 332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전출 109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특물계정의 지출계획 규모는 260억원으로 '25년도 대비 3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몬트리올의정서대응 8억원, 통화금융기관예치 14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2)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후관리 체계화 및 내역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개편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몬트리올의정서대응’(3563-304)은 오존층 파괴물질 또는 지구온난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 대체물질로의 전환조치를 지원하고 대국민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몬트리올 의정서[187]와 키갈리 개정서[188] 상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액된 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몬트리올의정서대응	850	850	850	807	△43	△5.0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구축	608	644	644	605	△39	△6.1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지원	242	206	206	202	△4	△1.9

자료: 산업통상부

187) 198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CFCs(염화불화탄소),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규정

188)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으나 CO_2(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4,800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HFCs(수소불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추가적 감축을 규정

②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은 수소불화탄소 등 규제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으로 사용공정을 진단하고 대체기술을 조사·제안하여 대체물질을 도입하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 매년 15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9년까지 HFCs(수소불화탄소) 등 특정 규제물질의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10% 감축할 의무가 있음.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HFCs 감축일정[189]

(단위: 백만원, %)

연도	'24	'29	'35	'40	'45
감축 일정	기준량 대비 동결	기준량 대비 10% 감축	기준량 대비 30% 감축	기준량 대비 50% 감축	기준량 대비 80% 감축

자료: UNEP

동 사업은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자 부담 없이 100% 정부보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다른 정부지원 사업 대비 만족도를 의미하는 "비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기술분야 평균인 81.8점을 크게 하회하는 66.7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한편[190],

189)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A5국 그룹1에 소속
190)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2025.10.

2014년 이후 기술지원을 실시한 전체 업체 중 대체기술을 도입한 업체의 비율이 75% 수준에 불과함.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 실시내역

구분	'22	'23	'24	'25
기술지원 실시업체 수	20	15	15	15
대체기술 도입업체 수	14	11	6	(집계중)
전환율	70.0%	73.3%	40.0%	-

자료: 산업통상부

대체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공정전환에 따른 비용과 절차상의 부담이 있음에도 대체기술 도입업체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점이 대체기술도입이 지연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체기술 도입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술지원과 연계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내역사업 감액분 조정 필요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과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사업비성 예산으로 구성되는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구축” 내역사업(6억 500만원)과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제협력비와 홍보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지원” 내역사업(2억 200만원)으로 이루어짐.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경상경비성 사업인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미나, 자료발간, 대국민 캠페인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오존층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 “국고보조 일정수준 감축결정”을 내림[191].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시 감축결정을 받은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지원” 내역사업에 대하여 인건비·기본경비·국제협력 사업 등 행정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지적받은 세미나 사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는 한편, 자료발간과 대국민 캠페인사업을 연구용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총 400만원을 감축하였음.

191)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5.9.

반면 별도로 감축결정을 받은 바 없는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기술 지원사업의 대상을 연 17개사에서 13.5개사로 전년 대비 20% 감축하고,

분야별 특정물질 협의체 회의 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몬트리올 의정서 대응지원 내역사업” 구조조정 총액 대비 9.8배에 해당하는 3,900만원을 감축함.

몬트리올의정서대응 내역사업별 조정내역

구분	’25	’26안
몬트리올 의정서대응	**850백만원**	**807백만원 (△43백만원)**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644백만원**	**605백만원 (△39백만원)**
	-**대체기술지원** 365백만원 ・17사 x 21백만원	-**대체기술지원** 325백만원 (△40백만원) ・13.5사 x 24백만원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190백만원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200백만원 (+10백만원)
	-**분야별 협의체** 89백만원 ・회의: 5분야 x 2백만원 x 2회 ・사업관리비: 69백만원	-**분야별 협의체** 80백만원 (△9백만원) ・회의: 5분야 x 2백만원 x 1회 ・사업관리비: 70백만원
몬트리올 의정서 대응지원	**206백만원**	**202백만원 (△4백만원)**
	-**인건비** 95백만원	-**인건비** 95백만원
	-**기본경비** 66.5백만원	-**기본경비** 66.5백만원
	-**국제협력** 19백만원 ・2명 x 5백만원 x 2회	-**국제협력** 19백만원 ・2명 x 5백만원 x 2회
	-**세미나** 5백만원 ・1회 x 5백만원	-**세미나** 11.5백만원 (+5.5백만원) ・1회 x 11.5백만원
	-**자료발간** 0.5백만원	-**연구용역** 10백만원 ・1회 x 10백만원
	-**대국민 캠페인** 2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액취지가 “몬트리올 의정서 대응지원” 내역사업 중 홍보예산의 실효성 부족에 있는 점,

동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중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규제물질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수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세부사업 편성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내에서 행정예산과 홍보비 등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대체기술 지원사업 등 사업비성 예산은 확대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④ 세부사업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구축” 내역사업 내 사업인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의 누적 기술지원 실시업체수 대비 대체물질 도입업체수의 비율을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삼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자체평가해 왔음.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세부사업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 (누적전환율)[192]	65	68	70	70	73
실적	66	70	73	75	-
달성도[193]	101.5	102.9	104.3	107.1	-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이에 따라 제정·시행되는 「20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예산사업 성과지표는 해당 세부사업 관리과제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194].

192) 누적전환율 = 해당연도까지 대체물질을 도입한 업체 수 / 해당연도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 업체 수

193) 달성도= 해당연도 실적 / 해당연도 목표

194) 국무조정실,「20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5.2.

그러나 동 세부사업은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분야별 특정물질 협의체 개최 등을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국내 규제물질 생산량과 소비량을 규정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연 15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대체기술 지원사업의 누적전환율만으로 동 세부사업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의정서대응'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내 규제물질 생산량과 소비량 감축실적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기술성과활용촉진(R&D): 공공 R&D 성과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 전면 개편 등 필요

① 계획안 현황

‘기술성과활용촉진(R&D)’(5076-314)은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술은행을 구축·운영하고, 기술거래촉진기관을 지정·관리하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민간 간의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500만원임.

2026년도 기술성과활용촉진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기술성과활용촉진 (R&D)	7,848	7,435	7,435	16,185	8,750	117.7

자료: 산업통상부

② 공공 R&D 성과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 전면 개편 등 필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거래기관 지정, 금융지원, 기술평가 활성화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함.

동 사업은 이러한 법적 책무의 이행을 위한 국가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과 ‘기술산업화 프로젝트’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은 국가 R&D 기술정보의 등록 및 활용 지원을 통해 국가 R&D 기술의 이전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술은행(NTB)[195]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

‘기술산업화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기술거래 지원체계를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6년에 기존 내역사업인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196]’를 종료하고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사업화 애로요인 해소, 기술의 실증 및 양산 연계 등을 포함한 시장 및 수요자 중심의 시장 창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즉,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 기술정보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라면, ‘기술산업화 프로젝트’는 시장·수요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확산형 사업으로 성격이 구분됨.

---

195) 국가기술은행(National Tech-Bank, www.ntb.kr), 법정 운영 기술정보망

196)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술중개, 컨설팅, 개념증명(PoC) 등 기업의 사업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2026년도 내역사업 개편(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도		2026년도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합 계	**7,435**	**합 계**	**16,185**
내역 1.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	**4,435**	**내역 1.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4,435**
①기술은행 구축·운영	3,400	①기술은행 구축·운영	3,400
②기술거래촉진기관 활성화 지원	300	②기술거래촉진기관 활성화 지원	300
③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및 성과환류	735	③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및 성과환류	735
내역 2.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3,000**	**내역 2. 기술산업화 프로젝트**	**11,750**
①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3,000	①문제해결형 10대 메가 프로젝트(신규)	5,000
-	-	②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신규)	6,750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의 경우 NTB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확장적 기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공공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기술정보 구축·서비스 플랫폼인 NTB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36만여 건의 기술요약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공공 R&D 성과기술의 이전·확산을 지원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기술은행(NTB) 활용 실적

(2024.12.24.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급기술 등록(건) (누적 : 363,727)	13,480	16,665	23,729	20,074	15,614
방문인원(천건)	5,327	9,582	23,490	13,870	15,343
일평균 이용자(건)	14,595	26,252	64,356	38,001	42,728

그러나, 현행 NTB 시스템은 공공기술 등록 및 공급기술 검색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공급기술 위주의 기술거래에 특화되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기능은 미흡[197]한 실정임.

특히 과거에 등록되어 노후화된 기술데이터의 정제·현행화 수준이 낮아 전반적인 플랫폼 활용도가 저조[198]하고, 20년 이상 운영된 NTB 시스템의 노후화로 최신 IT기술(생성형 AI 등)의 접목이 어려워 신기술 적용과 대규모 데이터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였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1년 AI 기술을 일부 도입하여 NTB를 1차로 개편[199]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수요에 대응하고자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시스템에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200]해 왔으나,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7) NTB 시스템은 제한된 조건으로 기술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술정보 검색이 불편하고, 정확한 기술 매칭 및 추천 기능은 부재한 상태임.

198) 기술데이터의 노후화로 기술추천·수요예측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타 기관 데이터 연계 분석 등에 기술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199) ('21.5.) AI 활용 기술 매칭, 추천·예상가격 등 인공지능 기반 관련 정보 제공

200) ('23~'24) 기술거래(TechStorm), 특허-산업-기업탐색(Build), 특허분석(Patentpia)

실제로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 수준(2023년 GDP 대비 4.96%, 세계 2위 수준[201])과 대규모의 공공 R&D 투자규모[202]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술이전율은 2021년 40.9%에서 2023년 30.2%로 지속적으로 하락[203]하여 R&D 투자와 성과 활용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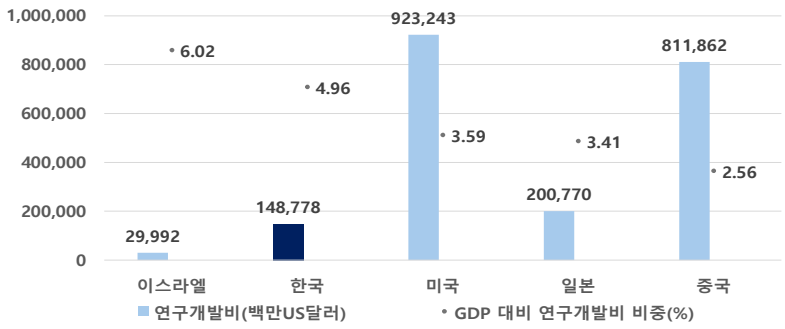
특히, 공공 기술이전율의 지속적 하락은 단순한 기술 수요 부진보다는 NTB를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지원체계가 시장 수요와 연계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NTB 시스템을 공공기술을 단순 등록·공유하는 공급자 중심 플랫폼에서 벗어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술 매칭, 규제정보 요약, 기술분야 간 융합

---

201) OECD 국가별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R&D 투자비중(2023)



자료: 산업통상부

202) 연도별 공공 R&D 투자규모: ('21) 24조 948억원 → ('22) 26조 3,283억원 → ('23) 28조 1,276억원

203) 연도별 공공 기술이전율: ('21)40.9% → ('22)31.7% → ('23)30.2%

추천 등 지능형 기능의 도입으로 맞춤형 기술추천[204], 협업지원 정보 제공[205], 기술사업화 투자·융자 연계[206] 등의 고도화 기능을 강화한다면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NTB 시스템에 대한 혁신기술 도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기술도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며 연평균 9% 이상 성장 중인 글로벌 기술거래 시장[207]에서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기술산업화 프로젝트'는 비교적 단기간 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 확산형 사업인 반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의 NTB 시스템 구축·운영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반조성 사업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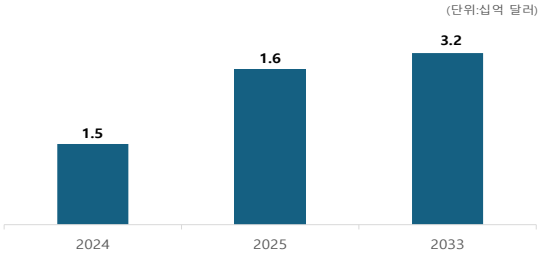
204) 키워드별 기술 목록 나열에서 탈피하여 '기술 활용분야(제품군)'와 '목적'에 맞는 NTB 내 유관 기술군 추천, 복수의 대학·공공연이 소유한 기술을 종합 제시하고,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제품화) 실현의 효과성 제고

205) 협력 가능한 시스템(Tech-GPT, 통합성과활용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NTB 기술 이외의 국내·외 기술과 R&D 성과물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보유 기관(기업), 분야별 주요 연구자, 기술·사업 관심기업(수요자) 등의 기술사업화 협업지원 정보 제공

206) 투자·융자 정보수집 및 준비, 투자·융자 사업자(민간+공공) 대상 접근 채널 제공 및 매칭 지원

207)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내재화보다 외부 기술도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확대하며 기술거래 시장은 연평균 9.5% 성장세를 기록 중임.

<연도별 글로벌 기술거래시장 규모>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술산업화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수요 중심의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NTB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공공 R&D 성과의 활용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두 축이 병행되는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공공기술의 실질적 이전·활용 확대를 위해 NTB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AI 기반 지능형 기능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시장 수요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공공 R&D 성과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확대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R&D 투자 지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사업비 유지 필요

① 계획안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5076-320)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우수 기술력을 담보로 R&D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대비 300억원 감액된 9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90,000	120,000	120,000	90,000	△30,000	△25.0

자료: 산업통상부

② 확대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지속적인 R&D 투자 지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사업비 유지 필요

동 사업은 기존의 정부 출연형 R&D[208] 지원방식에서 민간성과주도의 융자형 R&D[209]로 전환하여 민간 은행을 통한 시장성 및 사업성

208) 출연형 R&D: 정부가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209) 융자형 R&D: 저금리 대출과 같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성과 창출 후 상환 의무가 있어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210]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R&D 자금을 여타 정책금융보다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출연형 R&D 및 융자형 R&D 지원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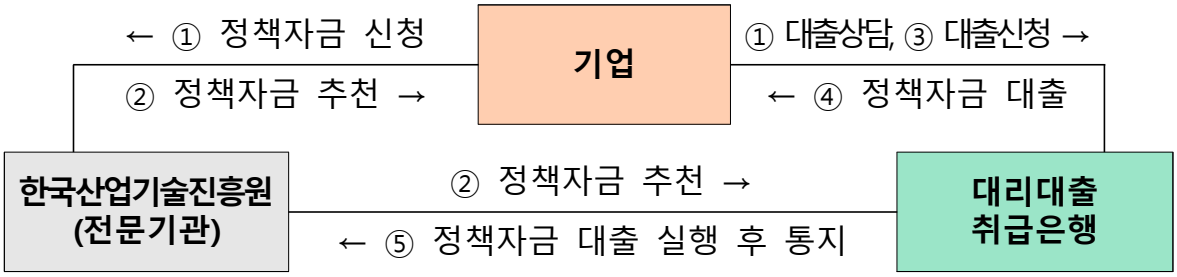
구분	출연형 R&D	융자형 R&D	비고
지원방식	출연(별도 대가 없음)	융자(빌려주고 갚는 방식)	기업 책임성 강화
지원범위	R&D비용 전액	금리만 우대 지원	정부 R&D 예산 효율성 강화
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한 통제	기본 가이드만 제시	기업 자율성 강화
선정방식	전문기관에서 선정	전문기관에서 추천→ 민간(은행)에서 대출심사	시장성 중심 평가

자료: 산업통상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최소 1억원 이상),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에서 2.0%p 차감한 금리(최저 1.3%)로 융자지원이 가능함[211].

210) (6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211) (예시: 2025년 3분기 기준) 2.53%(분기별 변동) - 2.0% = 0.53% → 최저금리 1.3% 적용

동 사업의 대출 지원 방식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10월말 기준 융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156개사가 3,785억원을 대출 신청하였으며, 이 중 KIAT의 과제평가를 통과한 55개사 가운데 41개사가 1,2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지원현황

(2025년 10월 말 기준)

구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방산	로봇	합계
신청기업(개)	39	28	15	38	25	11	156
신청금액(억원)	1,051.9	777.8	323	814.3	565.6	252.8	3,785.4
대출기업(개)	10	6	4	8	9	4	**41**
대출금액(억원)	363.9	186.6	88	173.7	268	119.8	**1,200**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21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

2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

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2025년 7월 동 고시의 개정으로 6개 분야(로봇, 방산 분야 추가)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예산을 2024년 900억원에서 2025년에 1,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융자지원 대상을 국가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 전체로 확대·실시하였고,

지난 2년간의 대출 신청 수요[213] 및 6개로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20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융자지원을 실시하고자 1,200억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900억 규모로 감액 조정되었음.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213) 동 사업 대출 신청액은 예산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동 사업 대출 수요: (24년) 2,981억원, 107개 기업 → (25년) 3,785억원, 156개 기업 신청

<대출 신청 및 지원 현황(2024~2025)>

구분	신청금액(억원)(A)	예산(억원)(B)	금액 기준 경쟁률(A/B)	신청기업(수)(C)	대출실행 기업(수)(D)	대출실행 기업 기준 경쟁률(C/D)
2024년	2,981	900	**3.31배**	107	32	**3.34배**
2025년	3,785	1,200	**3.15배**	156	41	**3.80배**

* 선정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30억원임

2026년 동 사업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민간 융자금	90,000	120,000	120,000	120,000	90,000	△30,000	△25.0

자료: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는 2025. 3. 5. 정부가 발표[214]한 50조원 규모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고려하여 동 사업예산 규모를 일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임.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215],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216]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217] 영위기업(대·중견·중소)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임.

214) 정부는 2025. 3. 5.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215)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 3. 5.)

216) 예)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

217)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동 사업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비교

구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첨단전략산업기금(안)
지원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지원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6대 분야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 (대·중견·중소기업 전반)
지원방식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저리대출·지분투자·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 및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만,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통해 설비투자·R&D 등의 투자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대출·보증 등의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대출자금을 통한 투자의 유형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218],

218)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대출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으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할 계획임.

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설비투자(Fab, MRO yard 등)를 위한 SPC에 대한 지분투자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기금의 후순위 보강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융자형 R&D 지원을 위해 융자자금의 용도와 산정기준을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동 사업과는 지원목적과 지원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

또한, 동 사업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 역량,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하였으나 R&D 투자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R&D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공장설비투자나 초창기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219]과는 별개로 동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위축 등 사업축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로봇·방산 등 새롭게 확대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219)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5. 8. 27.)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연속성과 자금지원의 공백 방지를 위해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출계획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무역보험기금

(1) '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

'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운용규모는 6조 3,030억원으로 자금조달 측면에서 보면 1조 5,476억원을 자체수입으로 확보하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005억원을 출연받으며, 4조 1,550억원을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할 계획이고, 자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사업비로 4,880억원, 기금운영비로 1,259억원을 지출하고, 5조 6,891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자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1,547,562	○ 사업비	488,018
○ 정부내부수입	600,500	○ 기금운영비	125,909
○ 여유자금회수	4,154,978	○ 여유자금운용	5,689,113
합 계	6,303,040	합 계	6,303,040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무역보험기금의 '25년도와 '26년도의 추정 재무상태를 보면, '25년도에는 4,21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26년도에는 6,94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무역보험기금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결산)	'25년(추정)	'26년(추정)
1. 사업수익	1,893,679	1,466,362	1,701,904
2. 사업비용	970,293	906,217	861,610
3. 사업총이익(1-2)	923,385	560,145	840,294
4. 사업관리비	131,101	139,815	147,246
5. 사업이익(3-4)	792,284	420,330	693,048
6. 사업외수익	3,708	3,732	3,717
7. 사업외비용	2,583	2,583	2,583
8. 경상이익	793,409	421,478	694,181
9. 당기순이익	746,370	421,478	694,181

자료: 산업통상부

'23년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당초 예상금액과 최종 결산금액 차이는 1,951억원이나, '24년도의 경우 그 격차가 6,43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수익 초과 달성 및 지출 절감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당기순이익 전망과 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추정 재정운영	결산
'23년도	67,253	262,368
'24년도	103,301	746,370

자료: 산업통상부

(2) 민간출연금: 민간은행과 재협약 및 민간출연금 수납 제고 노력 필요

① 계획안 현황

‘민간출연금’(59-594)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협약(특별출연 및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수입 항목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8억원 증액된 35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민간출연금	63,200	15,400	15,400	35,200	19,800	128.6

자료: 산업통상부

② 민간은행과 재협약 및 민간출연금 수납 제고 노력 필요

민간출연금은 「무역보험법」[220]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보험기금의 법정재원으로, 2019년~2024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으로 계획되어 왔으나 최근 민간은행과의 협약체결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2025년 계획액 154억원, 2026년 계획안 352억원으로 수납목표를 상향하였음.

220)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실제로는 2024년 632억원, 2025년 9월말 기준 844.5억원이 수납되었으며, 2025년말까지 추가수납 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은행·협약별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협약은행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망)	잔액 ('27~)
					9월말	추가출연 (전망)		
A은행 (패키지 1기)	80	40	40	55	5	-	-	-
A은행 (패키지 2기)	-	-	-	-	70	-	100	100
B은행 (패키지 1기)	-	-	-	300	-	-	-	
B은행 (패키지 2기)	-	-	-	-	150	-	100	50
B은행 (○○차 공급망)	-	-	-	-	50	-	50	65
○○차·□□	-	-	-	-	50	-	50	-
C은행	-	-	-	100	100	-	50	-
D은행 (패키지 1기)	-	-	-	162	108	-	-	-
E은행	-	-	-	15	-	-	-	-
F은행	-	-	-	-	13.5	-	-	-
G은행	-	-	-	-	270	-	-	-
H뱅크	-	-	-	-	27	-	-	18
I뱅크	-	-	-	-	1	-	-	-
합 계	80	40	40	632	844.5	-	350	233

주: A~E 은행은 2023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그 외 은행(F~I)은 개별적으로 출연협약 체결
자료: 산업통상부

기존 민간출연금은 40~80억원 가량 수납되었으나 2024년부터 수납 실적이 개선된 것은 2023년 12월 5대 시중은행(국민·KEB하나·우리·신한·농협)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시장다변화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임.

이후 2024년 2월부터 개별 은행별로 기금출연 및 협약보증이 순차적으로 개시되었으며,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2024~2025년에 걸쳐 각각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출연금 수납액이 6~700억원으로 증가함.

은행별로 협약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A은행의 경우 포괄적 업무협약 이전부터 출연금을 납부해왔는데, 2020년 체결된 1기 협약에 따라 2020년 초기출연 60억원을 납부한 후 보증·보험 누적공급액이 출연금 누적액의 15배에 달할 때마다 추가출연[221]해왔음.

2025년 6월 5억원 추가출연을 마지막으로 1기 협약은 종료되었으나, 2025년 6월말 2기 협약을 체결하여 초기출연금 70억원을 납부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는 추가출연 2회분(100억원) 수납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음.

다른 은행도 아래 표와 같이 출연협약을 체결해왔고, 수납실적, 잔여출연금 현황 및 연간 보증·보험계약액 추세를 고려하여 2026년도 계획안은 민간출연금이 350억원 가량 수납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는 2025~2026년에 협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2기 협약 체결 여부 및 규모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상한 것임.

221) 이하 다른 은행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출연함.

은행별 협약체결현황

협약은행	협약체결일	출연계획	잔여출연금(9월말)
A (1기)	’20.10.15.	·초기출연: 60억원 ·추가출연: 215억원	-
A (2기)	’25. 6.20.	·초기출연: 70억원 ·추가출연: 200억원	50억원×4회 **※ (’26) 2회분 수납 예상** → 2회 잔여
B (1기)	’24. 2.29.	·초기출연: 100억원 ·추가출연: 200억원	-
B (2기)	’25. 1.16.	·초기출연: 100억원 ·추가출연: 200억원	50억원×3회 **※ (’26) 2회분 수납 예상** → 1회 잔여
B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차·□□) 업무협약)	’25. 8.18.	·초기출연: 100억원 (은행 50억원, 기업 50억원) ·추가출연: 215억원	은행 50억×2회 + 65억원 / 기업 50억 **※ (’26) 은행 1회분, 기업 50억원 수납 예상** → 은행 1회분+65억원 잔여
C	’24. 2.29.	·초기출연: 100억원 ·추가출연: 150억원	50억원×1회 **※ 2026년 내 1회분 수납, 소진 예상**
D	’24. 4. 5.	·초기출연: 54억원 ·추가출연: 216억원	- ※ 2025년 내 소진 예상
E	’24. 5.30.	·초기출연: 15억원	-
F	’24.11.28.	·초기출연: 13.5억원	-
G	’24.12.17.	·초기출연: 90억원 ·추가출연: 180억원	- ※ 2025년 내 소진 예상
H	’25. 4.11.	·초기출연: 27억원 ·추가출연: 18억원	18억원
I	’25. 5.29.	·초기출연: 1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기금 자체수입의 감소는 적정 보험공급을 위한 정부출연금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26년에도 민간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6년에는 대미 투자지원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반회계 출연금(6,005억원)[222]이 편성된 만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기금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민간은행으로서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체결시 수출기업이 지원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지원[223] 등을 받게 되어 대출상품 판촉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고,

협약체결 대상이 되는 보증·보험종목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인데,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 인수실적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해외사업금융보험 계약체결한도를 2025년 9조 9,000억원에서 2026년 16조원으로 증액하여 설정하는 등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80조원에서 310조원으로 증액설정[224]하였으므로, 2026년 기존

222) 최근 10년간 정부출연금 총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연	3,900	700	800	1,350	5,731	3,500	912	500	700	3,800

주: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 포함, 추경시 추경액 기준

223) ○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 보증비율 상향(90%→95%), ▲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 대출금리 인하, ▲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 무보, 통상 위기 대응 위해 KB국민은행과 우대금융 공급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25. 6. 24.)
https://www.ksure.or.kr/rh-kr/bbs/i-414/detail.do?ntt_sn=38363&utm_source=chatgpt.com

22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제2212670호)

협약은행들의 해외사업 등 관련 대출액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금안정성 제고를 위해 2026년 출연협약이 종료되는 민간은행에 대해 우대금융 등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재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출연금 수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신용조회플랫폼 자체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최소화 필요

① 계획안 현황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1531-404) 사업은 보험금 지급, 보증 채무 이행 관련 국외 또는 국내채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의 채권을 회수하고 수출입 기업 신용조사평가, 국별 정치경제 동향 조사 및 글로벌 주요 산업에 대한 이슈 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1억 3,600만원 증액된 30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됨.

2025년도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16,405	19,596	19,596	30,732	11,136	56.8
-무역보험 채권관리 비용 등	9,149	11,794	11,794	14,063	2,269	19.2
-무역보험신용정보관리	7,256	7,802	7,802	16,669	8,867	113.7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신용조회플랫폼 자체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최소화 필요

내역사업인 ‘무역보험신용정보관리’ 중 ‘신용조회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안심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 확대 과제를

담당하면서 신설된 것으로[225], 2024년 12월 중순에 ISP 수립 사업을 공고하고, 2025년 1월 23일 자체변경으로 예산 3억 1,8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되었으며, 2026년 계획안은 7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현재 민간시장에서도 해외기업 관련 신용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로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신용정보, 위험분석 등에 관한 것임.

해외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분야 민간사업과 비교

구 분	N사 ○○○서비스	공사 신용조회 플랫폼(안)
이용목적	신규 바이어 발굴, 거시경제 분석자료 검색	무역보험 이용가능 여부, 무역보험 보험료 및 보험한도 산출
제공정보	기업 개요, 연혁, 바이어 컨택트 포인트, Risk Indicator	재무/ 비재무(업종,연혁 등), 산업별 업황, 부보실적 반영, 보험사고 이력 제공
주요고객	대기업, 금융기관	무역보험 이용고객 (기업규모 무관)
국외기업 보유정보	전세계 글로벌 일반 기업정보 (※ 보유정보 다수, 국내 수출과 연관성은 낮음)	국내 수출기업들의 신용조사 의뢰를 통해 확보된 K-수출 맞춤형 국외기업 정보
이 용 료	年 950만원	年 20만원(중소·중견기업)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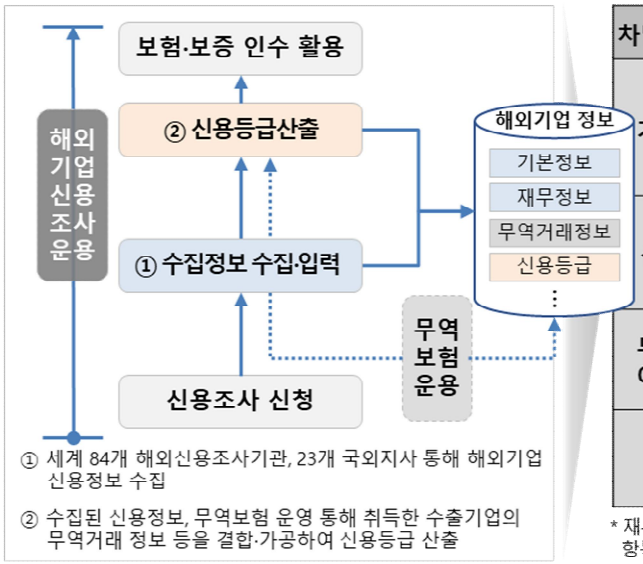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주로 대금결제 이행, 지급신용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무역보험 이용가능성 등을 사전검토하고자 하는 수

225)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2024.7.23.), 관계부처 합동
❑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다수 국민들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선정(22건)
1.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 **안심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 확대**('25.上)
◦ (현황) 해외수출에 관심있는 일반국민(기업, 개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플랫폼 부재
◦ (개선)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의 재무 및 위험정보*를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 해외 주요 기업의 재무 및 무역 정보(480만여개사), 사고 및 위험 기업정보(6만여개), 국가별 정치·경제동향 등(260여개국) 등

요도 있음.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존 무역보험 인수 및 사고이력 등을 기반으로 신용조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신용정보 수집체계 및 제공 정보

신용정보수집 체계



조회서비스 주요 제공 정보

차별화 항목	세부 내용	비고
기본정보	▪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소,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등	조회·검색
신용정보	▪ 신용등급, 세금 등 체납 정보, 재무정보	
무역보험 이용정보	▪ 무역보험 이용 여부, 부보실적 등	
기타	▪ 국가정보, 산업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보 등	K-Sight 연계

* 재무정보: B/S 및 P/L 기준연월, 연결/개별 여부, 자산·부채·자본 세부 항목, 매출액, 순이익 등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구축 ISP 수립' 결과보고(1.9.~5.8.)에 따르면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구축·개발·감리비용 등과 유지보수비용(2027~2031)이 27.0% 가량 낮을 것으로 추산되었음.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동 사업을 온프레미스 방식(On-premise, 자체 IT 인프라 구축·보유)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신용조회 플랫폼 서비스 대상 규모가 일정 수준 예측가능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신용정보업 특성상 정보보안 및 안정성이 중시될 필요는 있으나, 법령 및 지침상 원칙과 달리 자체 인프라 구축 방식을 택함으로써 비용이 다소 크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당국은 동 사업을 ISP 계획보다 적은 7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획안에 따라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HW/SW 구입 수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8~9억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수입은 2027년 3.2억원, 2028년 이후로는 6.8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동 사업은 수익창출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주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체 인프라 구축에 따라 예산이 다소 소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용조회 플랫폼 구축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시 중견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품유형을 다양화하여 자체수입을 제고하고 사업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기타경비: 법인세·지방소득세 계획안 반영 및 계획변경 최소화 필요

① 결산 현황

‘기타경비’(1677-200)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9억 7,500만원 감액된 327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기타경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
기타경비	60,550	33,720	94,903	32,745	△975	△2.9

자료: 산업통상부

② 법인세·지방소득세 계획안 반영 및 계획변경 최소화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타경비’ 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비목으로 ① 사옥 운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우편 등 공공요금과 ② 재산세·종부세 등의 제세금, ③ 신원보증보험료, 자동차·화재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④ 검사비, 협회비·분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과 동일한 5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됨.

2025~2026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분 류		'25 편성내역		'26
		당초	수정	편성내역
공공요금	전기료	792	792	792
	가스료	30	30	30
	수도료	100	100	100
	우편요금	70	70	70
	전신·전화요금	980	980	980
	회선·망사용료	120	120	120
	소계	2,092	2,092	2,092
제세금	법인세	-	56,212	-
	지방소득세	-	4,271	-
	기타	2,370	2,370	2,370
	소계	2,370	62,853	2,370
각종 보험료		550	550	550
각종 부담금		570	570	570
합 계		5,582	66,065	5,582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최근 5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기준으로 계획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획변경이 상당 금액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임.

최근 5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1	6,300	20,582	26,882	26,882	26,735	99.5	99.5	-	147
2022	6,555	7,320	13,875	13,875	13,512	97.4	97.4	-	363
2023	5,663	△150	5,513	5,513	5,309	96.3	96.3	-	204
2024	5,513	24,333	29,846	29,846	29,810	99.9	99.9	-	36
2025	5,582	60,483	66,605	66,605	64,174	97.1	97.1	-	-

주: 2025년 징수결정액·수납액 등은 9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2025년에는 604억 8,300만원을 증액변경했는데, 당초 2025년도 계획액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5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기타경비' 당초 계획액 대비 1.79배에 해당하는 604억 8,300만원(법인세 562억 1,200만원, 지방소득세 42억 7,100만원)을 증액변경[226]하였음.

그동안 기타경비 계획안 편성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2020년까지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227]가 0원으로 결정되고 기존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부터는 실제 결정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매년 8~9월에 1~6월분의 법인세 예상세액을 중간예납[228]해야 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하

226)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일자	유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코드)	2025년 계획현액(A)	변경액 (B)	변경 후 금액 (A+B)	변경 사유
5.21.	협의변경	기타경비(1677-200)	33,720	60,483	94,203	법인세·지방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1)	2,920,860	△60,483	2,860,377	

227) 지방세의 여러 세목 중에서 지방소득세로 인해 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세율의 10%를 부과**함.

❑ 지방소득세 개요
- ○ 부과기준 : 「지방세법」 §103의19 ~ §103의32
- ○ 산정방식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의 1/10 (「지방세법」 §103의20①1)
- ○ 신고·납부 : 「지방세법」 §103의23①, 4월말까지 신고·납부

228) 법인세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고(지방소득세는 의무없음), ① 직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원천납부세액) 50% 또는 ② 해당 사업연도의 예상 과세표준에 따른 예상 결정세액의 50% 중 납부금액을 선택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원천세액 및 중간예납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년도 4월에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환급받음.

기 위해 각각 2021년 204억 8,200만원, 2022년 73억 2,000만원을 계획 변경하였음[229].

2024년부터는 중간예납액 및 원천납부액보다도 법인세 부과액이 커서 순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순납부액 및 중간예납액을 집행하기 위해 2024년 228억 5,600만원, 2025년 562억 1,200만원을 변경함[230].

최근 5년간 법인세 중간예납·원천납부 및 순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법인세 부과액	0	16,157	3,342	18,762	44,958	미정
중간예납	0	20,482	7,320	728	7,861	21,357
원천납부	2,579	1,507	1,886	3,040	2,243	850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	2,579	21,989	9,206	3,768	10,105	22,207
순납부세액	△2,579	△5,832	△5,864	14,995	34,854	미정

주: 음영처리된 금액은 2024년 기타경비 지출액, 빗금친 칸의 금액은 2025년 기타경비 지출액
자료: 산업통상부

229)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순납부액을 포함하면 2021년 204억 8,200만원, 2022년 73억 2,000만원, 을 계획변경함.
※ 2023년에는 계획변경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액 7억 2,800만원, 2022년 지방소득세 순납부세액 1억 5,000만원 납부

230)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2024년에는 2023년 지방소득세 순납부세액 15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 2,800만원을 계획변경함.

최근 5년간 중간예납·원천납부 및 순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지방소득세 부과액	0	1,636	339	1,876	4,496	미정
중간예납	-	-	-	-	-	-
원천납부	258	151	189	304	224	85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	258	151	189	304	224	85
순납부세액	△258	1,485	150	1,572	4,272	미정

이와 같이 기타경비 지출이 부정확하게 계획되어 연례적으로 계획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책무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31]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5월말에는 사실상 1분기 정산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서는 9월 이후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액을 반영하고 계획변경 규모를 축소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 부과액 산정과정 및 2025년 상반기 순이익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해보면, 법인세 부과액은 우선 ① 당기순이익에 손금산입,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②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세액을 적용해 법인세를 산출한 후 ③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부과액을 결정함.

---

23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27쪽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 2. 세부지침
□ 예비비, 이·전용액 등 '24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

이월결손금(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과세소득에서 차감)은 2024년에 소진되었고 비과세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은 그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익)금산입은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항목들은 과세표준 추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반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법인세 등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임.

①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순이익 2,101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은 적어도 2,101억원일 것으로 보이고, ② 이에 따라 세율 및 누진세액을 고려하여 법인세[232]를 추정하면 437억 100만원 가량임. 그리고 ③ 9월말 기준 중간예납액 및 원천징수액 220억 700만원을 제외하면 214억 9,400만원을 2026년에 납부하여야 함.

최근 5년간 법인세 부과액 산정근거

(단위 :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당기순이익(A)	△1,010	1,665	2,092	3,040	6,722
손금산입(△익금산입)(B)[1]	933	△242	1,666	△1,528	△1,470
각 사업연도 소득(C=A-B)	△1,943	1,907	426	4,567	8,192
이월결손금(D)[2]	-	1,144	256	3,654	6,031
비과세소득(E)	-	-	-	-	-
소득공제(F)	-	-	-	-	-

232) 2,101억원 × 21% - 4.2억원 = 437.01억원

※ 법인세 세율(2023년 이후)

소득종류 / 법인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자료: 국세청(https://b.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과세표준(G=C-D-E-F)	△1,943	763	171	913	2,161
산출세액	-	164	34	188	450
세액공제[3]	-	2	1	-	-
결정세액(총부담세액)	-	161	33	188	450

주: 1) 법인세법상 수익/비용과 회계기준상 수익/비용 기준 차이를 조정
2) 과거 10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가능
3) 상가임대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자료: 산업통상부

이 경우 지방소득세는 43억 7,000만원으로 추정되고 9월말 기준 원천납부 8,500만원을 차감하면 42억 8,500만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즉, 상반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정하면 2026년에 부과되는 순납부세액은 적어도 257억 7,9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순이익이 발생하고 위의 가정과 같이 손금산입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4,200억원, 법인세 913억 8,000만원[233], 지방소득세 91억 3,800만원, 총 1,005억 1,8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2025년 법인세·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액 222억 9,200만원을 차감하면 2026년 순납부액은 782억 2,600만원에 달하며, 추가로 2026년도 중간예납액도 수백억원 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 기타경비 계획안 산정시 법인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5년부터는 이월결손금 소진 등으로

233) 4,200억원 × 24% - 94.2억원 = 913.8억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금액 이상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연례적인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 소관

Ⅰ. 예산안 개요

1. 총 괄

2026년도 지식재산처[234]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는 책임운영기관법 제30조제2항[235]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236]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에서 7,828억 9,700만원이며, 이는 ’25년도 본예산 7,810억 5,200만원에 비하여 0.2%(18억 4,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

---

1) 지식재산처는「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임

235) 「책임운영기관법」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236)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781,052	782,897	1,845	0.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781,052	782,897	1,845	0.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주: 총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안 총지출 규모[237]는 6,306억 9,000만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5,641억 1,300만원에 비하여 11.8%인 66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출예산안은 6,234억 7,000만원으로, '25년(5,568억 9,300만원) 대비 12.0%인 665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2억 2,000만원으로, '25년(72억 2,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37) 계정간거래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임.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본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지출규모)	**564,113**	**630,690**	**66,577**	**1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지출규모)	556,893	623,470	66,577	1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규모)	7,220	7,220	-	-

주: 지출규모는 총지출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는 7,828억 9,700만원으로, 2025년(7,810억 5,200만원) 대비 0.2%인 18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는 7,175억 6,200만원으로, '25년(6,985억 4,100만원) 대비 2.7%인 190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먼저, 손익계정의 구체적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수수료 수입은 6,963억 7,500만원으로, 2025년(6,420억 1,600만원) 대비 8.5%인 543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둘째, 수수료 외 수입은 54억 5,200만원으로, '25년(38억 6,900만원) 대비 40.9%인 15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셋째,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56억 2,700만원으로, 2025년(105억 5,300만원) 대비 △46.7%인 △49억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다음, 자본계정을 살펴보면, 첫째, 수수료 외 수입은 101억 800만원으로, 2025년(418억 8,000만원) 대비 △75.9%인 △317억 7,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둘째,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순감되었으며, 전입금(계

정간 거래)는 653억 3,500만원으로, '25년(825억 1,100만원) 대비 △20.8%인 △171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727,180**	**781,052**	**782,897**	**1,845**	**0.2**
순계(총계-계정간 거래)	673,610	698,541	717,562	19,021	2.7
총수입(총계-내부거래)	610,708	645,885	701,827	55,942	8.7
< 손익계정 >	**627,356**	**656,438**	**707,454**	**51,016**	**7.8**
□ 수수료 수입	604,240	642,016	696,375	54,359	8.5
□ 수수료 외 수입	6,468	3,869	5,452	1,583	40.9
□ 전년도세계잉여금	16,528	10,553	5,627	△4,926	△46.7
□ 전입금	120	-	-	-	-
< 자본계정 >	**99,825**	**124,614**	**75,443**	**△49,171**	**△39.5**
□ 수수료 외 수입	46,248	41,880	10,108	△31,772	△75.9
○ 공자기금 원금회수	42,826	37,874	6,303	△31,571	△83.4
○ 공자기금 이자수입	3,422	4,006	3,805	△201	△5.0
□ 전년도세계잉여금	127	223	-	△223	순감
□ 전입금	53,450	82,511	65,335	△17,176	△20.8

* 수수료 외 수입(손익계정) : 국유특허권 실시료수입, 경상이전수입, 수입대체경비 등

자료: 지식재산처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비중을 보면, 지식재산 일반 부문[238]의 비중은 56.1%로 2025년(50.0%) 대비 6.1%p 확대되고,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이 43.9%로 2025년(50.0%) 대비 △6.1%p 축소되었음.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부문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지식재산 일반	349,478	50.0	402,841	56.1	53,363	15.3
산업·중소기업 일반	349,063	50.0	314,721	43.9	△34,342	△9.8
계	698,541	100.0	717,562	100.0	19,021	2.7

주: 순계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출예산안은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음.

23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공통 과목구조 개편으로 산업부·중기벤처부·지식재산처의 사업전반을 포괄하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지식재산 일반'으로 지식재산처 별도 부문화('18.6)

① 프로그램별 증감 내역

손익계정에서 ①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1,050억 500만원으로, 2025년(937억 1,900만원) 대비 12.0%인 112억 8,600만원, ②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1,310억 3,700만원으로, 2025년(1,251억 7,700만원) 대비 4.7%인 58억 6,000만원, ③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654억 8,000만원으로, 2025년(529억 7,900만원) 대비 23.6%인 125억 100만원, ④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은 402억 8,000만원으로, 2025년(325억 8,000만원) 대비 23.6%인 77억원, ⑤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579억 4,400만원으로, 2025년(428억 100만원) 대비 35.4%인 151억 4,300만원, ⑥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은 2,197억 8,800만원으로, 2025년(2,063억 2,700만원) 대비 6.5%인 134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한편, 회계기금간 거래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25억 8,500만원으로, 2025년(203억 4,400만원) 대비 11.0%인 22억 4,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음.

또한, 자본계정에서 ①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16억 3,000만원으로, 2025년(7억 5,700만원) 대비 115.3%인 8억 7,3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②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은 14억 6,500만원으로, '25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음.

그에 비해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은 8억 4,100만원으로, 2025년(10억 8,800만원) 대비 △22.7%인 △2억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한편, 회계기금간 거래로서 공자기금예탁금은 183억 7,600만원으로, 2025년(187억 2,500만원) 대비 △1.9%인 △3억 4,900만원, 회계간 거래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531억 3,100만원으로, 2025년(1,025억 7,900만원) 대비 △48.2%인 △494억 4,8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음.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714,531	781,052	782,897	1,845	0.2
순 계 (총계-계정간 거래)	660,961	698,541	717,562	19,021	2.7
총지출 (총계-내부거래)	545,917	556,893	623,470	66,577	12.0
< 손익계정 >	614,739	656,438	707,454	51,016	7.8
□ 지식재산일반 부문	351,971	347,256	399,746	52,490	15.1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94,831	93,719	105,005	11,286	12.0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8,755	125,177	131,037	5,860	4.7
○ 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52,012	52,979	65,480	12,501	23.6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6,269	32,580	40,280	7,700	23.6
○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40,104	42,801	57,944	15,143	35.4
□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262,768	309,182	307,708	△1,474	△0.5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90,941	206,327	219,788	13,461	6.5
- 인건비	167,317	179,689	191,805	12,116	6.7
- 기본경비	16,594	18,070	19,175	1,105	6.1
○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8,378	20,344	22,585	2,241	11.0
○ 계정간 거래	53,450	82,511	65,335	△17,176	△20.8

구 분	'24결산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 자본계정 >	99,792	124,614	75,443	△49,171	△39.5
□ 지식재산일반 부문	2,105	2,222	3,095	873	39.3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666	757	1,630	873	115.3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39	1,465	1,465	-	-
□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97,686	122,392	72,348	△50,044	△40.9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기본경비)	900	1,088	841	△247	△22.7
○ 회계간 거래(일반회계전출)	77,666	102,579	53,131	△49,448	△48.2
○ 회계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	19,000	18,725	18,376	△349	△1.9
○ 계정간 거래	120	-	-	△120	순감

자료: 지식재산처

② 2025년도 종료사업과 2026년도 신규사업

2025년도 종료사업은 없고,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이 100억원,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이 98억 7,100만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종료사업 및 2026년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종 료 사 업	'25 예산	신 규 사 업	'26 예산안
-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0,000
-	-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9,871

자료: 지식재산처

③ 주요 증액사업 및 감액사업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으로, ①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55억 4,700만원으로, 2025년(22억 8,600만원) 대비 580.1%인 132억 6,100만원, ②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171억 2,300만원으로, 2025년(81억 2,400만원) 대비 110.8%인 89억 9,900만원, ③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74억 7,600만원으로, 2025년(41억 900만원) 대비 81.9%인 33억 6,700만원, ④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366억 9,800만원으로, 2025년(268억 5,300만원) 대비 36.7%인 98억 4,500만원, ⑤지식재산 창출지원 243억 7,300만원으로, 2025년(206억 6,000만원) 대비 18.0%인 37억 1,300만원, ⑥특허 심사지원 725억 8,000만원으로, 2025년(634억 4,300만원) 대비 14.4%인 91억 3,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2,286	15,547	13,261	580.1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5,486	8,124	17,123	8,999	110.8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4,348	4,109	7,476	3,367	81.9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3,495	26,853	36,698	9,845	36.7
지식재산 창출지원	23,573	20,660	24,373	3,713	18.0
특허 심사지원	62,936	63,443	72,580	9,137	14.4

※ (구분 기준) '25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 증감률 순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주요 감액사업으로, ①국제지식재산나눔(ODA) 8억 3,600만원으로, 2025년(21억 6,000만원) 대비 △61.3%인 △13억 2,400만원, ②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82억 500만원으로, 2025년(112억 7,500만원) 대비 △27.2%인 △30억 7,000만원, ③IP-R&D 전략지원(R&D) 322억 3,600만원으로, 2025년(416억 7,700만원) 대비 △22.7%인 △94억 4,100만원, ④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32억 3,500만원으로, 2025년(158억 4,000만원) 대비 △16.4%인 △26억 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음.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
국제지식재산나눔(ODA)	2,113	2,160	836	△1,324	△61.3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9,262	11,275	8,205	△3,070	△27.2
IP-R&D 전략지원(R&D)	39,093	41,677	32,236	△9,441	△22.7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1,431	15,840	13,235	△2,605	△16.4

※ (구분 기준) '25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 / 증감률 순

자료: 지식재산처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에서 일괄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2,0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예산 (A)	'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220	7,220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7,220	7,220	-	-

자료: 지식재산처

Ⅱ. 검토의견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1) 2026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2026년도 정부 전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13억 4,800만원임. 세입은 총 6개 소관에 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6개 소관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정부 전체 책특회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1,291,348(100.0)**	**1,291,348(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428(6.8)	87,428(6.8)
보건복지부	206,734(16.0)	206,734(16.0)
경찰청	94,712(7.3)	94,712(7.3)
산림청	72,503(5.6)	72,503(5.6)
지식재산처	**782,897(60.6)**	**782,897(60.6)**
질병관리청	47,074(3.6)	47,074(3.6)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도 책특회계 예산안 중 지식재산처 소관은 전체 세입 및 세출의 60.6%(7,828억 9,7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첫째, 세입과 세출 규모를 전년(본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총세입 및 총세출은 각각 18억 4,500만원 증가하였음. 계정(손익계정, 자본계정)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 및 세출(순계)은 각각 190억 2,100만원 증가하였음.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책특회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A)	'26예산안(B)	증 감(B-A)
세입	**총계**		**781,052**	**782,897**	**1,845**
	순계(총계-계정간 거래)		698,541	717,562	19,021
	순세입		649,891	705,632	55,741
	공자기금 원금회수		37,874	6,303	△31,571
	전년도세계잉여금		10,776	5,627	△5,149
	계정간 거래		82,511	65,335	△17,176
세출	**총계**		**781,052**	**782,897**	**1,845**
	순계(총계-계정간 거래)		698,541	717,562	19,021
	순세출		556,893	623,470	66,577
	여유재원	공자기금 예탁	18,725	18,376	△349
		일반회계 전출	102,579	53,131	△49,448
		소계	121,304	71,507	△49,797
	공무원 연금		20,344	22,585	2,241
	계정간 거래		82,511	65,335	△17,176

주: 1. 순세입은 세입(순계) 중 공자기금 원금회수,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
2. 순세출은 세출(순계) 중 공자기금 예탁, 일반회계 전출금, 공무원 연금을 제외한 금액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도 순세입은 557억 4,1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출은 665억 7,700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여유재원 715억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83억 7,600만원은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나머지 531억 3,1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둘째, 세출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에 비해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지식재산행정정보화,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는 증액되었고, 회계간 거래(일반회계전출), 회계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는 감액되었음.

2026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A)	'26예산안 (B)	증감 (B-A)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손익계정	93,719	105,005	11,286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소계	125,934	132,667	6,733
	손익계정	125,177	131,037	5,860
	자본계정	757	1,630	873
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손익계정	52,979	65,480	12,501
지식재산행정정보화	소계	34,045	41,745	7,700
	손익계정	32,580	40,280	7,700
	자본계정	1,465	1,465	-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손익계정	42,801	57,944	15,14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소계	207,415	220,629	13,214
	손익계정	206,327	219,788	13,461
	자본계정	1,088	841	△247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손익계정	20,344	22,585	2,241
회계간 거래(일반회계전출)	자본계정	102,579	53,131	△49,448
회계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	자본계정	18,725	18,376	△349
합 계(순 계)		**698,541**	**717,562**	**19,021**

자료: 지식재산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의 특징은 지출구조 혁신 기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전년 대비 예산 변동폭이 크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11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심사·심판처리 지원사업에서 113억 300만원, 심사・심판 역량강화사업에서 3,600만원, 특허고객 서비스지원사업에서 6억 90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에, 국제협력 강화기반 구축사업에서 △6억 6,200만원 감액되었음.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6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사업에서 5억 8,500만원,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활용강화사업에서 34억 1,100만원,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에서 18억 6,400만원,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사업에서 8억 5,400만원,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자본)사업에서 1,900만원 각각 증액되었음.

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12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사업이 98억 4,500만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 132억 6,10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에, 모태조합출자사업이 △80억원,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정보화)사업이 △26억 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은 7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허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사업이 21억 7,1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산업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이 98억 7,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프로그램은 15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사업이 89억 9,900만원, 기술 분쟁대응 지원사업이 22억 1,700만원,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사업이 33억 6,700만원,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사업이 9억 8,300만원,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사업이 3억 4,80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에,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이 △1억 3,100만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사업이 △6억 4,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은 13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121억 1,600만원, 기본경비 8억 5,8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셋째, 세부사업 기준으로, 2025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모태조합출자사업 1개이고, 2026년도 신규사업은 지식재산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사업,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 2개임.

2026년도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예산	'26예산안
신규	지식재산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	10,000
신규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	9,871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내내역사업 포함) 기준으로, 2025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상표 심사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 등 총 9개 내역사업임.

2026년도 전액 삭감 사업(내내역사업 포함)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종료대상 사업	'25 예산(A)	'26 예산안(B)	증감 (A-B)	비고
상표 심사지원	**10,681**	**11,833**	**1,152**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 (도형 DB 정비)	570	-	△570	일몰
국제지식재산나눔(ODA)	**2,160**	**836**	**△1,324**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780	-	△780	외부지적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0,448**	**9,998**	**△450**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500	-	△500	재원분담구조 개편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5,840**	**13,235**	**△2,605**	
산업재산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552	-	△552	일몰
AI 검색지원 학습데이터 구축	2,768	-	△2,768	일몰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6,853**	**36,698**	**9,845**	
지식재산활용 확산 인프라 구축	740	-	△740	효율운영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580**	**30,409**	**△2,171**	
특허정보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진행상태정보 국제표준DB 구축)	219	-	△219	일몰
특허넷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고도화	610	-	△610	일몰
교육환경개선(자본)	**2,185**	**2,108**	**△77**	
노후시설 보수·보강 (생활관 출입시스템 개선 공사)	94	-	△94	일몰

자료: 지식재산처

넷째, 2026년도 예산안을 사업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처가 직접 수행하는 예산은 3,226억원이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

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보조 등을 통해 수행하는 예산은 963억원임.

사업수행 주체별 2026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지식재산처 직접수행	322,607	특허 심사지원(72,580), 상표 심사지원(11,833), 디자인 심사지원(6,229), 심판 처리지원(1,449), 심사·심판관 역량강화(792), 국제협력(1,559), WIPO국제분담금(ODA)(2,218), 국제지식재산나눔(ODA)(836),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7,509), 지식재산 창출지원(200), 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1,019), 발명장려문화 조성(4,273), 여성발명진흥(1,410), 지식재산연구 활성화(1,464), IP활용 창업·성장 지원(31), 특허기술조사분석(R&D)(18,477), IP-R&D 전략지원(R&D)(32,236), 표준특허 창출지원(R&D)(7,467),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10,000),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2,98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2,149),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45),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2,257),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342),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13,235),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14,874),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30,409),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9,871),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12,137), 기술 분쟁대응 지원(13,274),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7,402),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7,476),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6,367),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2,771), 특허데이터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3,531)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839),

사업수행 주 체		예산안 규 모	세부사업 리스트(금액)
			건강보험부담금(손익)(7,969), 교육환경개선(자본)(1,488),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142),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1,465)
지식재산처 직접수행 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85	지식재산연구 활성화(4,385)
	한국발명진흥회	82,397	지식재산 창출지원(24,173), IP활용 창업·성장 지원(8,174),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7,220),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9,953), 지식재산 활용(사업화,거래,평가) 지원(17,330),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5,54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494	지식재산 활용(사업화,거래,평가) 지원(4,49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986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4,986)
	소계	96,262	
합 계		418,869	

* 주요사업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 기금예탁이자수입: 최근 국고채 이자율 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후 예치 기간(5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00만원 감액된 3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금예탁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기금예탁이자수입	3,422	4,006	4,006	3,805	△201	△5.0

자료: 지식재산처

② 최근 국고채 이자율 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지식재산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년 주기로 예탁 및 원리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음. 지식재산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성상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239]하여 일정한 여유 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여유 재원 중 일정 비율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 수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239) 지식재산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특허청 사업 수수료 수입으로서(2024년 지식재산처 사업 수수료 수입은 약 6,042억원), 자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전액 편성한 후에도 여유 재원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여유재원 예탁 및 전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유재원	공자기금 예탁금	1008	285	412	530	428	379	63	300	300	190
	일반회계 전출금	-	757	918	1,064	861	732	566	1,060	1,405	777
	소계	1,008	1,042	1,330	1,594	1,289	1,111	629	1,360	1,705	967

자료: 지식재산처

기금예탁이자수입은 최근 5년간 예탁금의 연도별 이자 수입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2026년 예산안인 38억 500만원의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 기타예탁이자수입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안
예탁 원금	6,303	30,000	30,000	19,000	18,725	
이자율	2.215	3.840	3.680	2.815	6.091	
적용 일수	462일	365일	365일	365일	268일	
이자	177	1,152	1,104	535	837	▶ 3,805

자료: 지식재산처

여기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낙찰금리를 반영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240]에서 정한 확정 이자율인 반면 '25년 이자율은 예산 편성을 위한 추정 이자율로 실제 이자율은

24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25년 말에 확정되게 되는데,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확정 이자율을 알 수 없어[241] 추정 이자율로 산정한 예산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기금예탁이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3,940	3,940	3,940	3,514	3,514	89.2	100.0
2023	3,998	3,998	3,998	3,446	3,446	86.2	100.0
2024	4,185	4,185	4,185	3,422	3,422	81.8	100.0
2025	4,006	4,006	4,006	1,570	1,570	39.2	100.0
2026(안)	3,805	3,805	-	-	-	-	-

자료: 지식재산처

다만, 세입 예산의 계획적 편성과 수납을 위해서 추정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게 하고, 최근 국고채 금리 및 기금예탁이자수입 이자율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등 합리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242].

지식재산처는 1년차인 2025년 예탁 기금(187억 2,5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6.091%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

241) 주: 위원회는 국·공채 금리수준,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되, 금리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24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나 지식재산처 기금예탁이자수입 이자율의 평균적인 수치보다 다소 높게 정하여 예산 예측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243].

최근 10년간 시장금리 추이

(단위: 기간중 평균금리,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고채 5년(평균)	1.97	1.53	2.00	2.31	1.59	1.23	1.72	3.32	3.59	3.15
기준금리	1.50	1.25	1.50	1.75	1.25	0.50	1.00	3.25	3.50	3.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특히, 지식재산처는 '22년 기금예탁이자수입 추정 이자율을 11.279%(확정 이자율 2.215%)로 산정[244]하는 등 매년 추정 이자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례적인 기금예탁이자수입 수납률 부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세입을 과다계상하게 되면 수입이 실제보다 많게 보여 과도한 지출 또는 예산 낭비의 유인이 생기는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기금예탁이자수입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수납을 위해 최근 국고채 이자율 추이를 반영한 적정한 이자율로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43) 주: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2026년 기금예탁이자수입 예산안에서 추정 이자율을 3.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평균적인 국고채 금리 추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244) 연도별 예산편성 추정금리(%)/확정금리(%) : ('22) 11.279/2.215, ('23) 6.328/3.840, ('24) 7.118/3.680

(3) 국제지식재산나눔(ODA):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국제지식재산나눔(ODA)’(1035-305)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국내 특허 정보를 활용한 지식재산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ODA사업임.

2026년도 국제지식재산나눔(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국제지식재산나눔 (ODA)	2,113	2,160	2,160	836	△1,324	△61.3

자료: 지식재산처

②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발명교육 ODA(내역사업)는 한국의 높아진 IP분야 위상과 국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도국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명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개도국 현지에서 창의적 발명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① 발명교육 거버넌스 수립, ② 발명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③ 발명교원 양성, ④ 발명교육센터 설치 기획 등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임.

발명교육 ODA 예산은 사업 기획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억원씩(총액 15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실제 예산은 이보다 다소 감액하여 2025년 3억 6,000만원, 2026년 4억 600만원으로 편성함.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개최한 연수 과정을 통해 발명교육 ODA사업 대상 국가로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2025년 5월 지식재산처와 캄보디아 교육부·상무부는 발명교육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범위, 역할 등을 명시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 **특허청-캄보디아 교육부, 상무부 3자 MOU 체결('25.5.5.(월))**
「발명교육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범위, 역할, 기능 등을 명시하여, 특허청장, 캄보디아 교육부 차관,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이 참여한 3자 MOU 체결
- 한-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발명교육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 논의
  * (참석) 특허청 차장, 캄보디아 교육부·상무부 차관
- 운영위원회*를 정식 출범하여 한국형 발명교육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정책협의 및 논의 기구 설립
  * (참석) 특허청 차장, 캄보디아 교육부·상무부 차관

자료: 지식재산처

2025년 10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은 50.5%이며,

2025년도 발명교육 ODA 사업 예산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소요 예산(A)	집행 금액(B)	비율(B/A)
발명교육 정책 컨설팅	150	82	55
학생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200	100	50
발명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26년부터)	-	
발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0	-	0
계	360	182	50.5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수행기관) 직원의 출장 및 현지 답사가 5차례 진행되었음.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사업 공무상 출장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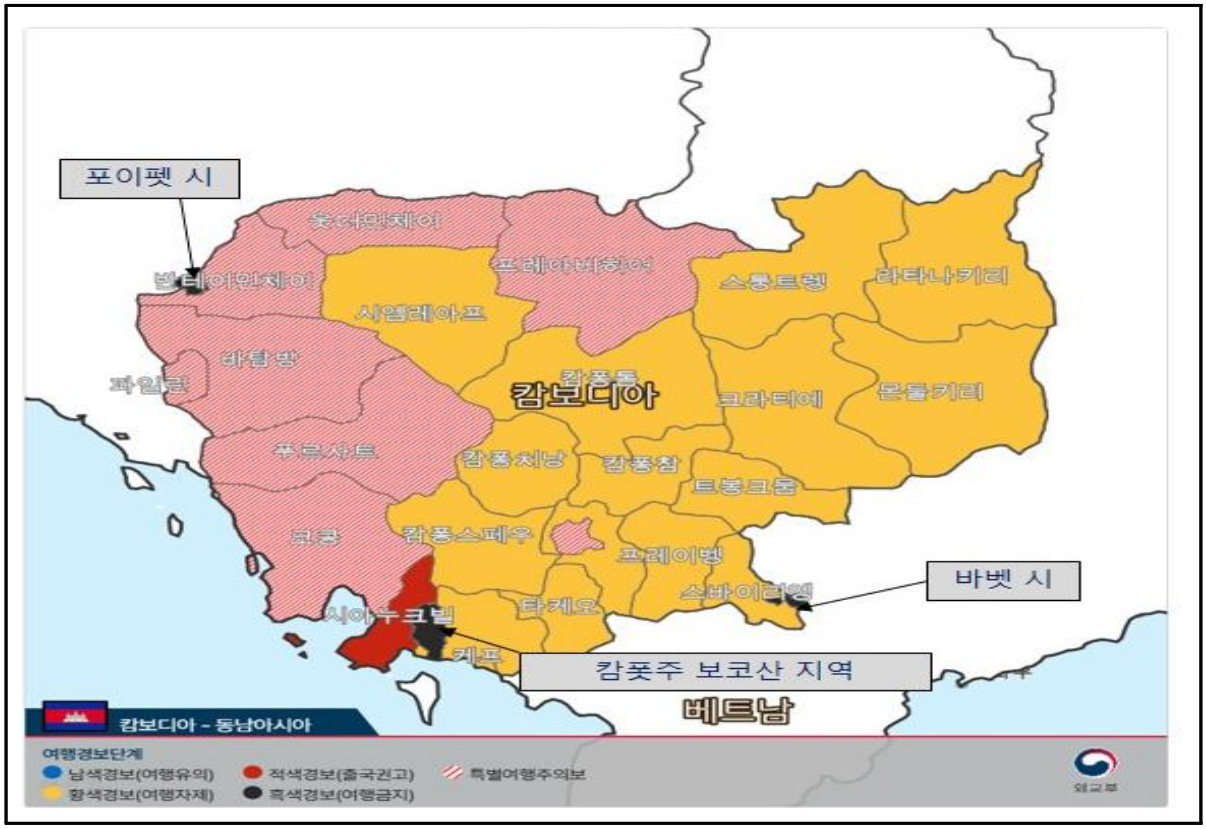
구 분	일 시	장 소	목 적
공무원 (지식재산처)	’25.5.4.(일)~5.7.(수)	시엠립	발명교육 ODA 사업 수행을 위한 한-캄 고위급 회의, MOU* 교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착수 세미나 ※한-아세안 고위급회의 계기 참석
공공기관 직원 (발명진흥회)	’25.3.3.(월)~3.8.(토)	프놈펜 시아누크빌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지역학교 방문 등
	’25.5.3.(토)~5.7.(수)	프놈펜 시엠립	추진위원회 관계자 회의 및 착수 세미나,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역학교 방문 등
	’25.9.16.(화)~9.20.(토)	프놈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부, 교육대학, 왕립대학, 국립교육원 관계자 인터뷰 진행
	’25.10.15.(수)~10.19.(일)	프놈펜 시아누크빌	학생용 발명교육 프로그램 현지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지 교사 워크숍 및 시범교육 학교 답사

자료: 지식재산처

다만, 2025년 8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사망·감금 문제[245]가 큰 화두로 제기되어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 간 정치·사회·외교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향후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245) 한국경제, [단독] 한국인 男,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고문 흔적”, 2025.8.14.

우선 외교부는 2025년 10월 15일부로 캄보디아 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8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246]를 발령하고 시아누크빌 주에는 3단계 경보(출국권고)를 발령하여 방문취소 및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음.



자료: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에 포함된 ‘프놈펜 시’와 출국권고 경보가 발령된 ‘시아누크빌 주’는 동 사업을 통해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발명교육교재 프로그램 및 발명교원 양성사업을 수행하려고 계획한 위치이므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발명교

246)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육 강사 등의 잦은 방문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발명교육센터는 사업 3년차(2027년)에 프놈펜 1곳(Aknuwatreachtheany 부설 초등학교), 시아누크빌 1곳(Hun Sen Mittapheap 초등학교) 등 총 2개 지역에 설치 예정	
위치 (대상)	Aknuwatreachtheany Primary School, HV4P+HW3, 프놈펜	Hun Sen Mittapheap School, G8R+94H, 시아누크빌 주
사진		
비고	학교 리모델링 완료('25.11.) 예정	교원연수 및 지역주민 IP교육 시설로도 활용 예정

자료: 지식재산처

특별여행주의보 및 출국권고 경보로 인해 2025년 11월 예정되어 있던 발명교육 강사의 현지 출장 일정이 불승인되었고[247], 여행경보의 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임.

○ **출장 목적**
- **(발명교육 시범교육)** 캄보디아 맞춤형으로 개발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시범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합성 확인 및 추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
- **(최종보고회)** 캄보디아 발명교육 1차년도 현지 최종 보고회를 통해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의견 수렴

○ **출장 개요**
- **(출장 일정)** '25.11.23.(일) ~ '25.11.29.(토)
- **(출장자)** 한국발명진흥회 2인, 발명교육 강사 3인
- **(출장지)** 캄보디아 프놈펜, 시아누크빌

자료: 지식재산처

247) 지식재산처는 일부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대체일정을 수립하여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특히 시아누크빌 주는 이번 감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죄단지(웬치)가 소재한 지역으로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지적되고 있고[248], 양국간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서 캄보디아 내 반한 감정까지 제기되고 있어[249],

동 사업을 위해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므로 발명교육센터 설치 예정지인 시아누크빌 내 초등학교의 장소적 적합성과 주변의 치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① 여행경보 변동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공무상 출·입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② 온라인 강좌 대체 등 일정 변동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지 출장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콘텐츠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③ 발명교육센터 선정 초등학교의 장소적 적합성 및 치안 확보 상황, ④ 예산의 불용 가능성이나 추가 증액 필요성, ⑤ 사업 기간(3년)의 연장 또는 단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48) KBS뉴스, 범죄단지 '웬치', 누가·어떻게·왜 오나?, 25.10.21.
"범죄단지 '웬치'는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웬치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캄보디아 남단에 있는 시아누크빌입니다."

249) MBC뉴스, '범죄도시' 낙인에 교민 날벼락... '반한 감정' 걱정도, 25.10.21

(4) 특허기술조사분석(R&D): 보유특허 진단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① 예산안 현황

‘특허기술조사분석(R&D)’(1233-301)은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한 R&D 전략 수립 및 기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상표 빅데이터 분석,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및 활용 지원, 특허성과 종합관리, AI 기반의 특허행정 혁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6,700만원 증액된 18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특허기술조사분석(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특허기술조사분석 (R&D)	15,135	15,610	15,610	18,710	2,867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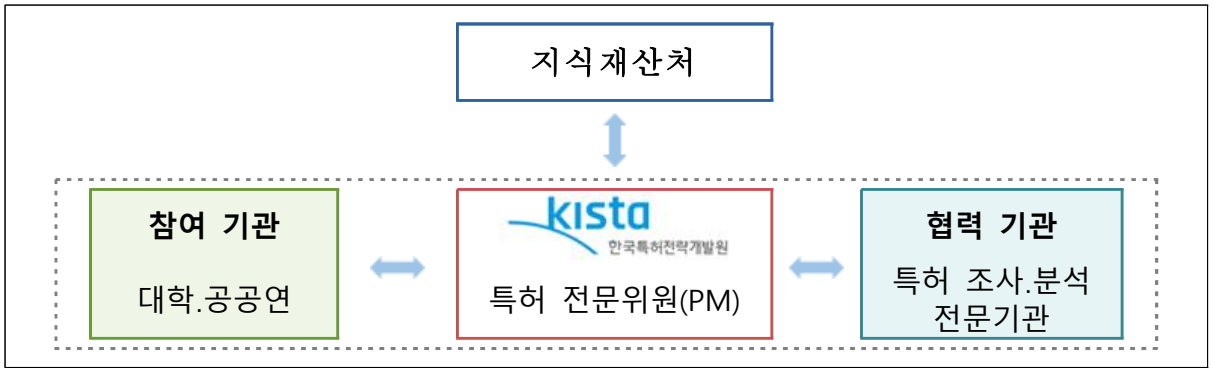
자료: 지식재산처

② 보유특허 진단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사업’(내내역사업)은 대학·공공연의 R&D 보유 특허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특허등급을 진단하고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인프라 부족[250]으로 인해 보유 특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특허 활용률이 저조[251]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특허비용 절감 및 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해 보유 특허 활용 및 처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보유 특허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임.

사업의 추진체계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 전문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참여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지식재산처

동 사업이 추진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65개의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8,337건을 진단하여 ① 유망특허 활용 전략을 통해 3,685건의 특허기술이 이전되어 약 632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② 특허 처분 전략을 통해 11,661건의 특허권리를 포기하여 약 434억원의 연차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6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250)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보유 비율: 45%, 평균 전담인력: 2.1명
251) [특허 활용률('24)]
- 대학·공공연: 28.5%
- 중소기업: 76.4%

이에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자 2025년 예산 5억원(25개 기관×2,000만원)에서 2026년 예산 15억원(75개 기관×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유특허 진단 사업에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전체 대학·공공기관 보유 특허 건수 대비 진단을 받는 특허 건수가 아직 미미한 점[252] 및 정부 R&D 보유 특허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253]를 반영하여 정부 R&D 보유 특허 진단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함.

다만, 최근 5년간 정부 R&D 보유 특허 진단 사업의 경쟁률이 1:1 내외이고, 동 사업은 정부의 전액 지원이 아니라 참여 기관의 50% 자비 부담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정기관 수를 확대하더라도 신청기관 수가 이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254],

예산의 불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관·대학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255].

---

252) 지식재산처는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미활용 보유특허는 83,610건으로 현 정부 내 전체 진단을 위해 연간 최소 1.6만여 건 규모 지원이 필요하며, 연평균 1.3만 건의 대학·공공연 정부 R&D 특허가 신규 창출되므로, 매년 약 1.6만 건 진단을 위해 75개 과제(과제당 특허 평균 200건 진단) 수행 필요하다고 설명함.

253) ○ 특허 양적성과 지양 및 질적평가 강화 필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5.8. 중 대통령 말씀
○ 성과 중심 R&D 체계화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진단지원 확대 예정(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25.10. 국과심)

254)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2025년 이전에는 정부 R&D 특허성과 100건 이상인 기관(127개)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청기관의 수가 제한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R&D 특허성과 보유기관(376개)으로 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청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사업 경쟁률

지원연도	예산액	신청기관 수	선정기관 수	경쟁률
2021년	3억원	15개	15개	1 : 1
2022년	3억원	17개	15개	1 : 1.1
2023년	3억원	15개	15개	1 : 1
2024년	3억원	20개	15개	1 : 1.3
2025년	5억원	27개	25개	1 : 1.1

자료: 지식재산처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사업 지원 유형별 사업비

지원 유형		맞춤형Ⅰ	맞춤형Ⅱ	맞춤형Ⅲ
지원 구분		기관 전반의 특허	기술 분야별 특허	주요 연구자의 특허
지원 기간		13주	10주	7주
지원 대상 특허 건수		500건 이하	300건 이하	100건 내외
사업비	총 사업비	6,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정부 지원금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참여기관 부담금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보유특허 진단 지원은 기관별로 보유한 특허량에 따라 차년도에 중복 신청·지원도 가능한데,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동 사업의 인지도와 저변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전반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관하여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55)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존에 보유특허가 100개 이상인 기관만 지원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026년부터는 보유특허수가 적은 기관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화하는 한편, 사업 공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사업 선정 기관/대학

구분	대학	공공기관	합계
'20	고려대학교 의료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한국광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5 (대학: 4 공공: 11)
'21	창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15 (대학: 6 공공: 9)
'22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세명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아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15 (대학: 8 공공: 7)
'23	배재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15 (대학: 5 공공: 10)
'24	한국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성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공항공사	15 (대학: 8 공공: 7)

* 기간 내 5회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간 내 3회 지원: 한국전기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5년간 보유특허 진단 사업 선정 기관/대학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반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5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주요 R&D 연구 공공기관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많으므로 보유특허 진단 필요성이 큰 측면은 있지만, 기관의 규모 및 정부 R&D 연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스스로 보유 특허의 활용 전략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남발하지 않도록 지식재산 역량을 자체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최근 5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허 출원·등록 및 진단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19	'20	'21	'22	'23
출원	464	439	454	490	406
등록	307	383	357	314	278
R&D 보유특허 진단	1,119	479	400	700	400

자료: 정부R&D특허성과관리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근 5년간 국내특허 출원·등록 건수를 고려할 때, 매년 등록특허 개수 규모 만큼의 특허진단을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업무와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분업화되고 공공기관은 양적인 특허성과의 제고를 위해 특허 출원·등록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256], 오히려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256) 주: 정부R&D특허성과관리시스템상 특허성과는 주로 공공기관이 출원·등록한 특허 건수를 산정하는 양적 평가가 주요함.

따라서 지식재산처가 보유 특허를 직접 진단해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학·공공기관이 지식재산권 전담인력을 자체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일반 연구자도 기초적인 지식재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간접적·장기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적절히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도록 신청 및 지원 자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2026년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예산의 불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 국가발명인재관 체험 콘텐츠 내실화 필요 등

① 예산안 현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1235-30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7018-251)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7022-251) 사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국가발명인재관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등 3개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 증액된 3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1,801	1,895	1,895	2,149	254	13.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1,004	963	963	958	△5	△0.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	198	126	126	40	△86	△68.3
합계	3,003	2,984	2,984	3,147	163	5.4

자료: 지식재산처

② 국가발명인재관 체험 콘텐츠 내실화 필요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 내에 위치한 국가발명인재관(이하 “인재관”)은 2005년 12월에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연면적 1,200평 규모로 공작실습실과 발명체험실, 시청각실, 연구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재관은 연수원의 부속시설로서 별도의 조직 구성은 없이 연수원 교육기획과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제반 운영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인재관 운영은 공무직 2인이 담당하고 있음.

인재관 운영 목적은 발명교육[257]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발명과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재관의 실제 운영 상황은 시설의 설립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발명인재관 체험 콘텐츠 현황

콘텐츠	주요 내용	도입시기
활자인쇄	모양이 다른 두 개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체험	2012년
회전그림판	애니메이션, 영화의 시초인 회전그림판을 통해 동작의 연속됨을 본 후 잔상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2012년

25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마트 계산대	준비되어 있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서 듣는 발명이야기	2012년
안전을 위하여	아이들이 가상으로 운전체험을 하며 자동차 안전에 관한 발명품을 알아가는 콘텐츠	2013년
스케치 월드 (공룡,바다 세계)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한 예로 공룡과 물고기 등 QR종이에 색칠한 후 스캔하면 화면에 반영되는 등 체험자와 미디어가 소통하는 프로그램	2018년
피치볼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한 예로 공이라는 물체를 통해 화면과 상호 작용하는 체험	2018년
행동발달 창의파크	신체적으로 활동하며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	2019년
VR PARK	다양한 콘텐츠(봅슬레이, 레이싱, 롤러코스터 등)의 가상현실을 체험	2019년
로봇 공연	음악에 맞춰 로봇이 춤을 추는 공연을 하는 등 로봇에 대한 호기심 자극	2019년
발명 수상작	학생발명 대회 수상작품 중 일부를 기증받아 전시하는 등 학생발명에 대한 관심 제고	2019년
E스포츠	스포츠 소재와 게임 몰입성을 융합한 스포츠 체험	2019년
홀로그램 (체험형)	체험형 홀로그램(약 2분 30초 영상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되어 사진 및 영상 촬영)	2020년
불꽃놀이 영상	배경, 음악, 모양이 다른 불꽃을 선택하여 약 30초 동안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시청(불꽃놀이 발명에 대한 설명 콘텐츠 포함)	2020년
WING TV (홀로그램)	선풍기 날개처럼 일정한 속도(RPM)로 회전하는 4개의 날개에 장착된 LED를 통해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2020년
거꾸로 구르는 바퀴	무게 중심과 위치에너지의 관계 이해와 함께 비현실적 현상을 과학적 사고로 이해(바퀴의 발명과 발전에 대한 설명 콘텐츠 포함)	2025년*
드론 시뮬레이션	드론의 세부 구조를 모형과 함께 설명하는 전시품	2025년**

* 2025년 9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전시물품 이관 완료
** 2025년 11월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전시물품 이관 완료 예정
*** 콘텐츠 운영 현황은 2025년 10월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인재관은 2025년 10월 기준 15종의 체험 콘텐츠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2020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서 새로운 발명교육 콘텐츠의 추가 개발이나 새로운 기구 도입이 더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발명과 관련한 체험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는 찾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체험 목적으로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인터렉티브 미디어[258] 등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이미 연구·실험 단계를 넘어 대중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발명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최신 과학기술 체험 콘텐츠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안전을 위하여', 'E스포츠', 'VR PARK' 등 전반적으로 발명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한 놀이 시설으로서의 용도가 더 주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재관의 단체견학 신청·예약 현황을 보면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59].

체험 콘텐츠 사진		
		
안전을 위하여	E스포츠	VR PARK

자료: 지식재산처

258) 주: 관객의 동작, 소리, 터치 등 입력에 반응해 콘텐츠가 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기반 미디어를 말함.

259) [2025년 9월 국가발명인재관 단체견학 신청 현황]
- 일반 어린이집: 14팀
- K-사이언스월드 과학관광: 4팀
-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1팀

이와 달리 시설 운영 취지가 유사한 경주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내 발명교육체험관(이하 “경주센터”)은 발명 사고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발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체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재관 체험 콘텐츠의 개선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경주 광역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체험관 체험 콘텐츠

도전혜윰관: 놀이·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13개 주제)	
발걸음(발명걸음마)	‘발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발명둥지로 내딛는 첫발걸음부터’ 라는 메시지를 주는 체험
비상(발명대혁명)	역사적인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오토마타로 표현한 작품적인 성격의 전시 체험물
나의찐! 발명가	좋아하는 발명가와 발명품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스스로 만드는 핀볼 체험
발명과비밀(대화, 소통)	발명 아이디어, 다양한 생각 등을 모스부호로 표현하는 체험
혜윰마루(발명마루)	창의적인 사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유아체험
행복한발명(가치정류장)	따뜻한 가치와 행복을 주제로 한 발명품 체험
신나는발명(춤추는신호등)	안전과 관련된 발명 아이디어가 적용된 체험
발명 승부사	도전과 시도의 발명 소양을 갖게 하는 조작 (투석기 기반) 체험
발명 장인	도전과 시도의 발명소양을 갖게하는 조작 (오토마타 기반) 체험
첨성대의 비밀	신라 발명의 꽃인 첨성대의 천문관측 가설 중 2가지 (천체 망원경과 옵스큐라) 방법을 체험물을 통해 체험
Invention Show Time(IST)	발명품을 소재로 한 연쇄 반응쇼(시간제운영)
트리즈로 새활용	발명 트리즈 기법과 새활용 개념을 접목한 창작 교육 체험 (시간제운영)
발명이야기	창의적인발명이야기, 발명품 제작과정 (더하기 빼기기 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스톱 모션 활용 체험

발명채움관: 발명적 사고 증진을 위한 전시·체험 공간(19개 주제)		
로비(발명 명예의 전당)		세계적 유명한 발명품, 학생발명품, 수상 발명품을 발명 명예의 전당에 전시
발명으로	발명의 진화	발명품의 진화 모습과 발명본관 전체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제 영상 연출

초대 (7주제)	적정기술	적정기술 관련 발명품 전시체험
	위기와 발명	위기의순간(전쟁, 코로나등)에 발명된 발명품 전시 체험
	자연과 발명	생태모방으로 탄생한 자연과 관련된 발명품 전시 체험
	발명의 재탄생	쓰레기를 새롭게 재탄생시킨 발명아이디어 전시 체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조상의 지혜	조상의 지혜(한글, 한복)를 색다른 방법으로 체험
	발명길, 특허로	떠오르는 발명 아이디어를 반짝반짝 글로우 보드에 직접 쓰고 그리는 체험
발명과 도전 (4주제)	무한도전	발명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공한 발명품들을 소개
	발상의 전환	실패, 실수, 우연을 발명으로 승화한 발명가의 발명품들을 전시로 소개
	엉뚱기발	기이한 발명품,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발명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발명과 특허	특허분쟁 및 우리나라의 특허이야기를 소개하는 체험전시
발명과 상상 (7주제)	발명과 상상속으로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비밀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 출입문 연출
	편리한 침실	우리 실생활 중 침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치있고 편리한 발명품들을 체험하는 전시
	똑똑한 서재	우리 실생활 중 서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발명품들을 체험하는 전시
	감성 거실	우리 실생활 중 거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성 자극 발명품들을 체험하는 전시
	재미난 욕실	우리 실생활 중 욕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욕실 발명품들을 체험하는 전시
	반전 작업실	작업실 공간의 무한변신, 작업실이 주방이 되는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체험하는 전시
	신기한 책장	평범해 보이는 책장에 공간 이동문과 마음대로 붙이는 액자를 연출해 체험

미래키움관: 최신기술로봇(15개 주제), 유아발명(5개 주제) 체험 공간		
로봇 체험실	탑승형 4D 라이더(6인승)	극대화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탑승형 전시물
	로봇VR 시뮬레이터(1인승)	VR 로봇 시뮬레이터를 관람객이 직접 조종하여 체험
	탑승형VR 시뮬레이터(2인승)	VR 로봇 시뮬레이터를 관람객이 직접 조종하여 체험
	로봇액션슈트	동작인식기술, 컴퓨터 그래픽(CG)기술, 증강현실(AR)기술이 융합된 액션슈트 체험
	표정(감성) 로봇	사람의 표정, 안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

	증강현실 아케이드 로봇	2대의 로봇을 직접 조종하여 바닥에 펼쳐지는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스케치 자동화 로봇	산업용 직교 좌표 로봇을 전시실 특성에 맞게 관람객이 직접 조종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다관절 로봇	산업용 다관절 로봇을 전시실 특성에 맞게 관람객이 직접 조종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축구 로봇 시스템	직접 로봇을 조종하여 축구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인터렉티브 시스템	바닥형 스크린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효과들이나 반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집게로봇 시스템	집게가 있는 전방향 이동 로봇을 관람객이 직접 조정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스마트 큐브	큐브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는 가상공간 체험
	군무댄스 로봇	군무를 시연하는 애완견 로봇
	FPV 배틀로봇	매카넘 휠을 적용한 1인칭 시점의 로봇 조종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로봇 전시물
	스마트 자동화 로봇 시스템	산업현장의 협동 로봇을 포함한 생산 자동화 라인을 축소하여 생산의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물
유아 공작실	로봇 페이퍼 토이	종이접기 놀이 및 터치테이블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물
	무한상상 블록놀이시스템	빔 프로젝터와 블록 인식센서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물
	터치월 시스템	벽에 이미지로 나타나는 세계 10대 발명품을 터치하면 발명품에 대한 정보 제공
	크리에이트 블록 인터렉티브 시스템	블록 인식 센서를 이용해 로봇과 관련된 모션과 영상 등 다양한 이펙트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는 전시물
	대형블록놀이	다양한 모양의 대형 블록을 아이들의 생각대로 조립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대형블록 조립 놀이 체험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한편, 참신한 발명 콘텐츠의 부재는 인재관의 방문객 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재관의 방문자 수는 매년 3만명 정도로 코로나19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260]을 고려한 배후 수요까지 감안하면 다소 적은 측면이 있음.

26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국가발명인재관은 대전시 유성구 소재

최근 5년간 국가발명인재관 및 경주 발명체험교육관 방문자 수

(단위: 명)

연도	국가발명인재관	경주 발명체험교육관
2021	61	-
2022	14,239	115,078
2023	27,585	166,275
2024	28,094	137,216
2025.9.	23,364	99,773

자료: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연수원 관련 3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안 내역을 보면, 공무직 41명분의 임금[261], 연수원 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적인 비용 및 교육과정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발명 콘텐츠 개발·도입이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홍보비 등 인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관련 3개 세부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2,149백만원**
(1)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 운영: 234백만원
(2)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1,891백만원
- 학생·발명교육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158백만원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연수원 공무직 임금 등) 1,662백만원
- 장애학생 발명교육 지원: 71백만원
(3)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24백만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958백만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 40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26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직 현원 현황(41명): 시설 12명, 방호 6명, 식당 8명, 환경관리 7명, 조경 4명,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2명, 사무보조 1명, 영문에디터 1명

인재관은 최근 ‘처’로 승격한 지식재산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발명교육 체험 시설로서 발명교육의 기준 및 모범이 되어야 할 시설인 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발명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과 투자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262].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국가발명인재관의 체험 콘텐츠를 발명교육에 기여하는 양질의 콘텐츠로 내실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발명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실효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62) **박기문 외 3인, 「국가발명인재관의 발전방안 도출 연구」, 24.6. p.22**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명교육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교육과정,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시설과 장비 등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환경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발명·지식재산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발명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발명교육센터,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초·중등 정규과정에 보급하는 선도적 기능을 갖도록 검토해야 한다.

공간 조성방안은 ‘리모델링’과 ‘신규공간 구축’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리모델링 방안은 신규 공간 조성방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들과 교과, 일반 시민 등의 발명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규공간 구축방안은 국가발명인재관이 국가 수준 발명·지식재산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산업체와의 협업 및 공유가 가능한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및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발명교육을 위해 AI, AR, VR,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이 구축된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발명수업 및 발명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6)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발명교원 인증제도 예산 재편성 검토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1235-302)는 초·중·고 발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준별·학교급별 특화된 발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기반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 감액된 9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발명교육 활성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발명교육 활성화 (초·중·고)	10,343	10,448	10,448	9,998	△450	△4.3

자료: 지식재산처

② 발명교원 인증제도 예산 재편성 검토 필요 등

발명교원 인증제도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263]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264] 등에 근거하여, 초·중등

26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 방식으로 발명교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발명교원 인증제도 내용

○ **(제도 현황)** 발명교원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함.

등급	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비고
	정교사 자격증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평가시험
명인	1급	180시간 (집합교육 90시간 이상)	7년	1급 발명교사	30점	40시간	30점	700점	구술
1급	2급	120시간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600점	필기
2급	2급 (소지 예정자)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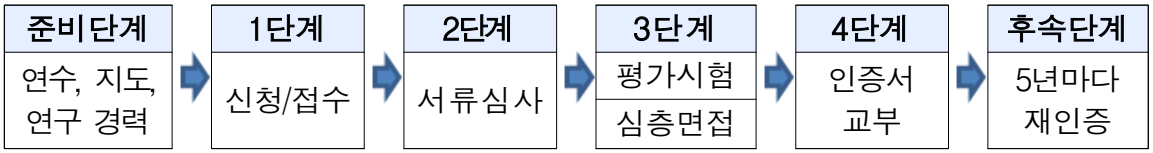
○ **(법적 근거)** 발명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발명교원 인증에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발명교원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원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원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원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원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원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한 고시

○ **(심사과정)** 등급별로 발명교원 인증제 요건(연수시간, 지도경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평가시험(명인의 경우 심층면접)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5년간 발명교원 인증 자격 부여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발명교원 인증은 명확한 법령상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상태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발명교원 육성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1	'22	'23	'24	'25	'26
예산(안)	500	500	500	-	-	-
결산	500	500	500	230*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내역사업) 사업 중 '지역 발명교육 인프라 지원'(내내역사업) 사업 예산을 일부 재조정하여 운영

자료: 지식재산처

2023년까지 발명교원 인증제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24년 이후 예산이 순감되었는데,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발명교원 인증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지식재산처 고유 업무로서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므로 사업 예산을 일부 재조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함.

양질의 발명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여 발명영재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양성하며,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265]을 실천하는 등 발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발명교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발명교원 인증제도 취득 현황

(단위 : 명)

인증년도	명인	1급	2급	계
2013~2017	11	-	-	11
2018	4	4	174	182
2019	3	19	169	191
2020	4	6	139	149
2021	2	13	119	134
2022	2	6	157	165
2023	3	2	89	94
2024	(신청자 없음)	3	66	69
합계	29	53	913	995

자료: 지식재산처

현재 발명교원 인증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발명교원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266], 발명교원 인증을 받는 교사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명인 등급의 전문적인 발명교원은

265)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추진 방향]

□ (초중고) 발명교육을 비교과활동 중심에서 정규교육化
- ○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內로 편입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
- ○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발명교원 양성 체계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

266) 2024년 발명교원 인증을 받은 인원(995명)은 전국 초·중·고 정규 교원 수(421,456명)의 0.24%이고, 초·중·고 전체 학교(6,676개)당 발명교원 수는 0.14명임.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등 발명교원 인증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발명교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부산, 대전, 전북,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 학교 수 대비 많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한정적인 발명교원 양성 예산으로 부산교대, 전주교대, 충남대 등 일부 대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발명교원 양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함.

시도별 학교 수 대비 발명교원 비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증교사(명)	51	174	15	64	15	93	6	15	99
학교 수(개)	1,317	617	463	535	314	301	242	101	2,494
비율(%)	3.8	28.2	3.2	11.9	4.8	30.9	2.5	14.9	3.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증교사(명)	14	31	23	144	50	33	165	3	995
학교 수(개)	622	468	719	758	821	908	966	189	11,835
비율(%)	2.3	6.6	3.2	18.9	6.1	3.6	17.1	1.6	8.4

* 학교 수는 초·중·고등학교 포함
자료: 지식재산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 및 발명교원 인증제도의 취지가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발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인데, 발명교원의 수가 적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은 발명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균형 있는 발명교원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는 발명교원 인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024년부터 순감된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67].

267) 참고로 발명교원 인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13억 6,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발명교원 인증제도 운영 필요 예산(1,362백만원) 산출 내역**

○ **(현직교원 연수운영)** 현직 발명교원에 대한 재인증을 보장하고, 일반교원 대상 발명교과서 지도역량 연수 운영(종합교육연수원)을 위하여 **262백만원** 필요

- 현재 인증받은 인원이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발명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교사들의 재인증을 위한 연수시간은 연간 6,636시간이나, 발명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종합교육연수원 규모는 4,100시간에 불과, 연수시간 확보를 위하여 112백만원 필요
- 초등·직업계고 중심 발명교과 확대에 따라 학교당 1명씩(6,676명) 발명교육 지도인력 양성 필요, 현 양성된 995명 제외 5,681명 교육을 위해 5년간 매년 1,130명씩 교육 지원을 위하여 150백만원 필요

○ **(신규 발명교원 양성교육)** 발명교사교육센터를 통한 신규 발명교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500백만원**(5개권역×100백만원) 필요

○ **(양성체계 내실화)** 우수한 발명 인증교원에 대한 후속지원 및 관리체계(실태조사, 시스템 등) 구축 등을 통해 양성된 교원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하여 **600백만원** 필요

- 발명교사 인증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 150백만원, 발명교사 관리체계 구축 150백만원, 발명교사 실태조사 등 300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7)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담보IP 매각·활용 수익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은 IP(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담보물인 IP를 매입·활용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금 회수위험을 줄여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억 6,100만원 증액된 15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2,286	2,286	15,547	13,261	580.1

자료: 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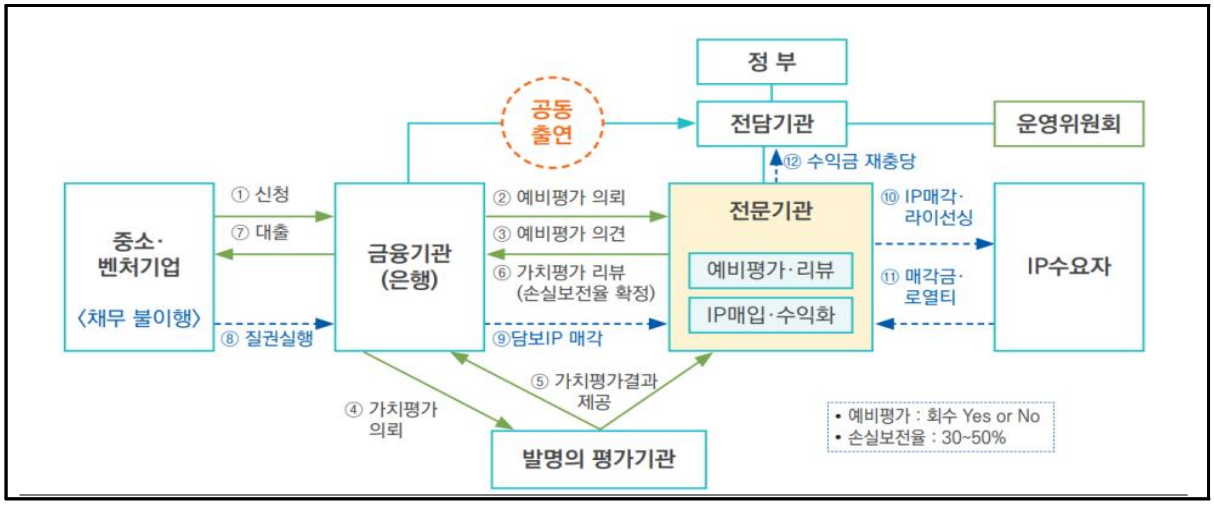
② 담보IP 매각·활용 수익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의 사업 구조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IP담보대출 신청(①)을 받은 금융기관은 전문기관[268]의 예비평과 결과에 따라 매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②·③), 전문기관이 발명 평가기관의 IP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율(30~50%)을 결정하면(④~⑥), 금융기관은 IP

268) 실제 IP 매입·보유는 전문기관 설립 특수목적법인(SPC)이 수행함.

가치평가액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며(⑦),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전문기관은 질권실행으로 담보IP를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으로부터 IP를 매입하여 IP 수요자에게 매각·라이선싱 등의 방식으로 활용(⑧~⑫)함[26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구조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액(132억 6,100만원)하여 15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15,547백만원) 산출 근거**

○ 담보 IP매입: ('25) 1,500 → ('26요구) 14,747백만원 (증 13,247백만원)

('25) IP담보대출 잔액 2,348,700백만원 × 예상 실매입률 60% × 조정 부실률 0.53% × 정부지원율 20%(손실보전율40%×정부출연율50%) = 1,500백만원

→ ('26) 직전 3년 평균 IP담보대출 잔액 2,233,300백만원 × 예상 실매입률 70% × 직전 3년 가중평균 부실률 3.39% × 정부지원율20%(손실보전율40%×정부출연율50%) + '25년 부족액 4,148백만원 = 14,747백만원

○ IP평가분석 : ('25) 675 → ('26요구) 675백만원 (전년동)

○ 사업운영 : ('25) 111 → ('26요구) 125백만원 (증 14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26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288

최근 IP 담보대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종료[270] 등으로 은행권의 담보 IP매입 요청액이 급격히 증가[271]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 IP매입 예산 증액은 합리적인 이유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다만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6년간 IP 담보대출 부실률 현황

구분	'20	'21	'22	'23	'24	'25.3.
IP 담보대출 부실률(%)	1.13	1.07	1.56	1.05	3.71	3.95

* 부실률 = 은행 추산 부실액/은행 추산 담보대출 잔액
자료: 지식재산처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2항[272], 동 법 시행령 제16조[273] 및 동 사업 운영지침 제5조제2항[274]에 따르면 정부나 금융회사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 ②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 및 ③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270)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23.9.) 및 대출 만기연장(~'25.9.) 종료
271) 연도별 신규 매입요청액: ('23) 82.4억원 → ('24) 177.3억원 → ('25.8.) 174.7억원 → ('25.12. 예상) 262.0억원
272) 「발명진흥법」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274)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사업의 재원) ② 정부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외에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이자수익도 사업재원으로 사용한다.

담보 IP의 매각은 IP 거래시장 자체의 활성화 부진과 함께 부실기업이 보유했던 IP라는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매각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어, 2023년까지 담보 IP 활용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담보 IP 매각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275]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근 활용 실적이 제고되고 있고, 담보 IP 매입 및 보유 개수의 증가[276]에 따라 매각·활용 가능한 담보 IP 개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9월에 민간 기술거래전문기관 52개와 IP 이전·라이선싱 중개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해서 담보 IP 활용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담보 IP 활용 실적

(단위: 건, 개, 백만원)

구분	매각			실시권 부여(라이선싱)			합계		
	계약 수	IP 수	금액	계약 수	IP 수	금액	계약 수	IP 수	금액
'21	-	-	-	2	2	7	2	2	7
'22	-	-	-	7	23	114	7	23	114
'23	3	4	53	8	14	35	11	18	88
'24	4	10	274	9	24	104	13	34	378
'25.9.	5	10	397	8	12	84	13	22	481
합계	12	24	724	34	75	344	46	99	1,068

자료: 지식재산처

275) 서울회생법원('21.9.), 수원회생법원('24.9.) 부산회생법원('25.1.) MOU 체결

276) **최근 6년간 담보 IP 매입 실적**

(단위: 건, 개,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9.
계약 건수	3	17	23	40	80	71
매입 IP 수	5	29	54	68	151	160
매입 대금	3.2	18.4	34.3	41.3	123.6	100.1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안 추계 내역을 보면 이러한 수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IP담보대출 잔액이나 실매입률, 부실률 등으로만 소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요액 추계에 있어 담보IP 매각·활용 수익금과 해당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 적정한 예상 수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담보 산업재산권 매각·활용 예산안 추계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비고
전년도 출연금 잔액(A)	120.21	100.12	47.71	△41.48	· 전년도 이월 출연금 중 정부분 잔액
당해연도 예산(B)	-	9	15	-	· 담보IP 매입 정부예산
가용 매입액(C=A+B)	120.21	109.12	62.71	△41.48	· 당해연도 가용 매입 정부예산
해당년도말 IP담보대출 잔액(D)	23,226	21,541	22,232	22,333	· '25~'26년말 잔액: 직전 3년 평균 가정
부실률(E)	1.05	3.71	3.95	3.39	· 부실률 = 부실액 / IP담보대출 잔액 · '25년(가정): '25.3월 부실률 · '26년(가정): '23~'25년 가중평균(1:2:3)
예상 부실액 (F=D×E)	243.87	799.17	878.16	757.09	-
실매입률(G)	44.0	53.3	65.0	70.0	· 담보IP 매입 요청액 대비 실제 매입액 비율 · '25년(가정): 65%, '26년(가정): 70%
부실률 기반 예상 매입액 (H=FxGx20%)	21.46	85.19	114.16	105.99	· 정부부담률 20% = 손실보전율 평균 40%×정부출연 50%
실매입액(I)	20.09	61.42	-	-	· 실제로 매입한 금액(결산기준)
이자수익(J)	[4.18]*	[4.37]*	1.43	-	· *'25년에 누적액 전액 사용예정
연말 매입예산 잔액(K)	100.12	47.71	△41.48	△147.47	· '23년, '24년: K=C-I · '25년, '26년: K=C-H+J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담보IP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손실보전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담보 IP의 거래가능성 등을 평가(1단계)한 후, 우대사항[277]을 반영(2단계)하여 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물적 담보가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우대사항 해당시 손실보전율을 항상 최대치(50%)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음.

이 때문에 거래 가능성의 정도(1단계)가 손실보전율에 적정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1단계 절차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갖춘 기업이 낮은 신용등급을 갖춘 기업에 비해 오히려 금융 혜택을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업 설계가 공적 자금의 부담을 크게 만든다는 국회 및 언론의 지적[278]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우대요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손실보전율 편중 현상이 완화되도록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중[279]이라고 설명함.

---

277)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2]
* 우대사항 등
1. 창업초기 기업(설립한 지 3년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건은 손실보전율 50% 적용(매입거절 특허가 아닌 경우)
2.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건은 손실보전율 상향 적용(매입거절 특허가 아닌 경우)
3.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율 30% 적용

278) 서울경제, “[단독] ‘고신용 기업 역차별’ IP 담보대출 손본다”. 25.10.13.
(주: 해당 기사는 서일준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79) 2025년 11월 중 개정 완료

손실보전율 및 우대사항 개선안

	< 현행 >		< 개선안 >
1단계 평가	○ 담보IP의 거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손실보전율 산정 (30~50%)		
2단계 평가	○ **우대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전율 50%** 적용		○ 해당하는 우대사항 1개마다 1단계 손실보전율에 5%p 가산
	○ 단,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경우 **손실보전율 30%** 적용		○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경우 1단계 손실보전율에서 5%p 차감
우대사항 정비	1. 매출액 3억 이하, 창업 3년 미만 기업 2. **신용도가 낮은 기업(B0이하)** 3. 해외 IP 담보 제공 기업 4. 거래, 소송 관련 자료 제출기업 5.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 담보 제공 6. 핵심특허를 외부에서 매입한 경우	→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삭제 : 거래가능성 평가와 중복) 5. (삭제 : 거래가능성 평가와 중복) 6. (좌동) 7. (신설) 해외 수출 인증 기업 8. (신설)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

자료: 지식재산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향후 IP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한 IP담보 대출액이 감소하여 정부의 담보 IP매입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임[280].

또한, 최근 금융기관의 IP담보대출 신규 실행 위축으로 2023년 이후 IP담보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처가 직전 3년 평균으로 추정한 IP담보대출 잔액(2조 2,333억원) 예상치는 다소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음[281].

280)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한 IP 담보 대출액은 증가하기에 정부의 매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IP 대출액 증가 또는 감소 효과는 동 제도의 개선('25.11.) 이후 실시되는 IP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 시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28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291

최근 4년간 IP담보대출 실행 추이

(단위: 억원, 건)

구분	'22	'23	'24	'25. 8.
IP담보대출 신규 실행 규모	9,156	9,119	7,522	4,887
IP담보대출 신규 실행 건수(추정)	1,559	1,612	1,346	856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4년간 IP담보대출 잔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2	'23	'24	'25. 6.	'26(추정)
IP담보대출 잔액 규모	21,929	23,226	21,541	21,297	23,333

자료: 지식재산처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① 사업 재원에 담보IP 매각·활용 수익 포함, ② 손실보전율 결정 기준에 대한 개선으로 담보IP 매입 부담 경감 가능성, ③ IP담보대출 잔액 감소세에 따른 예산 과다계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향후 예산 추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세부사업 간 과목구조 조정 필요

① 예산안 현황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1531-302)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억 9,900만원 증액된 17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1531-304)는 브랜드분쟁 대응 전략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 감액된 74억 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5,486	8,124	8,124	17,123	8,999	110.8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6,837	7,533	7,533	7,402	△131	△1.7

자료: 지식재산처

② 세부사업 간 과목구조 조정 필요

지식재산처는 지금까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국내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라는 단일 사업을 운용하였는데, 2026년부터 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상향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3개의 세부사업 및 11개의 내역사업으로 편성·관리할 예정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세부사업 구조 개편 내역

<table>
<tr><th colspan="2">2025년</th><th rowspan="2"></th><th colspan="2">2026년</th></tr>
<tr><th>세부사업(1)</th><th>내역사업(5)</th><th>세부사업(3)</th><th>내역사업(11)</th></tr>
<tr><td rowspan="11">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td><td>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td><td rowspan="3">→</td><td rowspan="3">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td><td>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td></tr>
<tr><td rowspan="2">수출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td><td>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td></tr>
<tr><td>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신규)</td></tr>
<tr><td rowspan="4">특허 분쟁대응 지원</td><td rowspan="4">→</td><td rowspan="4">기술분쟁
대응 지원</td><td>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td></tr>
<tr><td>영업비밀 보호 지원</td></tr>
<tr><td>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신규)</td></tr>
<tr><td>NPE 위기대응 기반구축(신규)</td></tr>
<tr><td>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td><td>→</td><td>기술분쟁
대응 지원</td><td>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td></tr>
<tr><td rowspan="3">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td><td rowspan="3">→</td><td rowspan="3">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td><td>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td></tr>
<tr><td>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td></tr>
<tr><td>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신규)</td></tr>
</table>

자료: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세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은 상표 무단 선점행위나 제품에 한글을 기재하는

행위 등 최근 한류의 인기에 편승한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①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상표출원 동향을 조사하고, 한류편승 위조상품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출원동향 및 시장조사'(내역)와 ② 피해기업·업종에 대하여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내역)을 포함하고 있음.

2026년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25) 0 → **('26) 9,390백만원(순증)**
- ○ **출원동향 및 시장조사: 2,700백만원**
  (출원동향, 10개국 × 170백만원 + 시장조사, 10개국 × 100백만원)
- ○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 6,690백만원**
  (개별 대응, 180건 × 33백만원 + 공동대응, 5건 × 150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주요 한류편승행위 사례

구분		한국 관련 상표	한류편승행위 사례
① 국내 등록상표 무단선점	동일	설빙	설빙
	유사	오뚜기 OTTOGI	오뚜기김 OTTOGINORI
② 국내 사용상표 무단선점		동원 부산어묵	부산어묵
③ 원산지 오인·혼동		BUSAN	MUMUS.KR
④ 한글명 제품·한글상표		소주	한국라면 SPICY RAMYEON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전략’(세부) 중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내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브랜드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는 상표 무단 선점행위를 포함하여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개별·공동 대응을 지원하였는데, 2026년부터는 상표 무단 선점행위에 대한 부분은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에서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도록 내용을 개편하였음.

2026년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25) 4,170백만원 → **(‘26) 3,121백만원***
○ (‘25) 개별대응, 4,002백만원 + 공동대응, 168백만원 → (‘26) 개별대응, 3,065백만원(110건 × 28백만원) + 공동대응 56백만원(1건 × 56백만원)

* 상표 무단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의 예산을 일부 감액함.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의 사업 배치를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세부)의 내용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동 내역사업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 사업을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세부)의 내역사업으로 과목구조를 재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의 세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하 내역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은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세부)와는 단어의 의미상 다소 무관하고, 오히려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세부)과 직관적으로 호응하고 있음.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과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비교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내내역)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역)
사업 취지	한글상표 선점, 제품에 한글을 기재하는 행위 등 한류편승행위 대응전략 지원	위조상품 등 상표·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법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50조의2[282], 동법 시행령 제27조[283]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지원 대상	국내기업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	국내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침해 상품
예산(‘26)	6,690백만원	3,121백만원
대응 전략 (개별전략 기준)	○무단선점 분석 - 국내외 상표 현황 분석 - 현지 상표권 조사, 무단선점 현황 분석 ○대응수단 검토 - 현지 법제도 및 판례 검토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질의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 현지 한류편승행위 대응전략 수립 - 협상 및 경고장 발송, 현지 상표출원	○위조·모방 분석 - 위조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 위조 상품 및 상대방에 대한 조사 ○대응수단 검토 - 현지 법제도 및 판례 검토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질의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 현지 위조상품 대응전략 수립 -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담당부서 (수행기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28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자료: 지식재산처

282)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8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산업재산권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84) 2025년 9월, 지식재산처 조직개편을 통해 국·과 신설

또한,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내내역사업)과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역사업)을 비교하면, 사업 취지, 지원 대상 및 구체적 대응전략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외 지식재산권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수출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사업이 일맥상통하고,

2026년의 경우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285]하다는 판단 하에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내역)보다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내내역)에 약 2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과 같이, 두 사업은 국가 재정의 여력과 현지 피해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따라 예산이 서로 증감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처럼 한정된 예산의 적정한 분배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을 때 잘 관리될 수 있으며,

그 외, 한류편승행위 사례 중 ‘원산지 오인·혼동’이나 ‘한글명 제품·한글상표’는 위조상품의 유형 중 하나인 점[286] 등 두 침해행위 간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복지원이나 지원배제

285) **무단선점 의심 피해상표 및 피해기업 현황**

(단위: 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9.
피해상표	535	977	1,666	1,749	4,522	4,977	4,654	3,939	7,524	7,774
피해기업	311	574	840	1,001	3,644	4,648	4,447	3,521	6,100	5,929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_K-브랜드 보호 포털

286)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대응 가이드」(202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위조상품의 유형을 ① 상표·상품 모방, ② 상표 모방, ③ 상품 형태 모방, ④ 저작권 침해, ⑤ 한류 편승 등으로 구분함.

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내역) 중 ‘출원동향 및 시장조사’(내내역)는 상표 무단 선점행위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는데 이 조사 결과는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내역)에서도 활용되며, 두 사업의 수행기관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로 동일한 점 등

두 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각 사업 추진 내역과 성과의 일목요연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중복·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세부) 중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내역)은 위조상품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 발생 후 사후적 대응 지원이 아니라 사전적 피해 예방의 목적이 주된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세부)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측면이 있음.

□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체계

- ○ (지원 대상) 해외수출 중소·중견기업
- ○ (사업 규모) 2026년 총 예산 1,618백만원[① 바우처 875백만원 지급(지원기업 100개 社), ② 전문컨설팅 등 7억원]
- ○ (지원 내용) ① 물리적 보안기술 및 정품인증기술 도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자부담 비율: 30%), ② 기술 전문컨설팅 연계
- ○ (운영 체계) 관리기관과 자문기관을 지정하고 참여기업에 바우처 지급

자료: 지식재산처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한류편성행위 대응지원(내역)을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세부)에서 관리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내역)을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세부)에서 관리하는 등, 세부사업 간 과목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세부·내역사업 편성 수정의견

세부·내역사업 편성 정부안			수정의견	
세부사업(3)	내역사업(11)		세부사업(3)	내역사업(11)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신규)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신규)**
기술분쟁 대응 지원	5개 세부사업 (생략)	→	기술분쟁 대응 지원	5개 세부사업 (생략)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신규)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신규)**

(9)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목별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① 예산안 현황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일반수용비, 여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 지식재산처 기관운영의 필요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증액된 2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기관운영 기본경비	1,830	2,156	2,156	2,268	112	5.2

자료: 지식재산처

② 비목별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026년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등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결산 내역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액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목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기관운영 기본경비	1,830	2,156	-	2,268	112	5.2
공공요금 및 제세	174	174	-	218	44	25.2
임차료	343	347	-	403	56	16.1
유류비	36	36	-	36	-	-

자료: 지식재산처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전화 및 인터넷요금, 공용휴대전화,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우편요금 등에 대한 비용이고,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400만원 증액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5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23	123	9	132	129	104.9	97.7	3
2021	142	142	5	147	146	102.8	99.3	1
2022	142	142	10	152	148	104.2	97.4	4
2023	164	164	△15	149	143	87.2	96.0	6
2024	174	174	△5	169	123	70.7	72.8	46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최근 5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23년 및 2024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고[287], 매년 집행액이 1억

287) 지식재산처는 2024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과 관련하여, 재택근무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23) 718명 → ('24) 635명] 재택근무자에 대한 업무망 인터넷 회선 요금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이며, 2026년의 경우에도 특별히 추가적인 예산 증가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288]을 고려할 때, 편성 예산 일부가 불용되거나 이·전용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으로 임차료 비목은 사무실 복합기, 공기청정기, 비데, 관용차량 등에 대한 임차료 비용이고,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600만원 증액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5년간 임차료 비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98	198	15	213	213	107.6	100.0	-
2021	198	198	-	198	192	97.0	97.0	6
2022	198	198	△27	171	170	85.9	99.4	1
2023	171	171	15	186	185	108.2	99.5	1
2024	343	343	△65	278	239	69.7	86.0	39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5년간 임차료 비목의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집행액은 2억원 내외인 점, 해외 파견 1인에 대한 주택임차료(약 8,600만원)[289]가 전년 대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추가적인 예산상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률 부진이 예상됨.

288) 지식재산처는 2025년 재택근무자 수도 2024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함.
289)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에 WIPO 파견자 1인에 대한 주택임차료가 포함되어 전년('23) 대비 예산을 증액하였고, 2025년에는 파견자가 없었지만, 2026년에 다시 파견자 1인에 대한 주택임차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유류비 비목은 관용차량의 유류비에 대한 비용으로, 2026년 예산은 전년 동액인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5년간 유류비 비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36	36	△15	21	20	55.6	95.2	1
2021	36	36	△5	31	24	66.7	77.4	7
2022	36	36	△8	28	27	75.0	96.4	1
2023	36	36	△13	23	16	44.4	69.6	7
2024	36	36	-	36	12	33.3	33.3	24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지식재산처 관용차량의 전기차 비중 증가[290] 등 유류 사용 필요성 및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처 격상에 따른 대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 유류비 예산 편성액 3,600만원의 불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소요를 예측하기 힘들고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290) **최근 5년간 지식재산처 관용차량 현황**

(단위: 대)

연도	관용차량 종류			계
	친환경차		유류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2021	1	4	19	24
2022	2	4	19	25
2023	3	2	19	24
2024	4	3	19	26
2025	4	3	19	26

자료: 지식재산처

어느 정도의 여유 재원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예산의 계획적 편성·집행, 불용 방지라는 국가재정의 대원칙은 가급적 기관운영 기본경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91].

만약 비목별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비목에서 발생한 여유 재원을 이·전용에 비해 간이한 절차인 세목조정[292] 또는 내역변경[293]을 통해 다른 비목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비목의 연례적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비목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하거나 다른 비목의 자체 예산상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각 비목별 연례적인 집행액 추이 및 예상 집행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는 등 향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291) 지식재산처는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 편성시 정확한 소요 예측에 한계가 있고, 처 격상에 따른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여유 재원을 고려한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설명함.

292)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함. 세목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 가능함.

(예시)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간 세목조정

293) 내역변경이란 단위 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 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자체 준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함.

(예시) 단위사업인 본부 기본경비 내,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7011-252) 국외여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국외여비간 내역변경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2026년도 정부 전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조 3,163억원임. 세입은 교육부 소관에 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6개 소관 부처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식재산처 소관은 세입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세출의 0.04%(72억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정부 전체)

(단위: 백만원, %, 총계기준)

구 분	세 입		세 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7,316,309**	**100**	**17,316,309**	**100**
교육부	17,316,309	100	16,625,050	96.01
산업통상자원부	-	-	5,530	0.03
고용노동부	-	-	403,403	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59,209	1.50
농림축산식품부	-	-	15,897	0.09
지식재산처	**-**	**-**	**7,220**	**0.04**

자료: 지식재산처(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재정통계 자료 편집)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 규모는 72억 2,000만원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사업(72억 2,000만원) 1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